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 정책추진 방안 연구

제 출 문

문화체육관광부 귀중

본 보고서를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 정책추진 방안 연구”

연구용역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2. 12. 31

주관 기관 : (사)문화다움

연구책임자 : 추미경((사)문화다움 상임이사

/성공회대학교 문화대학원 겸임교수)

연 구 원 : 신호진((사)문화다움 기획실 팀장)

연 구 원 : 송영호(고려대학교 대학원 사회학 박사과정)

연구보조원 : 양지애((사)문화다움 연구원)

연구보조원 : 김민석((사)문화다움 연구원)

연구보조원 : 유수연((사)문화다움 연구원)

I. 서장	1
1. 연구배경 및 목적	1
1.1. 연구배경	1
1.2. 연구목적	3
2. 연구범위 및 방법	4
2.1. 연구범위	4
2.2. 연구방법	4
3. 연구추진 프로세스	5
II.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 관련 국내외 정책동향	6
1.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 등장배경	6
1.1. 글로벌라이제이션 시대, 변화하는 지역전략	6
1.2.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 정책의 등장	8
2. 국내외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 정책동향	13
2.1. 해외 지역재생 관련 주요 정책동향	13
2.2. 분석시사점	39

3. 국내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 관련 정책동향	41
3.1. 시기별 지역관련 정책추진 흐름	41
3.2. 부처별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 관련정책 추진동향	46
3.3. 분석시사점	63

Ⅲ. 문화부 내 지역재생 관련정책 분석

1. 지역민족문화과	65
1.1. 설립배경 및 역할 검토	65
1.2. 지역재생 관련정책 추진현황	67
2. 디자인공간문화과	69
2.1. 설립배경 및 역할 검토	69
2.2. 지역재생 관련정책 추진현황	70
3. 정책사업별 검토	73
3.1. 문화역사마을가꾸기 조성사업(2002~)	73
3.2. 문화도시 조성사업(2005~)	76
3.3. 공공디자인 시범도시 조성사업(2005~)	78
3.4. 생활공간 문화적 개선사업(문화로 행복한 학교 만들기/2006~)	81
3.5.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시범사업(2008~)	84

3.6. 지역근대산업유산 활용 예술창작벨트 조성사업(2008~)	89
3.7.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시범사업(2009~)	92
3.8. 마을미술 프로젝트(2009~)	96
3.9. 문화이모작 사업(2010~)	100
4. 분석시사점	104
4.1. 전반적 시사점; 관련 정책의 선도적 추진에도 불구하고 성과 분산	104
4.2. 정책추진 초반기(2004~2008); 획일적 지역문화 정책의 경로 의존성	105
4.3. 최근(2009년~현재); 정책대상, 접근방식, 정책과정에서 새로운 시도	107

IV.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 정책 및 추진체계(안) 111

1.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 정책개념 정립	111
1.1. 정책 추진방향	111
1.2. 정책 개념; 지역문화창조 클러스터링/파트너십(가칭)	115
2. 지역문화창조 클러스터링/파트너십 정책(가칭) 내용	128
2.1. 지역문화콘텐츠 클러스터링/파트너십 정책	128
2.2. 지역문화창조인력 클러스터링/파트너십 정책	130
2.3. 생활속문화공간 클러스터링/파트너십 정책	132
3. 법제도적 장치 마련	134
3.1. 지속가능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법안 마련	134
3.2. 법제도적 장치마련 방안	134

V. 정책 추진방안 및 제언	137
1. 정책 추진방안	137
1.1. 통합적 추진 방향	137
1.2. 영역별 추진 방향	138
1.3. 종합	139
2. 정책 제언	140
2.1. 통합적 관점의 문화부 지역재생 정책 수립 및 조정	140
2.2. 최근 문화부 지역재생 정책성과의 계승과 체계화 필요	141
2.3. 문화부 지역재생 정책 통합적 홍보 채널의 구축 필요	143
2.4. 종합	144
VI. 부 록	145
1.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 정책추진 방안 전문가 집담회 자료집	145
2.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 정책추진 방안 전문가 집담회 주요내용	219
참고문헌	231

표 차례

〈표 1〉 통합재생예산(SRB)의 주제 및 세부목표	14
〈표 2〉 영국 도시재생정책의 추진기구와 보조금 지원제도	15
〈표 3〉 RDA와 LEP의 특징	18
〈표 4〉 영국 지역재생 정책동향	19
〈표 5〉 프랑스 지역재생 정책동향	22
〈표 6〉 미국 지역재생 정책동향	24
〈표 7〉 일본 지역재생 정책동향	25
〈표 8〉 싱가포르 지역재생 정책동향	27
〈표 9〉 EU 유럽문화수도 개요	28
〈표 10〉 유럽문화수도 연도별 지정현황	29
〈표 11〉 EU 상호문화도시 프로그램 개요	31
〈표 12〉 상호문화도시 프로그램을 실행을 위한 전략	34
〈표 13〉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개요	35
〈표 14〉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가입 신청 절차	36
〈표 15〉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가입 효과	36
〈표 16〉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가입현황	37
〈표 17〉 1960~2000년대 지역개발 정책 비교	42
〈표 18〉 소관 부처별 지역개발제도 현황	45
〈표 19〉 국토해양부 지역재생 관련 사업 흐름	47
〈표 20〉 국토해양부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시범사업〉 개요	48
〈표 21〉 국토해양부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시범사업〉의 이슈	49
〈표 22〉 국토해양부 도시재생사업단 개요	49
〈표 23〉 행정안전부의 변천과정	50
〈표 24〉 행정안전부 지역재생 관련 사업 흐름	51
〈표 25〉 행정안전부 지역재생 관련 사업 개요	51
〈표 26〉 행정안전부 지역재생사업 이슈	52
〈표 27〉 농림수산식품부의 변천과정	54
〈표 28〉 농림수산식품부 지역재생 관련 사업 흐름	56

〈표 29〉 농림수산식품부 지역재생 관련 사업 개요	57
〈표 30〉 농림수산식품부 〈농어촌 신문화공간 조성사업〉의 이슈	58
〈표 31〉 2011년 창조지역사업 현황	61
〈표 32〉 지역민족문화과 연도별 역할 변화	66
〈표 33〉 지역민족문화과 지역문화정책 흐름	67
〈표 34〉 디자인공간문화과 연도별 역할 변화	69
〈표 35〉 디자인공간문화과 공간문화정책 흐름	70
〈표 36〉 문화역사마을가꾸기 조성사업 개요	73
〈표 37〉 문화역사마을가꾸기 조성사업 추진경위	75
〈표 38〉 문화역사마을가꾸기 조성사업 세부 프로그램 예시	76
〈표 39〉 지역거점 문화도시 조성사업 개요	77
〈표 40〉 공공디자인 시범도시 조성사업 개요	78
〈표 41〉 공공디자인 시범도시 조성사업 추진현황	79
〈표 42〉 추진주체별 업무분장	80
〈표 43〉 생활공간 문화적 개선사업 개요	81
〈표 44〉 문화로 행복한 학교만들기 개요	82
〈표 45〉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시범사업 개요	85
〈표 46〉 지역근대산업유산 활용 예술창작벨트 조성사업 개요	89
〈표 47〉 지역근대산업유산 활용 예술창작벨트 시범사업 추진내용	90
〈표 48〉 지역근대 산업유산 예술창작벨트화 사업 추진절차별 주요업무 상세내용	91
〈표 49〉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시범사업 개요	92
〈표 50〉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시범사업 연도별 정책개념 및 사업유형	94
〈표 51〉 마을미술 프로젝트 사업 개요	96
〈표 52〉 마을미술 프로젝트 추진방향	97
〈표 53〉 2012 마을미술 프로젝트 사업내용	98
〈표 54〉 문화이모작 사업 개요	100
〈표 55〉 문화이모작 시범사업 내용	102
〈표 56〉 문화 클러스터와 관련 개념과의 비교	119
〈표 57〉 정책 추진방안	139

그림 차례

〈그림 1〉 연구방법	4
〈그림 2〉 연구추진 프로세스	5
〈그림 3〉 영국의 도시재생 추진체계	17
〈그림 4〉 EU 상호문화도시 프로그램 선정도시 현황	32
〈그림 5〉 농촌지역개발사업의 전개도	55
〈그림 6〉 사업추진 체계도	75
〈그림 7〉 공공디자인 시범도시 조성사업 추진체계	79
〈그림 8〉 ‘문화로 행복한 학교만들기’ 사업추진체계	83
〈그림 9〉 문전성시의 문화가치와 정책목표	84
〈그림 10〉 문전성시 사업대상 시장의 유형별 특징	85
〈그림 11〉 문전성시 추진전략	86
〈그림 12〉 문전성시 추진체계	87
〈그림 13〉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시범사업 정책 개념도	93
〈그림 14〉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시범사업 공동체 형성 로드맵	95
〈그림 15〉 마을미술 프로젝트 추진절차와 조직구성	99
〈그림 16〉 2012 문화이모작 사업구조	103
〈그림 17〉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 정책 틀	114
〈그림 18〉 전국문화 클러스터 분포 현황	120
〈그림 19〉 문화부 지역재생 관련 정책제언	144

I. 서장

1. 연구배경 및 목적

1.1. 연구배경

- 전 지구적인 지역화(glocalization) 흐름과 맞물려 국내외적으로 지역문화의 중요성이 날로 더해지고, **시대적 패러다임이 소프트 파워 중심의 창조사회로 전환하고 있는 글로벌 환경** 속에서 지역문화를 창조적으로 가치화하고, 일회적이거나 단기적 성과가 아닌 지속가능한 지역문화 콘텐츠로 뿌리내리고자 하는 지역문화정책이 전 세계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 국내에서도 2000년을 전후해서 지역문화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본격화되기 시작했으며, 중앙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내에서도 전통지역문화과(현 지역민족문화과)에서 <문화의거리 조성사업(1999~2004)>을 시작으로 **지역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하드웨어/소프트/휴먼웨어와 관련된 다양한 차원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음.** 그러나 정책성과가 차별화되어 드러나지 않고 지속성에서 일정한 한계를 보여 왔음.
- 이중에서 최근 추진되고 있는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시범사업(이하 문전성시) 및 생활문화공동체만들기 시범사업은 “일상공간을 문화적으로 가치화함으로써 전통시장 문화를 지역문화콘텐츠로 재생하고, 주민 주도적 문화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지역문화역량을 구축하는” 등의 차별적 성과를 만들어 내었음. 그러나 이 **정책성과도 지역문화의 통합적 맥락 속에서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인지 전망이 다소 불투명한 것이 현실임.**

-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뿐만 아니라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 농림수산식품부 등의 여러 중앙 부처, 개별 지자체 단위 등에서 최근에는 **문화와 창의성이 중요해진 시대환경 변화에 맞추어 다양한 형태의 “문화”를 통한 지역활성화 정책을 실시하고 있음.**
- 지역 내에서는 여러 중앙 부처와 지자체 차원의 유사한 지역문화 활성화 프로젝트들이 추진되면서 지역의 통합적 관점에서 각 사업들이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부처별, 지자체 정책별 사업 목적에 따라 지역이 대상화되는 경향을 보여 왔음. 결과적으로 정책성과가 분산되고, 지역문화역량으로 축적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지역문화의 통합적 발전보다는 부처별 경쟁, 지역 간 경쟁구도를 가중하는 상황이 지속적으로 만들어지고 있음.
- 이러한 상황을 전략적으로 극복하고 그동안 추진되었던 지역문화정책의 성과를 효과적으로 재조직하기 위해서는 통합적 지역문화의 관점에서 추진할 수 있는 정책 프레임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즉, 한국 지역문화의 현 단계에서 그동안 양적으로 확산되어 왔던 정책 추진 성과를 질적으로 전환하고, 통합적 지역문화자원으로서의 지속가능성을 구축하기 위한 지역문화정책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임.
- 지역문화를 활성화하고 진흥하기 위한 종합적 지역문화정책 가운데, **지금까지 개별적으로 분산되었던 지역문화 정책성과를 지역의 통합적 맥락 속에서 가치화하고, 창조사회로의 전환에 맞는 지역문화창조역량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이를 위해서 21세기 시대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글로벌 차원의 정책 틀(policy frame)이자 지역문화의 통합적 발전을 위한 정책으로서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 정책모델을 개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

1.2. 연구목적

-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 정책은 완전히 새로운 정책 모델이라기보다는 기존의 정책추진 관점과 방법을 지역발전의 통합적 관점으로 재구성함으로써 지역문화발전 현 단계에서 필요한 창의적 접근방법을 모색하는 것임.
- 이러한 맥락에 기초해서 본 연구는 **통합적 지역재생의 관점에서 문화를 활용하는 정책으로서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 정책추진방안” 도출을 목적으로 함.**
-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 정책은 지역재생 정책 전반을 가리키는 것이 아님. 광범위한 지역재생 정책 가운데, 창조사회로의 전환에서 중요한 교두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으로 특성화된 **문화를 매개한 지역재생 기법**이라고 할 수 있음.
-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 정책은 또 하나의 단위 정책사업을 개발하는 것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지역문화정책을 질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정책 프레임을 개발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음.**
-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 정책은 그동안 개별 단위사업으로 분산되었던 지역문화정책 성과를 통합적 맥락으로 종합하여 드러내면서 지속가능한 지역문화자원으로 이어질 수 있는 “지향가치와 추진과정에 대한 정책모델 정립”에 주안점을 두는 것이 필요함.

2. 연구범위 및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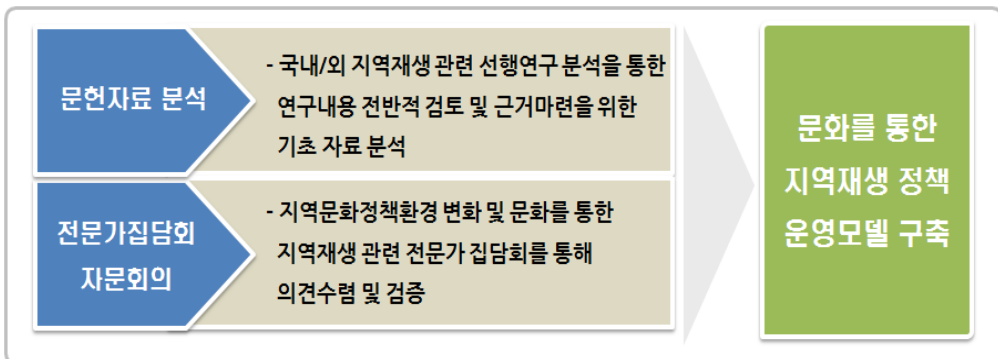
2.1. 연구범위

- 국내외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 관련 환경과 주요 정책동향, 국내 시기별, 부처별 관련 정책사업 흐름을 살펴봄으로써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 정책환경 검토
- 문화체육관광부 내 관련 정책추진현황 및 사업별 정책 이슈를 검토하여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정책 추진방향 도출
- 문화체육관광부(지역민족문화과)에서 추진해야 하는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 정책” 개념 및 정책내용, 추진체계, 법제도적 장치 등 정책추진방안 도출하고 향후 정책추진을 위한 추진 로드맵 구성

2.2. 연구방법

-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의 관점에서 지역문화정책 방안 도출을 위한 국내외 선행연구, 정책 보고서 등 관련 문헌자료를 분석함.
- 관련분야의 연구자 및 현장전문가, 각 부처별 정책입안자로 구성된 자문집담회(자문회의)를 통해 복합적 차원에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함.

〈그림 1〉 연구방법



3. 연구추진 프로세스

- 연구는 연구기획-문헌조사-연구분석 및 시사점도출-개념정립 및 정책추진 전략 도출-정책운영 모델 구축 및 정책제언의 총 5단계로 구분하여 추진함.
- 먼저 연구방향을 설정하고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과 관련된 국내외 문헌조사와 분석을 통해 유사 정책사례를 분석하고 연구내용의 토대를 마련함.
- 또한 국내외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 관련 정책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지역민족문화과)에서 추진해야 하는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 정책” 추진방향과 정책 개념을 정립함.
- 정책 추진방향 및 정책개념에 따라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 정책내용을 구성하고, 향후 정책추진을 위한 로드맵 및 정책제언을 제시함.

〈그림 2〉 연구추진 프로세스



II.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 관련 국내외 정책동향

1.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 등장배경

1.1. 글로벌라이제이션 시대, 변화하는 지역전략

- 21세기 글로벌 환경은 후기산업시대로의 급격한 패러다임 재편에 따른 세계화의 강조와 더불어 지역의 정체성과 차별적인 특성을 중요하게 인식하는 전 지구적 지역화 시대로 전환되고 있음. 이는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지역의 차별적 강점을 동시에 부각시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글로벌라이제이션(globalization)**으로 설명됨.
- 이러한 변화는 20세기 산업사회의 특징인 대량 생산방식에 기반을 둔 제조업 기반 경제구조에서 서비스업, 다품종 소량 생산 위주의 소프트 산업 기반 경제구조를 특징으로 하는 후기산업사회로의 전환과 관련됨. 후기산업사회로의 전환은 사회, 문화, 공간, 철학 등 사회전반의 상호 연쇄작용을 불러일으켜 기존의 고급예술과 엘리트 문화에 대한 반성적 검토와 광범위한 포스트모더니즘 논의를 촉발시켰음. 이에 따라 대중문화의 급성장, 문화의 산업화 및 서비스화 과정이 전 지구적으로 확산되었고, **후기산업사회의 제 영역에서 ‘문화’가 중요한 화두로 등장**하게 됨.¹⁾
- 후기산업사회에는 **문화의 산업화 및 서비스화와 연동되어 산업의 전반적인 요소들이 소프트화 되는 창의적 문화생산(creative cultural production) 사회²⁾**로의 변화가 진행되면서 **문화의 시대에서 지식기반사회, 창조사회 패러다임으로 이어지고 있음.** 1997년에 발표되었던 미국의 'Creative America', 영국의 'Creative Britain' 같은

1) 추미경, 「도시문화전략과 장소마케팅의 흐름」, 홍익대출판부, 2006. 재인용.

2) 이병민, 『글로벌라이제이션과 지역발전에 대한 연구방법론 고찰』, 2011. 재인용.

보고서는 국가차원에서 창조산업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대표적 사례임. 국내에서도 이러한 흐름에 맞추어 미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국가 및 지역 차원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1990년대 문화산업 정책, 2000년대 콘텐츠산업 정책, 그리고 2010년대의 창조산업 관련 정책으로 제시되어 왔음.

- 문화의 시대, 지식기반사회, 창조사회 등 21세기 시대변화를 나타내는 패러다임은 큰 틀에서 유사한 맥락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패러다임으로 표현된다 하더라도 **글로벌라이제이션 경향 속에서 지역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은 동일함. 지역은 이제 중앙에 대비되는 지방, 또는 중심부로부터의 변방이라는 낡은 인식과 존재기반에서 탈피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지역의 고유한 가치를 미래 경쟁력으로 탈바꿈하고자 하는 정책이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음.³⁾
- 이와 같은 **글로벌라이제이션 시대로의 전환에 따른 사회발전**에 대한 **새로운 관점의 패러다임 등장**은 지역의 발전 전략도 변화시키고 있음. 이전까지 지역은 대체로 자국 내 중앙과의 관계 속에서 그 중요성이 다루어져 왔는데, 변화하는 글로벌 환경 속에서는 지역문화를 독립적으로 발전시키고 그 범위를 전 지구로 확대, 경쟁력을 키우는 전지구적 지역발전 전략으로 재편되고 있음.
- 이제 지역은 역사, 전통, 관습, 문화, 생활문화 자원, 지역 고유의 자원을 활용한 스토리텔링 등 독특한 차별적 요소를 통해 지역발전의 원동력을 만들고, 글로벌라이제이션 환경에 부합하는 지역의 경쟁력을 만들고 가고 있음. 이러한 과정을 통해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지역에 대한 정체성을 새롭게 인식하고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면서, 각 지역의 특성과 문화 고유의 기능을 유지한 채 전 지구적 차원에서 그 연계성을 높여가고 있음.**

3) 추미경, 「기초예술과 문화산업의 연계, 지역에서의 전략」, 『2012 경남문화재단 정책세미나 자료집』, 2012. 재인용.

- 변화하는 시대환경 속에서 지역발전 전략은 20세기 접근방식인 물리적 환경 개발 또는 개선이라는 하드웨어적 개발 차원을 넘어 **지역이 담고 있는 의미, 역사, 문화, 사회적 분위기 등 인간 중심의 콘텐츠를 중요시하는 소프트웨어적 접근으로 전개되고 있음.**

1.2.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 정책의 등장

- 이와 같은 글로벌라이제이션 지역환경 속에서 지역의 물리적 맥락과 더불어 시간적 맥락이 함께 살아있는 지역의 문화 정체성을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지역발전 전략이 추진되고 있음. 이에 따라 1970년대 후반 이후 전 세계적으로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 정책이 등장, 확산됨. 문화와 예술을 활용한 지역재생 정책은 후기산업사회로의 전환을 상대적으로 빠르게 맞이한 **서구 선진국, 즉 서유럽 및 북미 지역에서 1980년대 시작되어 1990년대 유럽지역 전반, 2000년대 아시아 및 세계 모든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음.**
-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 정책은 급격한 시대환경 변화에 따라 쇠퇴하는 도시에 대한 전반적인 재생정책 경향 가운데 최근의 패러다임임. 도시의 황폐화된 물리적 구조물을 개선하고 도시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은 195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전개되어 왔는데, 1950년대 도시재건축(urban reconstruction), 1960년대 도시재활성화(urban revitalization)를 거쳐, 1970년대 도시전면재개발(urban renewal), 1980년대 도시재개발(urban redevelopment)등⁴⁾을 들 수 있음.
- 그러나 이러한 개발방식이 도시의 물리적 환경 및 시설개선, 새로운 지역의 개발에만 머물면서 도시가 다시 쇠퇴하거나 개발과 성장주의적 왜곡된 결과를 초래함에 따라 **기존 도시에 대한 종합적인 재생을 통해 도시부흥을 도모하고자 하는 도시재생(urban regeneration)**

4) 김인선 외, 「도시재생을 위한 컬처노믹스적 접근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제26권 제5호 (통권259호), 2010, p.285.

개념이 1980년대 이후 활성화되기 시작하였음.

- 국내 국토정책에서 도시재생은 “기계적 대량생산 위주의 산업에서 전자공학, 하이테크, IT 등 신산업으로의 변화 및 신도시/신시가지 위주의 도시 확장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낙후되고 있는 기존 도시에, 새로운 기능을 도입, 창출함으로써 경제적, 사회적, 물리적으로 부흥시키는 것”⁵⁾이라 요약하고 있음. 유럽에서의 도시재생 개념을 살펴보면, “일정 도시지역에서 경제적, 물리적, 사회적, 환경적 조건이 변화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되어야 하는 여러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총체적이고 종합적인 비전과 행동”⁶⁾이라고 정의하고 있음.
- 이와 같이 도시재생은 쇠퇴하는 도시에 대한 개선 정책이 신시가지, 신도시 등의 특정 지역에 대한 물리적 시설 및 환경 개선 중심의 개발이익에 근거하고 있었던 것에 비해 **도시와 지역에 대한 종합적 발전의 관점에서 추진된 도시(지역)재개발 정책**임.
- 사실 도시재생, 도시마케팅 개념은 21세기에 온전하게 새롭게 등장한 개념은 아님. 장소/지역의 성장과 쇠퇴의 반복적 흐름 속에서 도시와 지역을 개발하고 재생하고자 하는 정책이 시대에 맞게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음. 자본주의 사회로의 전개 속에서 산업 기반의 도시가 형성되었고 그에 따른 도시 발전, 쇠퇴와 맞물려 도시개발 및 도시재생 관련 정책이 여러 형태로 전개되어 왔음.
- 21세기 도시재생, 지역재생의 **새로운 것은 창조사회로의 전환이라는 시대 환경과 맞물려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의 관점”이 핵심 요소로 등장했다는 점**임. 또한 세계의 많은 도시들이 주목하고 있고, 미래적 관점에서 진단한 성공적인 도시(지역)재생 정책으로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 프로젝트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임.

5) 도시재생사업단 홈페이지(<http://kourc.or.kr/tb/jsp/index.jsp>)

6) Peter Roberts & Hugh Sykes, 『Urban Regeneration: A Handbook』, SAGE Publication, 2000.

- 서유럽 및 미주 지역의 주요 공업 도시들은 급속한 도시화와 산업화로 인한 도시 환경 피폐화와 1970년대 경제의 침체화로 인하여 도시 쇠퇴를 경험하게 됨. 도시에 닦친 장기간의 침체와 쇠퇴에 대한 대안으로 1980년대부터 문화예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도시경제 활성화 정책이 추진되기 시작함⁷⁾. 이러한 흐름 속에서 1980년대 쇠퇴한 공업 도시들은 대규모 문화시설을 건립하거나 방치된 공간을 문화공간으로 재활용하고, 대형 문화이벤트를 개최하는 등 문화주도형 도시재생전략을 시도하면서 몇 가지 유형의 성공적인 도시재생을 이끌어 내기도 하였음.

-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대 부분적으로 문화를 산업으로 인식하기 시작하였고, 2000년대는 ‘문화’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법들이 제시되면서 지역과 결합된 문화, 지역문화에 대한 산업적 가치 창출 극대화를 위한 여러 정책들이 추진되었음. 이러한 정책 배경에는 국내 경제성장 및 국민소득 수준 상승에 따른 국민 삶의 질에 대한 관심 증가, 디지털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한 문화관련 동호회 활동 확산, 노령인구 증가, 주5일 근무제 실시에 따른 여가시간 증대, 웰빙 추구 등 문화 및 여가생활에 대한 국민들의 욕구 증대 현상 등이 있음⁸⁾

- 우리나라 지방 정부는 문화예술을 활용한 지역개발, 또는 지역활성화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정책추진 초반에 큰 규모의 자본·기업을 유치하거나 고객을 유인하는 개발사업 추진전략 같은 ‘외생적 발전 전략’에 주목했음. 지역관광축제의 개발과 활성화, 각종 문화시설 아이콘을 앞세운 지역마케팅 전략 추진, 국제적 문화행사의 유치를 통해 지역을 마케팅 하고자 한 수많은 도시들이 그러한 사례임.

7) Bianchini & Parkins, 『Cultural policy and urban regeneration: The West European experience』, Manchester University Press, 1993.

8) 오동훈, 「문화공간 조성을 활용한 선진 도시재생 성공사례 비교 연구」, 『도시행정정보』 제23집 제1호, 2010, p.176.

- 그러나 곧 이러한 외생적 접근방식은 한계에 부딪히게 되었고, 지역의 고유한 문화나 자원을 보존하고 개발하는 ‘내생적 발전’을 추구하는 지역재생 전략에 주목하게 됨. 또한 지역문화가 지역 고유한 삶의 방식 및 생활양식의 총체라는 관점에서 지역정책에서 지역 내부주민들의 역량 강화 중요성이 강조되기 시작하였음.
- 김효정⁹⁾은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이 일차적으로 지역의 문화예술과 자원을 결합한 지역산업육성, 이를 뒷받침하는 문화적이며 친환경적인 환경 조성을 바탕으로 창의성이 발현될 수 있는 지역을 만드는 개발 형태라고 정의하였음. 또한 이러한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은 예술성, 쾌적성, 경제성과 함께 개발의 지속가능성이 확보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함.
- 김남일¹⁰⁾도 문화를 통한 지역 재생 정책은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을 근간으로 하고, 지속가능한 문화도시를 추구하며, 생산구조로서의 문화도시를 추구하고, 시민중심의 문화민주주의 구현의 장으로 추구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 오동훈¹¹⁾은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 전략은 특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데, 경제적 측면에서 도시 활성화 및 생산성 증대,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도시 이미지 및 문화적 정체성 형성, 공간환경적 측면에서 환경생태문제 개선, 정치적 측면에서 시민참여로서의 민주정치 구현 등의 방향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 즉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 개념은 문화적 특성을 지니고 있는 공간 단위를 대상으로 지역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의 주도적 참여와 자율권을 확대하면서 지속적으로 지역사

9) 김효정 외, 『문화를 통한 지역개발 사례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7, p.10.

10) 김남일, 「도시활성화를 위한 문화공간 복원 및 활용의 도시재생전략」, 『강릉학보』 vol.2, 2008.

11) 오동훈, 「문화공간 조성을 활용한 선진 도시재생 성공사례 비교 연구」, 『도시행정학보』 제23집 제1호, 2010, p.178.

회 발전과 유지가 가능한 개발 수단이라고 할 수 있음.

-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은 지역의 고유한 문화와 자원을 활용함으로써 지역 이미지의 품격을 높이고 지역 사람들의 관심을 실질적으로 집중시킬 수 있어 지역의 내적인 활성화를 만들어내는 구심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큼. 즉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은 지역의 고유한 문화와 관련된 요소들을 지역민 삶의 중심으로 놓음으로써 지역을 재생시키고 활성화시키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 중요성은 날로 증가하고 있음.
-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은 21세기 지역재생의 중요한 축을 형성하지만 지역재생 정책을 전반적으로 대신할 수는 없음. 지역을 둘러싼 광범위한 환경과 사회구조, 구성원 등 여러 요소가 종합적으로 관여하는 지역재생의 기법은 영역별로 다양하게 구축되어야 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은 전체 지역재생 정책에서 핵심적 교두보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중요한 지역재생 기법 중 하나라고 위치** 지을 수 있음.

2. 국내외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 정책동향

2.1. 해외 지역재생 관련 주요 정책동향

2.1.1. 유럽

1) 영국

- 도시재생, 지역재생 정책에 있어 영국은 다양한 경험과 정책을 선도하는 세계적 주창자라고 볼 수 있으며, 최근에는 창조경제, 창조산업의 주창자로서 지역경제 개발에 있어 창조산업으로의 재구조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음. 영국에서 도시재생은 ‘특정 지역에 대한 개별적 처방이 아니라 도시 전체의 발전을 위한 전략적 계획 하에서 지역의 경제, 사회, 물리적 상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통합적 시도’로 정립¹²⁾되어 왔음.
- 영국은 1980년대 추진되었던 개별사업 단위의 물리적 재생 중심의 시행착오를 개선하고자 1990년 초에는 지역기반으로 지역재생 지원 프로그램을 통합한 시티 챌린지(City Challenge)를 시행하였음. 시티 챌린지는 지방정부 제안서에 기초한 공개입찰경쟁의 상향식 지역재생 지원방식임. 이러한 지역기반 통합적 접근과 상향식의 장점은 1994년부터 시행된 통합재생예산(SRB: Single Regeneration Budget, 1994~2002)에서 계승되고 있음. 1994년 공식적으로 시작되어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는 통합재생예산(SRB)은 개별사업 단위의 물리적 정비방식에서 1990년대 이후 지역사회 기반 통합적 지역재생방식으로 토대를 전환하는 중요한 정책 계기가 되었음.

12) 최막중, 윤세형, 「영국의 통합재생예산(SRB)에 의한 도시재생 특성」, 『국토계획』 제44권 제3호, 2009, p.39. 재인용.

- 영국 통합재생예산은 ‘사업(project)’보다 ‘주제(theme)’를 중심으로 한 보조금으로 지방주도형 상향식 재생방식이라는 측면과 경제·사회·물리적 요소에 대한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재생방식이라는 두 가지 측면을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음.¹³⁾

〈표 1〉 통합재생예산(SRB)의 주제 및 세부목표

주제		지역재생의 세부목표
물리	도시환경 개선, 디자인 증진	질 좋은 디자인을 통해 도시환경과 인프라를 개선
	주거환경 개선	물리적 개선 및 관리와 유지 보수 지원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함
경제	교육, 기술, 고용기회 증진	지역주민들 특히 젊은이들의 교육과 기술을 지원하고 역량을 향상 시켜 고용기회를 촉진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지역의 경제그룹들의 비즈니스 지원을 통해 지역의 경쟁력을 만들고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촉진시킴
사회	지역안전, 범죄예방	범죄 예방을 통해 지역사회의 안전망을 향상
	소수취약계층 권익증진	소수취약계층의 이익을 위한 권익증진
	삶의 질 향상	지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문화 여가 활동 및 스포츠 활동의 기회를 제공, 건강을 유지

자료 : DCLG(2007:6)을 참조하여 재정리

출처 : 최막중, 윤세형, 「영국의 통합재생예산(SRB)에 의한 도시재생 특성」, 『국토계획』 제44권 제3호, 2009, p.46. 재구성.

- 통합재생예산은 1995년부터 2001년까지 6개 Round에 걸쳐 시행되며 봄에서 다음 해 봄까지 1년 단위로 이루어짐. 총 1,028개의 재생계획(scheme)에 대해 57억 파운드를 지원함¹⁴⁾. 2002년 이후 통합예산(SB)으로 전환하였고, 경쟁방식과 지역 쇠퇴정도를 고려하여 지역을 선정하고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파트너십을 전제로 한 보조금 지원으로 추진함.¹⁵⁾ 지원기간은 계획별로 5~7년간 지원하되, 지원 및 개선효과를 정기적으로 심사평가하여 계속 지원여부를 결정함.¹⁶⁾

13) 최막중, 윤세형, 「영국의 통합재생예산(SRB)에 의한 도시재생 특성」, 『국토계획』 제44권 제3호, 2009, pp.41~47.

14) 최막중, 윤세형, 같은책, p.44.

15) 양재섭, 「영국·일본의 도시재생정책과 시사점」, 『서울정책포커스 제43호』,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7, p.9.

16) 양재섭, 같은책, p.9.

- 다음은 영국 도시재생정책의 추진기구와 보조금(기금)에 관한 흐름¹⁷⁾ 도입.

〈표 2〉 영국 도시재생정책의 추진기구와 보조금 지원제도

연도	정당	도시재생 추진기구	보조금 프로그램
1979 1981 1982 1986 1988 1989	대처 보수당	도시개발공사(UDC)	도시개발보조금(UDG) 도시재개발보조금(URG) City Grant
1990 1992 1993 1994 1996	메이저 보수당	English Partnership	City Challenge 통합재생예산(SRB)
1997 1998 1999 2001 2002 2003 2006	블레어 노동당	지역개발청(RDA) 도시재생회사(URC) 해산 일부 재설립	커뮤니티뉴딜기금(NDC) 근린재생기금(NRF) 통합예산(SB)

- 1997년 영국 노동당 블레어 정부 이후에는 지역주체 간 파트너십을 더욱 강조하는 지역재생 정책지원모델로 통합재생예산 외 커뮤니티 뉴딜기금(NDC: New Deal for Communities, 1998~현재)과 근린지역재생기금(NRF: Neighborhood Renewal Fund, 2001~현재)이 새롭게 등장하였음.
- 커뮤니티 뉴딜기금(NDC)은 커뮤니티의 재생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17) 양재섭, 「영국·일본의 도시재생정책과 시사점」, 『서울정책포커스 제43호』,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7, p.6.

통합재생예산에서부터 시작된 지역기반의 통합적 접근과 상향식 정책실행이라는 장점을 유지하는 가운데, 개별 조직이나 개인이 아닌 지역의 여러 **주체간의 파트너십을 보조금수급대상으로 설정하여 10년 기간의 계획을 지원하는 정책모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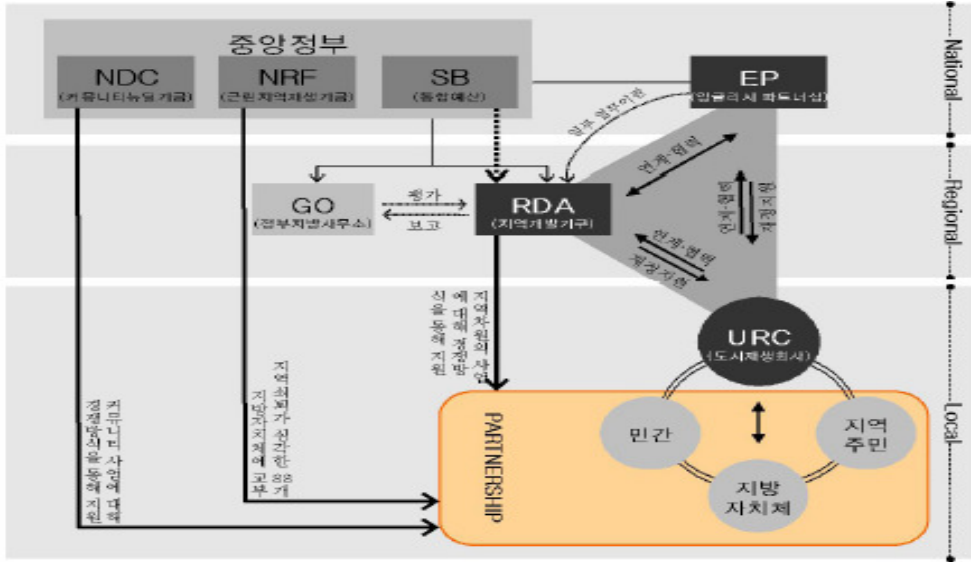
- **근린지역재생기금(NRF : Neighborhood Renewal Fund)**은 2001년 블레어 정부의 ‘근린재생 국가전략(A New Commitment to Neighbourhood Renewal : National Strategy Action Plan)’을 구현하기 위해 **근린지역 단위의 마을재생사업 지원정책을 한층 강화한 것**임.¹⁸⁾ 쇠퇴지역 지자체에 집중적인 재정지원을 실행하고자 빈곤, 범죄, 의료 및 교육 분야 등의 문제에 따른 **지역쇠퇴지수에 따라 재원을 배분하는 정책모델**임.
- 한편, **1998년 이후 영국에서의 지역재생 정책은 커뮤니티의 재생과 이를 위한 주체간의 파트너십을 점차 강화하는 쪽으로 전개되고** 있음. 근린지역재생기금을 통한 마을재생사업에서는 해당 지역의 지방정부·학교·경찰조직·자원조직 등 **지역전략 파트너십(Local Strategic Partnership)**을 조직하여, 사업계획 수립 및 지원받은 근린지역재생 자금에 대한 집행 권한을 갖도록 하고 지방정부가 이를 책임 관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음.¹⁹⁾ 이와 같이 지자체가 보조금 수급 대상으로 총 88개 지자체에 7년 동안 29억 파운드를 지원하였음.
- 또한 **영국은 민-관 파트너십에 의해 독자적으로 설치된 지역발전기구 RDA(Regional Development Agency)를 설립**하여 2007년 약 22억 파운드에 달하는 물리적 재생 및 경제 재개발을 담당하고 추진하고 있으며, 경제구조를 조정하고 RDA의 지방분산형 구조를 조정하는 새로운 거버넌스 및 전달구조를 구축하였음²⁰⁾.

18) 엄철호 외, 「지역기반 건축·도시프로그램 지원 네트워크 구축 및 코디네이터 기능 활성화 방안연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2009, p.17.

19) 엄철호 외, 같은책, p.17.

20) 배진희, 임수경, 「영국지역발전기구(RDA)에 대한 평가체계 분석」, 한국산업기술평가원, 2007.

(그림 3) 영국의 도시재생 추진체계



출처 : 양재섭, 「도시재생사업의 추진동향과 정책과제」, 『건설주택포럼 2008년 세미나 자료』, 2008, p.21.

- 영국의 RDA는 지역단위에서 운영되는 준 자율조직으로서 1998년 제정된 지역발전기구법(Regional Development Agency Act)에 따라 1999년 4월 지역별로 1개소씩 8개의 RDA가 설치되었고, 2000년에는 런던권역에 1개의 RDA가 설치되어 총 9개의 RDA가 운영되었음. 지역경제발전을 지방정부에 일임하거나 중앙정부 부처가 주도하기보다는 지역별로 사무소(Agency)형태의 전담기구를 두어 전문적·종합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설립됨.
- 전국단위의 RDA는 국내외 기업유치와 고용창출을 주요전략으로 지역의 산업·경제발전 지향적 업무를 중점적으로 수행하며, 지역단위의 RDA는 경쟁력 있는 집적 경제단위로서 경제발전뿐만 아니라 지역의 물리적·사회적 쇠퇴와 부흥, 서비스 개선 등 지역사회의 전반적인 발전 시책을 추진하였음.

- RDA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클러스터 형성, 지역 내 인프라 구축 사업의 타당성 연구, 지역연구, 네트워크 지원,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 등과 같은 사업을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이는 추가재정 확보의 어려움에 따른 투자수단의 다양화 및 확보와도 연관이 높음.
- 이후 **2010년** 출범한 연합정부는 강력한 지자체를 표방하며, 지역발전에서 민간 협력을 강조하며 **기존 RDA정책을 30~50개의 지역기업 파트너십(LEP: Local Enterprise Partnership)방식으로 전환함.**
- 이는 기존 RDA의 시행을 통해서 지역 간 격차 및 지역 내 격차가 완화되지 않은데다 RDA 성과가 대체로 공공부문 투자에 의존하여, 지방산업계를 중심으로 한 민간부문의 성장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임. 또한 권역설정 문제, 추진기구 거버넌스와 운영방식 변화의 필요에 의해서 추진되었음. 근본적인 원인은 금융위기에 따른 국가 재정문제 즉, 재정지출의 삭감모색, 또한 노동당 집권 동안 해체된 대도시 지역의 부활과 RDA 권역 내의 도시지역 간 갈등문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정치적 의도가 포함된 것으로 분석함.²¹⁾

〈표 3〉 RDA와 LEP의 특징

구분	권역	지배구조	재원	기능
RDA	잉글랜드 9개 지역 : 한국의 5+2 광역권과 유사	RDA 이사회(Board)와 지역위원회 (LALB) 위원을 중앙정부에서 임명	6개 중앙정부 부처의 예산을 포괄보조금 형태로 각 RDA에 중앙정부가 배분	권역계획,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 교통 등 포괄적 지역경제 개발가능
LEP	통근권 중심의 기능적 경제권: 잉글랜드 내 30~40개 권역(한국의 3~4개 시군통합 규모)	LEP 이사회(Board)위 원의 50% 이상을 지역기업인 중에서 선출, 기업인이 의장직 수행	LEP가 신청한 사업계획을 심사하여 지역성장기금에 경쟁적으로 배정(2011~24년 한정)	기존의 RDA 기능 중 해외 투자유치, 국제무역혁신, 기업투자지원 등은 중앙정부 수도로 전환

출처 : 김재홍, 『잉글랜드 광역경제권 정책의 전환: RDA의 폐지와 LEP 창설을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제 15권 제1호, 2011, p205.

21) 권영섭 외, 『국토 및 지역발전 정책의 평가와 효율적 추진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2012.

- LEP는 RDA와 달리 법적 지위를 가지지 않는 카운티 수준의 지방자치단체들이 민간부문과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중앙정부에 입찰하는 방식으로 선정됨. LEP 제안서는 산업계로부터의 지원, 자연적 경제 지리(기능지역), 해당 지방정부의 지원, 부가가치 및 발전목표 등 4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되고 승인됨. 투자유치, 혁신, 금융지원 등 핵심 경제정책 업무가 중앙정부로 이관된다는 점에서 지역정책의 중앙집권화는 강화될 소지가 큰 것으로 전망됨.
- 그런데 RDA에서 LEP체제로 전환되면서 공공부문의 개입이 줄어들고, 각 지자체별로 자체적인 예산 조달에서 어려움이 발생함. 또한 지역성장기금(Regional Growth Fund)이 지역 사업주체 경쟁방식으로 사업비를 획득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이외에 예산지원 없음으로 인해 RDA보다 더 중앙정부에 의존될 가능성이 대두됨. 이에 경쟁력 있는 지역과 낙후된 지역의 차이, 지방정부의 권한 축소 등으로 인하여 지역 간 상당한 의견차를 보여, 현재까지 LEP가 설립되지 않은 지역도 있음. 일각에서는 지역성장기금(RGF)이 경쟁방식으로 사업비를 지원하며, 정밀실사 과정을 거쳐 효율성을 배가하는데 반하여, 대규모 회계·건설업체 수입만 증대시킬 뿐 실제로 RDA에 비해 재정지원의 효과성이 적다는 평가도 있는 상황²²⁾임.

〈표 4〉 영국 지역재생 정책동향

정책의 동향	시사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ity Challenge - Single Regeneration Budget - New Deal for Communities - Neighbourhood Renewal Fund - Local Strategic Partnership - Regional Development Agency - Local Enterprise Partnershi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80년대 개별사업 단위의 물리적 지역재생 시행 착오를 넘어 1990년 이후 지역 기반의 물리적 환경 개선, 경제개발 및 재구조화, 사회적 결속력, 삶의 질 등을 향한 통합적 지역재생 전략 추진 - 지역기반, 통합지역예산, 10년까지의 장기지원 - 커뮤니티 재생, 여러 주체 간 파트너십 강화 - 강력한 지자체, 근린지역의 강조

22) 정준호, 「영국 보수당 연정의 지역발전 재정지원제도-지역성장기금(Regional Growth Fund)」, 『지역과 발전』 vol10, 2013, pp.38-40.

2) 프랑스

- 프랑스는 주정부 주도로 도시설계가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 및 빈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외곽지역이 무분별하게 개발됨에 따라 저밀도 도심지역 개발, 사회적 통합을 통한 실업문제 해결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시재생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주정부는 PNRU(National Program for Regeneration)와 ANRU(National Agency for Urban Regeneration)를 통해 국가보조금과 지방자치정부들의 분담금을 매칭 조성하여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 PNRU(National Program for Regeneration)²³⁾는 **프랑스의 보를로 법 1권 2장에서 규정하는 도시재생 시행 프로그램으로 사회통합,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주요 목표 하에서 도시취약구역을 재구조화하는 것**임. 지역주택계획을 고려하여 수립된 이 사업은 도시정비사업, 주거개선사업, 주택 철거 생산, 공공시설 재생·철거·재구성, 경제·상업활동 공간의 재구성, 또는 도시재생 관련 투자를 포함함. 보를로 법을 통해 PNRU는 사회취약계층이 지리적으로 한 지역에 밀집 거주하는 것을 방지하고, 도시 내 다른 지역과의 혼합을 촉진해서 지역 활력을 창출하고자 함. 또한 이를 통해 도시기능을 다양화하고 주택 다양성을 촉진하며 격리된 사업지구를 도시 안으로 포함하고자 함. 재생사업이 저소득층 거주지역의 실업률 감소, 경제발전 및 학교교육과 의료혜택의 접근성 제고에 기여하도록 하고 있음.
- 2004~2008년까지 PNRU 시행을 위해 25억 유로가 할당 지정됨. 매년 최저 금액이 465백만 유로 이하일 수 없도록 규정되었음. 이 금액은 정부와 경제사회연합, 예금공탁금고 등에서 지원함. 또한 정부는 사업시행을 위해 3억 5천만 유로에 해당하는 금액을 빌려줌. 재생사업 후에는 부지, 건축물의 관리 판매 등으로 마련할 수 있음.

23) 이성근, 최민아, 「보를로법에 의한 프랑스 국가도시재생프로그램(PNRU) 및 도시재생사업 특성에 관한 연구」, 『국토계획』 제47권 제4호, 2012, p22.

- ANRU(National Agency for Urban Regeneration)²⁴⁾는 2004년 2월 9일 시행령에 의해 설립 도시재생관련 자금을 취합하는 단일기관으로 지자체와 그 외 도시재생사업시행기관에 재정지원을 담당함. ANRU는 도시재생사업의 진행을 단순화하고 지자체와 임대주택사업자의 사업진행을 촉진하고자 함. 중앙정부 및 관련지자체 대표들로 구성된 위원회에 의해 운영되며 이들은 재정지원과 함께 설립목적에 적합한 지자체 공모안을 선정하고 실행, 모니터링 함.
- ANRU는 유일한 교섭상대자로서의 역할을 통해 재정지원을 보장하고 세부적 실행계획과 함께 사업시행의 역할을 함. 재정지원은 다년 지원이 가능함.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선 재정지원을 하고 9달 동안 모니터링을 하며, ANRU 위원회(36명)는 예금공탁금고, AL, ANAH 등 주택관련 기관, 도·광역시도 지자체 대표자의 네 부문으로 구성되어 주요 프로젝트에 대해 논의하고 투자 및 PNRU의 방향성, 규칙 및 협약 등을 결정함.
- ANRU는 개별사업에 대한 재정지원과 함께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과 재생사업을 종합, 총괄하는 기능을 함. 재생사업 추진현황 검토는 매년 시행되며 보틀로법에서 명시된 지표에 의해 평가됨. 또한 “협의개발지구(ZAC: Zone d'aménagement concerté)”를 지정하여, 사업운영자에게 지침을 제공하고 수용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도시 외곽의 무분별한 개발 방지, 사회적·재정적 통합, 에너지의 지속가능성, 시민들의 역량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음.
- “협의개발지구(ZAC)”²⁵⁾는 프랑스에서 “우선도시화지구(ZUP: Zone à Urbaniser en Priorité)”라는 도시개발기업이 성행 후 1976년에 만들어진 것임. “우선도시화지구” 사업이 주택건설에만 집중되었던데

24) 이성근, 최민아, 「보틀로법에 의한 프랑스 국가도시재생프로그램(PNRU) 및 도시재생사업 특성에 관한 연구」, 『국토계획』 제47권 제4호, 2012, p.23.

25) 박현찬, 「프랑스 협의개발지구 제도 검토 및 파리의 사례」, 『건축과 사회』, 2006, pp.98~107.

반해, “협의개발지구” 기법은 다양한 도시개발목적에 활용하고자 하며 사업구역 내 공공시설에 관한 공공부문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려고 시도함.

- 공공부문 주도로 이뤄지는 공공시설 사업계획의 일종으로 여러 사업 주체가 도시공간의 다양한 기능을 위해 활용,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지정권한을 가지며 시의회의 의결을 통해 개발지구가 지정됨. 파리, 리옹, 마르세유와 같은 대도시에서는 시장이 자치구 의회의 동의를 구해야 함. 실행방식은 공공개발 사업이지만 민간부문의 참여가 활발하여 24%는 공공, 47%는 민간에 의해 실행됨. 재정적으로도 지자체와 중앙으로부터의 자립을 위해 민관합동 개발방식을 시작함.
- 대표적 사례로 파리의 1979년 시트로앵 협의개발지구, 1986년 뤼이 협의개발지구, 1987년 베르시 협의개발지구, 1990년 센리브고슈 협의개발지구가 있음. **다목적, 사전의견수렴 보장, 다수의 참여, 상위 지역계획과의 연계성,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보장 등 우선도시화지구와 구분이 되는 시사점을 안김.**

〈표 5〉 프랑스 지역재생 정책동향

정책의 동향	시사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ational Program for Regeneration - National Agency for Urban Regeneration - ZAC; Zone d'aménagement concerté (Concerted Development Zone) - ZUP; Zone à Urbaniser en Priorit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 외곽의 무분별한 개발 방지, 사회적·재정적 통합, 에너지의 지속가능성, 시민들의 역량 강화에 주력 - 협의개발지구 등의 제도적 전개를 통해 다목적, 사전 의견수렴 보장, 다수의 참여, 상위 지역계획과의 연계성,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보장

2.1.2. 미국

- 미국은 영국과 거의 유사한 시기에 지역재생 관련 사회적 흐름이 조성되었는데, 영국과 차이가 나는 지점은 공공정책에 의한 드라이브보다는 미국 시민사회의 특성과 맥락에 따라 **시장경제 중심으로 지역개발, 지역재생이 활성화**되었다는 점임. 때문에 미국에서는 지역재생이라는 용어보다는 장소마케팅, 도시마케팅의 개념, 즉 지역 마케팅 차원에서 추진된 경향이 강함.
- 최근 미국에서는 쇠퇴한 산업도시의 경제재생 지원정책이 **세금감면 위주의 인센티브 제공방식에서 지역의 핵심자산 육성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는데, 지역이 가진 핵심자산에 투자하도록 파트너십을 활용하는 포괄적인 접근방식이 주목받고 있음**²⁶⁾
- 1970년대에는 전국 규모의 비영리사업 조직인 내셔널 트러스트에 의한 ‘메인 스트리트 프로그램’이 시작되면서 지역 차원의 마을 보존에 대한 중요성이 널리 인식되었음. 현재까지도 왕성하게 지속되고 있는 이러한 지역 주민 참가 프로그램들은 ‘내부’로부터 경제활동의 활성화를 지원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음.
- 역사문화적 건축물을 통한 지역재생의 경우, 최근에는 비교적 가까운 과거(近過去)의 유산 보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각 시대의 최첨단 기술과 디자인으로 건설되었던 것 중에는 도시경관 속에서 랜드마크가 되는 경우도 있음²⁷⁾
- 도심재생 관련 프로젝트에서는 **생활 속 주요 공간들이 ‘축제의 장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이러한 축제의 장이 다시 상업 활동으로 이어**

26) 이왕건, 「미국 쇠퇴 산업도시의 도시경제 재생전략 시사점」, 『국토정책브리프』 285호, 2010.

27) 20세기 전반에 계획된 주택가 혹은 교외 주택가에서 볼 수 있는 보존 관계자들이 꺼려하는 알루미늄 계, 석면재 등의 외장재에 대해서도 최근에는 역사적이라고 판단.

지는 일종의 "festive market place" 성격의 공간재생 흐름이 활성화되고 있음. "festive market place"는 제임스 라우즈(James W.Rouse) 와 그의 회사에 의해 고안된 아이디어로 벤자민 C. 톰슨의 제후로 인해 20세기 후반 도심 지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제안됨.

〈표 6〉 미국 지역재생 정책동향

정책의 동향	시사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쇠퇴한 산업도시의 경제재생 지원정책에서 지역의 핵심자산 육성방식으로 변화 - 지역주민참가 프로그램들을 중심으로 “내부” 로부터 경제활동의 활성화에 주목함 - 생활 속 주요 공간을 축제의 장이자 상업공간으로 연계하는 “Festive market place” 흐름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 중심의 장소마케팅에서 지역이 가진 핵심자산에 투자하도록 파트너십을 활용한 재생정책으로 변화 - 역사문화적 건축물을 통한 지역재생의 경우, 비교적 가까운 과거의 유산 보존에 대한 관심 증가

2.1.3. 아시아

1) 일본²⁸⁾

- 1990년대 이후 2002년까지 일본 경제는 동경 등 대도시의 국제경쟁력 하락, 버블경제의 붕괴 등으로 실제적 침체 상태가 지속됨. 또한 낙후된 기성 시가지 재정비 및 지진 대비 관련 사회적 필요와 더불어 OECD 차원에서의 도시재생 권고를 받아들여 고이즈미 내각이 들어선 2001년 이후 도시재생정책이 추진되기 시작함.
- 2001년에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도시재생본부가 설치되었고, 2002년 도시재생특별조치법 제정, 2003년 지방도시 지역재생을 촉진하는

28) 양재섭, 김정원, 「일본의 도시재생정책 추진체계와 시사점」, 『경제포커스』, 2007
 양재섭, 「영국 일본의 도시재생정책과 시사점」, 『서울정책포커스』, 2007, 시정개발연구원. 두 보고서 내용참조 재구성.

“마치즈쿠리 교부금”제도가 도입되면서 지역재생 관련 추진기구, 기금, 지원프로그램 등이 본격적으로 정비되었음.

- 그러나 일본의 도시재생 정책이 지방자치시대에 역행하는 하향식 접근방식, 대도시 위주의 정책추진, 민간개발업자 중심의 규제 완화, 경제재생에 치우친 도시재생 정책 및 다양한 재생 프로그램 및 주민 참여의 저조함, 초고층 아파트 등의 부동산 개발 붐과 같은 역기능의 양산 등 비판적 요소를 수반하게 됨.
- 한편 1995년 지방자치법 제정 이후, ‘도시재생’과 ‘창조도시’에 대한 정책적 관심을 넘어 지역 내부에서의 자발적 관심도 증대되었으며, 지역 내 무수히 존재하는 NPO 법인과 지자체가 결합해 크고 작은 시·군들이 ‘마을만들기’에 힘을 쏟고 있음. 일본은 NPO 법을 제정함으로써 시민사회의 사회공헌활동을 보다 용이하게 하고 공익성을 강화함. 우수한 법인은 선별되어 세법상의 특례가 부여됨. 2011년 기준으로 NPO 법인으로 인증 받은 법인 수는 195,226개소임. NPO 법인에는 17개 활동 분야가 있고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분야는 보건, 의료, 복지 분야로 57.7%임. 문화, 예술, 스포츠 분야는 33.6%임.

〈표 7〉 일본 지역재생 정책동향

정책의 동향	시사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정부 도시재생본부 설치(2001) - 도시재생특별조치법 제정(2002) - 도시재생을 위한 다양한 기금 설립과 운영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0년대 이후 국가정책으로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되기 시작함 - 도시재생정책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하향식, 대도시 중심, 지역주민의 배제, 경제재생 위주, 제2의 개발붐 조성 등 비판적 요소를 수반하게 됨. - 마을만들기 차원의 지역 내적 프로그램이 주민들의 자발적 NPO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운영되기 시작함.

2) 싱가포르

- 싱가폴은 인구 700만이 넘는 도시국가로 르네상스 시티 프로젝트와 같은 통합적 도시재생 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프로젝트가 본격화된 것은 1999년부터이며 성과를 거두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 중반 이후임. 경제적으로는 제조업 중심에서 21세기 들어 지식경제시대로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개인의 1인당 GDP가 3만 7천 달러에 이르는 성과를 이루고 싱가포르가 가진 ‘다양성’이라는 강점을 활용한 경제발전 모델을 가지게 됨. 또한 창조산업을 중심으로 인적자원의 우수성과 창의성이 직결됨.
- 정부가 강력한 주도권을 가지고 시민들의 문화예술의 질을 향상, 참여하는 기회를 직접적으로 확대함.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축적한 문화예술적 토양은 다소 척박하나 정부 주도의 공공성을 통해 사회통합을 이룸.
- 도시국가 싱가포르에서 1980~90년대의 경기침체를 분석하면서 다양한 국가전략(도시전략)을 모색하는 가운데 **1997년도에 본격적으로 시작한 르네상스 시티 프로젝트(Renaissance City Singapore)를 추진하게 됨.**
- 이 프로젝트는 **강변이 중심이 된 도시재생 기획으로 진행됨. 강변에 전통가옥을 살려 새로운 건물과 대비되는 경관을 의도적으로 조성하고 같은 맥락에서 에스플러네이드²⁹⁾와 같은 문화적 랜드마크로 세계적인 복합공연장을 설립함.**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거점 도시로서의 지향을 가지고 있는 싱가포르에는 잘 갖추어진 호텔 인프라들이 있고, 이러한 여건 속에서 에스플러네이드가 하나의 상징적 문화적 장

29) Esplanade는 싱가포르 정부가 '밀레니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2000년 10월 개관한 아시아 최대 규모의 복합문화예술공간으로 약 15년간의 사전기획과 공간건축 및 운영설계의 과정들이 있었다. 시내 중심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변의 잘 갖추어진 호텔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다양한 예술, 문화 프로그램과 컨벤션 산업이 복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소로 상징화 되면서 도시 전체의 매력적 유인 요소를 강화하였음.

- 싱가포르를 **예술을 위한 국제도시(Global City for the Arts)**를 표방하며 **예술과 문화의 발전을 지역경제와 통합하여 창조적 문화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고자 하였고, 현재까지 비교적 성공사례로 평가받고 있음.**

〈표 8〉 싱가포르 지역재생 정책동향

정책의 동향	시사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80~90년대 경기침체 이후 1997년부터 현재까지 국가 차원의 통합적 도시재생 정책으로서 르네상스 시티 프로젝트(Renaissance City Singapore) 추진 - 예술을 위한 국제도시(Global City for the Arts)를 표방 - 정부 주도의 강력한 공공성을 실현하는 방식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국가 규모와 특성에 맞는 통합적 도시재생정책의 추진 - 장기적 관점에서 일관된 전략을 지속적 추진 - 강변 중심으로 도시재생 전략을 추진하면서 에스플러네이드와 같은 국제적 특성을 강화한 문화공간 아이콘을 적극 활용함

2.1.4. EU/유네스코 차원

1) EU 유럽문화수도 지정제도

(1) 추진배경

- **1984년 그리스 델피**에서 열린 유럽공동체 문화부장관과 유럽의회 문화위원회 모임에서 **그리스 문화부장관 멜리나 메르쿠리(Melina Mercouri)의 발의로 시작**되었음. 문화, 예술, 창의성이 기술, 상업, 경제적 교역만큼 중요한 시대에 맞추어 예술가 및 지식인들의 소통과 교류가 필요함을 주장, 해마다 문화도시를 지정하여 유럽인들의 문화적 자부심을 공통으로 키워나가고 유럽 내에서의 문화교류 활성화를 제안, **1985년 아테네가 처음 지정되면서 현재까지 지속됨.**

(2) 지정제도 개요

〈표 9〉 EU 유럽문화수도 개요

구 분	내 용
정책목표	“유럽 문화의 풍요로움과 다양함, 그리고 공통의 특징을 재조명하는 한편 유럽인 상호간의 심층적인 이해증진을 도모한다.” (1995년 5월 15일, 유럽의회와 유럽이사회가 채택한 ‘결의문 1419호’ 제 1조)
정책개념	유럽문화수도(European Capital of Culture, ECO) 유럽 연합 가맹국의 도시를 매년 선정하여, 1년간에 걸쳐 집중적으로 각종 문화 행사를 전개하는 사업
정책유형	다양한 중장기 혹은 단기 문화활동(유럽문화수도)에 대한 직접적 지원 -EU의 문화활동 지원 프로그램
선정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럽인들이 공유하면서 공헌하고, 영감을 준 예술동향, 스타일을 강조할 것 - EU의 다른 개별 국가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문화행사를 촉진하고, 지속적인 문화협력을 이끌며 EU 내에서 이러한 움직임을 배양할 것 - 창조적인 작업을 지원하고 발전시킬 것 - 보다 넓은 범위의 참여, 이동 보장할 것 - EU 시민들의 방문을 장려하고, 가능한 넓은 범위의 관객 접근을 촉진할 것 - 유럽 문화와 다른 지역 문화 간의 대화를 장려할 것 - 역사적 유산, 도시건축과 도시의 삶의 질을 강화할 것
선정대상	EU 회원국

- 2004년까지 ‘유럽문화도시(European City of Culture)’로 추진되다가 **2005년 이후 ‘유럽문화수도(European Capital of Culture)’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사업내용도 심화됨. 선정도시는 최소 6년간의 과정을 거쳐 지정되고 유럽연합 기준에 맞춰 프로그램을 준비함.

(3) 지정현황

- 2000년에는 21세기를 맞이한 특별 이벤트로 9개 문화도시가 지정됨. 동서남북의 도시들이 선정되어 유럽의 새로운 시대에 대한 자축과 부활을 꿈꾸는 상징적 특별행사로 기획됨. 이 9개 도시는 사업 전반에 걸쳐 협의, 협력, 조정하는 일시단체인 유럽문화도시 연합을 형성하였음.(AECC: Association of European Cultural Cities)³⁰⁾

〈표 10〉 유럽문화수도 연도별 지정현황

순번	지정연도	지정도시	순번	지정연도	지정도시
1	1985년	아테네	15	1999년	바이마르
2	1986년	피렌체	16	2000년	아비뇽, 베르겐, 볼로냐, 브뤼셀, 크라코우, 헬싱키, 프라하, 레이카비크,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3	1987년	암스테르담	17	2001년	로테르담, 포르투
4	1988년	베를린	18	2002년	브뤼헤, 살라만카
5	1989년	파리	19	2003년	그라츠
6	1990년	글래스고우	20	2004년	게누아, 릴
7	1991년	더블린	21	2005년	코르크
8	1992년	마드리드	22	2006년	파트라스
9	1993년	안트워프	23	2007년	룩셈부르크, 시비우/헤르만슈타트
10	1994년	리스본	24	2008년	리버풀/스타방가
11	1995년	룩셈부르크	25	2009년	린츠/빌뉴스
12	1996년	코펜하겐	26	2010년	에센/이스탄불/페치
13	1997년	데살로니카	27	2011년	탈린/투르쿠
14	1998년	스톡홀름	28	2012년	기마랑이스/마리보르

(4) 시사점

- 이 제도는 1985년부터 지금까지 장기간 지속적으로 시행되면서 **유럽 문화수도로서 장소 매력도를 높인 일부 도시를 통해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왔음. 최소 4년 이상의 준비기간을 거쳐 1년간 문화수도로서 활동함으로써 해당 도시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이 전 세계에 광범위하게 홍보되고 그에 수반하는 여러 형태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연계하였음.
- 이러한 과정 속에서 **유럽의 “문화도시” 브랜드를 전 세계적으로 확산**

30) 임문영, 「유럽연합(EU)의 문화수도(文化首都)와 그 시사점」, 『한국프랑스학논집 제55집』, 2006, p.463.

하였음. 유럽문화수도에 영향을 받아 아메리카와 아랍 지역에서도 유사한 문화수도인 **아메리카문화수도(American Capital of Culture)**, **아랍문화수도(Arab cultural capital)**가 **계획**³¹⁾되는 등 국제적으로 문화도시 지정제도의 정책 계기를 적극적으로 제공함.

- 그러나 이러한 경향은 유럽 전역에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의 정책 이슈를 확산하는 순기능도 보여주지만 동시에 도시 간 경쟁을 부추기는 역기능을 보여줌. 유럽의 도시를 문화적으로 융합하고 도시마다의 문화적 비전을 높이기 위해 시작된 제도이지만 **현실적으로는 변화하는 시대 환경 속에서 도시간의 경쟁적인 구도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음.** 단일 프로젝트가 아닌 도시 자체를 문화화 하는 것들에 대한 개념이 정책적으로 확산된 만큼 대규모의 외부 투자를 확보할 수 있고 관광인프라 등이 설립되어 실질적인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도시 사이의 경쟁을 가속화하는 역기능이 존재함. **또 문화도시로 지정된 후에도 빨리 좋아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전략적 관점으로 접근하자고 하면서도 상징적 프로젝트(flagship project) 위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았음.**

2) EU 상호문화도시 프로그램

(1) 추진배경³²⁾

- 유럽사회는 그간 문화, 언어, 사회, 종교, 지역 간 이질성이 심화되고, 국가와 민족 간 문화적 차이에 대한 인식기반이 허약해지면서 이를 해소하고 다원성을 실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게 됨. 1990년대 유럽연합의 통합과정에서 유럽의 공통된 정체성을 만들하고자 다양한 문화적 배경의 유럽 시민들을 동참하게 하는 방법으

31) 임문영, 「유럽연합(EU)의 문화수도(文化首都)와 그 시사점」, 『한국프랑스학논집 제55집』, 2006, p.467.

32) 홍종열, 『유럽연합(EU)의 문화정책 연구 : 글로벌라이제이션 전략을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2011.

로 유럽시민권 제공, 문화인적교류를 시행함. 유럽연합의 문화창조 산업정책 녹색에도 “창조성의 근원은 지역이고 그 도달점은 세계이다”라고 제시하는 등 유럽연합 27개국의 조화로운 공존 추구하고 독특한 지역들의 고유성 유지를 중시하고자 함을 분명히 명시함.

- 유럽의 ‘상호문화도시 프로젝트’는 이러한 상황 인식 속에서 유럽 도시 내 문화다양성을 어떻게 구현하고, 도시 내 문화다양성 실현에서 타 도시 사례를 보고 배우며 상호 피드백을 통한 제3의 길 모색 등을 추진하고자 유럽연합과 유럽평의회가 공동으로 시행한 정책임.

(2) 지정제도 개요³³⁾

- 이 제도의 주요 내용은 현지인과 이민자가 상호작용하며 더불어 살아가기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는 모범 도시를 상호문화도시로 선정하는 것임. 제1단계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제2단계는 2011년 초부터 2012년 말까지 2년간 지속됨.

〈표 11〉 EU 상호문화도시 프로그램 개요

구 분	내 용
정책목표	· 시범도시 중심으로 이민과 통합, 사회적 결속을 화두로 하는 문화 간 접근에 관한 폭넓은 논의와 정책입안을 자극 · 시범도시 대상으로 도시의 다양성을 경영하는 종합적인 상호문화전략 발전 · 유럽의 다른 도시들에게도 영감을 줄 수 있는 활동 추진
정책개념	유럽의 도시 내 문화다양성 경영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하는 프로젝트
정책유형	유럽평의회와 EU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유럽도시개발 프로그램
선정기준	· 상호문화적 인프라 구축상황 · 도시의 고유한 전통과 경제여건 · 구성원들의 의지와 노력 · 최근 도시에서의 상호문화성 발전 잠재력 · 도시의 문화다양성 장점 이해도 · 이민에 대한 긍정적 시각과 프로그램 참여도
선정대상	유럽평의회 47개국 회원국 중

33) 오정은, 『유럽의 상호문화정책연구 : 상호문화도시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다문화와 평화』, 성결대학교 다문화평화연구소, 2012.

- 프로그램의 진행과정은 상호문화에 대한 개념 소개, 유럽 도시들의 시공무원, 행정가 및 기타 이해당사자들과의 토론, 상호문화도시 선정을 위한 서류검토와 현지조사 같은 평가작업 등으로 구성. 전문가 위원회 같은 외부 전문가가 지속적으로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함.
- 우수 상호문화도시 평가는 스위스 Bassel에 위치한 연구 및 컨설팅 전문기관인 BAK Basel에 의해 개발된 지표를 사용. 즉, 상호문화도시 지표(Inter-cultural City Index)를 근거로 하여 유럽 상호문화도시의 상호문화성을 측정하는 과정으로 운영됨. 지표는 상호문화도시 뿐만 아니라 유럽 전역의 도시에서 상호문화성을 측정하는데 공신력 있는 도구처럼 활용됨.

(3) 지정현황³⁴⁾

(그림 4) EU 상호문화도시 프로그램 선정도시 현황



출처 : Council of Europe 홈페이지 <http://www.coe.int>

34) 오정은, 『유럽의 상호문화정책연구 : 상호문화도시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다문화와 평화』, 성결대학교 다문화평화연구소, 2012.

- 본 제도는 1단계 사업에서 11개 도시 선정, 제 2단계에서 10개 도시가 선정되어 총 21개 도시로 운영됨. 각 도시마다 역사적으로 이민자의 유입이 많거나 문화다양성이 오랫동안 형성된 환경을 가지고 있음. 지역에서 다양한 상호문화 관련 사업들이 상호문화도시 프로젝트 진행 중 활발하게 이루어져 시민들의 다양성 이해도가 높아짐.
- 폴란드 Lublin 시의 경우, 시민들이 자원봉사 형식으로 참여하는 가운데 NGO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짐. 네덜란드 Tilburg시는 이전에 다문화주의에 입각한 정책 사업들이 추진되었으나, 상호문화도시 프로그램 참여 후 일반시민과 이민자 사이의 교류증진에 초점을 둠.
- 1단계 사업 후 2단계 사업에서는 네트워크가 더욱 활성화되며 각 도시들은 서로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 지속적인 협력을 이룸. 또한 정회원 외에 준회원 도시들이 상호문화성 개발을 위해 자체평가를 실행하고 타 도시와 교류하며 상호문화도시 발전을 도모함. 미국의 Lodi, 멕시코의 Mexico city, 캐나다의 Montreal 같은 유럽 이외 지역 도시들도 참여함.

(4) 시사점

- 이 프로젝트의 ‘상호문화주의(inter-culturalism)’는 기존의 다문화주의에서 나타났던 소수자 그룹 집단 거주지 방치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모든 문화적 배경의 사람들이 사회 안에서 교류·화합함으로써 실질적인 인종간 화합의 해결책을 모색하도록 장려함.
- 상호문화도시 프로젝트 실현을 위한 세부 영역들로는 ①교육 ②공공장소 ③거주지 ④이웃이 있으며,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그룹들이 상호 접촉하고 공동 활동을 하도록 각 영역들에 대한 투자와 개선이 이루어짐.

〈표 12〉 상호문화도시 프로그램을 실행을 위한 전략

1. 문화다양성에 대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정책방향을 발전시키도록 유도
2. 상호문화 간 렌즈를 통한 도시 기능의 활성화를 위해 시범정책 추진
3. 이문화간 공동체들의 갈등에 대한 문제를 인정하고 해결방안을 위해 정부부처와 시민단체들의 공동의 노력과 방안을 만들
4. 언어로 인한 거리감 해소를 위해 이주민들이 제1공용 언어는 물론 소수민들의 언어 역시 균형적으로 배울 수 있는 기회 확대
5. 지역 미디어들이 이문화 간 대화의 중요성과 긍정적 미래를 홍보, 지자체들의 활동이 계속 알려지도록 유도
6. 도시의 대외적인 국제정책을 만들고 도시 간 정책이 펼쳐짐을 홍보. 지역민들에게도 세계 시민임을 각인시킴
7. 상호문화 간 지적 교류 기능을 활성화시킴
8. 상호문화에 대한 인식과 포용 훈련을 프로그램화시켜 정책입안자로부터 참여시킨 위로부터의 개혁을 이끌어냄
9. 새로운 이주민들의 유입에 대해 성숙된 도시 문화가 바탕이 된 프로그램들 도입
10. 다양한 의사결정 과정에 상호 문화 간 대화를 장려하여 최상의 결정과 정책들이 나오는 모델 마련

출처 : 홍종열, 『유럽연합(EU)의 문화정책 연구 : 글로벌라이제이션 전략을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2011, pp.162~163.

3)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³⁵⁾

(1) 추진배경

- 1980년대 이후 후기산업사회 패러다임이 창조성에 바탕을 창조사회로 전환되고 있음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창의도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짐.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는 창의도시의 고유문화자산이 세계적으로 재인식되도록 협력하는 도시 간 네트워크로 추진되었음. 2004년 10월 유네스코 이사회에 의해 “세계 문화다양성 협력망 (Global Alliance for Cultural Diversity)” 일환으로 에딘버러를 최초의 유네스코 창의도시로 선정하면서 시작됨.

35) 전병태,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가입 지원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8.

(2) 네트워크 개요

〈표 13〉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개요

구 분	내 용
정책목표	지역 차원에서 문화산업의 창조적, 사회적, 경제적 가능성을 확대하는 것을 돕고 궁극적으로 유네스코가 추구하는 문화다양성 증진을 목적
정책개념	도시 간 비경쟁적 협력, 지식 및 경험 공유, 역량강화, 교육 등을 장려하며 공공부문과 민간분야의 협력을 강조
정책유형	네트워크형 사업
가입기준	· 창조도시 지정을 신청한 도시의 해당 주제 분야의 창조산업 전반에 걸친 문화관계자(활동가)를 모두 포함 · 각 도시는 창조성을 육성할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을 지니고 있어야 하며 또한 이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활성화 할 수 있어야 함 · 도시의 창조적 잠재력과 역량은 지역적으로는 지역의 문화 산업을 이끌 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는 국제 시장으로 통하는 통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함 · 지원 신청서에는 각 장르별 기준에 맞게 작성되어야 하며 추가로 자체의 기준을 제시할 수 있음
가입대상	7개 분야 주제(민속예술, 문학, 미디어 예술, 음악, 음식, 디자인, 영화)에서 선정

- 유네스코 창의도시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도시는 해당 도시의 문화적 자산에 대한 사전연구를 바탕으로 7개 주제 중 해당 도시의 특성과 환경에 맞는 신청 분야를 정하고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신청함.³⁶⁾
-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로 참여하게 되면 해당 도시는 국제적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의지가 있어야 하고 참여국들과의 정보 공유, 적극적인 소통의지가 있어야 함. 또한 각종 정책과 사업의 이행 상황, 협력활동에 관한 사항을 매년 유네스코에 알려야 함. 연간 보고나 네트워크 활동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에서 가입을 해지할 수 있음.³⁷⁾

36)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창의도시네트워크 신청서 작성 매뉴얼』, 2009, p.54.

37)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같은책, p.57.

〈표 14〉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가입 신청 절차

도시의 문화적 자산 및 특성 연구/ 신청분야 결정
연락책임자 선정
관리그룹 구성
운영위원회 구성
신청서 준비 및 제출 (국내 차원) 1. 신청서 준비 방향 및 진행일정 협의 2. 신청서 초안 작성 및 검토 3. 신청서 초안 영문 번역
신청서 최종 평가
결과 발표

〈표 15〉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가입 효과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청 준비 과정에서 도시의 문화적, 창의적 자산과 그 가치 재인식 2. 문화적, 창의적 자산에 바탕을 둔 중장기적, 종합적 도시 발전 계획 수립 기회 제공 3. 동 네트워크 가입 도시들과의 교류 및 발전 경험 공유 기회 확대 4. 가입 도시의 문화적, 창의적 자산에 대한 국제적 홍보 기회 확대 5. 동 네트워크 가입도시로서 유네스코 관련 지침에 따른 유네스코 이름과 로고사용 가능 6. 관련 창의산업 육성 및 관광 확대 등을 통한 경제적 수익 확대 7. 지역민의 지역 내 창의적 문화자산에 대한 가치 인식 제고 및 자긍심과 소속감 고취

(3) 가입현황

- 창의도시는 현재 전 세계에 34개 회원 도시가 있음. 각 분야마다 장르적 특성에 따른 기준으로 도시 선정. 우리나라는 디자인 분야에 서울, 음식분야에 전주, 공예와 민속예술 분야에 이천이 지정되었음.

〈표 16〉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가입현황

분야별	도시
문학(6)	에딘버러(영국), 멜버른(호주), 아이오와 시티(미국), 더블린(아일랜드), 레이카비크(아이슬란드), 노리치(영국)
영상(2)	브래드 포드(영국), 시드니(호주)
음악(5)	세비야(스페인), 볼로냐(이탈리아), 글래스고(영국), 겐트(벨기에), 보고타(콜롬비아)
공예와 민속예술(5)	산타페(미국), 아스완(이집트), 가나자와(일본), 이천(한국), 항주(중국)
디자인(11)	부에노스 아이레스(아르헨티나), 베를린(독일), 몬트리올(캐나다), 나고야(일본), 고베(일본), 선전(중국), 상해(중국), 서울(한국), 생에티엔느(프랑스), 그라츠(오스트리아), 베이징(중국)
미디어 아트(1)	리옹(프랑스)
음식(4)	포파얀(콜롬비아), 청두(중국), 오스터순드(스웨덴), 전주(한국)

- 선정기준을 살펴보면 문학은 편집의 독창력, 출판사의 질적·양적 다양성, 문학적 도시환경 및 축제개최, 도서관·서점·문화센터 보존에 따름. 영상은 영화촬영소·영화세트장, 영화인 양성센터 등 기반시설, 영화제작·배포·상업화 연결과 축제·이벤트 개최, 기록보관소·박물관·신작발표회가 이뤄지는지 봄.³⁸⁾
- 음악은 음악창조 활동 공간 조성, 전문 음악학교·예술학교 유무, 국제적 음악축제 및 행사 개최, 독특한 장르의 음악 및 음악산업 활성을 기준으로 함. 공예와 민속예술에서는 독특하고 전통 있는 민속예술공예, 공예작가와 지역예술인 확보, 예술인 양성센터, 축제·전시회·박람회·시장 등, 박물관·수공예품 상점 등 기반 시설을 살펴봄.
- 디자인은 디자인산업(건축, 인테리어, 패션 등), 디자인학교·연구센터, 디자이너 활동범위, 디자인박람회·이벤트 개최경험을 봄. 미디어 아트에서는 디지털 기술의 창조산업화, 주민참여·삶의 질 향상 미디어 아트 소재, 미디어 아티스트 연수 프로그램 유무를 기준으로 봄.

38) 전병태,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가입 지원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8, p.26.

- 음식은 전통식당과 요리사 참여의 미식학 커뮤니티 형성, 전통지역 요리 노하우 및 요리실습, 전통음식시장 활성화, 전통음식 산업개발 및 음식축제, 생물다양성 보전계획 포함이 있는지를 봄.

(4) 시사점

- 유럽문화수도 지정제도가 유럽 도시들의 문화정체성을 대외적으로 포지셔닝 하고 유럽도시 간 문화교류를 촉진하는 데 주목한 것에 비해, **유네스코 창의도시 지정제도는 전 세계 도시를 대상으로 문화산업 및 창조적 산업 활성화 측면에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함.**
- 이 제도는 공공영역과 민간분야의 협력관계를 형성하고 국내외 시장에 접근, 예술가와 기타 창조가들, 저작권 문제도 다룸. 문화산업의 사회성, 독창성, 경제적 잠재성 표출하고자 함. 또한 유네스코가 추구하는 세계의 문화다양성 증진, 지속가능한 성장 및 빈곤퇴치를 목적으로 하여 지식의 국제적 공유를 추구함.³⁹⁾
- **창의도시의 본질인 ‘인적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도시 간에 경쟁 대신 상호 협력에 초점을 맞추는 점이 높게 평가됨.** 최근 지역적이나 활동 면에서도 서구의 도시들이 절대적인 강세를 보여 왔지만 **최근 서구권을 넘어 아시아 등 다양한 지역에서 추진되는 ‘문화’를 통한 발전의 일환으로 창의도시가 주목받음.** 특히 서울(디자인)과 이천(공예와 민속예술), 전주(음식)를 창의도시에 올린 한국, 중국(5곳), 일본(3곳) 등 동북아의 활약이 두드러짐.
- 그러나 유네스코 창의도시의 네트워크 안에서의 시스템이 지나치게 유연하고 명확한 규정이 부재함에 따라 창의도시로서의 실체에 대한 문제점이 부각되고 있음. 때문에 창의도시 가입, 운영, 모니터링 등 전 과정에서 보다 체계를 갖추는 것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임.

39) 전병태,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가입 지원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8, pp.4~24. 참조.

2.2. 분석시사점

1) 개별지역에 대한 물리적 재생에서 지역기반의 통합적 재생으로

- 하드웨어적 접근에서 소프트/휴먼이 결합된 총체적 접근으로의 전환

- 전 세계적으로 지역재생 정책은 21세기 지역발전전략으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음. 또한 산업사회 경제기반 위에서 추진되었던 개별 지역에 대한 물리적 환경개선 중심의 지역재생 방식은 후기산업사회로 접어들면서 점차 지역의 특성에 기반을 둔 지역사회의 통합적 재생방식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삶의질 향상이 지역재생에서 중요한 요소로 등장하면서 **지역문화환경 및 지역문화콘텐츠, 주민문화역량 등 하드 요소뿐만 아니라 소프트/휴먼 요소가 점차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게 됨.**

2) 지원제도의 변화; 상향식, 장기지원, 파트너십 강화, 커뮤니티 재생으로의 전환

- 지역재생정책은 하향식 정책추진방식에서 상향식으로 지속적으로 변화해왔으며, 주민의 주체적 개입이나 지역재생에서의 주도성이 점차 강화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음. 점차 하드웨어적 개선이 아닌 지역공동체(local community)의 내부적 재생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으며, 이를 위한 다양한 주체의 파트너십이 지역재생의 추진주체로 인식, 강화되는 경향임.
- 단일 사업, 개별 지역단위가 아닌 종합적 지역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지역재생정책에서는 지원기간이 최소 3년에서 최장 10년까지 지속되는 장기지원구조가 국제적으로 광범위해지고 있으며, 성과도 측정되고 있음. 다만 장기지원제도가 지원 의존성을 높이는 역효과를 수반할 수 있어 섬세한 지원방식의 설계가 필요함.

3) 지역재생에서 문화적 요소의 증가

- 문화, 창의성이 사회발전에 중요해진 21세기 패러다임 전환 속에서 문화를 활용한 지역재생 사례가 광범위하게 증가하고 있음. 초반에는 국제적 아이콘으로서 대형 예술공간, 문화시설의 건립이나 국제 문화행사 개최 및 유치를 통한 문화적 이미지와 정체성을 가시적으로 구축하는 효과성에 주목하였음.
- 그러나 점차 지역의 고유한 문화자원, 역사문화 등을 활용한 지역재생 프로젝트로 전개되고 있으며, 지역주민의 문화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지역 커뮤니티를 재생하고자 하는 전략으로 전환되고 있음. **1990년 중후반 이후 도시들은 실질적이고 역량을 갖춘 도시 문화를 구축하기 위해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관점에서 다양한 차원의 도시문화자원을 창조적으로 조직하고 특성화하는 통합적 문화기획과 도시문화전략으로 방향을 전환함으로써 도시재생의 종합적 맥락 속에서 문화 프로젝트를 구현하고자 하고 있음.**
- 즉, 하나의 프로젝트나 하드웨어 구축으로 도시재생의 흐름을 단숨에 보여주려는 것보다는 도시나 지역에 존재하고 있는 광의적 개념의 유, 무형 문화자원을 도시의 고유성과 특성에 기초해 조직하고 묶어낼 수 있는 **통합적이고 장기적인 접근방식으로서의 도시문화전략(urban cultural strategy)이 중요하게 등장하게 됨.**

4) 문화도시, 창조도시 등 도시 간 국제 경쟁구조의 경향화

- 한편 종합적 문화도시전략으로의 전환은 국제적 차원에서도 유럽문화도시(수도), 상호문화도시, 창의도시 네트워크 등으로 제도화되면서 도시 간 국제 경쟁구조가 점차 강화되는 경향임. 유럽에서 시작된 흐름은 세계 전역으로 확산되는 추세임.

3. 국내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 관련 정책동향

3.1. 시기별 지역관련 정책추진 흐름⁴⁰⁾

- 우리나라 지역개발 정책은 1960년대 고도 경제성장기를 시작으로 1980년대 국토 및 지역개발의 성숙기, 지역균형개발정책 추진기를 거쳐 1990년대 지역개발 정책의 안정기를 이루었음. **2000년대 이후로는 세계경제화, 지역화, 지식정보화 등 새로운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사회·경제적 환경개선 등을 포함하는 지역개발정책의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음.**
- 현재는 자율과 창의를 기반으로 지역의 특성에 맞는 발전과 지역 간의 연계 및 협력 증진을 통하여 지역경쟁력을 높이고 삶의 질을 향상함으로써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2004년 4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제정하여 이 법안을 기반으로 지역발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정부의 시기별 지역개발 정책을 1960년대 이후부터 2000년대 까지 지역개발에 문화적 요소가 도입된 과정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국가기간 산업과 성장을 위한 지역정책 시기인 1960~1970년대, 지역균형발전개념이 도입된 시기 1980년대, 지방자치제도의 시작 시기인 1990년대, 지역혁신을 통한 국가균형발전 시기인 2000년대로 구분됨.

40) 김효정 외, 『문화를 통한 지역개발 사례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7, 해당 부분 인용, 재구성함.

〈표 17〉 1960~2000년대 지역개발 정책 비교

구분	1960~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주요 개발 계획	1차~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1차 국토종합계획	5~6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2차국토종합계획 및 수정계획	7차 경제사회개발계획 및 신경제 5개년계획, 3차 국토종합계획	1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4차 국토종합계획 및 수정계획
경제 개발 및 국토 계획의 목표	기간산업구축 산업구조 근대화 자립경제 확립 기술혁신과 능률향상	안정기조 정착 계층·지역간균형발전 복지수준제고 수도권 성장 관리 경제의 개방화	산업경쟁력강화 사회적균형발전과 국민복지향상 국제화, 자율화와 통일기반 조성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 지역혁신체계 구축 균형, 개방, 녹색, 복지, 통일국토
주요 지역 개발 정책	경인·경부·호남·남해 고속도로 및 소양·안동댐 건설, 포항제철건설, 한국수출산업단지·울산 미포공업단지 건설	수도권정비계획법 제정, 전주권·광주권 종합개발, 다도해·88고속도로 주변 특정지역개발 사업	영종도신공항·고속철도·서해안고속도로·새만금간척사업착공, 지역균형개발법 제정, 오지·도시개발계획, 개발촉진지구 제도 도입	광역권 재편,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 지역종합개발지구 제도 도입, 신활력사업, 공공기관 및 행정수도 이전
평가	경부축을 중심으로한 양극화 도농간 격차 심화 생활환경 낙후	불균형의 지속 SOC 투자 저조 생활환경 낙후	수도권 인구집중의 지속 환경 관련 쟁점 부각	불균형 해소를 위한 지역개발 사업의 체계화 추진 중
정책 이슈	도시 인프라	민주화, 사람, 생활 공동체중신 가치 회복	지방자치(1995) 지역경쟁력 삶의 질	지역균형발전 창조도시 매력적 장소
거버넌스	정부주도	정부주도	중앙주도/지방협조	파트너십 (지역공동체)
이론	성장거점 불균형발전	집중개발전략 지역균형개발	지역불균형 해소	지속가능한 개발
접근 방식	하향식	하향식 지역개발 내발적 지역개발	하향식	상향식

출처 : 김효정 외, 『문화를 통한 지역개발 사례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7. pp.35~36 표를 인용, 항목 추가하여 보완(음영 부분) 구성함.

- 1960~1970년 : 전후 국가 재건의 시대였던 이 시기 지역개발정책의 주요 목표는 국가 또는 사회 전반의 경제성장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것이었음. 또한 국토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산업 및 인구를 적절하게 분산시키는 것이었으나, 기본적으로는 성장 우선의 불균형 개발전략이 중심에 있었음.

- 당시 정책적 이슈는 국가 재건을 위한 정부 중심의 하향식 도시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음. 이 시기에는 투자의 효율성이 가장 중요한 정책적 판단기준이었으며, 공업화, 경제개발을 위한 산업기반시설 투자가 최우선 과제였고, 특정 지역을 개발함으로써 그 파급효과를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것이 주요 정책기조임.
- **1980년대** : 1970년대 이후 **경제성장 위주의 지역개발정책 추진이 미친 부정적 효과를 극복하기 위한 지역 간, 계층 간 형평성 증진과 개인복지 환경을 조성하고자 했음.**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우리나라 경제는 대량생산, 대량소비를 기반으로 하던 산업구조가 자본집약적 산업, 기술 기반의 고효율 생산 등으로 이전하는 후기산업사회로의 전 지구적 변동과 더불어 국제경제 침체와 경쟁심화 및 블록화 현상에 직면하게 되었음.
- 이 시기에는 경제성장이 일정 수준 목적을 달성함으로써 국민들의 복지에 대한 욕구를 수용, 국민복지에 관한 정책적 목표가 지역개발에서 중요한 항목으로 등장하게 됨. 이에 수도권 집중 억제와 지역 균형 발전을 추가하며, 지역격차와 낙후지역의 문제해결을 위해 특정지역개발사업을 함께 추진하였음. 그러나 지역불균형적인 개발정책의 부작용을 줄이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부주도의 일방적 집중 개발 및 하향식 정책추진으로 실질적인 성과는 가시화되지 않았으며, 대도시의 인구집중으로 여전히 지역 간 불균형은 지속되었음.
- **1990년대** : **지역발전 패러다임이 경제성장 위주에서 사회적 발전과 복지 위주로 전환되며, 세계화 시대의 자본주의 재편이 본격화된 시기임.** 세계적으로 정보통신기술이 급속도로 발달·보급되는 시기이며, 1990년 지방자치법이 통과되고 1995년 민선 1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통해 지방자치시대가 본격화된 시기임.
- 이 시기는 정부주도에서 민간부문 및 경쟁력 있는 자율시장경제체제

구축, 지방정부와의 협조, 삶의질을 강조하기 시작하였으며, 수도권 집중 억제라는 소극적인 방식에서 탈피, 각 지역의 특성화에 기반을 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개발사업이 다각적으로 시도되었음. 그러나 여전히 하향식 접근방식은 탈피하지 못하였으며,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입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었음.

- **2000년대** : 인류의 지속적 생존과 발전 차원에서 **환경지향적 지역발전의 패러다임으로 전환되고, 경제위기로부터 서서히 벗어나면서 주 5일제 시행을 시작으로 문화, 여가, 삶의 질, 고령화와 저출산 등의 문제가 부각되면서, 대안마련이 사회적 이슈로 발생되었음.**
- 2000년 초반까지 다양한 지역개발 정책이 추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와 경제력의 수도권 집중현상이 여전히 지속됨에 따라 대안 마련을 위해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이 수립되었음.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은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혁신 및 특성에 맞는 발전을 통하여 자립형 지방화를 촉진함**으로써 전국이 개성 있게 골고루 잘 사는 사회를 건설하는 데에 목적을 두었음.
- 이에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는 5개년 계획에 입각하여 지역혁신체계 구축을 통한 지방대학 발전, 자립형 지방화를 위한 지역산업 발전, 상생과 도약을 위한 신국토구상, 산업단지의 혁신 클러스터화, 신활력 지역 발전계획, 수도권 발전 및 혁신도시 건설,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의 사업을 추진함.
- **2000년대에 들어 지역이 창조도시로서의 기능과 매력적 장소로서의 의미를 통해 지속가능한 개발정책을 펼치기 시작하였으며, 정부의 접근방식도 과거 하향식 구조에서 점차 상향식으로 변하기 시작함. 지역에서 문화를 통한 발전정책이 활성화 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각 관련 부처별 법령제정 및 구체적 지역개발 정책사업이 추진되기 시작함.**

〈표 18〉 소관 부처별 지역개발제도 현황

구분	관련법령 (최초제정일)	관련계획		
		계획명	계획기간	수립주체
문화체육관광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문화권 조성사업	9~16년	시, 도지사
	문화예술진흥법 및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문화지구 관리계획	3년마다 평가 후 실적 우수 시 필요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계획	20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지방문화원진흥법	향토사대중화사업 어르신문화프로그램운영사업 지역문화경영과정	-	시, 도지사
	문화예술진흥법	문화의 날, 문화의 달 행사 개최	-	대통령령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	10년	시·도지사
국토해양부	국토기본법	국토종합계획 도종합계획 시군종합계획 지역계획, 부문별계획	20년 20년 - -	건교부장관 도지사 시장·군수 중앙행정기관장
	제주특별자치도법	제주자유도시종합개발계획	10년	도지사
	지역균형개발법	광역개발계획 특정지역개발계획 개발촉진지구개발계획 지역종합개발기구 개발계획(2006.3 신설)	10~20년 10년 5~10년 -	시, 도지사 시, 도지사 시·도지사 시장·군수 도지사·시장·군수
행정안전부	도서개발촉진법	도서종합개발10개년계획	10년	행자부장관
	오지개발촉진법	오지종합개발10개년계획	10년	행자부장관
	접경지역지원법	접경지역종합계획	-	시·도지사
	소도읍육성지원법	소도읍육성계획	10년	시장·군수
농림부	농업·농촌기본법	농업·농촌발전계획 시·도 농업·농촌발전계획 시·군·구 농업·농촌발전계획	10년	농림부장관 광역시장·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농어촌정비법	정주생활권개발계획 문화마을조성사업	-	시장·군수
지식경제부	폐광지역특별조치법	폐광진흥지구개발계획	5년	시·도지사
균형위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신활력지역	3년	시장·군수

자료 : 건설교통부 국토균형발전본부, 2007 : 185.

출처 : 김효정 외, 『문화를 통한 지역개발 사례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7, p28 표를 재인용, 항목 추가하여 보완 구성함.

3.2. 부처별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 관련정책 추진동향

- 우리나라 각 부처별 지역재생 관련정책은 2000년대에 이르러서 본격화되기 시작하였음. 그동안 하드웨어 위주의 사업추진에서 탈피하여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의 문화자원을 활용하고 주민의 주체 역량을 키워 자생적이고 자발적인 지역활성화 방향으로 이끌어내고자 하고 있음.
- 최근 수년 사이에는 문화를 활용한 지역재생 정책을 각 부처에서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경향이 커지고 있으며, 유럽 등 해외 주요 국가들에서와 마찬가지로 개별지역과 단위사업을 넘어 지역에 대한 종합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음. 이러한 흐름이 구체화되기 시작한 2004년을 기점으로 여러 부처별로 추진되고 있는 지역재생 관련 정책을 비교검토 하면서, 일반적 관점의 지역재생의 틀이 아닌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 정책모델의 정립에 필요한 시사점을 살펴보도록 함.

3.2.1. 국토해양부

- 국토해양부는 2000년 이전까지 개발과 성장 위주의 공급정책을 시행하였으나, 21세기가 시작된 이후 양적인 충족에서 질적 만족으로 건축·도시·국토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함. 또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녹색건축·도시·국토의 조성⁴¹⁾과 더불어, 세계도시화 시대 새로운 도시경쟁력이 요구됨⁴¹⁾에 따라 이러한 환경변화에 부합하는 도시재생 정책수립에 주목하기 시작함.
- 하지만 그동안 양적 공급 위주의 개발로 인해 획일적으로 조성된 도시환경은 단조롭고 개성 없는 국토 이미지로 2008년 세계 13위의 경제적 위상에 비하여 낮은 국가브랜드 평가를 받기도 했음.

41) 김복환, 「국토해양부의 국토환경디자인 정책의 성과와 과제」, 『建築 2010년 5월호』, 2010.

- 2000년대 들어서면서 그동안의 도시개발 사업이 양적 성장 위주였다는 비판과 함께 도시개발 과정에서 훼손된 자연환경과 상실된 문화, 역사적 측면에서의 정체성 회복에 대한 요구가 대두됨. 이러한 환경변화 속에서 창조적인 도시재생은 국토해양부의 중요한 정책 이슈로 부상하였고 이에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시범사업>,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 등 지역의 정체성을 구현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하였음.

〈표 19〉 국토해양부 지역재생 관련 사업 흐름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하드+소프트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시범사업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		

-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시범사업>은 시민들이 살고 싶어 하고,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자체들로 하여금 이런 도시발전전략을 시행하도록 하는 정책적 동기를 유발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이자 시범사업의 성격을 지님.
- 이 시범사업이 종료되면서 도시의 자생적인 경쟁력을 확보 할 수 있도록 기초생활권 중 기존의 도시활력증진 사업지역(97개 시·군·구)과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시범사업>을 비롯한 16개의 사업을 묶어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으로 재편, 추진하고 있음.
-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시범사업>이나,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은 기존의 하드웨어 구축에 치중하던 국토해양부 사업들과 달리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동시에 추구하였고, 추진체계에 있어서도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형식을 취하였음.

- 그러나 **하향식 및 하드웨어적 사업추진방식의 관행을 효율적으로 극복하지 못했고, 사업운영조직의 지속성, 전문성의 문제, 주민 갈등 상황 극복의 문제는 과제로 남아있음.**

(표 20) 국토해양부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시범사업> 개요

구 분	내 용
정책배경	도시의 한계를 극복하고 도시민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더 높이는 양적 위주의 개발에서 주민이 실제 살기 좋은 곳으로 탈바꿈시키고 삶의 질, 공간의 질을 우선하는 도시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새로운 도시계획의 패러다임이 요구됨
정책목표	국토의 균형발전,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정책개념	주거·복지·교통에 대한 도시민의 기본수요를 충족시켜 주면서, 도시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보장해주는 “어울려 사는 건강한 도시”, 활기찬 경제기반을 갖추어 풍부한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일하기 좋고 활력 있는 도시”, 다양하고 개성 있는 문화와 아름다운 경관을 제공하는 “여유 있고 문화적인 도시”를 지향하여 만들어 가는 과정·절차 및 사업, 지자체와 도시민의 협력과 참여
사업목적	한국형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정립 - 주민주도 삶터가꾸기를 통한 공동체 회복 - 도시별 특화발전을 통해 삶의 질 향상 - 법적, 제도적 기반 만들기로 조기정착 유도
사업내용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특화발전계획을 수립하고 비전을 제시하는 ‘시범도시’ 사업과 주민주도의 마을 만들기 활성화 전략을 담은 ‘시범마을’ 사업으로 분류하여 진행
사업유형	활력도시형, “문화도시형”, 환경도시형, 안전·건강도시형, 교육·과학도시형, 자유창의형
사업대상	시범도시 사업 : 기초지자체(시·군·구) 단위 중대규모 지역 시범마을 사업 : 동 단위 및 소규모 마을 단위 생활공간
추진현황	2007년 ~ 2009년 총 94개(419억원) 2007년 36개소(142억원)/2008년 32개소(133억원)/2009년 26개소(144억원)
시범도시	- 도시의 경제, 사회, 문화적 특성을 살려 개성 있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초지자체가 그 도시의 경쟁력 우위요소를 발굴하고, 이를 토대로 특화발전계획을 수립 추진하는 것을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정책사업 - 전문가, 지역주민, 시민단체, 지자체 등이 협력하여 도시의 비전을 형성하고 경제, 사회·문화, 환경 등의 전 영역에서 도시의 특성과 잠재력을 발현시킬 수 있는 전략을 발굴·추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시범마을	- 주민이 동 단위 이하의 생활권(커뮤니티)을 대상으로 마을을 진단하고 스스로 삶터를 가꾸어 나가는 시범지구 또는 시범단지 규모의 마을계획을 수립·추진하는 것을 지원하는 정책사업 - 지역주민, 마을대표, 시민단체, 커뮤니티의 리더 등이 협력하여 마을가꾸기를 진행하면서 이 과정에서 주민들의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과 참여의 기회를 증진

〈표 21〉 국토해양부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시범사업〉의 이유

사업명	주요 쟁점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시범사업 ⁴²⁾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 거버넌스 인식 확산 등의 성과 •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 지원으로 전환 이슈 • 정형화된 사업유형을 넘어 다양한 유형으로 특화하기 • 하향식, 하드웨어적 사업추진방식이 실질적으로 극복되지 못함 • 사업운영조직의 지속성, 전문성의 문제 • 주민 갈등상황 극복의 문제 • 군지역 통폐합에 따른 행정적 통합관리체계의 문제

- 한편 국토해양부는 2007년 도시재생사업단을 개소하여 현재 6차년도 도시재생 연구개발 사업을 수행 중에 있음. 도시재생 연구개발 사업은 국토해양부 VC(Value Creator)-10 사업의 하나로, 정책, 제도, 건설기술, 환경기술 등 종합적인 면에서 선진국의 약 40% 수준으로 인식되는 우리나라 도시재생 역량을 선진국 수준으로 고양시키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음.

〈표 22〉 국토해양부 도시재생사업단 개요

구 분	내 용
비 전	삶의 질 향상과 도시경쟁력 확보
목 표	G7 국가수준의 도시경쟁력 확보를 위한 도시재생시스템 구축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재생사업(쇠퇴도시 유형별 재생기법 및 지원체제 개발, 사회통합적 주거공동체 재생기술 개발, 구도심 복합용도 공간 재생기술 개발, 도시시스템 녹색재생 기술개발 등 인문 사회과학적 과제와 공학, 기술적 과제 연구) - 한국형 도시재생 패러다임 설정 및 국가 중장기 전략수립, 도시재생 역량강화, 도시재생사업의 파급효과 및 성과분석, 테스트베드 실행 및 실용화 방안 등 핵심과제 지원·종합 수행
최근 프로젝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공동체 자력수복형 도시재생 개발기법/ 도시재생 기반기술 개발 연구 - 지역자력형 테스트베드 사업

42) 두리공간환경연구소,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시범사업 성과와 과제』, 국토연구원 도시재생지원사업단, 2011.

3.2.2. 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는 1948년 정부수립과 함께 총무처와 내무부로 발족한 이래 1998년 2월 28일에 개정된 [정부조직법]에 의해 총무처와 통합되어 행정자치부로, 2008년 다시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중앙인사위원회, 국가비상기획위원회, 정보통신부 일부 기능을 통합한 현재의 행정안전부로 출범함.

〈표 23〉 행정안전부의 변천과정

총무처→국무원 사무국→국무원 사무처→내각사무처→총무처→행정자치부→행정안전부
내무부→행정자치부→행정안전부

- **행안부는 1989년부터 1990년에 청와대 지역균형발전기획단 설치, 1995년 지방자치제도의 실행 등 지방분권과 지역균형 발전 정책이 강화되면서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오고 있음. 이러한 맥락 속에서 행정안전부는 지방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자치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 중 하나로 **상생발전을 통해 더불어 잘사는 지역을 만들기 위한 도서·소도읍·접경지역 등 저발전지역에 대한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음.
- 행정안전부의 정책들은 주로 **농산어촌 지역이나 접경지역 등 특수상황 지역들을 대상으로 한 마을만들기 및 마을가꾸기사업**임. 사업지역들은 대부분 경제·사회·문화적으로 낙후된 곳으로, 정책 초기에는 생활환경 개선 등의 하드웨어적인 접근이 대부분이었으나,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삶에 질’에 대한 요구와 맞물려 하드웨어 구축과 소프트웨어 구축을 동시에 추구하는 정책으로 변화**하였음.

〈표 24〉 행정안전부 지역재생 관련 사업 흐름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하드+소프트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시범사업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		
							접경특화발전지구 (~ '30)		

〈표 25〉 행정안전부 지역재생 관련 사업 개요

구분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시범사업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
정책배경	지역발전 정책을 이전의 '균형발전' 에서 '녹색성장' 으로 시각 전환하여 생태·문화주의적 지역발전이 확산됨	
정책목표	중앙과 지방이 조화롭게 발전하는 선진 지방자치 구현	
정책개념	주민·지자체 주도로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고품격 생활환경 및 소득기반을 조성해나가는 21세기형 지역재 창조 활동	지역별로 가지고 있는 개성과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아름답고, 쾌적하고, 특색 있는 지역으로 재창조' 하는 21세기 커뮤니티 운동인 동시에 민관협력 사업
사업목적	중앙주도의 획일적인 지역개발로 인해 사라져가고 있는 지역의 개성과 그 지역만이 가지는 특색을 되살리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함	마을의 가치나 유·무형의 자원을 발굴하여 가꾸는 과정을 통하여 나눔과 소통의 따뜻한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자연 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마을가꾸기로 매력 있는 동네, 잘사는 우리 동네를 만들고자 함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공간 디자인 - 교육·의료 등 삶의 질 제고 - 지역공동체 복원 - 지역브랜드 창출을 통한 소득기반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7년: 생활환경개선사업 위주 추진 - 2008년: 마을의 보물을 찾아 마을발전 동력을 삼는 보물찾기 추진 - 2009년: 마을공동체 활성화 중점 추진
추진현황	2007년 ~ 2009년	2007년 ~

〈표 26〉 행정안전부 지역재생사업 이슈

사업명	주요 이슈				
<p>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⁴³⁾</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주체가 대부분 복수마을로 구성되어 있어 결속력, 마을의 전통 및 정체성 약화가 우려됨 • 노령화로 리더역량 저하, 구성원 역량 저하, 주요 추진인력의 부족 • 계층구성의 편중화: 세대간·계층간 이해차, 토착주민과 이주민과의 정체성 차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가 문제 • 새로운 시설물 건축 및 건립에 치중함: 기존 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는 구상은 거의 없음 • 자연경관, 지역문화재에 대한 절대적 의존성 • 민-관-산 협력 네트워크 미흡, 추진인력, 협력단체의 부재 • 산업화, 현대화로 인한 마을 고유성과 현대화 조화 부족 • 특화된 사업이 없고, 지역과 사업의 차별성, 경쟁력의 부족 • 지역성의 부족 				
<p>접경특성화 마을⁴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의 접경지역개발사업의 성과와 문제점을 토대로 권역별 특화된 접경특성화마을사업으로 변경되었으며, 2011년부터 시행(~2014까지 추진예정)하여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나 평가에 대해 보고되지 않았음 • 기존의 접경지역개발사업의 주요 쟁점 및 개선사항을 보면, <table border="1" data-bbox="340 832 1171 1485"> <thead> <tr> <th data-bbox="340 832 755 865">기존, 접경지역개발사업의 주요 쟁점</th> <th data-bbox="755 832 1171 865">현, 접경특성화마을 사업 개선사항</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340 865 755 148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흡한 종합계획 및 비효율적 추진체계: 계획심의 및 사업우선순위 조정만 있을 뿐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체계 부재, 다수의 중앙부처와 지자체에 의해 분산 시행함에 따라 사업의 일관성 결여 및 중복시행, 실효성 반감 등의 문제 발생 - 자원조달 방안 미흡: 자원조달 규정의 부재로 안정적인 자원조달이 안되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소관부처들이 몰아가기 사업 방식으로 추진하는 문제점 - 접경지역지원 법규정 미비: 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이 부재하며, 접경지역법이 국토계획법 및 군사시설보호법의 하위법으로 규정되어 사업추진 지난. 중앙부처 계획에 의한 임의지원 조항이 있으나 실효성 없음 </td> <td data-bbox="755 865 1171 148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처별 산재되어 있던 사업들을 권역별로 개편하여, 행정안전부 소관 사업으로 통합된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의 하위사업으로 추진 - 접경지역의 개발가치 충족을 위한 적정사업(규모)를 재설정 - 선택과 집중에 의한 자원별·권역별 개발 추진(자연생태자원 권역, 시설물자원 권역, 문화자원 권역, 인적자원 권역) </td> </tr> </tbody> </table>	기존, 접경지역개발사업의 주요 쟁점	현, 접경특성화마을 사업 개선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흡한 종합계획 및 비효율적 추진체계: 계획심의 및 사업우선순위 조정만 있을 뿐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체계 부재, 다수의 중앙부처와 지자체에 의해 분산 시행함에 따라 사업의 일관성 결여 및 중복시행, 실효성 반감 등의 문제 발생 - 자원조달 방안 미흡: 자원조달 규정의 부재로 안정적인 자원조달이 안되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소관부처들이 몰아가기 사업 방식으로 추진하는 문제점 - 접경지역지원 법규정 미비: 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이 부재하며, 접경지역법이 국토계획법 및 군사시설보호법의 하위법으로 규정되어 사업추진 지난. 중앙부처 계획에 의한 임의지원 조항이 있으나 실효성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처별 산재되어 있던 사업들을 권역별로 개편하여, 행정안전부 소관 사업으로 통합된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의 하위사업으로 추진 - 접경지역의 개발가치 충족을 위한 적정사업(규모)를 재설정 - 선택과 집중에 의한 자원별·권역별 개발 추진(자연생태자원 권역, 시설물자원 권역, 문화자원 권역, 인적자원 권역)
기존, 접경지역개발사업의 주요 쟁점	현, 접경특성화마을 사업 개선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흡한 종합계획 및 비효율적 추진체계: 계획심의 및 사업우선순위 조정만 있을 뿐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체계 부재, 다수의 중앙부처와 지자체에 의해 분산 시행함에 따라 사업의 일관성 결여 및 중복시행, 실효성 반감 등의 문제 발생 - 자원조달 방안 미흡: 자원조달 규정의 부재로 안정적인 자원조달이 안되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소관부처들이 몰아가기 사업 방식으로 추진하는 문제점 - 접경지역지원 법규정 미비: 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이 부재하며, 접경지역법이 국토계획법 및 군사시설보호법의 하위법으로 규정되어 사업추진 지난. 중앙부처 계획에 의한 임의지원 조항이 있으나 실효성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처별 산재되어 있던 사업들을 권역별로 개편하여, 행정안전부 소관 사업으로 통합된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의 하위사업으로 추진 - 접경지역의 개발가치 충족을 위한 적정사업(규모)를 재설정 - 선택과 집중에 의한 자원별·권역별 개발 추진(자연생태자원 권역, 시설물자원 권역, 문화자원 권역, 인적자원 권역) 				

43) 행정안전부, 『지역공동체 복원 및 형성에 관한 연구』, 2007.

44) 행정안전부, 『접경지역 지원 성과평가 및 발전방안』, 2007.

- 행안부는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정책적 목표가 뚜렷한 가운데 **2007년 이후 본격적으로 지역재생 관련 정책을 마을단위로 추진하기 시작**하였음. 지역만들기 또는 마을만들기 사업으로서 과거 시설 및 환경 개선방식에만 집중하였던 차원을 넘어 **하드/소프트/휴먼의 종합적 접근을 시도**하였음.
- 그러나 2008년 시군구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살펴 보면, 주민공동체 의식 저조(주민참여의 저조), 지역 여건의 한계점, 운영·지원의 한계점, 지자체 자부담의 어려움 등이 문제점으로 드러났고, 더불어 지역공동체가 미비한 상태에서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실제적 운영이 어렵다는 의견이 제시됨.⁴⁵⁾ 마을만들기 사업들의 경우, 추진주체가 복수 마을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아, 마을 간의 결속력 문제나 이질적인 문화에 따른 갈등, 정체성 문제들이 제기되기도 하였음.
- 행안부 마을만들기 관련 사업은 **지역문화자원의 활용, 지역주민 참여 등 소프트/휴먼 요소를 정책사업에 중요하게 수용하여, 문화를 매개한 지역재생의 정책 경향으로 전환**하였으나, **실천적으로는 시설 개선 등의 하드웨어적 접근이 주를 이루고** 있음.
- 또한 공동체 간 의사결정이나 협력을 위한 **휴먼웨어적인 접근방법에서도 성과가 잘 드러나지 않아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과제**로 남아있음. 지역재생을 위한 콘텐츠가 지역경관과 문화재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어 **마을간 차별성과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다양한 소프트웨어의 개발·구축이 요구**되고 있음.

45) 박승규 외,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의 발전적 개편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8, 부록 p.42.

3.2.3. 농림수산식품부

- 현재의 농림수산식품부는 1945년 농림부를 시작으로 [정부조직법]에 의해 지속적으로 개정되며 2008년 농림부와 해양수산부의 기능이 통합되어 농림수산식품부가 됨. 주요업무는 농산·축산·수산, 식량·농지·수리, 식품산업진흥, 농어촌개발 및 농수산물 유통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것임.

〈표 27〉 농림수산식품부의 변천과정

농림부→농수산부→농림수산부→농림부→농림수산식품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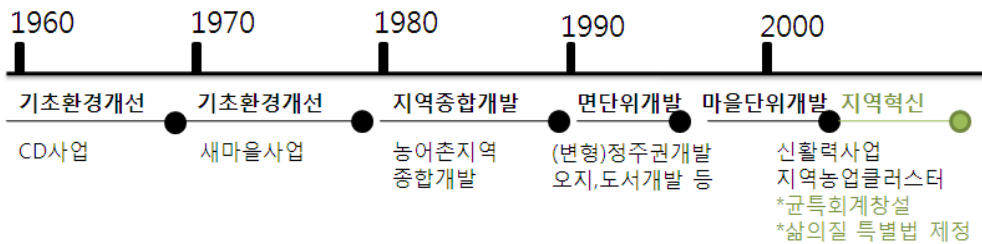
- 농촌지역개발정책은 1950년대 후반 UN, ICA가 개발한 지역사회개발사업(Community Development Program: CD사업)을 시작으로 우리나라에서는 1970년대 새마을 운동, 1980년대 정주권 개발을 거치며 진화해옴.⁴⁶⁾
- 1960년대 이래로 1990년까지 인구감소와 고령화라는 문제가 농촌지역에 수반되면서 수도권으로 인구 과밀도 현상과 맞물려 농촌지역은 지속적으로 농업 기반 경제활동이 어려워졌음. **농림부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다각도로 해결방안을 모색하면서 농촌관광과 지역특화산업 부문에 관심을 가지게 됨.**
- 이러한 흐름 속에서 1990년대부터 농외소득 증대에 기여할만한 잠재력을 인식하고 관광농원, 농어촌 휴양단지, 농어촌 민박마을 등의 농촌관광 정책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함. **1990년대 후반부터는 농촌관광정책에 대한 요구가 본격화되면서 일본이나 유럽 사례를 통해 농촌관광시장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이를 통해 지역 활성화 계기를 마련하는데 활용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기 시작함.**⁴⁷⁾

46) 송미령 외,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새로운 도전과 구상』,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8, p67.

47) 송미령 외, 같은책, pp.29~30.

- 때문에 1990년대 이후부터 농촌지역은 기존의 하드웨어적인 환경개선 뿐만 아니라 ‘내생적 발전론의 실험’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농촌 지역정책들이 등장함.⁴⁸⁾ 2000년대에는 농촌 지역개발 정책이 큰 폭으로 재편되며 이전과는 다른 목표를 갖는 정책 사업들이 등장함⁴⁹⁾ 최근에는 농촌지역 본래의 문화적 가치와 의미가 새롭게 부각되면서 농촌지역의 고유한 어메니티와 잠재자원을 복합적으로 활용한 농촌 지역개발사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그림 5〉 농촌지역개발사업의 전개도



출처 : 송미령 외,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새로운 도전과 구상』,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8, p.69.

- 이에 따라 사업추진방식도 과거 정부주도 지역주민 결합방식에서 탈피하여 정부와 지자체, 지역주민의 복합적 거버넌스로 전환되고 있으며, 도시지역과 긴밀한 관계를 고려한 지역연계개발 패러다임을 수용하는 쪽으로 계속 변화하고 있음.
-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추진하는 농촌지역 대상의 지역개발정책은 하드웨어 구축에서 소프트웨어 구축 중심으로 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농촌지역 문화자원 활용의 중요성과 지역의 창조역량 증진 필요성이 더욱 강화됨.⁵⁰⁾

48) 김정섭 외, 『농촌 지역 활성화 정책의 평가와 발전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1, p.11.

49) 김정섭 외, 같은책, p.28.

50) 류정아, 『농촌지역 문화환경 개선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0.

〈표 28〉 농림수산식품부 지역재생 관련 사업 흐름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하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소프트				농어촌 축제지원사업					
하드+소프트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하드+소프트/휴먼					농어촌 신문화공간 조성사업				

- 이러한 맥락 속에서 농림수산식품부는 2005년 이후 중앙 주도의 획일적 지역개발로 인해 사라져가고 있는 지역의 개성과 특색을 되살리고, 주민 삶의질을 높이고자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함. 2008년 이후에는 농어촌축제지원사업, 농어촌 신문화공간 조성사업 등 문화와 연계한 농산어촌재생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전반적으로 농림수산식품부가 추진했던 농산어촌 지역 관련 정책은 농촌마을에서의 농업위주의 경제활성화를 넘어서는 **농촌문화와 결합된 농촌창조경제 활성화로 전환되고 있음.**
- 그러나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등 주요한 정책사업 등이 하드웨어/소프트웨어/휴먼웨어의 통합적 정책접근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새마을운동, 정주환경 개선 등 농촌환경 개선 및 신축이라는 물리적 개선방식에 의존하는 경향이 큼. 뿐만 아니라 농산어촌 지역 문화자원을 활용하는 방식인 소프트웨어 부문에서의 획일적 접근, 휴먼 부문에서의 주민 주체의 형식적 결합력으로 인한 주민참여 실체의 허약함 등 지역에 공통된 과제들을 남기고 있음.
- 이중에서 2009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되어 온 <농어촌 신문화공간 조성사업>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휴먼웨어 사업을 통합적⁵¹⁾으

51) 이 사업에서 하드웨어는 사용빈도가 낮은 정미소, 폐교 등을 리모델링하거나 복원하여 도서관, 전시관 등의 문화공간으로 조성함. 소프트웨어는 사라져 가는 지역자원을 찾아 보전하고 주민간, 도시민과 문화교

로 추진한 대표 사례임. 그간 **농어촌마을사업이 소득·생산·유통에 치중한 개발이었다면 <농어촌 신문화공간 조성사업>은 문화를 매개로 마을주민들이 즐겁게 소통하면서 지역 정체성도 찾고 농어촌 유휴자원을 활용, 마을을 재생하는 등 농어촌 개발에 색다른 접근을 시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농림수산식품부 보도자료, 2012.5.29.)

〈표 29〉 농림수산식품부 지역재생 관련 사업 개요

구 분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농어촌 신문화공간 조성사업
정책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지역 본래의 문화적 가치와 의미가 새롭게 부각 - 농촌지역개발 사업추진방식의 변화 · 정부, 지자체, 지역주민의 복합적 거버넌스 · 도시지역과 긴밀한 관계를 고려한 지역연계개발 패러다임의 수용 	
정책목표	정부주도의 하향식 지역개발사업을 탈피한 주민주도의 상향식 사업을 구성하고 추진하여, 기초기반이 부족한 농어촌지역의 자립기반을 구축하여 농촌 활성화 방향 모색	
사업목적	농촌마을의 경관개선, 생활환경정비 및 주민 소득기반확충 등을 통해 살고 싶고, 찾고 싶은 농촌정주공간을 조성하여 농촌에 희망과 활력을 고취함으로써 농촌사회 유지 도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라져가는 농어촌 문화를 기록·복원하고, 농어촌의 유·무형 문화를 매개로 한 문화공간을 조성 - 기존 문화시설과 연계·운영하고 지역주민의 문화역량을 향상시켜, 지역문화 거점 및 도농교류 네트워크 기반으로 활용
사업내용	지역의 잠재자원을 발굴·활용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농촌마을의 경관개선, 생활환경정비, 소득기반확충, 지역사회유지를 위한 인구유치 및 지역혁신을 위한 지역역량강화 등 종합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앗간 등 농어촌 유휴자원과 폐교를 활용하여 주민들의 문화활동 및 도농교류 공간으로 조성, 지역의 거점문화공간으로 활용 - 문화공간조성에 필요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휴먼웨어 사업 추진
예산지원	권역당 3~5년간 40~70억원 범위 내 (여건별 차등지원)	사업지역별로 3년간 최대 30억원 (국고 50%, 지방비 50%) 범위 내 지원
추진현황	2004년 ~ 2017년 추진현황(2011년 기준, 301권역)	2009년 ~ 강원(횡성), 충북(옥천), 충남(서산), 전북(완주), 경북(의성), 제주(서귀포) 6개 지역

류를 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보급, 사회적 활동 지원하는 쪽으로 추진되었음. 휴먼웨어는 지역주민의 문화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해 조직체 구성·운영, 주민교육, 선진지 견학 등으로 운영됨.

〈표 30〉 농림수산식품부 〈농어촌 신문화공간 조성사업〉의 이슈

사업명	주요 쟁점								
<p style="text-align: center;">농어촌 신문화공간 조성사업⁵²⁾</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 사업은 마을의 고유한 문화나 자원을 보존·활용 하는 것이 지역경쟁력을 높이는 원천이라는 점에 착안해 점차 사라져 가고 있는 농어촌 문화를 기록, 복원하되 주민들의 생활 속 아이디어와 결합시켜 새로운 농어촌 문화를 재생 산하고, 농어촌에 활력을 불어넣자는 취지로 시작 • 시범사업 추진 후 해당 지역에는 젊은 청년, 예술가, 문화전문가 등이 귀촌해 창업, 컨설팅, 문화활동을 하면서 마을에 크고 작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 • 3년이 지난 현재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마을에는 전통 등공예, 목공, 밴드, 타악, 국궁 등 13개 동아리가 활동 중 • 그러나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의 문제 제기도 있는 바, 이를 보완한 지속가능한 사업의 운영이 향후 과제로 남아 있음⁵³⁾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head> <tr> <th style="width: 15%;">구분</th> <th>정책 이슈들</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344 716 477 823"> <p>하드웨어 분야</p> </td> <td data-bbox="477 716 1181 8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유휴시설의 리모델링 및 복원방법 - 과다 조성 및 활용계획으로 사후 운영 및 유지관리 우려 - 유휴시설과 마을 문화와의 정체성 관계 모호 </td> </tr> <tr> <td data-bbox="344 823 477 967"> <p>소프트/휴먼웨어 분야</p> </td> <td data-bbox="477 823 1181 96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라져가는 농어촌의 삶터와 일상의 모습을 충분히 담았는가 하는 지역 정체성의 문제 - 전문가의 지원 종료 후에도 주민활동이 지속될 것인가 하는 자생력의 문제 </td> </tr> <tr> <td data-bbox="344 967 477 1166"> <p>기타 사업 추진상의 어려움</p> </td> <td data-bbox="477 967 1181 116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밖에 신규 시범사업에 대한 사업 관계자의 이해 부족과, 사업 공감대의 부족, 토지 소유자의 변심으로 토지 및 건축물 매입이 불가하여 일부 대상지 변경, 사업추진주체에 대한 논란, 사업비 편성에 따른 시설 소유권 문제, 사후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대한 고민은 있으나 실제 하드웨어 조성 시 이를 고려하기 보다는 사업비 규모에 맞추어 시설 마련 </td> </tr> </tbody> </table>	구분	정책 이슈들	<p>하드웨어 분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유휴시설의 리모델링 및 복원방법 - 과다 조성 및 활용계획으로 사후 운영 및 유지관리 우려 - 유휴시설과 마을 문화와의 정체성 관계 모호 	<p>소프트/휴먼웨어 분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라져가는 농어촌의 삶터와 일상의 모습을 충분히 담았는가 하는 지역 정체성의 문제 - 전문가의 지원 종료 후에도 주민활동이 지속될 것인가 하는 자생력의 문제 	<p>기타 사업 추진상의 어려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밖에 신규 시범사업에 대한 사업 관계자의 이해 부족과, 사업 공감대의 부족, 토지 소유자의 변심으로 토지 및 건축물 매입이 불가하여 일부 대상지 변경, 사업추진주체에 대한 논란, 사업비 편성에 따른 시설 소유권 문제, 사후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대한 고민은 있으나 실제 하드웨어 조성 시 이를 고려하기 보다는 사업비 규모에 맞추어 시설 마련
	구분	정책 이슈들							
	<p>하드웨어 분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유휴시설의 리모델링 및 복원방법 - 과다 조성 및 활용계획으로 사후 운영 및 유지관리 우려 - 유휴시설과 마을 문화와의 정체성 관계 모호 							
	<p>소프트/휴먼웨어 분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라져가는 농어촌의 삶터와 일상의 모습을 충분히 담았는가 하는 지역 정체성의 문제 - 전문가의 지원 종료 후에도 주민활동이 지속될 것인가 하는 자생력의 문제 							
<p>기타 사업 추진상의 어려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밖에 신규 시범사업에 대한 사업 관계자의 이해 부족과, 사업 공감대의 부족, 토지 소유자의 변심으로 토지 및 건축물 매입이 불가하여 일부 대상지 변경, 사업추진주체에 대한 논란, 사업비 편성에 따른 시설 소유권 문제, 사후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대한 고민은 있으나 실제 하드웨어 조성 시 이를 고려하기 보다는 사업비 규모에 맞추어 시설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후, 건축물 개조범위에 대한 판단, 추진위원회 및 공무원의 교체, 시설의 소유 및 운영권, 하드웨어 사업의 착수 전 소프트·휴먼웨어 사업비 집행, 사업관계자와의 사업에 대한 공감대 형성 등 이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⁵⁴⁾ 									

52) 두리공간환경연구소,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시범사업 성과와 과제』, 도시재생지원사업단, 2011.
 53) 전영미, 「신문화공간조성사업의 추진현황과 과제」, 『한국농촌건축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자료』, 2010.
 54) 전영미, 「농촌지역 유무형 자산을 활용한 마을가꾸기 사업의 추진현황 분석: 신문화공간조성사업을 중심으로」, 『한국주거학회 2011년도 춘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11, pp.197~202.

3.2.4. 지역발전위원회

1) 지역발전위원회 개요⁵⁵⁾

- 지역발전위원회는 ‘국가균형발전계획’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2003년 4월, 대통령 자문기관으로 출범했던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전신임. 참여정부 기간에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공간의 질과 삶의 질을 제고하는 살기좋은 지역 창조’라는 비전을 세우고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음. 2005년에서 2007년에는 ‘신활력지역’을 선정하여, 234개 기초자치단체 중 낙후정도가 심한 하위 30% 70개 시군에 낙후정도에 따라 매년 20~30억씩 시군별로 차등지원 하였고, 지역브랜드 개발 및 소득기반 확충 등 소프트웨어 사업 위주로 지원하였음.⁵⁶⁾
- 참여정부 국가균형발전정책은 실질적 지방분권이 아닌 강제적인 수도권 분산정책으로서 시장기능 효율성과 지역의 자조적 노력을 저해했다는 저평가가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발전 수단으로 지역혁신 개념을 도입하고 지방대학을 지역혁신의 동인으로 파악한 점, 낙후지역개발에 소프트웨어적 접근을 시도한 것은 높게 평가됨⁵⁷⁾
- 현재의 지역발전위원회는 이명박 정부 제2기 국가균형발전정책이 이전 참여정부의 균형과 분산 위주의 정책에서 **상생과 분권 중심으로 전환함에 따라 지역발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관련 정책에 대한 자문을 수행하는 대통령 산하 직속기구**임. 지역발전위원회는 현 정부 100대 국정과제(광역경제권 구축, 지방재원 확충,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 등)와 지역 관련 국정철학(중도실용주의, 따뜻한 자유주의)을 공간적으로 구현하는 정책자문 및 지역소통채널로서 역할을 수행함.

55) 지역발전위원회 홈페이지(<http://www.region.or.kr>)

56) 지역발전위원회 홈페이지(<http://www.region.or.kr>) 홈페이지/ 자료실, 지난정책 소개

57) 모성은, 「국가균형발전정책의 효율적 추진방안」, 『월간 자치발전 2009년 5월호』 (사)한국자치발전연구원, 2009.

- **지역발전위원회는 기본적으로 심의·자문위원회의 성격을 가지지만 실제적으로는 지역발전을 달성하기 위해 기획, 평가, 교육, 컨설팅 지원 등 광범위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그리고 지역발전정책의 5대 핵심과제를 추진하기 위하여, 5+2광역경제권, 기초생활권, 초광역개발권 등으로 구체화하고, 지역 성장거점 육성을 위하여 혁신도시 등 기존시책과 더불어 과학기술벨트 등 신성장 거점을 육성하고자 함.
- **그동안 분산 중복시행된 지역발전사업의 평가체계(균형위, 지경부, 행안부)를 지역발전위원회로 일원화**하였고, 지역발전제도개선대책반 운영을 통해 지방 건의사항을 적극 해결 하는 등 지역발전정책의 실행방안을 마련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2008년부터 지역발전위원회는 지역발전사업 평가를 통하여 전국 230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역의 특화발전 및 광역 경쟁력 향상을 위해 지원된 광특회계사업 추진 실적 종합평가를 실시함.
- 2012년에는 2011년도 수행된 1,071개 지역발전사업에 대하여 지역발전위원회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합동으로 실시하여, 추진체계 우수사례 5지역/ 연계협력 우수사례 5지역/ 파급효과 우수사례 4지역/ 녹색·친환경 우수사례 3지역/ 효율적 집행 분야 우수사례 3지역으로 총 20개 우수 지자체를 선정함.

2) 창조지역사업

- 지역발전위원회는 그간의 지역정책이 시설물 건립 위주의 단기적 접근, 지역의 실정과 주민 주체의 주도성을 섬세하게 고려하지 못하는 관주도적 추진방식으로 인해 실패가 잦음에 따라 지자체 재정 부담이 심화되고, 주민복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행함을 비판적으로 수용함. 이에 따라 향후 지방재정 악화 예상 및 시민사회의 거버넌스 요구 등을 고려한 지역정책으로서 창조지역사업이 등장함.

- 창조지역사업은 지역의 유무형 자산을 토대로 창의적 발상을 이끌어 내고 지역주민의 참여 하에 이루어지는 장기적 관점의 지역사업으로서, 광의적·동태적 개념으로 추진되고 있음. 문화콘텐츠는 창조지역의 필수적인 요소이지만, 전부가 아닌 일부로 문화예술, 자연자원, 첨단산업, 스포츠 이벤트, 관광자원, 농식품업 등 지역별로 다양 할 수 있음⁵⁸⁾

〈표 31〉 2011년 창조지역사업 현황

권역	지자체	부처	사업명	사업내용
충청권	대전	국토부	○ (대덕구) 배달강좌제 50	■ 평생 학습+서비스개선
	충북	농식품부	○ (음성군) 동요 에듀케어 project	■ 전래 동요+교육문화
	충남	농식품부	○ (공주시) 사이버시민과 5도2촌 주말도시 융복합 사업	■ 사이버시민+도농교류 (도시농업)
		농식품부	○ (서산시) Birds of Korea project	■ 철새 +모바일Application
호남권	전북	국토부	○ (전주시) 국선생 맵프로젝트	■ 막걸리+전통주 +지역재생
		국토부	○ (전주시) 소리산업 아카이브 구축	■ 소리+음향산업
	전남	농식품부	○ (순천시) 행복24시 정겨운 순천사람들	■ 자원 봉사+의료·복지
		농식품부	○ (순천시) 문화로 가꾸는 경관농업	■ 논+캠버스+순천만 +철새
동남권	경남	농식품부	○ (고성군) 공룡특화자원화-4D 입체	■ 공룡+영상 →창조자원화
		농식품부	○ (남해군) 생생테마랜드 - 에너지 자족 마을	■ 환경집적시설+공공디자인→창조자원화
		농식품부	○ (산청군) 동의보감촌 문화콘텐츠 개발	■ 동의보감→창조자원화
대경권	경북	농식품부	○ (경산시) 로터스 floating 아일랜드 가든	■ 연꽃+수상식물원 →창조자원
		농식품부	○ (예천군) 꿀벌 우수 증봉선발 사업	■ 꿀벌 → 창조자원화
강원	강원	농식품부	○ (정선군) 아리랑의 고향 정선 조성	■ 정선아리랑 →창조자원화
	총 계		12개 시·군·구, 13개 사업	

58) 지역발전위원회, 『2012 창조지역사업 가이드라인』, 2012.

- **창조지역사업은 2011년에 시작해서 2012년에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문화부, 농식품부 추천으로 문화기획·지역·농촌전문가 9명으로 컨설팅단을 구성하여 현장 모니터링 및 컨설팅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음. 지역사업에 대한 컨설팅단 운영모델은 지역민족문화과에서 추진한 <문전성시 컨설팅단> 및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컨설팅위원회> 성과를 적극적으로 수용한 사례임.**
- 컨설팅단 현장점검 결과를 살펴보면 사업의 이해도에 따라 각 지자체의 **창조지역사업 기획 및 지역주민 연관성 정도에서 편차**를 보이고 있음. 또한 **사업에 대한 증장기적 비전 및 통합적 관점의 기획총괄 부서의 부재, 민관협력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가 제기됨.** 또한, 컨설팅 시점이 사업 진행 중간에 이루어져 향후 적절한 시기의 컨설팅의 필요 및 창조지역사업의 지역내 유관기관 및 지역주민 이해를 높이고 성공사례의 공유를 위한 홍보활동 필요가 거론되었음.
- **이와 더불어 연계협력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2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참여하여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재원을 함께 분담하여 효과를 공유하는 사업 개념임.** 창조지역사업 및 연계협력사업은 각 지역에서 시작하는 단계인데, 2011년도에는 농림수산식품부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120개 시·군 중에서 기초자치단체간 연계협력사업이 7개 군, 창조지역사업은 11개 읍면동 소관 지자체만 신청하는 데 그침.⁵⁹⁾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처간 개별적으로 추진되었던 지역사업을 연계하고자 하는 정책적 시도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음.**
- 연계협력사업의 추진사례로 곡성, 남원, 장수, 구례, 하동, 산청, 함양이 조합 형태로 참여한 <지리산권 관광개발 공동연계사업>, 공주와 부여가 협의회 형태로 참여한 <백제문화제 통합개최> 등이 있음⁶⁰⁾

59) 대한민국 국회, 『2011년도 공청회자료집(예산안기금운용)』, 2011, p.39.

60) 지역발전위원회, 『농림수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간 연계협력사업 편람』, 2013, p.134.

3.3. 분석시사점

1) 2000년대 이후 개별단위 지역개발에서 통합적 지역재생 정책으로 전환

- 한국에서 지역정책은 한국 현대사의 굴곡과 맥락을 같이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국제환경 변화에 대응하면서 급속하게 변화와 발전, 시행착오의 과정을 겪고 있음. 1980년대까지는 경제성장 중심의 물리적 개발과 환경개선에 기반을 둔 지역정책이 지배적이었지만 1990년대는 지역분권 및 지역주민 삶의 질 패러다임이 세계화 경향과 연동되어 추진되기 시작하였음.
- 2000년대가 되면서 한국도 세계의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지역고유의 특성에 기반을 둔 통합적 관점에서의 지역재생 정책이 전국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함.

2) 2007년 이후 여러 중앙부처에서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 정책에 주목함

- 지역을 정책대상으로 삼고 있는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 농림수산식품부 등 여러 중앙부처에서 지역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전략으로 2007년 이후부터 “문화”를 매개한 지역재생 정책에 주목하기 시작했음. 이전에는 지역재생정책에서 문화는 거의 비중이 없거나 일부였던 것에 비해 2007년부터 본격적으로 중요 요소로 인식되고 있음.
- 이는 창조사회로의 전환 등 지역을 둘러싼 패러다임이나 지역여건이 변화하면서 지역정책을 추진하는 관점과 방법이 매우 다양해졌고, 문화산업 및 창조경제에 대한 비전, 삶의 질 고양 및 사회통합 등과 관련해서 부처별 정책기조에 문화 관련 정책 프로그램이 반영되고 있는 것이라 봄.

3) 하드/소프트/휴먼을 강화하는 종합적 시도가 있지만 실체가 허약함

- 최근 추진되는 지역재생 관련 여러 가지 정책사업은 시대적 변화에 부합하여 과거와 같이 하드웨어적 개선에 머물고 있지 않으며, 대체로 소프트/휴먼 요소를 종합적으로 연계 시도하고 있음. 국토해양부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시범사업>, 행정안전부의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참살고싶은 마을가꾸기>, 농림수산식품부의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농어촌신문화공간 조성사업> 등이 모두 그러함.
- 그러나 그동안 지역에서 주류였던 물리적 개선위주의 지역개발의 관행이 잘 해결되지 않으며, 지역문화를 활용한 소프트 콘텐츠 개발에서도 창의적 기획보다는 전형적이고 획일적인 모델로 진행되고, 지역주민들은 아직도 수동적 시혜 대상에서 참여와 주체로서 진화하고 있지는 않음. 형식적 진화에 비해 내용적 실체는 허약함.

4) 지역재생의 접근방식에서 연계와 교류, 운영구조의 혁신이 필요

- 지역재생은 개별 지역이나 프로젝트 단위를 넘어 지역의 종합적 관점에서 활성화하고자하는 정책이므로 지역의 통합적 관점에 입각한 접근방식이 필요함. 즉, 지역의 필요에 따라 정책과 지원을 연계하고 교류함으로써 지역의 자원, 공간, 사람을 지역재생의 핵심 요소를 자리매김 하는 “과정”이 필요함.
- 지역재생 사업의 운영구조에서도 한국 지역상황에 실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전반적 혁신이 필요함. 하드-소프트-휴먼 요소에 대한 형식적 접근이 아니라 실체를 가지고 지역에 맞게 구축되도록 추진과정을 섬세하게 돕는 정책운영이 필요함.

Ⅲ. 문화부 내 지역재생 관련정책 분석

1. 지역민족문화과

1.1. 설립배경 및 역할 검토

-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발전에서 문화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내 전담과인 현 지역민족문화과를 설치하여 지역문화진흥 정책을 추진하게 됨. **현재의 지역민족문화과의 정체성은 지역발전에서 문화의 역할을 정립하고 구축해가는 중앙부처의 위상과 역할로부터 출발하고 있음.**
- 지역민족문화과는 1996년 문화정책국 소속인 문화진흥과가 예술진흥국으로 이관되고 지역문화예술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운영되기 시작하였음. 초기에는 전담 정책과로서의 위상이 분명하지 않은 가운데, 국민의 정부인 **1999년에는 지역문화예술과를 전통문화과와 통합하며 명칭을 전통지역문화과로 변경**하였음.
- **지역문화에 대한 정책추진은 참여정부 때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하였음. 참여정부는 자율, 분권, 참여라는 국정 기조를 제도화하고자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지방분권특별법을 제정·시행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신설하고 정부보조금의 대폭적인 지방이양을 추진하는 등 **지역분권에 적극적인 정책을 펼쳤고,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주요한 기반체계마련 대책으로서 거시적이고도 종합적 시각에 입각한 ‘지역문화진흥법’의 제정을 추진**하기 시작하였음.
- 이러한 흐름 속에서 지역문화 균형발전과 문화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문화정책국을 신설하고 예술국 소속의 전통지역문화과와 문화교류과를 통합, 문화정책국 소속으로 지역문화과를 신설하였음.

- 2009년 이명박정부 출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정책국과 예술국을 문화예술국으로 통합하여 현재까지 지역문화 진흥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1년 지역문화과를 지역민족문화과로 명칭을 변경**하여 지역문화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표 32> 지역민족문화과 연도별 역할 변화

구분	주요역할
<p>1999~2004 전통지역문화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통음악·전통무용·전통공예 등 전통예술 진흥 및 현대화에 관한 사항 • 지역문화예술 및 생활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항 • 문화예술 수요확충에 관한 사항 • 전통문화예술 교육기회 확대에 관한 사항 • 세시풍속·민속예술의 육성 및 보급 • 전통문화예술의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 지역축제의 육성 및 지원 • 지방문화원의 육성 및 지원 • 향토문화의 보존 및 조사·연구 • 국립국악원 및 국악중고등학교에 관련된 업무
<p>2004~2011 지역문화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문화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및 추진 • 지역주민의 문화복지 및 문화향유 활성화에 관한 사항 • 문화·창조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향토문화의 보존 및 조사·연구의 지원 • 지방문화원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 지방문화예술위원회 및 지역 문화재단에 관한 사항 • 지역문화자원의 발굴 및 활용에 관한 사항 • 문화예술·관광·체육·문화복지 등 문화시설의 기본정책의 수립·조정 • 지역문화자원의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p>2011~현재 지역민족문화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문화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및 추진 • 지역문화의 균형발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지원 • 지역주민의 문화복지 및 문화향유 활성화에 관한 사항 • 문화·창조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향토문화의 보존 및 조사·연구의 지원 • 지방문화원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 지방문화예술위원회 및 지역 문화재단에 관한 사항 • 지역문화자원의 발굴 및 활용에 관한 사항 • 문화예술·관광·체육·문화복지 등 문화시설의 기본정책의 수립·조정 • 지역문화자원의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1.2. 지역재생 관련정책 추진현황

- 문화체육관광부는 참여정부 출범 이후 지역균형발전에 힘을 기울이면서 문화를 통한 ‘지역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 확립과 시스템 구축에 주력하였음.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 관련 정책사업은 전통지역문화과(현재의 지역민족문화과)에서 추진되기 시작하였음. 1999~2004년 추진하였던 <문화의거리 조성사업>을 시작으로 2004년을 전후해서 참여정부 시기에는 지역문화진흥 및 균형발전 정책기조에 따른 <생활친화적 문화공간 조성>, <문화역사마을 가꾸기>, <문화도시 조성사업> 등으로 본격화되고, “광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경주 역사문화도시”, “전주 전통문화도시” 등 도시차원의 문화전략이자 국가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문화도시 조성사업>으로 이어졌음.

<표 33> 지역민족문화과 지역문화정책 흐름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하드	문화의거리 조성사업								
	생활친화적 문화공간 조성								
소프트	지방대 활용 지역문화 컨설팅								
	지방문화원 중심 지역문화프로그램								
휴먼	지역문화아카데미 사업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시범사업								
하드+소프트	문화역사 마을 가꾸기		디자인 공간 문화과 이관						
	문화도시조성사업(경주,전주,부여·공주)								
하드+소프트+휴먼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여가정책과에서 이관	문화이모작 사업	

- 이명박정부 출범 이후 지역균형의 관점에서 접근되어 온 지역문화정책의 또 다른 축으로 지역문화의 특성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새로운 목표로 설정함.
- 2008년 12월 발표된 문화·체육·관광을 포괄하는 지역문화발전방안에서는 주요과제로 수요 측면에서 생활권 단위의 활력 넘치는 지역문화환경 조성을 통한 삶의 질 제고와 함께 공급 측면에서 지역문화의 창의성을 진흥하여 지역문화의 특성화, 자생력 강화를 지원하게 됨. 이러한 흐름 속에서 역사적 장소이자 일상적 생활공간인 전통시장을 지역문화 체험공간으로 활성화하는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시범사업>과, 주민을 예술과 문화의 향유자가 아닌 창작자이자 생산자로 이끌어내는 <생활문화공동체만들기 시범사업>이 추진됨.
- 이 두 사업은 기존 지역문화정책과는 차별적 성과를 내었다고 평가되는데, <문전성시 시범사업>은 상업적으로 침체된 전통시장에 문화예술을 활용하여 시장을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것에 큰 성과가 있었으며, 지역민들의 생활문화를 활용하고, 프로그램과 사람이 중심이 되어 공간을 문화적으로 재생하는 성과를 거두게 됨.
- <생활문화공동체만들기 시범사업>은 지역주민이 객체로 대상화되기 쉬웠던 기존 지원사업과는 달리 주민 스스로 문화의 생산자가 되고 주체화되는 새로운 개념의 생활공감 프로그램으로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 어려운 지역문화공동체에 새로운 성과를 구축해가고 있음.
- 그런데, 지역민족문화과에서 추진한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 관련 사업은 개별 사업으로서는 가치와 성과가 분명한 것에 비해 사업의 지속가능성 면에서 한계를 보여 왔고, 이에 따라 지역에 정책성과가 종합적으로 구축되고 있지 않은 상황임.

2. 디자인공간문화과

2.1. 설립배경 및 역할 검토

- 문화체육관광부는 인간과 자연, 문화가 도시의 중심가치가 되는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2005년 8월 16일 조직개편에 따라 2004년 단편적인 사업으로 추진되었던 공간문화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문화정책국 내에 공간문화과를 신설함.
- 2005년 설립이후 2007년까지 공간문화과는 문화적 공간환경 조성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및 공간문화정책에 관한 조사·연구, 간판문화개선 사업, 문화도시의 공간환경 조성·지원, 국가이미지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한 공공디자인 정책을 추진하는 역할을 담당하였음.

〈표 34〉 디자인공간문화과 연도별 역할 변화

구분	주요 역할
2005~2007 공간문화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적 공간환경 조성을 위한 종합 계획 수립 및 관련법률 제정 등 • 도시경관에 대한 문화가치 확산 · 간판문화개선, 도시공간 개선을 통한 쾌적한 도시경관 창출 및 도시경쟁력 제고 • 국가이미지·삶의 질 제고를 위한 공공디자인 정책 추진 • 국책사업 분야에 문화 패러다임 도입 적극 추진 : 용산 민족역사공원,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2008~2012 디자인 공간문화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적 공간환경 조성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 도시와 농촌지역의 문화적 공간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 간판문화의 개선에 관한 사항 • 문화도시의 공간환경 조성·지원에 관한 사항 • 다중이용 공공시설의 문화적 개선에 관한 사항 • 공공시설물 등의 디자인 진흥에 관한 사항 • 공간문화 인식 제고 및 교육에 관한 사항 • 국립·공립 시설의 공간 기획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공예 진흥에 관한 사항 • 한국공예문화진흥원 및 한국디자인재단과 관련된 업무

- 2008년 8월 공간문화과를 디자인공간문화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국가적 차원의 디자인 정책을 수립·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디자인기본법 제정을 추진하였으나 법제정에 이르지 못함.
- 이후 디자인공간문화과의 정책범위는 점차 확대되어 공공디자인 시범도시 조성, 당인리 화력발전소의 문화예술창작벨트 조성사업, 대한민국건축문화제, 지역근대산업유산을 활용한 예술창작벨트 조성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음.

2.2. 지역재생 관련정책 추진현황

- 디자인공간문화과는 일상 생활공간 속에서 문화를 느끼고 호흡하는 정책추진이 절실한 시점에 설립되어 공간의 배치, 형태, 디자인 등이 개인 감성이나 행동뿐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아래의 표와 같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게 됨. 이중 <문화역사마을가꾸기 사업>은 2002년 지역문화과에서 시작한 사업으로 2006년 이후 디자인공간문화과로 이전되어 추진됨.

〈표 35〉 디자인공간문화과 공간문화정책 흐름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하드+소프트+휴먼	공공디자인	공공디자인 시범도시 조성						문화디자인 프로젝트(간이역)	
소프트		문화역사마을 가꾸기							
하드+소프트	공간문화조성 및 문화공간		근대문화유산을 활용한 구(舊)서울역사복합문화공간조성				문화역 서울284 개관식	문화역 서울284 운영	
			당인리 화력발전소의 문화예술창작벨트 조성						
			지역근대산업유산을 활용한 예술창작벨트 조성						
하드+소프트+휴먼		생활공간 문화적 개선사업 (2008년부터 문화로 행복한 학교 만들기 사업으로 중점)							

- 2007년에는 1925년 건립된 이후 근현대사의 역사적·상징적 공간으로서 사적 제 284호로 지정된 서울역을 문화적으로 재생하는 <근대문화유산을 활용한 구(舊)서울역사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을 추진, 2012년에 “문화역 서울 284”로 개관하였음. 또한 공공디자인엑스포를 개최하여 공공디자인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시키고 디자인을 확산·보급 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게 됨.
- 2008년에는 개발논리에 밀려 훼손·멸실되거나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는 산업유산의 가치를 재인식하고, 문화, 예술, 관광 진흥 관점에서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여 도심재생 및 지역문화예술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지역근대산업유산을 활용한 예술창작벨트 조성사업>을 국정과제로 추진함. 이때 국토연구원의 근대산업유산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지자체 추천 16개 사업을 대상으로 서면심사 및 현장실사를 거쳐 시범사업 대상지 5개소(대구, 포천, 아산, 신안, 군산)를 최종 선정하였음.
- 또한 생활공간 문화적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문화로 아름답고 행복한 학교 만들기 시범사업>을 추진, 전국 공모신청을 통해 낙후정도, 개선의지 및 협력체계 여부, 지역상황을 고려하여 5개교를 선정, 추진하였음. 특히 이 사업은 실질적 이용자인 학생과 교사, 학부모가 적극 참여하여 개선된 공간에 대한 자부심과 애착심을 확인하고 지속가능한 공간환경 조성의 토대를 마련하는 계기를 구축하였음.
- 2009년은 2008년 국정과제로 추진하였던 <지역근대산업유산을 활용한 예술창작벨트 조성사업>을 위해 선정된 5개소 지역주민과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지역특성에 맞는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문화공간조성을 위한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했으며, 이듬해인 2010년 실시설계를 마치고 리모델링 등 공사를 추진하였음.

- 2011년은 문화생활로부터 상대적으로 소외된 지역에 위치한 소규모 기차역의 공공디자인 개선을 통해 문화적 공간 모델 형성 및 공간문화 인식 확산에 기여하고,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의 적용으로 지역 주민의 참여를 촉진하는 등 지역 문화네트워크 형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문화디자인 프로젝트 간이역 시범사업>을 문화콘텐츠와 공공디자인이 결합된 문화적 공공디자인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추진함.
- 특히 <문화디자인 프로젝트 간이역 시범사업>은 시설개선 중심의 공공 디자인 사업에서 벗어나 지역문화에 기반을 둔 문화콘텐츠를 발굴하고 지역 주민의 참여를 촉진하는 문화적 커뮤니티 디자인을 추구하여 지역의 문화적 자생력을 촉진하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음.
- 디자인공간문화과 정책사업은 역사문화자원 및 공간, 생활문화자원 및 공간 등을 활용한 지역재생 정책 특성을 띠며 추진되고 있음. 전반적으로 근현대 문화유산, 생활문화자원 등을 활용하여 도시와 지역을 활성화하는 데 다양한 “물리적 문화환경”을 조성하여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이라는 정책 관점에서 볼 경우, 이를 통해 “지역 커뮤니티, 주민 주체의 참여와 재생”등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됨.

3. 정책사업별 검토

3.1. 문화역사마을가꾸기 조성사업(2002~)

- <문화역사마을가꾸기 조성사업>은 우수한 문화 역사적 소재를 발굴·육성하여 관광자원화 하고 문화와 환경이 아름답게 조화된 자생력 있는 마을을 조성하기 위하여 2002년부터 총 240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였음. 하드웨어 중심의 개발정책에서 벗어나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하는 현황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한 문화역사의 복원과 보존 창조가 필요함에 따라 사업이 추진됨.
- <문화역사마을가꾸기 조성사업>은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물리적인 사업정비보다는 소프트웨어적인 문화·역사·환경·소득 등이 조화롭게 반영된 방향으로 운영하고자 하였으며, 마을의 문화·역사적 소재를 발굴·육성, 관광자원화 하여 문화와 환경이 아름답게 조화된 자생력 있는 마을 조성하고자 하였음.

〈표 36〉 문화역사마을가꾸기 조성사업 개요

구 분	내용
사업목적	마을의 문화·역사적 소재를 발굴·육성, 관광자원화 하여 문화와 환경이 아름답게 조화된 자생력 있는 마을 조성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량위주의 건축, 마을정비 사업보다는 문화·역사·환경·소득이 조화된 장기적 마을발전 전략 수립 운영 - 지역관광자원 개발 및 관광객 증대를 위한 마을별 특화된 문화·역사 마을 가꾸기 사업 전개로 경관개선, 상징물 설치, 관광상품 개발, 역사마을체험 프로그램 및 마을운영 프로그램 개발 등 - 일률적 개발방식을 지양하고 마을의 특성을 고려한 특화된 마을 조성
사업유형	마을의 문화 역사적 환경을 활용한 마을 콘텐츠 개발
사업대상	전국 9개도의 각 도에 1개 마을 원칙
예산지원	총 240억원
추진현황	1차년도(2003)~ 장수, 태안, 해남, 합천, 고양 사업 진행 2차년도(2004)~ 16곳 추가 총 21개 지역 사업 진행 3차년도(2005)~ 2단계 사업 진행한 21곳 중 우수한 3개 지역 선정 진행
담당부서	디자인공간문화과

- 2002년 시범사업 이후 <문화역사마을가꾸기 조성사업>으로 공식명칭을 확정하면서 추진되기 시작함. 그러나 후에 4개 사업이 취소, 중단되어 단발성 사업으로 그쳤다가 2005년 선택과 집중이 적용된 기존 16개 사업 대상지 중 3개 사례지가 선정되면서 다시 추진됨.⁶¹⁾
- 총 사업비는 255억 원이었으며, 전국 9개도 별로 1개 마을 조성을 원칙으로 하되, 지자체가 희망하는 시에는 도 단위 사업비(30억 원: 기금 20억, 지방비 10억)내에서 2개 마을 조성이 허용됨. 2개 마을 조성 시 마을 규모와 기반시설 현황에 따라 차등 교부가 가능하도록 하였음.
- 지역 특성이 고려된 마을별 특화 사업으로 지역관광자원 개발 및 관광객 증대를 위해 경관개선, 상징물 설치, 관광상품 개발, 체험 프로그램 개발 등 일률적 개발방식을 지양하고 관주도의 하향식이 아닌 지역주민과 민간단체의 자발적 참여에 의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단위별 순수민간 차원의 추진협의체를 구성, 운영하였음.
- 하지만 1, 2차년도 <문화역사마을가꾸기 조성사업> 세부사업을 진행하며 참여주체들 간 역할이 불분명하고 조직이 구성되지 않아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부족해짐에 따라 3차년도 사업은 2차년도 사업 중 3개 마을을 선정하여 선택과 집중 통한 사업을 진행하였음.
- 3차년도 사업은 1,2차년도 진행했던 활동을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위한 공간 정비와 함께 새로운 체험프로그램 개발,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과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해 추진체계 및 각 지역 사업주체 별로 사업초기부터 민간전문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장려,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였음.

61) 이동균, 『주민참여에 의한 마을가꾸기 사업에서 참여주체의 관계구도와 역할에 관한 연구 : 문화·역사마을가꾸기 사업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2007, p.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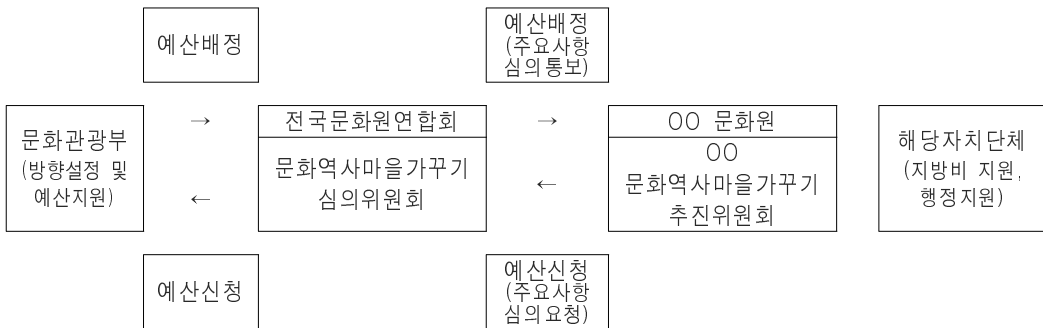
〈표 37〉 문화역사마을가꾸기 조성사업 추진경위

단계	시기	시행범위	비고
1차년도	2003	5개 지역	장수, 태안, 해남, 합천, 고양
2차년도	2003~2004	21개 지역	안동 군자마을(2004) 외 20개 마을
3차년도	2004~2007	3개 지역	안동 군자마을(2005), 영광 효동마을(2005) 제주 법환마을(2005)

출처 : 이동균, 『주민참여에 의한 마을가꾸기 사업에서 참여주체의 관계구도와 역할에 관한 연구 : 문화역사마을가꾸기 사업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2007, p.8.

- 본 사업은 전국문화원연합회가 사업 시행주체가 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예산을 지원함. 또한 <문화역사마을가꾸기 조성사업> 추진위원회가 지역별로 구성·운영되어 각 분야별로 문화역사, 관광, 건축, 행정 등을 심의하고, 자치단체에서는 지방비와 행정적 지원을 담당함.

〈그림 6〉 사업추진 체계도



자료 : 2006년 『문화역사마을가꾸기』 추진위원회 컨설팅 워크숍, 전국문화원연합회, Aug. 2006, 재인용.

출처 : 이동균, 『주민참여에 의한 마을가꾸기 사업에서 참여주체의 관계구도와 역할에 관한 연구 : 문화역사마을가꾸기 사업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2007, p.10.

- 본 사업은 지역의 문화역사를 발굴 활용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주민참여 및 민간단체의 참여를 독려하고자 하였음. 또한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이끌고, 마을의 물리적 환경개선, 주민의 다각적인 소득 증대를 꾀하고자 하였음.

〈표 38〉 문화역사마을가꾸기 조성사업 세부 프로그램 예시

내 마을 문화역사 발굴 소개	향토문화 역사 조사프로그램 운영	지명과 동네이름 찾기	문화역사 소개 강화
지역문화 역사 알리기	지역문화 역사체험 프로그램 운영	정체성 있고 차별화된 축제 활성화	타임캡슐 제작보관
작은 지역축제 만들기	문화 탐방 코스 개발		

- 〈문화역사마을가꾸기 조성사업〉에서는 주민교육을 통한 인식 고취, 주민과 행정지원가 및 전문가 협력, 주민조직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한 성공요소라고 평가됨. 그러나 한편으로는 지역문화 콘텐츠 개발에서의 한계, 마을과 주민의 자생력 한계에 부딪히게 됨.⁶²⁾

3.2. 문화도시 조성사업(2005~)

- 〈문화도시 조성사업〉은 1985년 시작된 〈유럽문화수도 지정제도〉의 국제적 영향력을 전제로 1990년대 한국사회의 경제사회적 변화와 함께 문화의 중요성이 사회적으로 확산되면서 지역민족문화와 주도로 지역문화진흥 및 균형발전의 주요한 정책으로 추진되었음.
-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도시선정 기준은 광역권별 특성과 지역 균형이 고려되었고 최종 부산, 경주, 전주, 공주·부여가 선정되었음. 이 도시들은 우리 고유의 역사성과 전통문화로 대표되는 역사문화도시들이고 광주 아시아문화중심도시와 함께 한국과 지역문화를 대표하는 도시로 조성되고 있음. 현재 4곳의 〈문화도시 조성사업〉은 2006년부터 2035년까지 사업기간을 설정하고 추진 중에 있음.

62) 김승근, 「주민참여에 의한 문화역사 마을가꾸기의 현황과 과제(충주 목계 문화역사마을 중심으로)」, 『농촌건축 : 한국농촌건축학회논문집』, 2008.

〈표 39〉 지역거점 문화도시 조성사업 개요

	경주 역사문화도시	전주 전통문화도시	공주·부여 백제역사문화도시	부산 영상문화도시
사업 비전	“천 년의 역사와 미래가 공존하는 세계적인 역사문화도시, 경주”	“세계와 소통하는 가장 한국적인 도시, 전주”	“역사·자연·사람이 미래를 만드는 살맛나는 백제왕도, 공주·부여”	“아시아 영상허브”
사업 목적	· 천 년고도 경주를 문 화유산과 관광이 조화되는 도시로 재창조, 세계적인 관광문화도시로 조 성	· 전주의 풍부한 전통 문화자원을 활용하 여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문 화도시 창출	· 백제의 고도인 공주 와 부여의 역사와 문화자원을 활용한 역사문화도시조성 · 역사적 정체성 확립 과 고도경관 형성	· 아시아 시장 지향 · 산업+문화 동시육 성 · 클러스터 구성요 소 구비
사업 내용	· 문화유산 발굴·복원 · 문화유산 환경정비 · 문화산업기반확충 · 관광기반활성화 기반구축 · 도시기반정비 · 문화기반육성 4대 선도사업군 65개 전체사업	· 전통문화 관련사업 · 역사유산 관련사업 · 전통문화자원 활용기반 확충 · 전통문화 교육 및 인적 체계 구축 · 전통문화도시 홍보 및 관광활성화 · 전통문화도시 공간정비 계획 · 전통문화도시 교통체계 개선 · 경관 관련제도 정비 및 시민참여 유도 4대 선도사업군 64개 전체사업	· 고도정비사업 · 예술고을정비사업 · 관광도시 개발사업 · 백제학 연구원 설립 · 백제미술 공예센터 설 립 · 백제문화 애니메이션 개발 본부설립 · 고마나루 역사 진흥재 단 운영 · 공주시 문화재보존 센 터 지원 5대 선도사업군 57개 전체사업	· 기업 유치 및 육성 · 기초인프라 강화 · 네트워크 강화 · 국제화 전략 · 인력양성 전략 · 문화 및 관광산업 육성전략 4개 핵심과제 44개 전체사업
사업 기간	2006 ~ 2035년 (30년간)	2007 ~ 2026 (20년간)	2009 ~ 2030 (22년간)	2005 ~ 2014 (10년간)
사업 계획	· '05~' 09 : 선도사업 · '10~' 19 : 인프라구축 · '20~' 29 : 다양한 역사체험, 문화프로그램 개발 · '30~' 34 : 위상확보	· '07~' 11 : 기반 조성단계 · '12~' 16 : 자립적 성장단계 · '17~'26 : 가치 확산단계	· '09~' 15 : 기반 조성단계 · '16~' 20 : 성장 단계 · '21~'30 : 확산단계	· '05~' 08 : 산업기반 형성 · '09~' 12 : 영상클러스터 성장 · '13~ : 안정적인 정착기

※ 부산영상문화도시의 사업기간은 부산영상문화도시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 기준 자료이며, 2011년 사업이 종료되었음.

3.3. 공공디자인 시범도시 조성사업⁶³⁾(2005~)

- 도시환경이나 공공분야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디자인에 중요성이 부각되고, 상대적으로 낙후된 공공영역의 디자인으로 인해 통합적 도시이미지 창출 및 도시공간 조성의 한계가 노출됨. 이에 따라 지역의 문화와 역사, 자연환경에 바탕을 둔 쾌적하고 지속가능한 공공디자인 공간을 조성, 관광자원 발굴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주민참여 디자인에 의한 지역문화 커뮤니티 공간조성 형식의 <공공디자인 시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게 됨.
- 도시재생의 시범 모델로서 도시이미지 구축에 지역의 테마, 지역주민들의 참여로 발굴하는 문화콘텐츠 구축, 지역민들이 중심이 된 문화 커뮤니티 활성화와 역량 향상에 중점을 두었음.

〈표 40〉 공공디자인 시범도시 조성사업 개요

구 분	내용
사업목적	도시 재생의 시범 모델로서 도시이미지 구축에 지역의 테마, 지역주민들의 참여로 발굴하는 문화 콘텐츠 구축, 지역민들이 중심이 된 문화 커뮤니티 활성화와 역량 향상에 중점을 둠
사업내용	가로환경 개선, 지역 고유의 역사성과 문화적 정체성을 살리는 공간사업
사업유형	공간 디자인 개선을 통한 역사 문화적 환경 조성
사업대상	선정지역 주민
예산지원	마스터플랜 수립 및 기본시설설계 사업비 1억 5천만원 (전년도 배정) 사업별 3~5억원 차등 지원 (총 사업비의 50% 사업연도 배정)
추진현황	9개 지역 조성 (부산 광복로 가로환경개선사업, 영등포 공공디자인 시범거리 조성사업, 대구 동성로 공공디자인 개선사업, 안양 만안구 공공디자인 시범도시 조성사업, 양평 한강아트로드 조성사업, 익산 아름다운 금강 변포구마을 가꾸기 사업, 안동 인도교 및 문화체육단지 조성사업, 부산 진구 서면 특화거리 조성사업)
담당부서	디자인공간문화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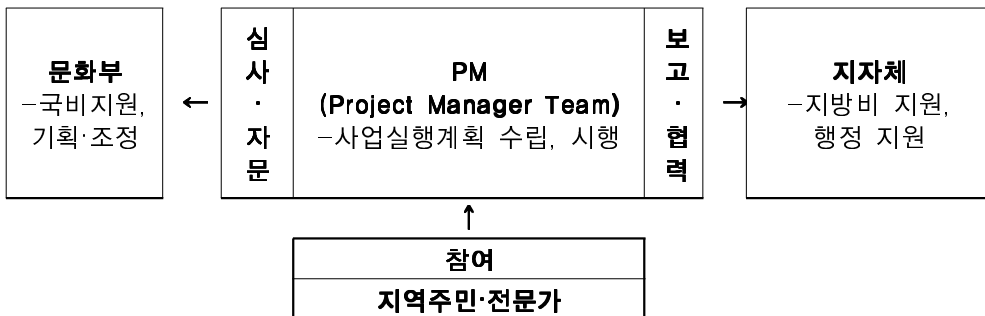
63) 이윤경, 「공공디자인 시범도시 조성사업 현황진단 및 개선방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1.

〈표 41〉 공공디자인 시범도시 조성사업 추진현황

사업명	기간	구간	목적
부산광역시 가로환경개선사업	2005~ 2009	광복로-광복로입구 -창선상가	광복로의 간판, 보도 및 차도, 시설물을 토털 디자인 개념으로 종합개선
영등포 공공디자인 시범거리 조성사업	2006.6~ 2009.11	당산로 (현대해상-친수공간)	시범적인 공공디자인 개선사업을 통해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 공간 창출 모델 제시
대구 동성로 공공디자인 개선사업	2007.5~ 2010.6	대구 동성로	대구 동성로의 정체성을 살린 공간기획 및 디자인
안양 만안구 공공디자인 시범도시 조성사업	2007~ 2011	만안구 일원	도시지역 내 디자인 사업에 대한 모델 제시하고 중앙과 지방, 민관 협력으로 공간문화적 도시조성의 새로운 패러다임 구현
양평 한강아트로드 조성사업	2009~ 2011	강하면	한강아트로드조성 문화커뮤니티/관광시설
익산 아름다운 금강변 포구마을 가꾸기 사업		성당면 성당리 성당포구	성당포구마을만들기 커뮤니티/역사환경보전
안동 인도교 및 문화체육단지 조성사업		운흥동 낙동강변	탈출공원공공디자인조성사업 관광특구/문화커뮤니티
부산 진구 서면 특화거리 조성사업		서면교차로- 부전도서관-피에스 타, 롯데	서면특화거리조성사업 도시형공공디자인
청주 사직공원 조성사업	2010~ 2012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산 126-9번지 일원	환경보전적인 공간 조성 주민욕구를 만족시키는 공간 창출 도시 내 녹지체계형성을 도모할 수 있는 공원 조성

출처 : 강현주, 김주연, 이윤경, 장동련, 『문화적 관점의 공공디자인사업 평가지표 보고서』, 한국공예디자인 문화진흥원, 2011, p.22.

〈그림 7〉 공공디자인 시범도시 조성사업 추진체계



- 사업 추진체계에서 전문가의 독려로 지역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함. 전국적으로 지역민들의 지역에 대한 관심과 문화인식의 확장을 위해 사업형식에 있어 공모형식으로 대상을 선정하였고 주민참여방안의 개발을 다양하게 모색하였음.

(표 42) 추진주체별 업무분장

추진주체	업무
문화부	· 기본정책 수립, 지침 제시, 사업 전반의 기획·조정, 평가·환류 등 · 국비 지원 및 각 주체 간 협력체계 구축 · 각 사업지별 PM 지정 및 전문인력 지원
지자체	· 지역주민, 지역 전문가, 관련단체 등 지역 협조체계 구축 · 시범사업에 대한 예산 교부 및 관리, 행정 지원 · 사업 종료 후 지속화 방안 마련 및 시행
PM단(Project Manager Team)	· 디자인 및 문화·예술 분야 전문가로 구성 · 사업별 사업계획 수립 및 디자인·문화콘텐츠 개발·실행 · 지역주민, 지역 전문가, 관련단체 등 지역 협조체계 구축 · 사업추진 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한 대응책 수립 및 실행
평가단	· 평가위원 및 사무국으로 구성 · 사업 모니터링·성과평가 및 차년도 사업계획 수립 검토·자문 · 사업결과 정리 및 사업도록 및 평가보고서 등 발간
주민	· 사업시행주체(PM)와의 협력 관계 구축 · 디자인 및 문화콘텐츠 개발·실행에 동참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2010년 공공디자인 조성사업 추진계획안」, 2010.

- 2005년 이후 수행된 공공디자인 시범사업은 민간위탁 중심으로 추진되어오다 지자체가 직접 사업의 주체가 되는 방식으로 변화하게 되었고, 지원 사업기간 및 규모도 축소하게 됨. 반면, 문화적 가치를 반영하고자 하는 사업취지는 점차 강화되고 초기 사업대비 절차적 타당성을 높여감. 초기 토목공사 위주의 하드웨어 시공이 주류를 이루던 것에 비하여 최근에는 문화콘텐츠를 구현하고자 하는 계획 위주로 전환되고 있음.

3.4. 생활공간 문화적 개선사업(문화로 행복한 학교 만들기/2006~)

- <생활공간 문화적 개선사업>은 다양한 생활공간의 발굴과 인간중심의 공간을 마련하고 공간문화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해 공모사업으로 추진되었으며, 예산지원 외에 기획, 컨설팅 등 사업의 완결성을 추구하는 지원 시스템으로 구성되었음.⁶⁴⁾
- 2006년도 2월 공고에 34개 사업이 신청하였지만 3개 사업만이 선정되고, 7월에 2차 공고를 통해 6개 사업이 선정됨. 2006년에 7개 지방자치단체의 9개 사업에 10억 원을 지원. 2007년에는 9개 지방자치단체의 17개 사업에 9억 원이 지원되었음.

<표 43> 생활공간 문화적 개선사업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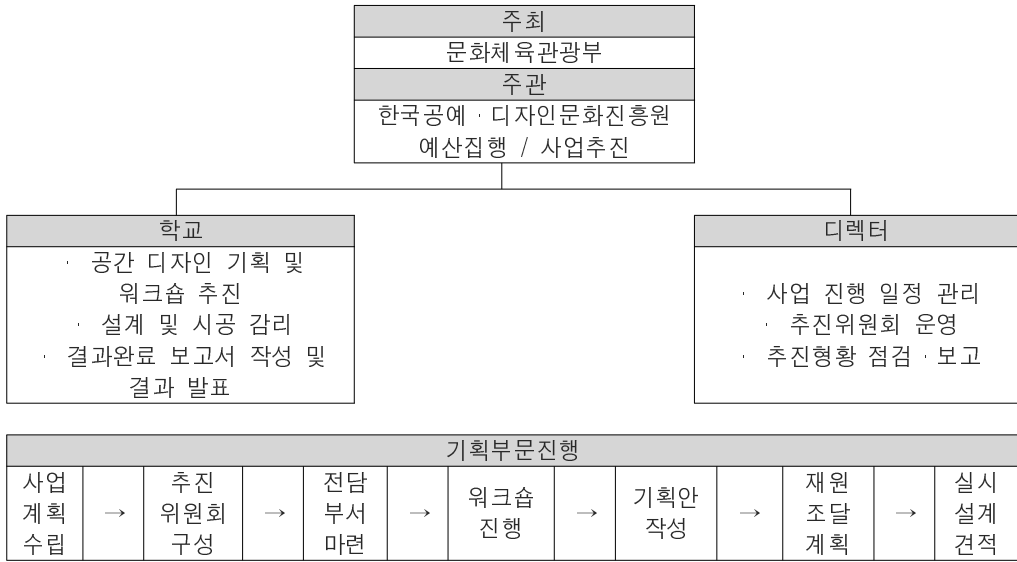
구 분	내용
사업목적	구조·형태·디자인·질감 등의 변화를 통해 공간의 심미적 쾌적성 제고 또는 지역공동체 구성원 간 배려와 소통이 원활한 공간으로의 개선
사업내용	계획 중인 지자체 내 개선 사업을 대상으로 심사, 선정하여 해당 지자체에 지원
사업유형	공모사업
사업대상	지자체내 일정 구역에 대한 생활공간 문화적 개선사업
예산지원	2006년 : 10억원 2007년 : 9억원
추진현황	2006년 : 9개 2007년 : 17개 2008년부터 학교 문화공간 조성사업을 중점
담당부서	디자인공간문화과

- 2008년에 <생활공간 문화적 개선사업>에서는 “학교”를 머물고 싶고, 가고 싶고, 즐거운 공간으로 개선하고자 <학교 문화공간 조성사업>으로 추진하게 됨. 전국에 걸쳐 총 43개의 공모 신청 후 최종 5개교가 선정됨. 선정기준은 낙후정도, 개선의지 및 협력체계 여부, 지역적 상황을 고려함. 본 사업은 2011년 전국에서 278개 학교가 신청할 정도로 전국적인 관심도가 크게 확산되었음.

64) 문화체육관광부, 『2006년 생활공간 문화적 개선사업 추진 계획(안)』, 2006.

- 총 35개 학교에서 문화카페, 갤러리, 옥상공원, 화장실, 도서실 등 공간을 조성함. 기존에 시설개선 중심이었던 화장실을 문화공간으로 개선하기 위한 <학교 화장실 문화로 바꾸기 사업>, 도서산간 지역의 유희교실을 북카페 등으로 활용한<빈 교실 문화카페 만들기 사업> 등이 추진됨.

<그림 8> ‘문화로 행복한 학교만들기’ 사업추진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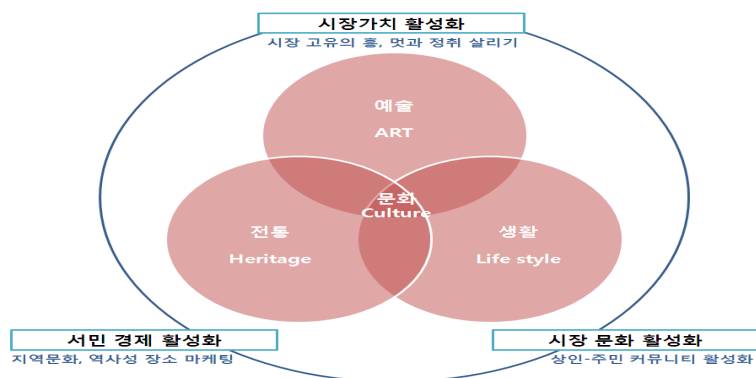
- 2011년부터는 <문화로 행복한 학교만들기> 사업을 통해 조성된 학교의 문화공간을 활용한 다양한 체험형 디자인 교육을 진행하여 학생들에게 문화와 예술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였음. 이를 통하여 **학교 공간을 문화공간으로 재창출함으로써 학교생활의 즐거움을 제공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새로운 페러다임을 조성해 줌. 더불어 지역 예술가의 자발적인 참여, 지역사회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학교, 밀착형 공간문화교육의 장으로서 기존에 있던 인식에서 전반적인 변화를 도모하였다고 평가하고 있음**⁶⁵⁾.

65) 김경인, 『문화로 아름답고 행복한 학교 만들기 양지중학교(전주시) 시범사업 보고서』, 문화관광부, 2008.

3.5.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시범사업(2008~)

- 문전성시 사업은 일상에서 쇠퇴하고 있는 전통시장 가치를 문화적 가치로 재생하기 위해 시장공간의 장소성과 연계한 예술활동, 상인과 지역주민의 관계맺기 활동, 전통과 현재를 잇는 매개활동 등을 통해 상인의 자존감·자발성 강화, 상인과 주민과의 문화프로그램 활동을 통한 커뮤니티 활성화, 일상공간·관광지·지역의 문화적·역사적 장소로서 미래시장의 모델을 창출하는데 주력하였음.⁶⁷⁾

〈그림 9〉 문전성시의 문화가치와 정책목표



- 첫 시범사업에서 지역문화, 공공미술, 문화예술교육, 스토리텔링, 건축 등 여러 전문가가 참여하여 ‘**전통시장 문화컨설팅단**’을 구성하였음. 컨설팅단은 민과 관을 이어주는 중개자 및 사업추진의 실행 조연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후보시장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실사와 지역주체인 주민·상인과의 대화를 거쳐 시범시장을 선정하였음.⁶⁸⁾ **컨설팅단 모델은 현 지역발전위원회 <창조지역만들기>와 같은 타 부처 지역재생 사업추진체계로 벤치마킹 됨.**

66) 문화로 행복한 학교 만들기 사이트(<http://www.happy-school.or.kr/>)

67) 문전성시사업단, 『문전성시 컨설팅 보고서 2008-12』, pp.6~7.

68) 문화체육관광부, 『2008 문화예술정책백서』, 2008, p.199.

〈표 45〉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시범사업 개요

구분	내용
사업목적	문화를 통해 상업적으로 침체된 전통시장을 지역문화공간이자 일상의 관광지로 조성하여 활성화하고 지역민의 문화향유를 제고하기 위함
사업내용	· 시장별 전통과 특성을 활용한 문화기획 (스토리텔링, 시장 콘텐츠 개발 등) · 문화적 환경 조성 (문화공간 조성, 공공예술, 커뮤니티 디자인 등)
사업유형	주민공동체형, 지역관광형, 문화복지형, 문화예술형
사업대상	생활권 인근 전통시장(점포수 50~200개 내외)
예산지원	시장 당 연간 1.5~3억(시장규모, 사업내용 등에 따라 차등지원)
추진현황	2008년 : 2개소 2009년 : 6개소 2010년 : 16개소 2011년 : 22개소 2012년 : 13개소
담당부서	지역민족문화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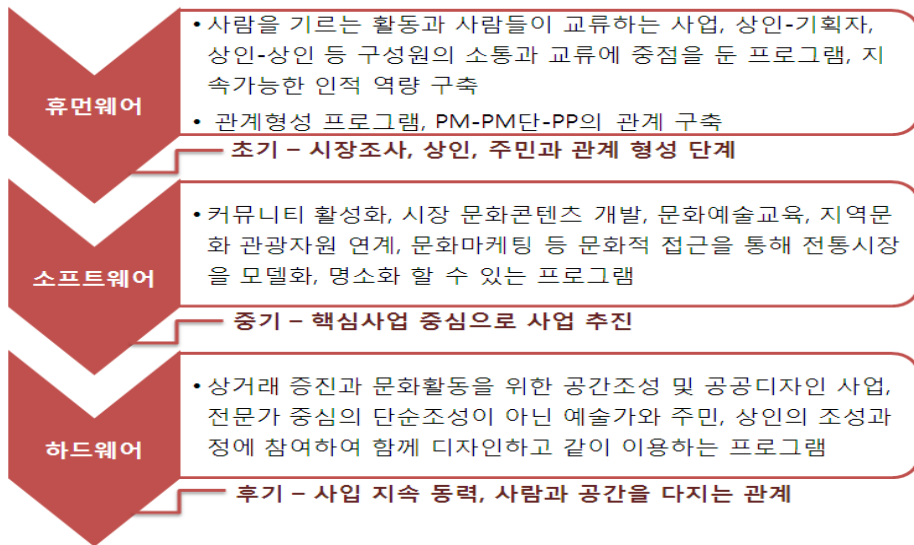
〈그림 10〉 문전성시 사업대상 시장의 유형별 특징



- 선정된 시장은 시장여건, 지역조건, 인력자원수준, 상인, 상인회의 결속력 및 기획력, **상인들의 문화정체성, PM(단체)의 전문성** 등 시장의 다양한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 적합한 유형을 설정함. 그리고 정책 유형별로 지원전략을 달리하여 세부사업을 추진한 후, 정책 효과성을 제고하고 시범사업 정책모델을 개발하였음.

- 「선(先) 맞춤형 컨설팅, 후(後) 사업추진」 프로세스로 시장별 특성과 전통을 살린 차별화된 사업을 각 대상지마다 추구하고 대부분의 프로그램에서 지역 특성을 살린 내용으로 지역민과 관광객들이 일회적인 행사로 여기지 않는 지속적인 문화활동이 이루어지는 문화공간으로서 시장을 인식하기 시작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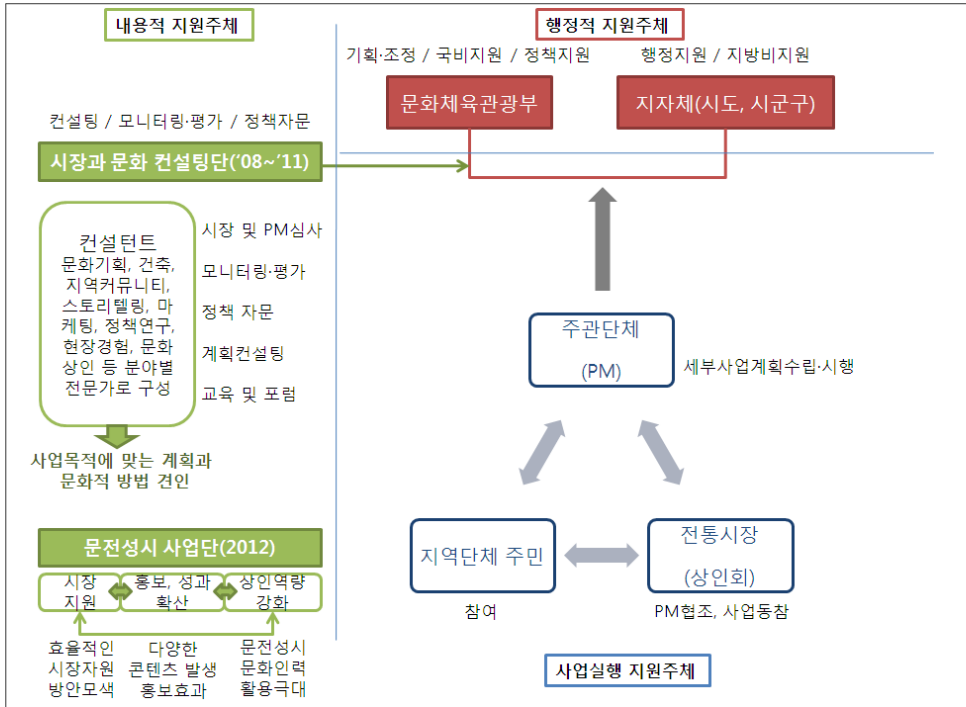
〈그림 11〉 문전성시 추진전략



- 문전성시의 추진체계는 행정적 지원주체와 내용적 지원주체, 사업실행주체로 구성됨. 행정적 지원주체는 계획수립, 주체 간 협력체계 조정, 예산을 지원하였으며 내용적 지원주체는 시범시장 및 PM심사, 실행계획 컨설팅, 모니터링·평가를 지원함. 마지막으로 사업실행주체는 세부사업계획 수립, 사업 협조 및 동참, 직접 프로그램에 참여함.⁶⁹⁾ “시장과 문화 컨설팅단”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컨설턴트로서 시범시장 및 PM선정, 계획컨설팅, 모니터링, 평가의 전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함.

69) 문전성시사업단, 『문전성시 컨설팅 보고서 2008-12』, p.10.

〈그림 12〉 문전성시 추진체계



- 〈문전성시 시범사업〉은 3년 지원(도입 1년, 정착 1년, 확산 1년)을 원칙으로 2011년까지 총 98억 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었음.⁷⁰⁾ 2011년에는 경북 경주와 충북 옥천에서 문화를 통한 5일장 활성화 시범사업이 착수되며 문전성시의 사업범위가 기존 정기 상설시장을 중심으로 진행한 것에서 오일장 등으로 확장된 형태를 가지게 되었음.
- 또한 문전성시 프로젝트로 인해 2011년 기준 문전성시 추진 시장 총 매출액이 평균 12.8%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문전성시 사업추진 이전에 비해 생산파급효과가 지원액 대비 약 3.4배, 취업파급효과가 약 346명으로 사회경제적인 성과를 이루었음.⁷¹⁾

70) 김수현,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의 성과와 발전방향」, 『지역과 발전』 vol.7, 지역발전위원회, 2011, p.46.

71) 이충기, 『2010 문전성시 프로젝트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경희대 산학협력단, 2010.

- **문전성시의 가장 큰 특징은 휴먼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실행과정으로 하드웨어가 만들어지는 구조로서 사업초기에는 휴먼웨어를 강화하여 관계 형성 프로그램을 만든 후 핵심사업인 소프트웨어를 전개하고 상인 및 주민들의 자생력과 자발성을 기반으로 장기적 비전 수립을 통해 하드웨어적 사업을 추진함.** 이와 같은 프로그램 진행 과정을 통해 지역의 상인과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지역민들의 역량을 증대시키는 성과가 있었음.
- **문전성시의 정책모델에서 전문 컨설팅단 구성 및 운영방식, 문전성시 사업운영에서 전문인력 책임운영제로서 PM제도, 3차년도의 단계적 연속지원과 지속적인 컨설팅과 협업구조의 구축 등이 성공의 주요한 요인으로 평가, 타 부처 사업(중기청 문화관광형 시장사업, 지방위 창조지역만들기 사업 등)에 확산되기도 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전성시 사업은 사업완료 이후** 주민과 상인 주도적 추진구조의 전환과 안정적 정착에는 성과가 고르지 않았고,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체계가 보완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상인주체 및 지역주민의 자발성 및 자생력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정책 과제가 남겨져 있음.**
- 또한 문전성시 사업성과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타 부처의 유사사업에 긍정적 파급력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역민족문화과에서는 사업이 2013년 종료될 예정이어서 **정책의 연속성이 만들어지고 있지 않음.**

3.6. 지역근대산업유산 활용 예술창작벨트 조성사업(2008~)

- 본 정책은 문화 가치적 인식부족과 현대화를 위한 개발논리에 밀려 훼손·멸실되거나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방치되었던 지역근대산업유산산업유산을 보존하면서 문화·역사·자연적 정체성에 기반을 둔 문화적 도시재생효과를 창출하기 위하여 추진됨.⁷²⁾
- 2008년 <지역근대산업유산 예술창작시범사업>이 국정과제로 추진되어, 2009년 <지역근대산업유산 활용 예술창작벨트 조성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추진됨. 본 사업은 근대산업유산을 최대한 보존하며 리모델링하여 고유성과 역사성을 살리며 지역의 특화된 문화예술 콘텐츠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예술창작기반 및 문화향유권을 확대하고 나아가 지역재생에 기여하고자 함.⁷³⁾

<표 46> 지역근대산업유산 활용 예술창작벨트 조성사업 개요

구 분	내용
사업목적	· 산업시대의 역사성과 지역의 정체성 보존 · 지역주민의 예술창작 및 문화향유 기반 확대 · 문화·예술·관광의 랜드마크 조성을 통한 지역재생
사업내용	리모델링 등 물리적 문화 환경 조성과 지역별로 특화된 문화예술프로그램 운영
사업유형	국정과제
사업대상	시범사업 대상지(군산, 신안, 포천, 대구, 아산 근대유산)
예산지원	400억원
추진현황	총 5개 지역 군산 : 조선은행, 나가사키18은행, 미즈상사, 대한통운 창고 리모델링 신안 : 염전체험장, 염생식물관찰원, 염전전망대 소금창고 리모델링, 소금공원, 염전경관 조성 포천 : 교육·전시센터 조성, 문화예술 카페 리모델링, 관람·편의시설 확충 대구 : KT&G 리모델링, 미디어테크(문화예술자료), 예술창작 프로그램 운영 아산 : 폐역사, 폐선로 경관정비, 농협창고(2동) 리모델링
담당부서	디자인공간문화과

72) 강동진 외, 『지역 근대산업유산 예술창작벨트화 시범사업평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1, 참조

73) 문화체육관광부, 『2011 문화예술정책백서』, 2011, p.444.

- 2008년 시범사업대상지 5개소가 선정되고, 2009년 지역주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이 수렴된 마스터플랜이 수립됨. 이후 2010년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하여 2011년에 지역별로 특화된 문화예술프로그램을 운영함. 각 시범사업은 3년 기간으로 추진되었으며,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시범사업 후 매년 1~2개소를 추가 선정하여 지속적인 확산을 도모하고 등록문화재와 함께 등록과는 상관 없지만 지역성을 보유한 대상도 모두 포함하여 선정하였음.⁷⁴⁾

〈표 47〉 지역근대산업유산 활용 예술창작벨트 시범사업 추진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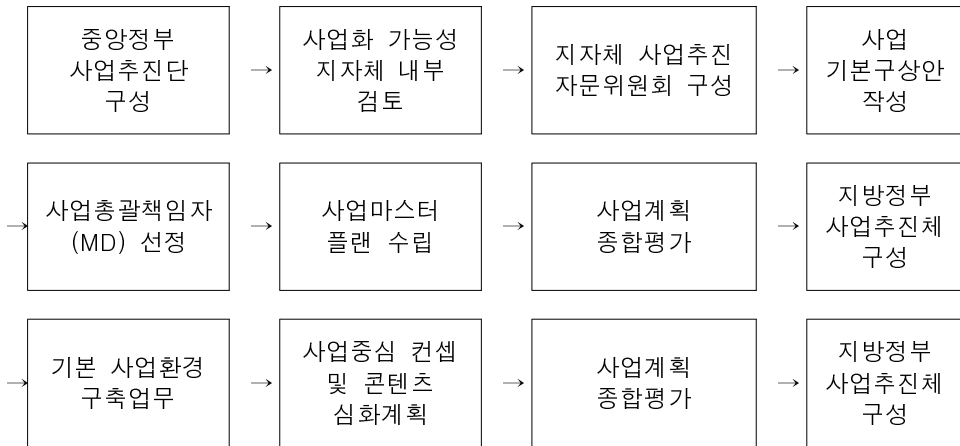
지역	사업대상	특화영역	주요 사업내용	추진실적
전북 군산	일제 강점기 근대유산	근대사, 공연	일제강점기 건물을 활용한 문화공간화 · 조선은행, 나가사키18은행, 미즈상사, 대한통운 창고 리모델링	-전시시설 설계 및 제작 (진척률30%) -리모델링 공사 추진(공정률 60%)
전남 신안	염전, 소금창고	소금, 체험	소금을 소재로 한 문화체험공간 조성 · 염전체험장, 염생식물관찰원, 염전 전망대 · 소금창고 리모델링, 소금공원, 염전 경관 조성 등	-염전체험장 조성 완료 -전통소금재현시설 공사 추진(60%)
경기 포천	폐채석장	돌, 조각	폐채석장을 활용한 문화공간 조성 · 교육·전시센터 조성, 문화예술 카페 리모델링 · 관람·편의시설 확충	-토목공사 완료(12월) -교육전시센터 공사 준공(12월)
대구	구 KT&G 연초장	예술창작 복합문화 공간	대구문화창작발전소 조성 · KT&G 리모델링, 미디어테크(문화 예술자료) · 예술창작 프로그램 운영	-미디어테크 구축완료(12월) -리모델링 공사 추진(공정률 40%) -실험적예술프로젝트 완료(12월)
충남 아산	구 장항선 폐철도	공연, 전시	폐철도를 활용한 문화공간 조성 · 폐역사, 폐선로 경관정비 등 · 농협창고(2동) 리모델링	-농협창고 설계 용역 완료, 폐역사 등 설계 (10%)추진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2011 문화예술정책백서』, 2011, p.445.

74) 박신의, 「폐 산업시설 활용 문화예술공간 정책의 구도와 방향」, 『2012 문화정책논총』 제26집 1호, 2012, p.56.

- <지역근대산업유산 예술창작벨트화 조성사업>은 지역의 근대산업유산에 대해 신규 개발이 아닌 보존적 수법으로서 공간계획을 통한 예술창작 기반 조성, 지역주민의 문화향유기회를 확대함으로써 문화적·경제적 낙후지역을 문화 인프라를 통해 활성화하고자 하였음.
- 사업대상 지역 및 특성을 살펴보면, 전남 군산의 근대사/공연, 전남 신안의 소금/체험, 경기 포천의 돌/조각, 대구의 예술창작, 충남 아산의 공연/전시임. 전반적으로 지역근대산업유산을 복합문화공간 또는 창작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했는데, 이는 문화예술창작을 도구적으로 활용하여 지역재생 거점을 삼고자하는 정책의도가 반영된 것임.

<표 48> 지역근대 산업유산 예술창작벨트화 사업 추진절차별 주요업무 상세내용



출처 : 강동진 외, 『지역 근대산업유산 예술창작벨트화 시범사업평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1, pp.190~198. 재구성.

- 그러나 이 사업은 대도시에 위치할 경우 충분한 인프라 활용을 통하여 지역재생 기능을 살릴 수 있지만, **지방소도시나 교외지역의 경우 지역성을 제대로 살리고 실질적인 주민 참여를 기대하기 어렵게 됨. 이에 지역과 연계된 안정된 인프라 구성과 프로그램 도입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평가되고 있음.**⁷⁵⁾

3.7.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시범사업⁷⁶⁾(2009~)

- 문화체육관광부는 2008~2012년 ‘함께 누리는 문화,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중장기 문화비전에 근거하고, ‘소외계층 문화복지 확대’라는 세부과제를 구현하는 차원에서 기초생활권 내 임대아파트 단지, 서민 단독주택 밀집지역, 농산어촌 등 문화적 소외지역을 중심으로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됨.

〈표 49〉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시범사업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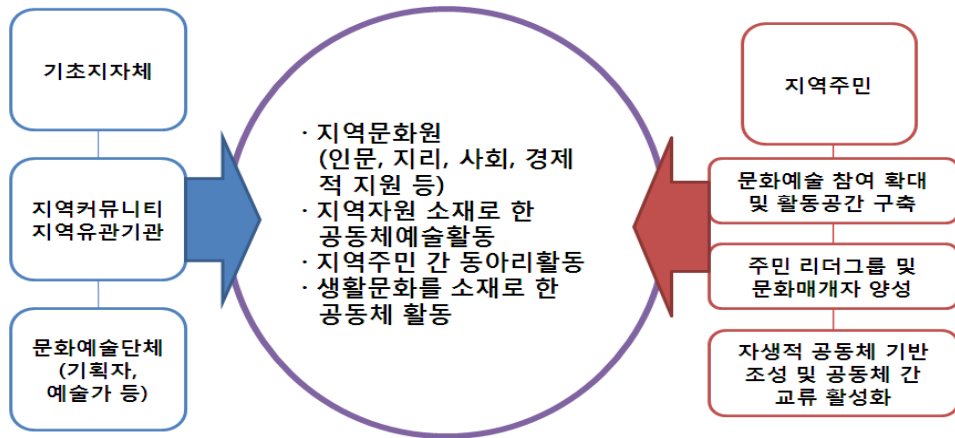
구분	내용
사업목적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문화예술활동의 주체가 되어 공동체를 형성 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국민들의 문화향수권을 보다 구체적으로 신장하고 지역공동체를 강화시키기 위함
사업내용	· 문화소외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문화예술활동을 매개로 한 공동체 활성화 지원 · 대상지역에 기반을 두고 활동하는 문화예술 관련 단체/기관을 대상으로 활동비 및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사업유형	공동체예술형, 공동체문화동아리형, 생활문화네트워킹형, 문화예술교육형, 기타
사업대상	문화소외지역 주민 (서민단독주택밀집지역, 농산어촌 등)
예산지원	2012: 1,200 백만원(복권기금)
추진현황	2009년: 18개 지역 2010년: 19개 지역 2011년: 15개 지역 2012년: 24개 지역
담당부서	지역민족문화과

- 2009년 18개 지역에서의 첫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매년 15~24개 지역에서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음. 본 사업은 처음부터 사업개념을 상대적으로 열어놓고 시작하였으며, 시범사업 3년 과정과 성과를 통해 실천적으로 정책개념을 정립하였음. **정책개념은 마을단위 생활권 내에서 주민이 문화향유 대상을 넘어 문화생산자로서 주체적이고 자발적으로 생활 속 문화를 조직하고 만들어가는 생활 속 문화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임.** 정책개념에는 핵심적으로 지역, 생활문화, 주민주도적 문화공동체 활성화에 주안에 중점을 둠.

75) 황소영: 이정형, 「근대산업유산 활용수법으로서 연계 벨트화에 관한 연구: 지역근대산업유산 활용 문화예술장장벨트 조성사업 실태를 중심으로」, 『한국도시설계학회 2011년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 2011, p. 295.

76) 추미경 외, 『2011 생활문화공동체만들기 시범사업 평가컨설팅 연구』, 한국문화원연합회, 2011.

〈그림 13〉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시범사업 정책 개념도



- 지원방식은 **생활문화공동체 취지에 맞는 프로그램을 기획한 실행주관단체**(사업대상 지역에서 주로 활동하거나 활동 가능한 문화예술단체 및 지역 기반 문화예술단체/기관)를 **공모로 선정**하여 사업비를 지원하되, **성과의 연속성을 위해 매년 심사를 거쳐 최대 3년 연속지원체제로 운영**함. 또한 ‘우리동네 예술동네’ 수기공모를 통해 **자발적인 사례를 발굴**하고 우수 수기를 대외적으로 알려 생활문화공동체의 대외적 인지도를 확산함.⁷⁷⁾
- 사업 추진구조는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민족문화과 소관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복권기금으로 예산을 지원함. 2009~2010년, 2012년에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2011년에는 한국문화원연합회가 지원사업을 주관하였으며, 2012년은 다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사업지원을 주관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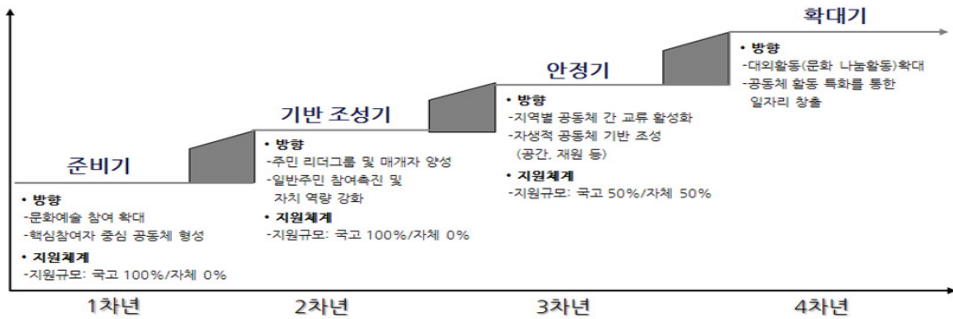
77) 문화체육관광부, 『2009 문화예술정책백서』, 2009, p.201.

〈표 50〉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시범사업 연도별 정책개념 및 사업유형

연도	정책개념	유형	내용
2009	지역의 인문, 지리, 사회, 경제적 특성에 기반하여 주민들이 생활문화 및 생활예술의 생산자가 되어 지역의 갈등을 스스로 해결하고 문화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것	공동체 예술형	지역의 자원을 소재로 예술가와 결합하여 지역주민이 만들어가는 공동체적 예술작품 유형
		예술 동아리형	지역적 특성관련 예술활동을 매개로 지역주민을 지속적인 공동체 동아리활동으로 묶어내는 유형
		생활문화 동아리형	지역밀착형 생활문화활동을 매개로 주민들의 공동체적 활동 조직
		생활문화 네트워크형	예술, 문화적 방법으로 지역의 자원을 지역문화공동체적 활동과 연계하는 유형
2010	지역 생활권의 인문, 사회적 특성에 기초해 주민이 공동체 내 주체적 문화생산자로 성장하게 함으로써 공동체 문화를 회복하고 지역의 변화를 유도하는 생활속 문화프로그램 지원정책	공동체 예술형	지역의 인문사회적 상황과 공동체 내의 갈등을 지역주민이 해소해가는 공동예술작업으로 예술가와 결합하는 공동체적 예술작품 유형
		공동체 문화/예술 동아리형	지역생활권 공동체에 대한 문화적 결속 및 공동체성 강화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주민 자발적 문화생산조직으로서의 동아리 유형
		생활문화 네트워크형	예술, 생활문화 등을 활용해서 지역의 자원을 통합적으로 묶어내고 지역주민의 공동체성을 끌어내는 여러 가지 활동과 연계하는 유형
2011	지역공동체 속에서 지역주민이 문화생산자가 되어 지역의 문화를 주체적으로 구축해가는 “생활속 문화공동체” 지원사업	공동체 예술형	예술가와 주민이 결합해서 지역공동체와 연관된 공동 예술작업을 추진함으로써 지역 공동체 결속을 강화하고 주민들의 문화창작 역량을 고양하는 공동체 예술작업 추진 유형
		공동체 문화 동아리형	예술활동이나 생활문화 등을 매개로 주민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동아리 및 주민조직을 활성화하여 지역공동체 결속을 강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유형
		생활문화 네트워크형	지역문화 자원과 주민의 다양한 문화활동을 연계하여 지역주민의 공동체성을 이끌어내고 동네, 마을의 공동체 문화를 만들고자 하는 유형
		문화예술 교육형	다양한 방식의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지역주민의 공동체성 및 지역적 결속을 강화하고자 하는 유형
		기타	기존 유형에 속하지 않으면서 생활문화공동체 사업의 새로운 사업모델로 시도되고 있는 유형(+형) 또는 정확한 사업유형으로 구분되기 어려운 모호한 유형(-형)

- 본 사업은 비교적 중기적 전략을 가지고 진행되었으며, 아래의 로드맵⁷⁸⁾에서와 같이 3개년 연속지원을 통해 성과의 연속성을 만들어가는 기조 하에서 추진방향이 준비기, 기반조성기, 안정기, 확대기의 진화과정을 지향하고 있음.

(그림 14)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시범사업 공동체 형성 로드맵



-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시범사업>은 지역주민이 객체로 대상화되기 쉬었던 기존의 지원방식과 달리 주민 스스로 문화의 생산자가 되고 주체화되도록 독려하는 새로운 개념의 생활공감 지역문화 프로그램 사업으로 추진되었음.
-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 어려운 ‘공동체’ 관련 문화프로그램을 일관된 정책개념에 기초해 3년간 체계적으로 지원, 다양한 사업유형을 구축하였고, 주민들의 주체적 참여가 두드러져 문화자치 역량이 강화됨. 안정기에는 주민들의 공동체 결속력뿐만 아니라 지역공동체와 수행단체간 상호신뢰도 또한 높아져 공동체 네트워크가 매우 활성화됨.
- 생활문화공동체 3년차 연속 사업지역에서는 주민들과 사업실행 주관단체(매개조직)가 협력에서 타 부처의 지역관련 지원사업을 주체적

78) 추미경 외, 『2009 생활문화공동체만들기 시범사업 평가건설팀 연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09. 발췌 인용.

으로 지원신청 또는 연계하여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이어가는 성과들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짐.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시범사업>을 통해 주체적으로 성장한 지역주민들이 주도적으로 마을사업을 지원하고 참여함으로써 기존 지역사업에서 자주 드러났던 형식적 주민참여의 한계를 실제로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음.

3.8. 마을미술 프로젝트(2009~)

- <마을미술 프로젝트>는 지역민족문화과와 디자인공간문화가 아닌 예술정책과에 추진되었지만 예술을 통한 지역재생과 연관된 정책개념을 가지고 있는 사업임. 이 프로젝트는 2009년 문화체육관광부의 주요 시책 중 예술가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술 뉴딜 프로젝트’ 추진 과제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재원은 복권위원회의 복권기금을 통해 마련되었음.

〈표 51〉 마을미술 프로젝트 사업 개요

구분	내용
사업목적	· 지역의 정체성과 특성을 기반으로 한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민의 예술향유 및 지역활성화에 기여 · 역사, 문화, 생태, 정서적으로 분명한 특색으로 가진 지역의 거점과 공간을 문화예술 공간으로 재창조
사업내용	생활공간 공공미술로 가꾸기 사업으로 지리, 역사, 생태, 문화적 가치가 잠재되어 있는 마을과 거점시설을 공공미술을 통해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조성
사업유형	행복프로젝트 / 기쁨두배 프로젝트 / 예술의 정원
사업대상	공모를 통해 선정된 마을
예산지원	연차별 약 20~23억 원 지원
추진현황	2009년 : 21개 2010년 : 15개 2011년 : 10개 2012년 : 11개
담당부서	예술정책과

- <마을미술 프로젝트>는 대규모 미술마을 조성과 일상공간의 예술적 재구성을 통해 지역의 랜드마크 및 문화예술 공간을 창출하고자 추진되었음. 또한 주민의 생활 속 문화 예술 향유기회와 자긍심을 고

취시켜주고 작가들의 일자리 창출, 지역의 공공미술 작가를 육성하고 미술을 통한 마을재생 및 지역 경제 활성화의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자 추진하기 시작하였음.

〈표 52〉 마을미술 프로젝트 추진방향

공공미술의 새로운 모델 창출	- 주민참여형 공공미술 추진 - 장소성에 기반한 공공미술 모델 개발 - 사후관리 체계구축을 통한 공공미술의 제도 보완
생활 속 미술문화 향유여건 개선	- 공공 공간을 문화친화적인 공간으로 리모델링 - 문화 소외지역에서의 문화 나눔의 실현
예술가의 창작활동 활성화	- 수용자와의 소통에 기반한 공동체 미술 활성화 - 창작활동 기회 및 작은 일자리 창출

출처 : 예술경영지원센터, 『2009 마을미술 프로젝트 평가보고서』, 2009, p.30.

- 2009년에는 3가지 주제 ‘우리동네 미술공간 만들기’, ‘길옆미술로 꾸미기’, ‘공공미술의 꽃피우기’로 공모가 진행됨. 총 사업장소 21개소에서 공공미술이 구현되며 생활미술을 통해 지역의 문화공간 확대 및 미술문화 향유여건을 조성하고자 함. 예술가와 주민 315여명의 공공미술 직접참여와 전국 21개소 지역민의 문화적 수혜를 추구하고자 하였음.
- 2010년에는 소액다건 중심의 2009년 사업에 비해 대규모 미술마을 조성 등 ‘선택과 집중’을 통한 선도사례 구축에 중점을 두었음. 공모사업 주제는 ‘우리동네 문화소동’, ‘테마이야기’ 두 가지로 진행되었으며, 공공미술에 대한 의지가 있는 지자체의 예산 매칭을 추진하여 사업규모를 확대, 지자체의 적극적 협조를 통해 사업 실현성을 강화하고자 하였음.
- 2011년부터 2012년까지는 3가지 주제로 사업이 구분됨. 2012년에는 2009~2011 마을미술 프로젝트 중 우수한 곳을 연계하여 예술지도(Art map)화 하고, 지역의 타 문화예술 자원과 연계하여 예술여행(Art tour) 프로그램을 구성하였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프로젝트의

확장성과 발전 가능성을 확보하고, 지역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동시에, 국제적인 공공미술 명소로 부각되도록 프로그램 개발하고자 하였음.⁷⁹⁾

〈표 53〉 2012 마을미술 프로젝트 사업내용

사업 구분		사업 내용		사업 대상지	지원 예산
공모1	행복 프로젝트	대규모 미술마을 조성		전국 1곳	10억원 (국비5억원+지방비5억원 =10억원x1곳) ※ 지방비 지원 : 국비 대비 100%이상
공모2	기쁨두배 프로젝트	'09년~' 11년 사업지 중 추가지원의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프로젝트		전국 4곳	4억원 (국비5천만원+지방비5천만원 =1억원x4곳) ※ 지방비 지원 : 국비 대비 100%이상
공모3	예술의 정원	주제1	마을 이야기 프로젝트	전국 2곳 내외	6억원 (국비5천만원+지방비5천만원 =1억원x6곳) ※ 지방비 지원 : 국비 대비 100%이상
		주제2	예술적 외관 조성 프로젝트 (Art-Exterior)	전국 2곳 내외	
		주제3	생태미술 프로젝트	전국 2곳 내외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2012 마을미술프로젝트사업 공모 계획서」,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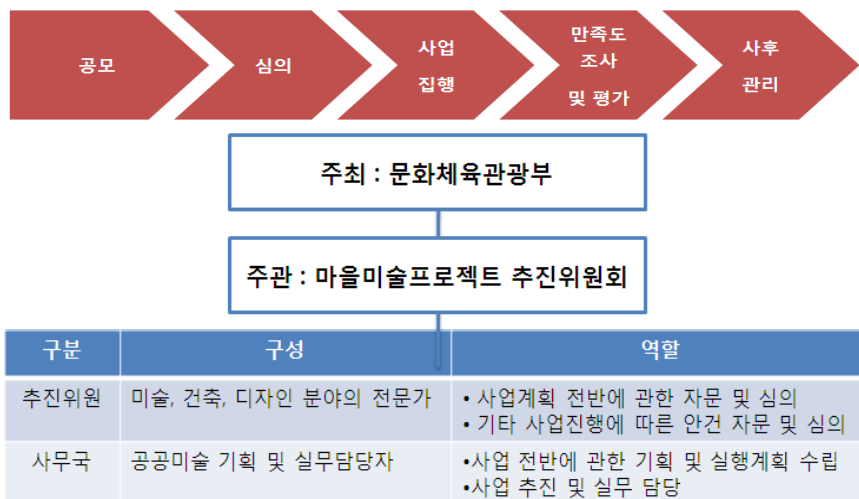
- 〈마을미술 프로젝트〉는 자유로운 공모방식으로 진행되며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마을미술 프로젝트 추진위원회는 2개 분야임. 전반적인 사업 진행과 실무를 담당하는 사무국과 학제간(분야간 협력)팀으로 구분하여 분야 간 협업체계가 필요한 공공미술의 특징을 고려하여 응모 팀은 다양한 장르의 학제 간 구성을 장려하도록 하였음.
- 〈마을미술 프로젝트〉 사업은 소외지역 주민의 문화예술 향유 여건 증진을 고려하여 저소득 계층이 거주하는 문화소외지역을 사업지역으로 선정하였고, 이를 통해 생활 환경 내 일상에서의 예술향유가 가능해지도록 하였음.

79) 2012 마을미술 프로젝트 홈페이지(<http://maeulmisul.org>)

III. 문화부 내 지역재생 관련 정책 분석

- 또한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프로세스 아트(Process art)를 통해 주민간의 유대 및 귀속감을 높이고자 하였고, 설치된 마을미술 작품을 통해 생활환경의 질을 높임으로써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하였음. 이를 통해 지역장소를 예술의 눈으로 다각적으로 성찰, 재창출하는 공공미술의 장을 마련하고 예술을 통한 지역재생의 모델을 전국에 창출, 확산하고자 했음.

〈그림 15〉 마을미술 프로젝트 추진절차와 조직구성



출처 : 예술경영지원센터, 『2009 마을미술 프로젝트 평가보고서』, 2009, p.35

- 이 사업은 예술가에게는 일자리 창출로서 실질적인 작업 기회 제공, 서울 및 수도권에 비해 창작활동의 장이 제한된 지역작가들에게도 기회가 마련되며 공공미술의 스펙트럼 확장을 하게 되는 효과를 가져 옴. 지역 콘텐츠를 활용한 스토리텔링 작품과 생활공간 친화적 작품으로 생활 동선과 연계된 장소-특징적(Site-specific)작품이 만들어졌으며, 단순히 ‘시각’으로만 감상하는 작품이 아닌 방문과 체험이 결합된 작품으로 만들어졌음.

3.9. 문화이모작 사업(2010~)

- 최근 농촌지역 고유의 문화적 가치와 의미가 새롭게 부각되었으나 도시지역과의 원활한 관계 도모 활성화 전략에서 충분한 성과를 내지 못함. 이에 대해 농촌지역의 문화자원을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 도·농간 상생이 가능한 발전전략을 수립해야 하는 변화가 필요함에 따라 **농촌과 문화의 새로운 협업방식을 통한 문화이모작 사업이 추진됨.**⁸⁰⁾

〈표 54〉 문화이모작 사업 개요

구 분	내용
사업목적	· 지역 내 문화역량을 강화하고 전문 문화인력 양성과 자발적인 기획사업 추진을 통해 지속가능한 마을 문화심기 모델 실현 및 전문 문화인력 활용성 제고 · 농산어촌 마을 문화심기 정책에 따른 현장 기반의 사업추진과정을 실행할 수 있도록 체계적·입체적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궁극적으로 정책현장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지역의 문화역량 강화
사업내용	· 기초와 심화교육과정 이수자에 한하여 사업제안서를 제출, 선정하여 사업이 교육의 실습이 될 수 있게 함 · 사업선정 마을에 컨설팅을 지원하고 최종적으로 평가를 실시하여 향후 마을자체 문화적 역량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함 · 농어촌마을 주민이 주요 대상이 되는 문화사업이어야 함
사업유형	지역 컨설팅, 교육, 실습형 사업
사업대상	· 농산어촌 체험마을 리더 : 마을대표, 추진위원장, 부녀회장 등 · 농산어촌 마을 관련 기관 담당자 : 지자체 공무원, 읍면동사무소, 농협 등의 기관근무자, 문화재단 근무자 등 · 농산어촌에 거주 또는 귀촌·귀농 희망자 : 문화예술인, 개인사업자 등 · 농산어촌 지역 문화사업에 참여하고자하는 단체 및 개인 · 기타 농산어촌 지역 외 문화이모작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예산지원	2010년 : 14억 2011년 : 4억 2012년 : 2억
추진현황	2010년 : 2개 (영덕군, 강진군) 2011년 : 교육 사업(총 200명) 2012년 : 13개 (평창군, 춘천시(3), 홍성군, 제천시, 청주시, 익산시(2), 완주군, 칠곡군, 부산 금정구, 부산 기장군)
담당부서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민족문화과/농림수산식품부 농어촌사회과

80) 류정아, 『농촌지역 문화환경 개선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0, p.3.

-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진행되었던 농촌지역 활성화 전략은 전반적으로 물리적 환경조성에 집중되어왔음. 때문에 농어촌 지역주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기초생활권 지역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농촌문화사업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한편으로는 농림수산식품부와 문화체육관광부의 개별적인 농촌지역 관련 사업들이 한계점을 도달하게 됨. 이에 부처를 떠나 농어촌에 실제 필요한 농촌문화사업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정책체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을 모색, 2010년 농림수산식품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MOU를 맺으며 <문화이모작> 관련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됨.
- ‘2010년 농어촌 마을 문화심기 시범사업’에서는 문화리더 과정, 마을에 문화심기 사업, 전국적인 대학생 농촌 문화활동, 공동연구 등의 다양한 사업을 시행.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마을의 문화성 회복이라는 내재적 활성화를 우선으로 농촌지역 발전을 도모함.⁸¹⁾
- ‘2010년 농어촌 마을 문화심기 시범사업’에서 ‘2011년 문화이모작_농어촌 마을문화심기’로 사업명이 변경됨. 기초교육→심화교육→실습사업으로 이뤄지는 단기간 고효율의 교육성과를 추구하도록 프로그램이 변화되었음.
- 기초, 심화과정 교육이수자들에게 이모작사업 및 컨설팅을 지원해주고 실제 기획서를 작성하는 실무능력 향상, 작성된 기획서를 바탕으로 사업을 실행해보도록 지원금이 지원되는 3단계 교육사업으로 변화되었고 사업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에 관한 협약, 사업의 우수성 및 사업 운영 소요비용 범위에 따라 사업예산이 차등 지급되었음.
- 수행 단체는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업 설계 및 제안을 하고 컨설팅 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프로그램을 보완, 재설계 후 사업을 운영하며 선정된 사업과 마을에 지역문화컨설턴트와 한국문화관광연

81) 류정아, 같은책, pp.50~54.

구원에서 지속적인 컨설팅을 지원하는 구조로 전담 컨설턴트는 사업 종료 시점까지 전반적인 컨설팅을 해주도록 되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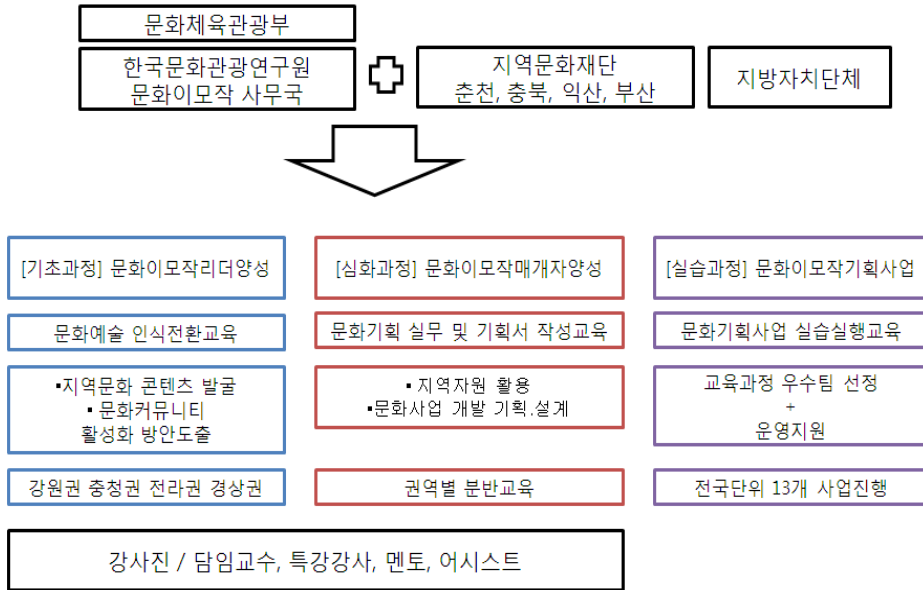
〈표 55〉 문화이모작 시범사업 내용

영덕군 창수면 인량리 "꿈의 농촌 한옥마을"		전남 강진군 병영면 도토리 "이야기가 자라는 마을"	
분류	내용	분류	내용
주민교육·자원 활용	· 마을자원 및 주민의 예술적 재능조사· 교육 · 한옥 문화지도 제작	주민교육·자원 활용	· 워크숍을 통해 지역주민의 문화 및 문화교류 역량 강화함 · 주민교육 전문 특화반 운영, 특화상품 개발 및 수익창출 · 사업구상단계부터 주민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함
문화기획단 운영	· 대학생들을 통한 도농간 문화교류 · 경북지역 대학생들의 지역문화 이해 기회 제공	마을의 문화자원 활용	· 역사문화자원 활용, 도시민들과 소통 계기 마련 · 지역의 무형적 인문자원을 유형의 문화자원으로 발전 · 하멜 스토리텔링 활용, 돌담길 개보수, 돌담길을 모티브로 경관 개선, 관광자원화 · 문화공간 조성, 도농간 문화교류 프로그램 개발, 운영
한옥콘텐츠의 부가가치 창출	· 한옥에서 콘서트, 영화제, 사진전, 축제 등을 개최해 영덕 한옥에 대한 전국적 재조명 계기 마련 · 체험프로그램을 위한 시범고택 선정 및 리모델링 · 12종택 전통 문화와 생활 방식 조사 및 연구	유휴 자원의 콘텐츠화	· 마을 내 유휴공간(돌담, 마을회관, 빈집 등)의 활용 · 지역주민의 수요에 바탕을 둔 레스토랑·전시관 운영 · 박물관 등 기존 공간 콘텐츠를 개선하여 체험 및 관광자원화 · 작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운영
농촌적 삶의 자원화	· 마을의 계절특성을 활용한 세대교류 프로그램 개발 · 체험프로그램인 '농촌사랑' 캠페인의 전국적 이슈화	문화상품 개발·판매	· 마을음식(매실과 장류 등) 및 문화상품 개발 · 유통방식의 개선 등으로 수익상승 유도 · 마을개발상품 판매를 위한 공간 조성
다큐멘터리 작업	· 에세이 히스토리북 등 사업과정의 다큐멘터리화 작업 · 인량리의 사계절과 주민, 기획단 활동 사진첩 출판 · 농촌문화기획단의 활동을 기록하고 인량리 주민들이 일상생활과 프로젝트 참여 모습을 기록한 다큐 제작		

출처 : 류정아, 『농촌지역 문화환경 개선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0, pp.50~54.

- 문화 이모작 사업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총괄진행을 하며 3년에 걸쳐 농어촌 마을 문화심기 사업에서 인력양성교육, 커뮤니티 아트 사업이 결합된 형태로 다듬어졌음.⁸²⁾

〈그림 16〉 2012 문화이모작 사업구조



출처 : 노수진, 「진화하는 문화이모작으로 가까이 번지고 멀리 퍼지는 마을문화 향기」, 웹진 문화관광 (http://www.kcti.re.kr/webzine2/webzineView.action?issue_count=9&menu_seq=7&board_seq=1), 2012.

- 2012년부터는 지역문화재단과 협력하여 매칭 펀드로 예산을 확보, 교육과 사업실행도 지역단위로 효율 높이도록 다각적인 체계를 구축 하였으며, 강원, 충청, 전라, 경상 4개 권역으로 나누어 지역의 문화재단과 함께 ‘지역 문화콘텐츠 발굴, 문화커뮤니티 활성화 방안 도출’을 주제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음.
- 문화이모작사업은 지역 내 문화와 인적자원, 기반을 가지고 지속가능한 문화 활동을 만든 효과적인 사업으로 평가됨. 향후 지역 인력 간의 네트워크 조성, 지역의 자발적인 참여와 진행 구조 형성, 창의적이고 다양한 아이템 발굴과 확산 등의 장기적인 방안이 모색되고 있음.

82) 노수진, 「진화하는 문화이모작으로 가까이 번지고 멀리 퍼지는 마을문화 향기」, 웹진 문화관광 (http://www.kcti.re.kr/webzine2/webzineView.action?issue_count=9&menu_seq=7&board_seq=1), 2012.

4. 분석시사점

4.1. 전반적 시사점; 관련 정책의 선도적 추진에도 불구하고 성과 분산

- 2000년 이후 지역문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중앙 부처 중 문화관광부 지역민족문화과에서 가장 먼저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에 해당하는 여러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함. 이후에도 디자인 공간문화과와 일정한 역할분담 속에서 현재까지 생활문화공간, 역사 문화마을, 근현대문화유산 활용 프로젝트, 전통시장의 문화적 재생 등 새로운 관점의 정책대상, 접근방법, 정책추진 프로세스 등을 개발하여 문화를 통해 지역을 재생하는 선도적 정책추진을 지속하고 있음.
- 그러나 이러한 선도적 정책추진과정 및 결과가 문화관광부의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 정책”으로 브랜드화 되거나 체계적 정책성으로 축적되고 있지는 않은 편임. 문화관광부에서 추진했던 정책이 여러 부처로 확산되기도 했지만 경쟁적 관점에서 비교하는 경향이 있는 것에 비해 문화부 정책의 순기능적 확산에 대한 시각이 부처 간에 확보되어 있지 않음. 또한 이를 체계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정책 틀로서 문화부만의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 정책의 브랜드가 형성되어 있지 않고 개별 단위 정책사업으로만 존재해 왔음.
- 이는 관련 정책이 문화관광부 내 큰 정책의 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가운데 개별 단위정책으로 추진되면서 정책 간 상호연계와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임. 또한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는 관련 정책의 성과가 단위 사업 차원에서 수렴되는 것으로 그침으로써 지역 문화정책 전반의 성과로 자리매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임.

4.2. 정책추진 초반기(2004~2008); 획일적 지역문화 정책의 경로 의존성

- 서구를 중심으로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 정책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각광을 받게 되자 국내에서 한국적 토양과는 무관하게 해외 사례를 적용한 문제점이 노출됨. 즉 **한국에서 추진되고 있는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 정책은 해외의 지역재생 사례를 답습하는 '경로의존성 (path dependency)'의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함.

4.2.1. 거대담론적인 지역재생 전략의 접근 한계

- 2000년대에 들어 전국 수많은 도시가 문화도시전략으로서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경쟁적으로 추진해 왔음. 구체적으로 역사문화도시, 교통문화도시, 과학문화도시, 영화문화도시, 생태문화도시, 만화문화도시, 산업문화도시, 음식문화도시 등의 명칭으로 각 도시의 문화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음. 문화관광부에서도 2005년 시작된 문화도시, 공공디자인 시범도시 등의 사업을 통해 이러한 흐름과 동일한 맥락 속에서 정책을 추진하게 됨.
- 이러한 문화도시 조성사업은 문화적 자산의 발굴과 문화적 역량 제고를 그 목표로 하고 있음.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축제나 국제행사 등 문화 이벤트의 개최’, ‘문화예술지구, 문화특구, 문화거리의 지정 및 조성’, ‘박물관, 예술센터, 공연장 등 문화시설물의 구축’, ‘랜드마크형 건축물의 건립’, ‘문화산업의 육성과 집적’, ‘역사성 전통성(궁궐, 성터 등)의 복원’, ‘거리와 장소의 품물화 및 관광화’, ‘하천 등 환경복원’, ‘도시이미지 홍보 및 장소판촉’ 등이 활용되고 있음
- 이들 사업들은 외연적 목표로는 물리적 시설 확충 중심의 도시계획 방식과는 구분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음. 하지만 실행과정에서 보다

큰 규모의 메가 이벤트적인 문화도시전략에 치중함으로써 지역주민과 활동 중심의 내재적 지역재생이라기보다는 여전히 도시 특성화를 위한 외연적 사업의 성격이 강한 한계를 지니고 있음.

- 결과적으로 도시발전전략으로서 문화도시조성사업은 쇠퇴한 개별도시의 특수성을 도시의 주체들이 적극적으로 해석하면서 그 지역에만 독특한(unique) 장소자본을 만들고 이를 브랜드 이미지화하면서 재생을 도모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충남발전연구원, 2008).
- 이에 따라 **메가 이벤트적인 문화도시조성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물리적 프로그램과 비물리적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지역재생, 경제재생, 문화재생, 환경재생, 복지재생 등으로 영역화/구체화 함으로써 다양한 주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사회적, 문화적 지역재생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음.

4.2.2. 하드웨어 중심의 지역재생 방식의 재현

- 문화관광부에서 지역민족문화과, 디자인공간문화과 중심으로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데, 본격적으로 정책을 시도한 2004년 이후 약 5년간 정책추진 초반 기간의 정책은 여전히 하드웨어 중심의 지역재생 방식이 재현됨.
- 정부 각 부처에서 추진해왔던 지역재생사업은 대체적으로 경제 논리를 바탕으로 한 도시계획 및 도시관리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어 기존의 도시정비방식과 다를 바 없다고(이순자, 2008) 평가되기도 함. 즉 한국에서의 지역재생은 장기적 관점의 지속가능한 정책보다는 도시개발(정비)에 초점을 맞춘 정책이 강조된 측면이 강하다고 할 수 있음.

- 그 결과 현실의 영역에서 도시재생은 ‘도시및주거환경 정비법’,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 정비법’,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 정비법’, ‘지역균형발전지원에관한 조례(서울)’등 대도시 중심의 물리적 환경정비 촉진을 위한 프레임 내에서 이루어져 왔다고 할 수 있음.(네모토 마사꾸즈·문수봉, 2010) 이같은 도시정비/관리 사업들은 선진국처럼 도시쇠퇴 문제에 부응하는 전략으로서 대응한 것이 아니라 도시의 발전 패러다임이 개발주의에서 탈개발주의로 옮겨가면서 발생하는 도시정비 수요에 불과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한계라고 지적되고 있음.
- 이러한 현상은 문화부의 지역재생 정책에서도 재현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대표적으로 1999년 시작된 ‘문화의 거리 조성’ 사업과 2002년 시작된 ‘문화역사마을 가꾸기 사업’, 2004년 시작된 ‘생활친화적 문화공간 조성’ 등이 하드웨어 중심으로 추진되었음.
- 각 사업들은 법적 지원방안, 콘텐츠 지표구성 등에 있어 소프트 인프라 측면이 구체적으로 설정되어있지 않고 오히려 하드웨어 인프라 조성에 집중되어 있어 정책추진취지와 다르게 하드웨어 중심으로 귀결되기도 함.

4.3. 최근(2009년~현재); 정책대상, 접근방식, 정책과정에서 새로운 시도

- 2009년~현재까지 최근 5년 사이 지역민족문화과 및 디자인공간문화과 중심으로 추진된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 정책은 기존의 시행착오를 개선하고자 새로운 시도를 다양하게 해왔음. **생활문화와 일상공간으로 정책대상의 확장, 소프트/휴먼 중심으로의 접근방식 혁신, 정책과정에서 중간매개자 제도의 도입 등 기존의 시행착오를 개선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다양하게 진행되어 왔음.**

4.3.1. 생활문화공간, 근대문화유산 등으로 정책대상 확대 - 내재적 접근으로 변화

- 지역문화정책, 특히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 정책이라는 관점에서 최근 문화관광부의 정책경향은 **전통시장, 폐교, 학교, 마을과 같은 생활문화공간으로 정책대상을 확장**하고 있음. 이러한 경향은 메가 이벤트 중심의 문화도시 전략의 **외재적 접근방식을 넘어서 지역 내 문화자원, 특히 일상 속에서 생활문화 자원 및 생활공간을 문화적으로 재생하고자 하는 방향으로서 바람직한 경향**이라고 볼 수 있음. 이와 같은 맥락 속에서 성공적 평가를 받고 있는 **지역민족문화과의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시범사업>**, **디자인공간문화과의 <생활공간 문화적 개선사업>** 등이 있으며, 이 정책의 성과는 다른 부처에도 확산되고 있음.
-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 정책의 대상은 역사문화자원에 대한 접근에서도 확장되고 있음. 과거 고대에서 중세에 이르는 전통문화유산의 보존에 집중하던 차원을 넘어 **근대/현대 문화유산을 활용하여 문화적으로 재생하고자 하는 경향이 지속**되고 있음. 이러한 방향의 정책대상 확장은 매우 긍정적인데 지역 내에서 현재 작동하고 있는 역사와 문화의 공간을 현재적으로 재생함으로써 현재의 시점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그 지역의 문화에 중심을 두고 그것을 찾아 새로운 지역문화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유도하게 됨. **디자인공간문화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근대문화유산을 활용한 예술창작벨트 조성사업>**, **<문화디자인 간이역 프로젝트>**, **<문화역 서울 284의 조성 및 운영>** 사업 등이 그러한 정책사례임.

4.3.2. 사람/자원 중심으로 공간을 연계 - 정책추진 방식의 변화

- 지역은 장소와 생활이 결합된 의미로서의 장소와 공동체가 결합된 의미를 지니며, 사회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내부의 지속가능한

발전가능성을 확보해야만 하는 생활공간환경 단위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이영범, 2009). 하지만 이러한 지역에 대한 개발과 재생 전략은 그동안 문화 없는 지역 재생을 반복적으로 추진하고, 지역의 주체인 주민 자발적 참여가 제한되고, 공동성 또는 공공성에 기반을 둔 재생의 형태를 가지고 추진하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음.

-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의 내부 주체, 고유한 자원이 결합된 지역의 공간 재생을 추진하고, 지역의 인적 물적 자원, 시설, 프로그램, 사회적 관계, 제도의 형태와 방식으로 도시 공간 내에 다양한 자원을 구축하고 장소화된 ‘문화 공동체’를 생성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음. 즉, 사람/자원이 중심이 되어 공간과 어울어 질 수 있도록 하는 지역재생을 통해 궁극적으로 ‘사회 문화적 재생’이 이뤄지고 창조적 사회 관계망의 재생까지 확장 할 수 있는 지역재생의 토대 마련에 주안점을 둘 필요가 있음.
- 이러한 흐름 속에서 문화관광부에서 추진한 최근의 지역재생 정책은 사람/자원이 중심이 되어 공간을 연계하고자 하는 정책적 시도가 진행되어 그동안 고질적이었던 사람/자원/공간의 유기적 어우러짐을 만들어낼 가능성을 확인해가고 있는 단계임. 지역민족문화의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시범사업>,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시범사업>, 디자인공간문화과의 <생활공간 문화적 개선사업> 등에서 그러한 정책시도가 추진되었고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음.

4.3.3. PM제도/컨설팅단 등 중간매개조직 운영 - 정책과정의 체계화 시도

- 최근 5년 사이 진행된 몇 가지 정책에서는 정책목표를 구현하기 위한 정책과정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체계화하는 성과를 만들어내었다고 볼 수 있음. 기존의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정책이 정책목표만 염두에 둔 채 정책과정을 구체적으로 설계하지 않고 일정한 방향의 경로의존성을 가지고 있거나, 정책과정에 대한 개념을 중요하게 다루

- 지 않았음. 그러나 최근 <문전성시 시범사업>,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시범사업>, <문화이모작 사업> 등에서는 **사업을 책임지는 전문 인력의 중요성을 제도적으로 정립한 “PM 제도”, 정책과 실행을 매개하는 전문매개조직 또는 기관으로서 “컨설팅단 운영” 등을 시범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구체적 정책성과를 거두게 됨.**
- 정책추진체계를 구체적으로 체계화한 제도적 성과는 다른 부처의 유사사업에도 긍정적 영향으로 확산되어 적용되는 사례가 여러 차례 나올 정도로 정책추진의 중요한 변화를 이루었음. 그러나 아쉽게도 **이러한 제도는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 정책 전반으로 확장되지 않았고, 제도로서의 발전적 과정이 수반되지 않음에 따라 개별 정책사업의 성과에서 그치고 있는 상황임.**

IV.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 정책 및 추진체계(안)

1.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 정책개념 정립

1.1. 정책 추진방향

1) 창조사회로의 전환 및 사회경제적 변화를 고려한 창조적 지역사회 기반 구축

-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 정책은 21세기 사회발전의 핵심어인 “문화”와 “지역”의 결합을 통한 지역재생 전략으로서 “지역”에 대한 미래적 발전전략에서 중요한 영역을 차지하는 정책임. 때문에 본 정책은 미래 사회변화를 고려한 정책 추진방향을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요소를 고려함.
- **첫 번째, 창조사회(creative society)로의 시대적 전환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함.** 21세기 후기산업사회는 문화의시대, 지식기반사회에 이어 창조사회 패러다임으로 전환되고 있음. 창조사회로의 전환은 가속화되는 글로벌라이제이션 속에서 창조경제의 성장이라는 특성을 수반하고 있는데, 창조경제 영역에서 지역과 문화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음. 이러한 흐름 가운데 예술적 상상력과 문화적 창조력은 창조경제의 산업구조 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삶 전반과도 다양한 방식으로 결합되면서 사회발전의 핵심 요소가 되고 있음.
- 때문에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은 이러한 창조사회로의 전환을 지역 차원에서 준비할 수 있는 창조적 지역사회기반을 만들어가는 데 기여하는 것이어야 할 것임. 즉, **문화, 지식기반, 창의력을 구축하는 사업이 지역사회와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공동체, 문화정체성, 지역경제, 환경 등 지역을 구성하는 전반의 요소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지역공동체 연계/밀착형이어야 함.**

- 두 번째, 한국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회경제적 변화를 반영한 미래의 관점에서 지역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함. 한국사회는 최근 저출산에 따른 낮은 인구성장률로 인한 인구저성장과 고령화, 1인 가구의 증가 등으로 인해 연령계층별 도시시설 수요와 활용도에 여러 가지 변화가 수반될 것이라 예측되고 있음. 이와 더불어 **경제성장을 둔화와 경제활동인구의 노령화, 구도심의 쇠퇴** 등은 다양하게 진행될 것임.
- 때문에 새로운 도시개발 수요보다는 쇠퇴가 진행되는 구도심을 중심으로 도시재생으로의 도시정책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음. 최근의 제 ‘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11~2020)’과 ‘국토 대예측 연구(II)’의 분석결과에서도 도시재생사업의 중요성과 활성화가 강조되고 있음. 즉, **철거형 재생 방식보다는 기성 시가지의 다양하고 고유한 지역 자산들(regional assets)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도시재생 추진방식의 변화가 요구됨.**⁸³⁾
- 두 가지 요소를 종합하면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 정책**”은 지역사회에 필요한 창조경제 구축과정과 결합되어 **고유한 지역문화 가치를 발견하고 활성화하는 도시재생 전략**으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함.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의 고유한 브랜드로서 정책가치와 프레임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개발과 조성보다는 지역 내 존재하는 사람, 콘텐츠, 공간의 가치를 예술/문화를 통해 새롭게 발견하고 지역사회의 창조적 기반으로 연계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

83) 이왕건 외, 『지역자산활용형 도시재생 전략에 관한 연구』, 2011, 국토연구원, pp.1~7. 참조인용.

2) 지역 고유의 문화콘텐츠, 생활문화를 가치화하는 지역문화창조 전략

- 미래사회의 근간으로 주목받는 창조산업 관점에서 지역재생을 위한 ‘문화’와 ‘예술’의 연계방식은 단순한 경제적 발전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민들의 유대감 형성 및 공동체 구축, 지역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확립해가는 전반적 과정과 결합되면서 지역의 창조적 경제를 구축하는 특성을 가짐.⁸⁴⁾
- 이러한 흐름 속에서 **지역문화 활성화 관련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어 왔지만 지역문화자원을 창조경제와 연계된 문화콘텐츠로서 접근하는 관점이 미약했음.** 때문에 현재까지는 지역관광축제 활성화, 관광산업 관련 단위 정책사업 등으로 추진되거나 아예 도시 차원의 문화도시 전략으로 포괄적으로 접근됨으로써 **지역의 고유한 문화자원, 생활문화 등을 지역 고유한 문화콘텐츠로 가치전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음.**
-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 정책에서는 이러한 제한된 시각을 넘어 지역에 존재하고 있는 유형, 무형의 다양한 문화자원을 창조경제와 연동할 수 있는 문화콘텐츠⁸⁵⁾로 구축해가고, 지역사회의 일상적 삶과 직접적으로 연동되는 생활문화를 가치화하는 지역문화창조 전략으로 구축해가는 것이 필요함. 즉, 지금까지 지역문화는 정책 대상으로서 문화자원을 발굴하고, 지역의 정체성을 연계하는 방식으로 접근되었지만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 정책은 지역과 문화를 종합적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창조의 과정(creative process)과 활동(creative activity) 관련한 역동적 개념으로 접근하는 “지역문화창조” 전략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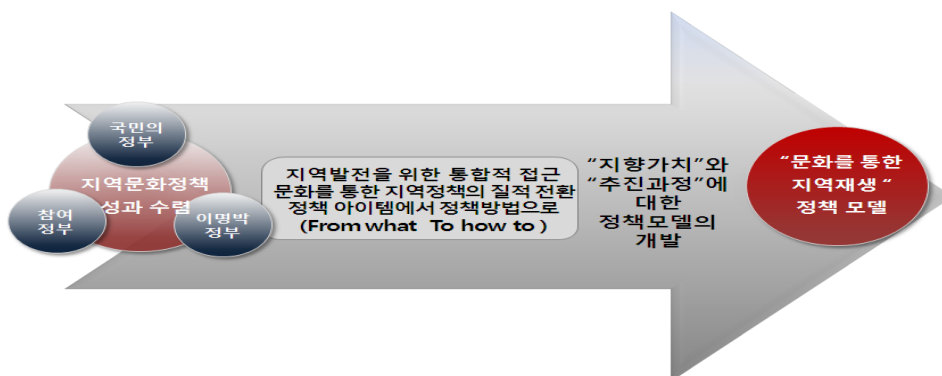
84) 추미경 외, 『기초예술과 문화산업의 연계방안 연구』, 2008,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부분적으로 인용.

85) 여기서 문화콘텐츠는 디지털 정보화된 문화자원으로 협소하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경제의 구조 속에서 적절하게 유형, 무형의 가치로 전환되어 자산화 되는 포괄적 개념으로 사용함.

3) 지역문화창조의 질적 전환을 위한 "How To" 정책 틀 마련

- 국내 여러 중앙부처에서 추진하는 도시재생정책에서 지역의 고유한 자산을 활용하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음. 여러 부처가 추진하고 있지만 **지역 고유의 문화콘텐츠를 활용하는 접근방식은 원칙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 고유의 업무로 추진되어 왔고, 향후에도 타 부처에 모델이 될 수 있는 정책모형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함.** 이를 위해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 정책은 그동안 지역민족문화과/디자인공간문화과에서 추진하여 개별적 성과로 귀결되었던 정책성과를 문화관광부의 통합적 **지역문화정책 성과로 종합하고 가치화하는 플랫폼 정책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

(그림 17)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 정책 틀



- 따라서,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 정책개념은 지금까지 지역민족문화과/디자인공간문화과에서 추진해왔던 사업성과를 체계적으로 종합하고 향후 새롭게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사업의 지향가치와 추진과정을 창조적으로 재구성하고 만들어가는 방향으로 정립하는 것이 필요함. 때문에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 정책은 새로운 정책 아이টে(what)에 대한 접근이 아니라 정책 지향가치에 따른 추진과정과 방법(how to)을 중심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

1.2. 정책 개념; 지역문화창조 클러스터링/파트너십(가칭)

1.2.1. 제안배경

- 창조사회의 핵심 동력으로 그 개념이 구축되고 있는 창조산업은 예술과 문화사업이 결합된 융합적 개념으로 양자의 영역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새로운 영역까지 포괄해서 창의성과 산업을 결합시키고 있음. 창조산업은 과거처럼 단지 산업으로서 단순히 소득을 창출하는 수단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창의성이 발현되는 토대를 제공하여 노동과 여가를 접목시켜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고용을 증진시키며, 부가가치 생성에 일조하고, 나아가 삶의 가치와 태도를 변모시키는 복합적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음.
- 한 지역이나 사회에 이질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문화’와 ‘경제’가 공통의 목적, 즉 인간이 살고 있는 환경을 인간답게 바꾸려는 목적에 부합하도록 기능하는 것이 창조산업의 특징이기 때문에 창조경제는 문화에 대한 저급한 상업주의 또는 반대로 문화지상주의가 아니라 문화(예술)와 경제 영역이 상생의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⁸⁶⁾
- 때문에 창조적 경제를 구축하기 위한 예술과 지역개발(재생)의 연계는 구체적인 하나의 결과물 자체보다는 지속적인 과정 자체를 중요하게 다룸. 또 지역의 발전을 진단하는 정형적인 틀에 갇히는 것보다는 지역의 활성화, 지역민 삶의 질적 발전을 이루는 데 무엇이 어떻게 창조적으로 다루었는지에 대한 새로운 관점의 특징들을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함.
- 지역문화 현장에서는 이러한 창조경제 환경으로의 변화가 실질적으

86) 오민근·정현일, 「도시조성과 산업발전 패러다임의 변화」, 『문화관광 너울』, vol. 208, 2008, 11월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인용 및 재구성.

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시행되고 있는 지역재생 정책에서 예술과 문화를 중심에 둔 지역재생 사업이 부처별로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는 경우가 있는 한편 성과중심의 정책추진 및 정책적 연속성이 보장되지 못하는 관계로 지역에서는 그 성과가 분산되고 있는 상황임.

- 또한 지방자치제도 실행 15년, 지역문화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지 10년이 넘어서면서 지역 단위에서는 지역문화 관련 많은 양적인 성장과 변화, 지역문화를 구성하는 사람, 공간, 자원 등의 측면에서 내발적 진화과정이 수반되었음. 때문에 **이제는 지역에 새로운 무엇인가를 지속적으로 만들어내는 방향보다는 지역에 이미 존재하는 고유한 지역문화자원 및 정책성과를 가치롭게 묶어내고 연계함으로써 지역의 창조경제로 클러스터링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임.** 즉 지역문화창조를 위한 사람/자원/공간의 클러스터링 정책개념임.
- 최근 도시재생 관련 연구, 창조경제와 관련 지역산업 활성화 방안 연구 등에서도 유사한 정책방향이 제시되고 있음. 먼저 국토연구원 『도시재생을 위한 문화클러스터 활용방안연구(2011)』⁸⁷⁾에서는 부산의 생활밀착형 창작공간 <포따포가>와 광주의 예술을 통한 시장공간의 재생을 모색하고 있는 <대인시장> 사례 등을 문화클러스터와 사회네트워크의 관점에서 분석, 도시재생에서의 실질적 역할을 제시하고 있음. 이를 통해 전국에 조성된 문화클러스터를 활성화 지원하는 정책을 제시하고 있음.
- 한편, 구문모(2012)⁸⁸⁾는 지역발전에서 문화중심 지역개발사업의 부진 요인을 창조생태계라는 관점에서 분석하면서, 향후 지역의 문화중심 개발사업은 창조경제의 관점 속에서 문화적 배려와 경제적 목

87) 박세훈 외, 『도시재생을 위한 문화클러스터 활용방안 연구』, 2011, 국토연구원.

88) 구문모, 「문화중심 지역개발사업의 창조생태계적 접근과 정책적 함의: 개념적 분석을 중심으로」, 『문화경제연구』 제15권3호, 한국문화경제학회, 2012.

표 두 가지의 요소를 유기적으로 반영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전략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있음.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향후 **문화중심 지역개발사업에서 창조생태계적 관점과 정책추진방안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임**. 창조생태계는 **문화와 창조분야의 경제활동과 이를 뒷받침하는 우수하고 복합적인 인프라를 갖춘 창조공간과, 이러한 환경을 찾아가는 창의적 인재가 핵심요소인 광의적 개념임**. 지역에서 창조생태계가 지속가능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체계 및 구성요소 간 활발한 네트워킹이 이루어질 때 가능함을 제시하고 있음.

-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 정책개념 구축에서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추진주체 간의 거버넌스 맥락이면서 공동 주체의 형성과 상호협업 취지를 강조하는 “파트너십” 개념임**. 지역재생에서 파트너십 개념은 이미 영국을 비롯한 유럽지역, 미국 등 미주지역, 일본 등 아시아 지역 등에서 다양하게 시도된 바 있으며, 순기능과 역기능도 어느 정도 알려져 있는 정책개념이자 제도임.
- 파트너십은 공공-민간/ 중앙-지역/ 기업-개인/ 지자체-기업-시민단체-개인 등 다양한 형태로 만들어질 수 있으며, **사람/자원/공간을 다루는 주체가 중심이 된 파트너십 개념으로 적용하여 지역재생에 필요한 여러 가지 요소의 클러스터링과 맞물려 주체간의 결합에 초점을 두는 정책개념으로 사용할 수 있음**.
- 본 연구의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 정책개념은 지역문화창조를 위한 기존의 사람, 자원, 공간에 대한 클러스터링 개념과 더불어 추진체계로서 실행주체간의 협업에 초점을 둔 지역문화창조 파트너십 개념을 동시에 제안하고자 함. 양자의 개념은 내용적으로는 동일한 맥락 속에 있으므로 선택적으로 사용해도 무방하며 병렬적으로 구사해도 무방할 것이라 봄.

1.2.2. 문화 클러스터 개념 및 현황 검토⁸⁹⁾

1) 문화 클러스터 관련 개념

- 예술가 중심의 문화 클러스터를 연구한 스텐과 세이퍼트 정의(Stern and Seifert, 2007)에 따르면 **문화 클러스터는 “서로 밀접한 연계를 가지고 자기조직적으로 상호작용하는 문화예술의 생산 및 관련기능의 지리적 집합체”로 예술가들의 창작, 즉 문화의 생산기능의 집합체로 설명됨.** 이 정의에 따르면 문화 클러스터는 문화예술이 산업화되기 이전의 창작기능을 중심으로 한 인적 네트워크를 의미하며, 자생성, 역동성, 풍부한 네트워크를 특징으로 하고 있음. 또한 예술가의 창작클러스터를 문화 클러스터가 갖는 창조성의 원천이자 지역사회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핵심자원으로 보았을 때 산업, 상업적 기능이 중요한 요소인 문화산업지구, 문화지구와 달리 예술창조, 문화창조에 주안점을 두게 됨.
- 문화 클러스터와 관련된 중요 개념 중 하나는 문화산업 클러스터(cultural industrial cluster)임. ‘문화산업’의 범위는 국가마다 조금씩 다른데, 우리나라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출판, 만화, 음악, 게임, 영화, 애니메이션, 방송, 광고, 캐릭터, 에듀테인먼트의 10개 산업을 문화산업으로 정의하고 있음. **문화산업 간의 협력과 연계를 위한 산업-연구 협력지구의 개념으로 산업화된 기능을 중심으로 바라본 장소 개념**이라 할 수 있음.
- 또한 문화 클러스터와 흔히 함께 논의되는 개념이 문화지구(cultural district, cultural quarter)임. 문화지구는 문화 클러스터와 혼용되기도 하고 개념적으로 구분 없이 사용되기도 하고 있음. **문화지구는 문화예술의 소비와 유통 기능이 강조된 지역 또는 장소 개념**으로,

89) 박세훈 외, 『도시재생을 위한 문화클러스터 활용방안 연구』, 2011, 국토연구원, 전반적으로 참조 재구성함.

문화예술의 창작, 생산기능이 강조된 지역으로서의 문화 클러스터 개념과 구분되기도 함. 일반적으로 '지구(district or quarter)'를 강조하는 시각은 문화를 관광산업 활성화의 수단으로 보며 소비지향적 기능의 발전에 초점을 두고 있음.

〈표 56〉 문화 클러스터와 관련 개념과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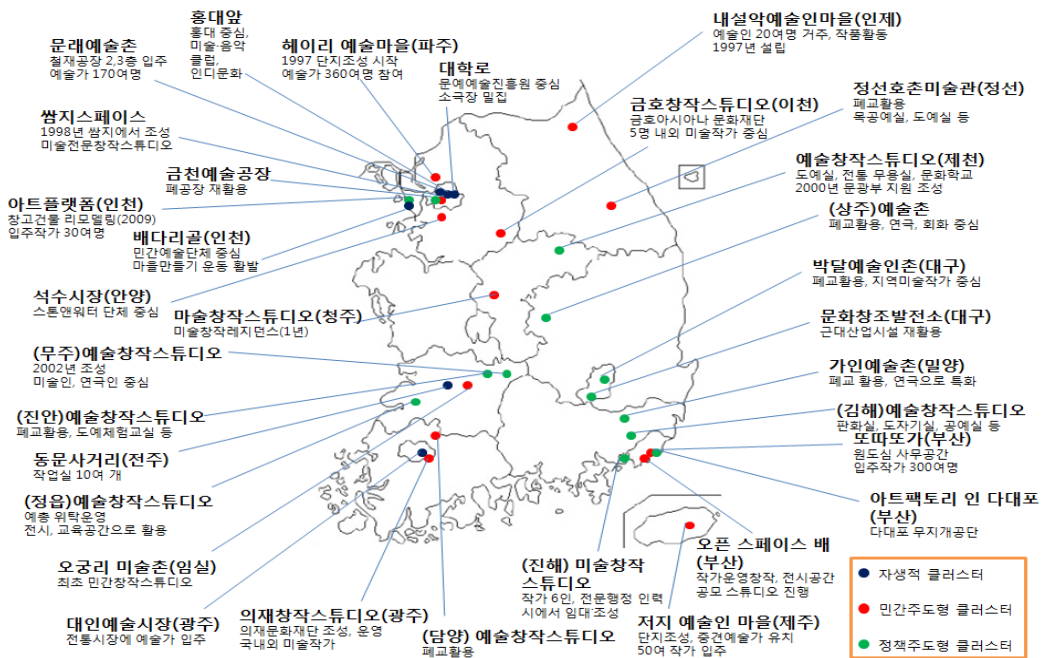
영역	문화 클러스터	문화산업클러스터	문화지구
특징	예술가 인적 네트워크와 지역사회 연계	문화산업기업의 기업연계	상업적 문화기능의 집적
핵심기능	시각예술, 공연예술, 예술기획, 예술교육	영화, 게임, 방송, 콘텐츠, 패션 등	박물관, 갤러리, 쇼핑몰 등
관련이론	클러스터 이론 예술세계론(Becker)	클러스터 이론	장소마케팅 이론
관련기존연구	Becker(2008), Stern and Seifert(2007), Markusen and Gadwa(2010)	Scott(2000), Power and Scott(2004)	Le Blanc(2010), Mommaas(2004), Montgomery(2003)

2) 국내 문화 클러스터 현황 및 시사점

- 우리나라의 문화 클러스터는 1980년대 이후 등장하기 시작하였으며, 1990년대 이후 문화경제의 부상, 문화예술 분야에서의 도시유희시설 활용, 정부의 문화예술 지원 확대 등에 힘입어 여러 가지 형태로 전국에 확산됨.
- 수도권에는 홍대, 대학로 등 오랜 기간 자생적으로 성숙·변화해 온 문화 클러스터가 종종 있지만 상당수는 개발압력에 밀려 급속히 상업화되고 있음. 반면 지방도시의 문화 클러스터는 대부분 정책적으로 조성되었으나 아직 활성화된 사례가 적음. 인천, 대구, 광주, 부산 등에서 침체된 도심을 활성화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음. 명확히 문화 클러스터를 조성하거나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 존재하지는 않지만, 문화기능을 활용한 도시재생, 전통시장 활성화 등 관련 정책이 다방면으로 추진되고 있음.

- 국내 문화 클러스터의 유형은 아래 표와 같이 자생형, 민간주도형, 정책지원형으로 나눌 수 있음. **자생형 문화 클러스터**는 주 구성원인 젊은 예술가들이 서울과 그 인근 지역에 풍부하기 때문에 주로 서울과 수도권에 분포하고 있음. **민간주도형 문화 클러스터**는 전국적으로 산재하고 있는데, 단지조성을 통해 형성된 경우 토지를 매입하고 기반시설을 조성해야 하기 때문에 땅 값이 비싼 대도시 지역보다는 농촌지역에 많이 입지하고 있음. 예를 들어 폐교를 활용한 경우에는 폐교가 많은 농촌 산촌에 입지하고 있어 도시 외곽에 입지하고 있기 때문에 자생형에 비해 활성화가 되지 못한 지역이 많음. **정책지원형의 경우** 입지패턴이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대도시에 위치한 정책지원형 문화 클러스터는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재생을 목적으로 정책적으로 조성한 사례가 많음. 농촌지역의 폐교나 유희시설을 활용하여 클러스터를 조성한 경우도 있는데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으로 폐교와 유희시설에 예술 창작공간을 조성한 경우임.

〈그림 18〉 전국문화 클러스터 분포 현황



-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문화 클러스터는 자생형 문화 클러스터의 수는 작고, 민간주도형과 정책지원형 문화 클러스터가 많음. 대부분의 문화 클러스터 정책이 예술가들에게 창작공간을 제공하는 문화예술 지원정책을 벗어나지 못하거나, 최근 지방자체단체를 중심으로 문화 클러스터를 활용하여 도시재생정책을 추진하는 사례가 늘어가고 있는데 이 경우도 지역의 유휴공간을 활용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실정임.
- 그러나, 대부분의 클러스터는 역사가 짧고 소규모여서 클러스터로서 성숙된 네트워크를 갖지 못하고 있으며, 자생형 문화 클러스터는 그 자체가 매우 중요한 사회적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재개발 및 상업화에 노출되어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음.
- 정책지원형 문화 클러스터는 도심활성화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곳이 대부분이지만 예술가 공동체가 고립되어 있어 지역사회 효과가 아직 미미하기 때문에 **지역사회에 영향력 있는 문화 클러스터를 발굴하고 지원하며, 지역사회와 연계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지원하는 것이 중요함.**
- 정책적으로 조성된 문화 클러스터라 할지라도 예술가의 사회네트워크가 빠른 시기에 구축되어 효과를 확인할 수 있지만 예술가들의 공동체 형성이 곧 지역사회 효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예술가들의 참여와 자발성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정책설계가 중요함.
- 이에 문화 클러스터의 파급효과 확산을 위해서는 어떠한 장소에 입지시키고 내부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는 것에 대한 공간 전략이 중요하며, 문화 클러스터의 성과확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가 있음.

1.2.3. 지역재생 파트너십 관련 개념 검토

1) 지역재생 파트너십 관련 개념

- 지역재생에서 파트너십은 지역 커뮤니티 구성원의 광범위한 참여를 통한 내재적 재생의 필요성, 지역성장산업의 육성을 위한 다양한 민간체계의 활용과 네트워크, 중앙 및 지방 정부의 지원과 협력 등이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해서 필요한 구조로 인식되어 왔고, 활용되어 왔음. 또한 종합적 관점에서의 지역재생정책이므로 추진주체로서 지방자치단체, 민간기업, 대학, 연구소, 전문기관, 지역 내 다양한 시민단체, 지역주민 등을 묶어내는 파트너십 활성화가 강조되어 왔음.
- 일반적으로 파트너십의 개념은 “복수의 개인이 이익 획득을 목적으로 자금, 노무, 기술을 제공하는 것을 법적으로 약속한 관계”라고 정의⁹⁰⁾됨. 이러한 기본 원칙에 따라 **지역재생을 위한 공공-민간, 민간-기업-시민사회 등 다양함 여러 유형의 파트너십은 구성원간의 법적 조합을 구성하고 공동의 책임과 권한을 공유하고 실행**하게 됨. 영국 도시재생 정책에서 추진되었던 지역전략 파트너십(Local Strategic Partnership), 지역기업 파트너십(LEP; Local Enterprise Partnership) 등은 이러한 맥락 속에서 지역재생사업의 중요한 주체이자 제도로 활용되었음.
- **파트너십 형태는 크게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 베이스 2개의 유형으로 이루어짐.** 프로그램 베이스 파트너십은 지역 전체의 넓은 범위에서 공공, 민간의 다수 공동 주체가 참여하여 장기간 다수 프로그램 사업으로 추진되며, 사업이 종료되어도 각각 주체가 존속되는 경우임. 이에 비해 프로젝트 베이스 파트너십은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한시적으로 구성되어 프로젝트가 종료되면 파트너십도 종료되는 경우임⁹¹⁾

90) 정철모, 「선진국의 도시재생을 위한 파트너십제도에 관한 연구」, 『도시행정학보』 제22집제1호, 한국도시행정학회, 2009, p.72.

2) 해외 지역재생 파트너십 추진 시사점⁹²⁾

- 국내에서는 지역재생을 위한 파트너십 제도로 구체화되어 실행된 바는 없으며, 거버넌스 형태로 유사한 협력체계가 운영되어 왔음. 때문에 해외 주요국에서 추진되었던 파트너십 제도의 추진 시사점을 중심으로 살펴 봄.
- **지역재생에서 파트너십 제도는 해외 주요국가의 도시재생 정책과정에서 도시재생 관련 사업 성격이 종합적이고 협업을 요구하는 부분이 많아 자연스럽게 진화되어** 왔음. 지역재생을 위한 파트너십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네트워크, 지역 내부로부터의 시민 참여 등을 이끌어내기 위한 적절한 구조로 정책성과를 만들었고 전반적으로 확대 수용되어 왔음.
- 그런데, 파트너십의 강화 및 확대는 지역사회의 직접 개입과 더불어 지역재생 사업 관련 이중/삼중적 권력분산 및 지나치게 많은 파트너십의 등장으로 **종합적인 조정의 어려움, 장기적 시간소요, 책임의 분산으로 인한 사업에 대한 총체적 책임소재의 모호함 등 부정적 요소들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내었음.** 이에 따라 지역재생 파트너십에 대한 막연한 정책 기대에 대한 **반성적 검토가 진행되고 있으며, 적절한 수준의 파트너십 모델과 정책효과에 대한 재검토가** 진행되고 있기도 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재생에서 파트너십은 영국, 미국, 일본 등의 선진국에서도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확대, 정착되어가고 있는 경향**임. 도시재생사업의 추진주체로서 점차 **“주민참여형 파트너십”이 중심적 위상과 역할로 성장하고** 있음. 이에 따라 도시재생이 과거의 물리적 환경개선이 아닌 사회적 재생, 문화적 재생으로 이어지게 되

91) 정철모, 같은책, p.72 인용 재구성.

92) 정철모, 같은책, 참조 재구성.

면서 주민참여형 파트너십을 대상으로 사회, 교육, 문화사업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포괄적 보조금제도가 도입되고 있음.

- 또한 선진국에서는 전반적으로 지역재생 파트너십 지원제도를 강화되면서 **중앙-지방정부 주도적 거버넌스 협력체계에서 주민참여형 도시재생 파트너십 추진체계로 재편**되고 있음. 지역재생에서 주민참여형 파트너십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장치가 다양하게 구축되고 있는데, **파트너십 인증/평가제도의 도입, 교육훈련의 체계화 및 제도화, 지역통합적 도시재생지원 행정체계의 마련** 등이 필요함.
- 해외 국가들의 경험적 사례를 통해서 제시되고 있는 파트너십 제도의 성공 요인은 먼저, 지역재생을 위한 공공-민간 파트너십에서 공공, 민간기업, NPO, 시민이 지역의 비전에 대한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각각의 역할에 대해 합리적으로 합의하는 것이 중요한 전제가 되어야 하는 점임. 또한 지역에서의 공동체 의식의 성장, 시민사회의 참여가 자연스러운 다문화사회의 기반, 공공과 민간의 신뢰관계의 토양이 튼튼해야 한다는 점임.

1.2.4. 지역문화창조 클러스터링/파트너십(가칭) 개념 정립

1) 창조경제 비전 속에서 지역문화의 창조적 재구성

- 문화 클러스터 개념은 원래 장소와 공간의 성격이 강한 편이며, 예술가 중심의 창작과 생산기능 중심의 클러스터에서부터 문화산업 클러스터, 문화지구 등과 같이 산업, 소비와 유통 기능으로까지 그 개념이 확장되었음.
- 예술가 창작활동 중심의 문화 클러스터는 예술가들의 창작활동을 통해 지역, 장소의 가치를 재발견하여 의미화하고 활동으로 지역사회와 연계됨으로써 예술가들의 공동체가 활성화되고 보다 넓은 네트워크를 형성시킴. 이를 통해 예술가의 지역사회 참여가 확대되고, 지역주민의 예술활동과의 연계가 활발해지면 지역사회 중심형 문화 클러스터가 활성화 될 수 있음.
- 예술가들이 클러스터를 형성하는 이유는 기업 클러스터와 마찬가지로 클러스터는 문화생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예술가 집단은 다른 어느 직업군보다도 서로 많은 영향을 주고받는 공동체적 속성을 지니고 있음. 또한 예술가의 클러스터가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확산효과(spill over effect)를 가져오기 때문에 예술가 개개인도 창조적 활동을 통해 사회에 기여할 수 있음.
- 지역문화창조 클러스터링(가칭)은 이러한 예술가 창작활동 중심의 문화 클러스터에서 그 범위를 지역문화콘텐츠로 확장하여 지역에 고유한 문화자원, 생활문화 등을 창출하고 생산하는 지역문화 창조활동 중심의 문화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개념임.
- 예술, 지역문화 창조 등을 통해 지역사회 중심의 문화 클러스터 효과는 모두 관련 기능의 클러스터링에 기인하는데 이는 클러스터가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외부효과’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기반이 되고, 동시에 기존의 도시문화전략이 갖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자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 지역문화창조 클러스터링(가칭)은 그동안 그 가치와 정책 성과가 분산되어 있거나 개별화 되어 있는 지역문화자원을 창조사회로의 전환에 맞추어 지역마다의 개성과 규모에 맞는 다양한 창조경제의 비전 속에서 창조적으로 재구성하는 정책 개념임. 때문에 정책 명칭도 장소나 공간적 개념의 ‘클러스터’ 대신 활동, 과정, 네트워크 성격을 강조한 ‘지역문화창조 클러스터링’으로 사용하는 것이 필요함.

2) 지역문화자원(사람, 자원, 공간)의 창조적 클러스터링

- 지역문화창조 클러스터링(가칭)은 지역문화자원을 크게 사람, 자원, 공간으로 구분하여 세 영역에서의 자원을 창조적으로 묶어내고 연계하고 소통하여 창조적 지역문화로 클러스터링 함.
- 사람은 지역문화창조 클러스터링의 핵심 요소로 새롭게 인력을 양성하거나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양한 유형의 지역문화인력을 지역문화창조의 큰 비전 속에서 네트워킹, 협업, 역량강화 등을 돕는 지역문화 창조인력(creator) 클러스터링 개념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
- 자원은 지역문화콘텐츠 클러스터링 정책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 그동안 유형, 무형의 지역문화자원에 대한 가치의 발굴, 지역문화자원으로의 전환 관련 수많은 작업들이 진행되었지만 창조경제의 구조 속에서 구체적 가치로 구현되는 지역문화콘텐츠로 정립되지 않는 것임. 따라서 다양한 지역문화자원을 지역사회, 지역경제, 지역공동체와 연계할 수 있는 지역 고유의 문화콘텐츠로 등록, 체계화하여 클러스터링 하도록 함.

- **공간**은 지역에 조성된 다양한 유형의 문화공간, 예술공간을 비롯해 유희시설로 존재하는 일상공간이나 문화유적 등을 모두 포함해서 **지역공동체의 생활 속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고 연계할 수 있는 공간전략개념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이미 추진된 사업과 연동되어 만들어진 공간이 다수 존재함. 최근에 조성된 다양한 유형의 문전성시 공간, 근대문화유산 예술창작벨트, 생활문화공동체 공간 등이 있고, 문화의집과 같이 기존에 구축되었던 생활문화공간 등 다양한 유형의 공간이 지역에서 활성화된 문화공간이거나 유희공간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러한 공간을 클러스터링 하는 정책추진이 필요함.

3) 지속가능한 지역재생을 위한 창조적 파트너십

-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 정책에서 **창조적 파트너십은 지역문화창조의 지속가능성을 만들어가는 핵심전략**이라고 할 수 있음. 사람, 자원, 공간이 어우러지는 지역재생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이들 세 요소를 적절하게 묶어내는 추진방식 및 추진구조를 창조적 파트너십으로 설정할 수 있음.
- **지역재생을 위한 창조적 파트너십은 지역문화를 창조적으로 재구성하기 위한 창조경제의 관점에서 사람, 자원, 공간과 연관된 다양한 주체를 발굴, 연계하기 위한 플랫폼으로서 작동**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때문에 공공-민간-기업-전문가-시민 등 여러 주체들의 협업이 필요한데, 지역내부와 외부를 넘나드는 **유연하고 개방적인 파트너십을 지향하는 것이 바람직함**. 공공과 민간, 기업과 시민사회, 전문가와 주민, 지역 내부와 외부가 공동으로 노력해서 지역재생의 필요에 맞는 정책성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함.

2. 지역문화창조 클러스터링/파트너십 정책(가칭) 내용

2.1. 지역문화콘텐츠 클러스터링/파트너십 정책

2.1.1. 개념과 범위

- 지역문화콘텐츠는 지역문화를 창조산업으로 연계하기 위한 주요한 문화자원의 영역을 만들고 묶어내는 정책 영역임. 지역문화의 개념은 장르 중심의 예술 개념을 넘어 “지역사회 생활방식의 총체”로서 광범위하고 포괄적 개념을 가지고 있음. 때문에 지역문화콘텐츠의 영역을 창조경제와 연관해서 구체적 영역을 범주화하고 가치화하는 것이 필요함.
- 기존에 다루어졌던 주요한 지역문화자원 영역으로 축제, 문화재 중심의 문화유산 등이 있음. 이를 포함해서 미래적 관점에서 주안점을 주고 영역화해야 하는 지역문화콘텐츠 범주를 전략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중요함.
- 이러한 맥락에서 이미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최근 5년 사이 선도적으로 다루기 시작한 생활문화자원, 근대 문화유산을 비롯해서 지역의 자연환경 영역까지 확장하여 구체적 지역문화콘텐츠로 범주화하고 지역의 창조경제와 연동할 수 있는 관점에서 가치화하는 것이 필요함. 생활문화자원에는 문전성시와 같은 시장문화(시장공간)을 포함해서 지역의 이야기자원, 지역 고유한 공예문화, 음식문화, 놀이문화, 등 다양한 발굴이 가능함. 근현대 문화유산은 간이역, 염전 등과 같이 이미 발굴한 근대적 문화자산에서 확장하여 마을 곳곳에 방치되고 있는 다양한 근대 문화콘텐츠를 발굴하고 가치화하는 작업이 필요함. 지역 문화를 형성하는 결정적 환경 요소가 되는 지역 고유한 자연환경 역시 중요한 지역문화콘텐츠로 영역화하는 것이 필요함.

2.1.2. 추진방향 - 〈지역문화콘텐츠 등록운영제도〉

- 문화관광부 차원에서 〈지역문화콘텐츠 등록운영제도〉와 관련해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지역문화콘텐츠 등록운영제도〉는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 정책의 큰 틀 안에서 지역문화콘텐츠 클러스터링/파트너십 정책 실행방안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서는 지역문화콘텐츠 등록제도 및 질적 운영방안에 대한 사전연구가 필요함. 지역문화콘텐츠의 개념과 범주를 설정하고,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창조경제와 연계하여 가치를 만들어내도록 돕는 질적 운영방안에 대한 구체적 방법을 개발하여 〈지역문화콘텐츠 등록운영제도〉로 구체화하는 것이 중요함.
- 지역문화콘텐츠는 새롭게 개발하는 방식이 아니라 지역문화콘텐츠 클러스터링/파트너십 정책 개념에 맞게 이미 지역에 존재해 온 지역 문화가치를 창의적 관점에서 새롭게 발견하고 지역의 창조산업 요소로 클러스터링하는 접근방식이어야 함.
- 지역문화콘텐츠를 일상적으로 접하고 살아가지만 지역 내부에서는 그 가치를 객관적이고 미래적 관점에서 인식하고 있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외부 전문가, 지역내부 전문가, 지역주민의 창조적 파트너십에 기초해 운영될 필요가 있음.
- 또한 실증적 검증과정을 위해 몇 개 지역에 3년 정도의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역문화콘텐츠 등록운영제도〉가 지역현실에 적절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정책지원 장치를 섬세하게 보완하는 것이 필요함. 일정한 검증 과정을 거친 후 지역문화콘텐츠 클러스터링/파트너십 정책 차원에서 점차 지역을 확산하여, 전국 〈지역문화콘텐츠 등록운영제도〉를 추진하도록 함.

2.2. 지역문화창조인력 클러스터링/파트너십 정책

2.2.1. 개념과 범위

- 지역문화창조인력은 창조산업 시대에 핵심인력으로 영국에서 개념화 되어 세계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창조산업의 콘텐츠 생산자로서의 크리에이터(creator) 개념을 지역문화인력으로 연계, 적용한 개념임. 그러나 지역문화창조인력의 개념 설정에서 영국으로부터 도입된 크리에이터 개념에 얽매일 필요는 없으며, **한국의 구체적 지역문화를 만들어가는 인력 전반을 지칭하는 한국형 개념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2000년 지역문화의 해를 분기점으로 지역문화 관련 정책이 꾸준히 추진되어 왔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지역문화아카데미>, <문화이모작사업>, <문전성시 시범사업>,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시범사업> 등을 통해 지역문화를 다루는 전문인력을 다양하게 구축해왔음.
- 이러한 인력군에는 지역 내부에서 지역문화 전반을 다루면서 꾸준히 활동해온 **지역문화인력을 포함해서 농산어촌 마을만들기 관련 지역 주민 활동가, 문전성시 사업 등으로 영역을 넘나들며 지역문화창조에 결합하고 있는 예술가, 문화기획자, 상인기획자 등 다양한 층위의 지역문화창조인력**이 있음.
- 지역문화 관련 다양한 경험을 축적하고 있는 인력군을 지역의 창조산업 전망과 연계하여 지역문화콘텐츠를 가치화하고 지역 내 문화공간으로 묶어낼 수 있는 **지역문화창조인력으로 네트워크링하는 것이 필요함.** 또한 변화하는 지역환경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지역문화를 활용해 지역발전으로 연계하는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 정책에 동참하고 성과를 낼 수 있는 지역문화창조역량을 강화하는 다양한 네트워크, 협업 프로그램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

2.2.2. 추진방향 - <지역문화창조인력 파트너십>

- 문화관광부 차원에서 <지역문화창조인력 파트너십>과 같은 **지역문화 인력간 네트워킹 및 협업지원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즉, 과거 추진했던 대상별, 부서별 분화된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 교육의 접근방식이 아니라 지역 기반의 통합적 관점에서 인력군을 지역문화창조의 필요에 따라 네트워킹하고 및 협업을 지원하며, 그에 수반되는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제도임.
- 이를 위해서는 **지역문화창조인력 대상범위에 대한 조사와 분석, 그에 적합한 지역문화창조인력 파트너십 프로그램의 기획과 운영 매뉴얼의 설계 등이 선행**되어야 함. 그동안 다양한 교육을 거쳐간 수많은 인력군이 있고, 문화관광부 지역민족문화과/디자인공간문화과에서 추진한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 관련 정책사업을 통해 양성된 인력군이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음. 이와 같이 **기존에 구축된 지역문화 인력에 대한 전반적 통계현황 분석, 그리고 지역에서의 활동근황 및 분포 등에 대한 지형도를 만들어서 <지역문화창조인력 파트너십> 프로그램을 설계**하도록 함.
- <지역문화창조인력 파트너십> 프로그램은 지역의 창조인력인 사람을 중심으로 지역의 자원, 공간을 연계하는 추진방향을 원칙으로 삼아 지역문화창조를 위한 지역인력의 다양한 프로젝트를 기획, 구현하는 것을 지원하고 연계하는 관점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때문에 대규모의 집체교육 형식이거나 단기간 집중교육 차원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접근방식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으며, 인력간의 네트워킹 및 협업을 지원하고 그 지원성과가 지역의 지역문화창조로 귀결되게 하는 정책지원으로 접근되는 것이 필요함.

2.3. 생활속문화공간 클러스터링/파트너십 정책

2.3.1. 개념과 범위

- **생활속문화공간의 개념**은 전문 예술 및 문화 공간 미션을 가지고 설립된 문화/예술 공간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지역주민들의 일상적 문화공간으로 작동하는 장소 또는 공간**임.
- 이러한 생활속문화공간에는 오래 전에 생활권 시민문화창조 공간으로 만들어진 <문화의집>과 같은 공간을 포함해서 최근 <문전성시 시범사업>으로 만들어진 생활권 전통시장 속 문화공간, 지역 근대유산을 활용해서 조성된 복합문화공간, 마을미술 프로젝트를 통해 만들어진 마을의 특정한 장소, 여러 부처의 마을만들기 사업 등을 통해 만들어진 마을박물관이나 마을회관 등의 다양한 생활공동체 문화공간 등이 모두 포함됨.
- 최근 세계적 동향도 커뮤니티 중심, 지역주민 중심의 재생정책으로 전환되고 있어 과거와 같이 상징적 예술공간, 대형 문화공간을 거점으로 하는 스펙터클한 외연적 정책추진은 점차 지양되고 있음. 이제는 **지역주민의 일상과 만나는 생활속문화공간을 창조적으로 재생하는 것에 주목하고 있는데. 이러한 접근이 지속가능한 지역재생 정책을 가능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창의적 역량을 구체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임.
- **생활속문화공간 클러스터링/파트너십 정책은 창조적 생활공간을 만들어내는 거점 또는 플랫폼 역할에 중점이 두어진 영역**임. 지역에 존재하는 여러 유형의 문화공간을 포함해서 유희공간으로 방치된 생활공간을 문화적으로 새롭게 재생하여 **지역 특성이 살아있는 생활속 문화공간의 창조적 플랫폼으로 묶어내는 것이 중요**함.

2.3.2. 추진방향 - 〈생활문화공간 클러스터링〉

- 문화관광부 차원에서 〈생활문화공간 클러스터링〉 지원제도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 이 제도는 새로운 공간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각 지역의 고유의 생활문화 특성이 살아나도록 지역 내 다양한 문화공간, 생활공간을 생활문화공간으로 묶어내어 지역문화창조의 플랫폼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에 중점을 두는 지원제도임.
- 이를 위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민족문화과, 디자인공간문화과, 예술정책과, 관광정책과 등에서 조성해왔던 여러 층위의 지역문화공간, 지역생활문화공간을 전반적으로 정리하여 전국에 분포된 공간문화의 유형 및 경향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함. 이러한 분포현황을 기반으로 전략적 관점에서 〈생활문화공간 클러스터링〉 지원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필요함.
- 〈생활문화공간 클러스터링〉 지원제도의 추진방향은 그동안 문화체육관광부가 만들어온 공간문화의 정책성과를 종합함으로써 개별 정책 성과에 대한 통합적 관점에서의 지속가능한 정책기반을 구축하는 것에 있음. **지속가능한 정책기반의 핵심은 조성된 공간이 지역주민의 생활권 내에서 지역문화를 위한 창조적 플랫폼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운영” 기능을 클러스터링하는 것이 중요함.**
- 또한 지역의 통합적 관점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외 타 부처에서 추진하였지만 지역에서 적절하게 활용되고 있지 않은 생활문화공간을 적극적으로 클러스터링하여 지역문화창조의 플랫폼으로 묶어내는 것이 필요함. 이 부분은 기존에 추진했던 〈문화이모작〉 정책처럼 **관련 부처와 협정을 맺고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임.**

3. 법제도적 장치 마련

3.1. 지속가능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법안 마련

-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정책은 **향후 문화관광부 차원의 통합적 정책 개념으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정권 및 정책담당 부서/담당자가 변하더라도 되도록 일관되게 추진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함.**
- 이는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 정책이 과거 지역개발 정책처럼 지역 커뮤니티, 지역주민을 배제한 외연적 접근이 아니라 지역 내부와 긴밀하게 연동된 추진과정의 지속성을 통해 구축된 신뢰를 바탕으로 성과를 만들어갈 수 있는 정책이기 때문임. 따라서 단기적 관점에서 변화가 찾아질 경우 정책성과를 내지 못하는 차원을 넘어 역효과마저 초래할 수도 있음.
- 이러한 맥락에서 본 정책은 일종의 사전계획(Pre-Production)을 충분히 진행한 후에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 체계적인 사전계획(Pre-Production) 단계에서 정책의 지속가능한 장치를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마련해두는 것이 필요한데, 이중에서 **법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매우 중요함. 정책의 정립 및 추진 일정과 동일한 선상에서 정책에 대한 법제도적 구조를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함.**

3.2. 법제도적 장치마련 방안

3.2.1. 문화관광부 소관 지역문화진흥법안 반영

-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관련 정책 추진에 기초 근간이 될 수 있는 법령은 먼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문화예술진흥법>과 현재 제정을 위해 계류 중인 <지역문화진흥법(안)>이 있음.

- <문화예술진흥법> 안에서 지역재생 정책과 관련된 직접적인 법조항은 법 제8조 “문화지구의 지정·관리” 조항으로 문화시설, 문화예술행사·축제 등 문화예술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지역과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문화지구로 지정 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음. 이를 통해 문화지구 지정관리 영역은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가지게 됨.
- <문화예술진흥법>의 제8조 “문화지구의 지정·관리” 조항은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 관련 정책개념으로 포함된 것이 아니라 문화예술진흥의 관점에서 포함된 것이므로 향후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정책의 일반적 사항을 <문화예술진흥법>에 포함시킬 필요는 없음.**
-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정책의 지속가능한 법제도적 장치는 현재 계류 중인 <지역문화진흥법(안)>에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포함내용은 “문화지구의 지정관리”조항처럼 세부적 단위사업으로 반영되기 보다는 **단위사업을 포괄할 수 있는 상위정책의 틀로서 반영하는 것이 필요함.**
- <지역문화진흥법(안)>은 2006년 5월 10일 이광철 의원 외 31인이 처음 국회에 의원 발의, 입법 형태로 추진하였으나 다른 관련법과의 중복성 등의 이유로 제정되지 못하였음. 이후 법 조항 보완을 통해 2012년 8월 문화체육관광통신위원회 도종환 의원 외 52인이 다시 법제정을 위해 발의하여 현재 계류 중에 있음.
- 계류 중인 <지역문화진흥법(안)>⁹³⁾에는 “문화도시, 문화지구의 지정 및 지원” 항목이 3장으로 독립되어 제시되고 있음. 그러나 문화도시 및 문화지구의 지정은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정책의 한 영역으로서 현재의 정책동향에서도 다소 떨어진 개념이므로 이미 미래적 관점을 확보하고 있지 않음.

93) 도종환 의원 발의 법안

- <지역문화진흥법(안)>은 현재 계류 중이지만 최종 결정되는 단계에 이르게 되면 반드시 보다 포괄적이고 미래적 관점에서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정책 관련 법조항을 수정, 반영하는 것이 필요함.

3.2.2. 타 부처 관련 법안과의 협력조항 연계

- 문화체육관광부 법제도적 장치마련과 더불어 필요한 것은 국토해양부 차원에서 추진, 계류 중인 국가 차원의 원도심 활성화 및 도시재생 정책추진을 위한 법률안에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 관련 협력조항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함. 연관성 높은 두 법률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법률(안)>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임.
-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법률(안)>은 도시의 외연적 확산을 억제하고 도심 쇠퇴 현상을 방지하며 도심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을 추진함으로써 도시경쟁력 확보와 도시 환경 보전에 이바지함 목적(제1조(목적))으로 국토해양위원회 2012년 5월 양승조 의원 외 11인의 의해 제안되었음.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계획적이고 종합적인 도시재생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물리적·비물리적 지원을 통해 민간과 정부의 관련 사업들이 실질적인 도시재생으로 이어지도록 하여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이유로 2012년 6월 5일 국토해양위원회 서병수 의원 외 34인이 발의하였음.
- 문화관광부에서 추진하는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정책은 국가 차원의 지역재생, 도시재생 정책의 일부이면서 독립적 영역으로 존재하는 것이므로 큰 차원에서 도시재생 정책 전반과 협력관계를 분명히 하는 법조항을 만들어두는 것이 필요함. 이를 통해 지금까지 잘 추진되지 않았던 부처간 협력과정에서 법제도적 장치에 힘입어 보다 원활하게 작동하게 만드는 계기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V. 정책 추진방안 및 제언

1. 정책 추진방안

1.1. 통합적 추진 방향

- 사람, 자원, 공간의 통합적 어우러짐에 기초해서 문화관광부 차원의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 정책을 통합 정책브랜드로 추진하는 방안**임.
- 통합적 추진방법의 첫 번째 방안은 사람, 공간, 자원에 해당하는 <지역문화창조인력 파트너십>, <지역문화콘텐츠 등록운영제도>, <생활문화공간 클러스터링> 세 영역을 복합적으로 담은 하나의 통합적 정책프레임을 만들어 지역민족문화과에서 추진하는 방안이 있음. 이 방안으로 추진할 경우 정책사업 규모가 가장 커질 것이며, 사업의 통합적 성과 및 리스크도 가장 크게 도출될 것임.
- 두 번째 방안은 지역민족문화과가 사업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되, <지역문화콘텐츠 등록운영제도>, <지역문화창조인력 파트너십>, <생활문화공간 클러스터링> 세 영역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임. 즉, 하나의 정책사업으로 묶어내는 것이 아니라 세 사업을 순차적이고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임. 이 방안으로 추진할 경우, 정책사업 규모는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지만 정책추진의 기간이 매우 길어지고 정책의 통합적 성과를 거두는데 일정한 한계를 가질 수 있음.
- 통합 정책브랜드로 추진할 경우 정책파급력이나 정책홍보 면에서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정책성과를 체계적으로 축적하는 차원에서 효과적이라 할 수 있음. 그러나 정책사업의 규모가 커지면서 정책추진과정에서의 섬세한 접근에 한계가 따르게 되고, 내실 있는 정책추진성과 도출에 일정한 한계를 가질 가능성이 높음.

1.2. 영역별 추진 방향

- 문화관광부 차원에서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정책을 통합적 관점으로 추진하되, **사람, 자원에 해당하는 정책은 지역민족문화과에 추진하고, 공간에 해당하는 정책은 디자인공간문화과에 추진하는 방안임.**
- 먼저, 지역민족문화과에서 사람, 자원에 해당하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통합적으로 두 영역을 묶어서 하나의 정책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과 두 번째 개별 사업을 순차적이고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이 있음. **두 가지 방안 모두 통합적 관점에서 세 영역을 묶어서 추진하는 방안보다는 사업규모에 부담이 줄고, 사업추진과정에서 보다 섬세한 접근을 할 수 있게 됨.**
- 디자인공간문화과에서는 공간에 해당하는 정책을 추진하되, 지역민족문화과와는 독립적으로 추진하는 방안과 지역민족문화과의 긴밀한 협력관계 속에서 추진하는 방안이 있음. **양자 모두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 통합 정책브랜드를 구현하는 데는 변화를 가져오기 힘들며, 기존에 지역민족문화과/디자인공간문화과 개별 정책사업의 추진과 동일한 선상에서 운영될 가능성이 높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긴밀한 협력관계 속에서 추진하는 후자의 경우에는 지역민족문화과와 디자인공간문화과가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정책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적극적 계기를 만들어낼 수도 있음.
-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 통합 정책브랜드가 아닌 정책 영역별로 추진함에 따라 **정책파급력이나 정책홍보 면에서 시너지 효과가 약할 수 있으며, 정책성고가 부분적으로 분산될 수 있음.** 그러나 각 과가 책임 있게 정책사업을 맡아 추진하게 되면서 **정책추진과정에서의 섬세함이나 개별적 정책추진성과 도출이 용이할 수 있음.**

1.3. 종합

〈표 57〉 정책 추진방안

추진방안	추진부서	사업	정책프레임	추진방법	특징
통합적 추진 방향	지역민족문화과	지역 문화창조인력 파트너십	사람	- 복합적 추진 정책규모가 가장 커지며, 사업의 통합적 성과 및 리스크도 가장 크게 도출 - 단계별 추진 정책사업 규모는 적절하게 조절 가능, 추진기간이 매우 길어지고 통합적 성과를 거두는데 일정한 한계	- “문화를 통한 지역 재생” 정책을 통합 정책브랜드로 추진하는 방안 - 정책파급력이나 홍보 면에서 시너지 효과, 정책성과를 체계적 축적 가능하나, 추진 과정에서 섬세한 접근에 한계 및 내실있는 정책추진성과 도출에 일정한 한계
		지역문화 콘텐츠 등록 운영제도	자원		
		생활문화공간 클러스터링	공간		
영역별 추진 방향	지역민족문화과	지역 문화창조인력 파트너십	사람	- 복합적 정책 추진방안, 개별사업을 순차적이고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이 있음	- “문화를 통한 지역 재생” 통합 브랜드를 구현하는 데는 한계 - 통합적 추진방향보다 사업규모에 부담이 줄고, 사업추진과정에서 보다 섬세한 접근이 가능 - 기존의 지역민족문화과/디자인공간문화과 개별 정책사업 추진의 동일한 형태의 운영 가능성
		지역문화 콘텐츠 등록 운영제도	자원		
	디자인공간문화과	생활문화공간 클러스터링	공간	- 지역민족문화과와 긴밀한 협력관계속에서 정책 추진	

2. 정책 제언

2.1. 통합적 관점의 문화부 지역재생 정책 수립 및 조정

2.1.1. 중앙부처 차원에서의 정책협의구조 구축 필요

-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 정책은 국가 차원의 지역재생 정책과 조화롭게 추진되는 것이 중요함. 때문에 **중앙 부처와의 통합적인 관점에 기초해서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하여 **정부 부처의 지역재생 관련 담당자들의 협의기반을 마련하고, 지역재생 정책을 통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함.**
- 특히 동일한 지역에 광역단위사업, 도시단위사업, 소규모 단위 사업이 중복 운영되고, 서로 이질적인 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조정과 통합을 할 필요가 있음. **각 정부 부처가 참여하여 통합적 관점에서 지역재생 정책을 추진하고, 사업을 조정할 수 있는 추진체계가 필요함.**

2.1.2. 문화부 지역재생정책 관련 종합적 실행계획 수립 필요

- 문화체육관광부 차원의 지역재생정책 관련 종합적 실행계획(master action plan)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본 연구는 기본연구에 해당하기 때문에 여기서 제시된 정책개념과 추진방안을 바탕으로 정책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기획을 담은 종합 정책계획의 수립이 필요함.
- 이를 통해 각 부처별로 진행하는 권역사업, 도시사업, 장소단위사업의 **개념/방향과 일관성 있는 기준, 가이드를 마련하고, 문화관광체육부에서 추진해야 하는 영역을 중심으로 통합적이고 일관성 있는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 정책을 도출할 필요가 있음.**

2.2. 최근 문화부 지역재생 정책성과의 계승과 체계화 필요

2.2.1. 생활문화와 근현대 역사문화로 정책대상 확대 및 체계화

- 문화부에서 최근 추진했던 개별 단위사업의 지역재생 정책성과를 확산하는 것이 필요함. 특히 생활문화와 근현대 역사문화자원으로 정책대상을 확대한 점은 지역재생 정책의 국제적 동향과도 부합하고 국내 지역문화환경에서도 실천적으로 필요한 영역임.
- <지역문화콘텐츠 등록관리제도>를 통해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 정책대상을 지역의 생활문화자원으로 확대/체계화 하는 것이 필요하며, 지역의 근현대 문화자원으로도 다양하게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

2.2.2. 사람/자원 중심의 정책추진 방식의 혁신 강화

-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 정책추진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것은 정책추진방식의 창조적 혁신을 이루는 것임. 이러한 차원에서 국내 정책은 휴먼/소프트/하드웨어의 종합적 정책추진이 비교적 일찍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천적 실체가 매우 허약하였음. 이는 사람/자원을 하드웨어인 공간 구축과 병렬적 관계 또는 공간으로부터 규정받는 위치로 설정해놓고 정책을 추진하였기 때문임.
- 그러나 이러한 정책추진과정에 혁신적 변화를 가져온 <문전성시 시범사업>을 비롯한 몇 가지 지역재생 정책사업 성과를 지속적으로 확산하여 지역재생 정책추진과정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타 부처로도 확산하는 것이 중요함. 이미 일정한 정책추진 성과가 다른 부처로 확산되고 있지만 문화부에서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지 않아 정확하게 정책혁신의 성과가 전달되지 않았음.

- 향후에는 **문화부가 추진하는 “정책과정에서의 혁신모델”을 성공요인으로 모델화 하고 확산하는 것이 필요함**. 이러한 맥락에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최근 이룩한 사람/자원이 중심이 되어 공간 등의 하드웨어/인프라를 지역과 주민의 필요에 맞게 구축해가는 과정은 보다 정교하게 정책과정으로 체계화되고 모델링되어 대외적으로 정책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고, 타 부처로도 확산할 필요가 있음.

2.2.3. PM제도/컨설팅단 등 중간매개자(조직) 역할 - 섬세한 정책설계 강화

-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정책과정에서의 혁신뿐만 아니라 정책추진체계를 섬세하게 설계하는 것도 중요함**. 정책추진체계를 섬세하게 설계하는 것의 의미는 정책목표가 몇 가지의 제도를 통해 저절로 구현될 것이라는 막연하고 단순한 기대치를 넘어 정책의 실현과정에 필요한 요소를 적절하게 배치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임.
-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추진된 정책에서 **PM제도/컨설팅단 등의 중간매개자(조직)의 역할을 설정하고 활성화하여 실질적으로 기능하게 만든 것은 지역재생정책 설계에서 큰 전환점**이 되었음. 향후에도 이러한 중간매개자 또는 중간조직의 중요성은 지속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러한 과정을 포함해서 **정책계획에서 섬세한 추진구조에 대한 설계가 강화되는 것이 필요함**. 이를 통해 그동안 추진된 지역문화정책의 형식적이고 양적인 요소를 극복하도록 내용적이고 질적인 차원으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함.

2.3. 문화부 지역재생 정책 통합적 홍보 채널의 구축 필요

2.3.1. 문화부 지역재생 정책홍보를 위한 저널-온라인 코너의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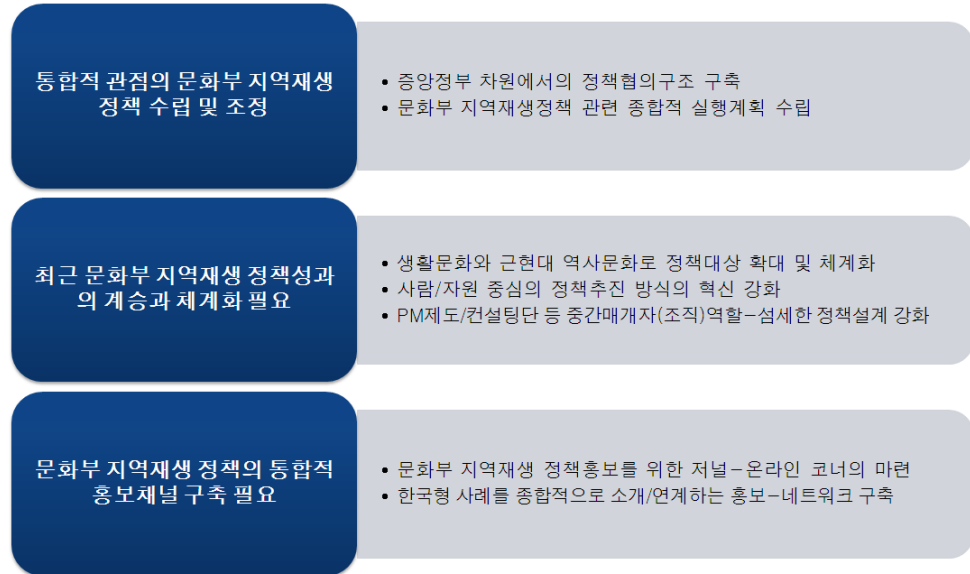
- 광범위한 지역재생 정책 가운데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 정책은 가장 주목받는 기법임. 문화체육관광부는 1999년에 시작, 2004년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이러한 맥락의 정책을 추진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책성고가 분산되어 대외적으로 정책브랜드로 정립되어 있지 않음. 뿐만 아니라 문화부에서 파생된 정책인데도 정확한 가이드라인 없이 피상적 정책성가로 타 부처로 전달 확산됨에 따라 정책의 실질 성과마저 퇴색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음.
-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고, 향후 문화부의 통합적 정책브랜드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문화부 홈페이지 또는 관련 매체를 활용해서 **문화부 지역재생 정책홍보를 위한 저널-온라인 코너를 마련하여 주기적으로 정책공감 및 홍보활동을 하는 것이 필요함.**

2.3.2. 한국형 사례를 종합적으로 소개/연계하는 홍보-네트워크 채널 구축

- 2000년 이후 현재까지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 정책은 주로 해외사례의 소개와 해석이 주류를 이루었음. 그러나 **지난 10년 국내 많은 지역에서 다양한 성공 및 시행착오의 한국형 사례가 구축되어 왔고, 이러한 사례는 한국에서의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 정책추진의 중요한 활동경험이자 학습, 공유의 자원(자산)이라 할 수 있음.**
- 지금까지는 문화부 사례도 타 부처 홍보물에 소개되는 경우가 더 많았는데, **문화부 차원에서 한국형 사례를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여 종합적으로 소개하고 연계하여 홍보와 더불어 관계자들의 네트워크도 구축할 수 있는 통합적 홍보 채널을 만드는 것이 필요함.**

2.4. 종합

〈그림 19〉 문화부 지역재생 관련 정책제언



VI. 부 록

1.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 정책추진 방안 전문가 집담회 자료집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 정책방안 전문가 집담회

- 일 시 : 2013년 1월 31일(목) 15:00~18:00
- 장 소 : 문화체육관광부(국립고궁박물관 문화정책관 제2회의실)
- 주 관 : 문화체육관광부, (사)문화다움

프 로 그 램

구분	시간	세부주제 및 발제자
session 1	15:00~15:05	인사말
	15:05~15:30	〈발제 1〉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 정책추진 방안 연구 : 추미경 (사)문화다움 상임이사/성공회대 문화대학원 겸임교수
	15:30~15:50	〈발제 2〉 진안군 마을만들기 정책과 주요활동 : 곽동원 진안군청 아토피전략 산업과 마을만들기 담당
	15:50~16:10	〈발제 3〉 공간과 문화자원 활용을 통한 지역재생 방향 : 김효정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16:10~16:30	Break Time
session 2	16:30~16:50	〈발제 1〉 장소성과 지역문화재생 ;관계의 재생, 가치의 재생, 공간의 재생 : 이영범 경기대학교 건축대학원 교수
	16:50~17:10	〈발제 2〉 공간/자원/사람의 연계에 의한 장소기반형 지역재생 전략 : 최정한 공간문화센터 대표
종합토론	17:10~18:00	발제자 전원
	18:00~	저녁식사 및 간담회

발제 1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 정책추진 방안 연구

추미경

(사) 문화다음 상임이사/성공회대 문화대학원 겸임교수

1. 문제제기

- 전 지구적인 지역화(glocalization) 흐름과 맞물려 국내외적으로 지역문화의 중요성이 커지고, **시대적 패러다임이 소프트 파워 중심의 창조사회로 전환하고 있는 글로벌 환경 속에서 국내에서도 2000년을 전후해서 지역문화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본격화되기** 시작함. 문화체육관광부 내에서도 전통지역문화과(현 지역민족문화과)에서 <문화의거리 조성사업(1999~2004)>을 시작으로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하드웨어/소프트/휴먼웨어와 관련된 다양한 차원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음. 그러나 **정책성과가 차별화되지 않고 지속성에서 일정한 한계**를 보여 왔음.
-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뿐만 아니라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 농림수산식품부 등 **여러 중앙 부처, 개별 지자체 등에서 최근에는 문화와 창의성이 중요해진 시대환경 변화에 맞추어 다양한 형태의 “문화”를 통한 지역활성화 정책을 증가하고** 있음.
- 지역 내에서는 여러 중앙 부처와 지자체 차원의 유사한 지역문화 활성화 프로젝트들이 추진되면서 지역의 통합적 관점에서 각 사업들이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부처별, 지자체 정책별 사업 목적에 따라 지역이 대상화되는 경향을 보여 왔음. 결과적으로 **정책성과가 분산되고, 지역문화역량으로 축적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지역문화의 통합**

적 발전보다는 부처별 경쟁, 지역 간 경쟁구도를 가중하는 상황이 지속적으로 만들어지고 있음.

- 이러한 상황을 전략적으로 극복하고 그동안 추진되었던 지역문화정책의 성과를 효과적으로 재조직하기 위해서는 통합적 지역문화의 관점에서 추진할 수 있는 정책 프레임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즉, 한국 지역문화의 현 단계에서 그동안 **양적으로 확산되어 왔던 정책 추진 성과를 질적으로 전환하고, 통합적 지역문화자원으로서의 지속가능성을 구축하기 위한 지역문화정책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임.**

2.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 관련 국내의 정책동향

2.1.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에 대한 맥락 검토

- 글로컬라이제이션 환경변화 속에서 1970년대 후반 이후 전 세계적으로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 정책이 등장, 확산됨. 문화와 예술을 활용한 지역재생 정책은 후기산업사회로의 전환을 상대적으로 빠르게 맞이한 서구 선진국, 즉 서유럽 및 북미 지역에서 1980년대 시작되어 1990년대 유럽지역 전반, 2000년대 아시아 및 세계 모든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음.
- 사실 도시재생, 도시마케팅 개념은 21세기에 온전하게 새롭게 등장한 개념은 아님. 장소/지역의 성장과 쇠퇴의 반복적 흐름 속에서 도시와 지역을 개발하고 재생하고자 하는 정책이 시대에 맞게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음. 21세기 도시재생, 지역재생의 **새로운 것은 창조사회로의 전환이라는 시대 환경과 맞물려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의 관점”이 지역재생에서 핵심 요소 또는 중요한 기법으로 등장했다는 점임.** 또한 세계의 많은 도시들이 주목하고 있고, 미래적 관점에서 진단한 성공적인 도시(지역)재생 정책으로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 프로젝트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임.

2.2. 해외 지역재생 관련 주요 정책동향

1) 국가별, 국제기구별 주요 동향 검토

〈표 60〉 영국 지역재생 정책동향

정책의 동향	시사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ity Challenge - Single Regeneration Budget - New Deal for Communities - Neighbourhood Renewal Fund - Local Strategic Partnership - Regional Development Agency - Local Enterprise Partnershi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80년대 개별사업 단위의 물리적 지역재생 시행 착오를 넘어 1990년 이후 지역 기반의 물리적 환경 개선, 경제개발 및 재구조화, 사회적 결속력, 삶의 질 등을 향한 통합적 지역재생 전략 추진 - 지역기반, 통합지역예산, 10년까지의 장기지원 - 커뮤니티 재생, 여러 주체 간 파트너십 강화 - 강력한 지자체, 근린지역의 강조

〈표 61〉 프랑스 지역재생 정책동향

정책의 동향	시사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ational Program for Regeneration - National Agency for Urban Regeneration - ZAC; Zone d'aménagement concerté (Concerted Development Zone) - ZUP; Zone à Urbaniser en Priorit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 외곽의 무분별한 개발 방지, 사회적·재정적 통합, 에너지의 지속가능성, 시민들의 역량 강화에 주력 - 협의개발지구 등의 제도적 전개를 통해 다목적, 사전 의견수렴 보장, 다수의 참여, 상위 지역계획과의 연계성,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보장

〈표 62〉 미국 지역재생 정책동향

정책의 동향	시사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쇠퇴한 산업도시의 경제재생 지원정책에서 지역의 핵심자산 육성방식으로 변화 - 지역주민참가 프로그램들을 중심으로 “내부”로부터 경제활동의 활성화에 주목함 - 생활 속 주요 공간을 축제의 장이자 상업공간으로 연계하는 “Festive market place” 흐름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 중심의 장소마케팅에서 지역이 가진 핵심자산에 투자하도록 파트너십을 활용한 재생정책으로 변화 - 역사문화적 건축물을 통한 지역재생의 경우, 비교적 가까운 과거의 유산 보존에 대한 관심 증가

〈표 63〉 일본 지역재생 정책동향

정책의 동향	시사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정부 도시재생본부 설치(2001) - 도시재생특별조치법 제정(2002) - 도시재생을 위한 다양한 기금 설립과 운영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0년대 이후 국가정책으로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되기 시작함 - 도시재생정책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하향식, 대도시 중심, 지역주민의 배제, 경제재생 위주, 제2의 개발붐 조성 등 비판적 요소를 수반하게 됨. - 마을만들기 차원의 지역 내적 프로그램이 주민들의 자발적 NPO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운영되기 시작함.

〈표 64〉 싱가포르 지역재생 정책동향

정책의 동향	시사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80~90년대 경기침체 이후 1997년부터 현재까지 국가 차원의 통합적 도시재생 정책으로서 르네상스 시티 프로젝트 (Renaissance City Singapore) 추진 - 예술을 위한 국제도시(Global City for the Arts)를 표방 - 정부 주도의 강력한 공공성을 실현하는 방식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국가 규모와 특성에 맞는 통합적 도시재생정책의 추진 - 장기적 관점에서 일관된 전략을 지속적 추진 - 강변 중심으로 도시재생 전략을 추진하면서 에스플러네이드와 같은 국제적 특성을 강화한 문화공간 아이콘을 적극 활용함

〈표 65〉 EU 유럽문화수도 개요(1985~)

구분	내용
정책목표	“유럽문화의 풍요로움과 다양함, 그리고 공통의 특징을 재조명하는 한편 유럽인 상호간의 심층적인 이해증진을 도모한다.” (1995년 5월 15일, 유럽의회와 유럽이사회가 채택한 ‘결의문 1419호’ 제 1조)
정책개념	유럽문화수도(European Capital of Culture, ECOC) 유럽 연합 가맹국의 도시를 매년 선정하여, 1년간에 걸쳐 집중적으로 각종 문화행사를 전개하는 사업
정책유형	다양한 중장기 혹은 단기 문화활동(유럽문화수도)에 대한 직접적 지원 -EU의 문화활동 지원 프로그램
선정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럽인들이 공유하면서 공헌하고, 영감을 준 예술동향, 스타일을 강조할 것 - EU의 다른 개별국가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문화행사를 촉진하고, 지속적인 문화협력을 이끌며 EU 내에서 이러한 움직임을 배양할 것 - 창조적인 작업을 지원하고 발전시키며, 보다 넓은 범위의 참여, 이동 보장할 것 - EU 시민들의 방문을 장려하고, 가능한 넓은 범위의 관객 접근을 촉진할 것 - 유럽문화와 다른 지역 문화 간의 대화 장려할 것 - 역사적 유산, 도시건축과 도시의 삶의 질을 강화할 것
선정대상	EU 회원국

〈표 66〉 EU 상호문화도시 프로그램 개요(2008~)

구 분	내 용
정책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범도시 중심으로 이민과 통합, 사회적 결속을 화두로 하는 문화 간 접근에 관한 폭넓은 논의와 정책입안을 자극 · 시범도시 대상으로 도시의 다양성을 경영하는 종합적인 상호문화전략 발전 · 유럽의 다른 도시들에게도 영감을 줄 수 있는 활동 추진
정책개념	유럽의 도시 내 문화다양성 경영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하는 프로젝트
정책유형	유럽평의회와 EU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유럽도시개발 프로그램
선정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호문화적 인프라 구축상황 / 도시의 고유한 전통과 경제여건 · 구성원들의 의지와 노력 / 최근 도시에서의 상호문화성 발전 잠재력 · 도시의 문화다양성 장점 이해도/ 이민에 대한 긍정적 시각과 프로그램 참여도
선정대상	유럽평의회 47개국 회원국 중

〈표 67〉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개요(2004~)

구 분	내 용
정책목표	지역 차원에서 문화산업의 창조적, 사회적, 경제적 가능성을 확대하는 것을 돕고 궁극적으로 유네스코가 추구하는 문화다양성 증진을 목적
정책개념	도시 간 비경쟁적 협력, 지식 및 경험 공유, 역량강화, 교육 등을 장려하며 공공 부문과 민간분야의 협력을 강조
정책유형	네트워크형 사업
가입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조도시 지정을 신청한 도시의 해당 주제 분야의 창조산업 전반에 걸친 문화관계자(활동가)를 모두 포함 · 각 도시는 창조성을 육성할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을 지니고 있어야 하며 또한 이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활성화 할 수 있어야 하고, 도시의 창조적 잠재력과 역량은 지역적으로는 지역의 문화 산업을 이끌 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는 국제 시장으로 통하는 통로의 역할을 수행 · 지원 신청서에는 각 장르별 기준에 맞게 작성되어야 하며 추가로 자체의 기준을 제시할 수 있음
가입대상	7개 분야 주제(민속예술, 문학, 미디어 예술, 음악, 음식, 디자인, 영화)에서 선정

2) 해외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 정책동향 분석시사점

가. 개별지역에 대한 물리적 재생에서 지역기반의 통합적 재생으로

- 하드웨어적 접근에서 소프트/휴먼이 결합된 총체적 접근으로의 전환

- 전 세계적으로 지역재생 정책 후기산업사회로 접어들면서 점차 지역의 특성에 기반을 둔 지역사회의 통합적 재생방식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삶의 질 향상이 지역재생에서 중요한 요소로 등장하면서 지역문화환경 및 지역문화콘텐츠, 주민문화역량 등 하드요소뿐만 아니라 소프트/휴먼 요소가 점차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게 됨.

나. 지원제도의 변화; 상향식, 장기지원, 파트너십 강화, 커뮤니티 재생으로의 전환

- 지역재생정책은 하향식 정책추진방식에서 상향식으로 지속적으로 변화해왔으며, 주민의 주체적 개입이나 지역재생에서의 주도성이 점차 강화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음. 점차 하드웨어적 개선이 아닌 지역공동체(local community)의 내부적 재생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으며, 이를 위한 다양한 주체의 파트너십이 지역재생의 추진주체로 인식, 강화되는 경향임.
- 단일 사업, 개별 지역단위가 아닌 종합적 지역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지역재생정책에서는 지원기간이 최소 3년에서 최장 10년까지 지속되는 장기지원구조가 국제적으로 광범위해지고 있으며, 성과도 축적되고 있음. 다만 장기지원제도가 지원의존성을 높이는 역효과를 수반할 수 있어 섬세한 지원방식 설계가 필요함.

다. 지역재생에서 문화적 요소의 증가

- **사회발전에서 문화, 창의성이 중요해진 21세기 패러다임 전환 속에서 지역재생에서 문화를 활용한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초반에는 국제적 아이콘으로서 대형 예술공간, 문화시설의 건립이나 국제문화행사 개최 및 유치로 통한 문화적 이미지와 정체성을 가치적으로 구축하는 효과성에 주목하였음. 그러나 점차 지역의 고유한 문화자원, 역사문화 등을 활용한 지역재생 프로젝트로 전개되고 있으며, 지역주민의 문화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지역 커뮤니티를 재생하고자 하는 전략으로 전환되고 있음.
- 즉, 하나의 프로젝트나 하드웨어 구축으로 도시재생의 흐름을 단숨에 보여주려는 것보다는 도시나 지역에 존재하고 있는 광의적 개념의 유, 무형 문화자원을 도시의 고유성과 특성에 기초해 조직하고 묶어낼 수 있는 **통합적이고 장기적인 접근방식으로서의 도시문화전략(urban cultural strategy)이 중요하게 등장하게 됨.**

라. 문화도시, 창조도시 등 도시 간 국제 경쟁구조의 경향화

- 한편 종합적 문화도시전략으로의 전환은 국제적 차원에서도 **유럽문화도시(수도), 상호문화도시, 창의도시 네트워크 등으로 제도화되면서 도시간 국제 경쟁구조가 점차 강화되는 경향임.** 유럽에서 시작된 흐름은 세계 전역으로 확산되는 추세임.

2.3. 국내 지역재생 관련 주요 정책동향

- 우리나라 지역개발 정책은 1960년대 고도 경제성장기를 시작으로 1980년대 국토 및 지역개발의 성숙기, 지역균형개발정책 추진기를 거쳐 1990년대 지역개발 정책의 안정기를 이루었음. **2000년대 이후로는 세계경제화, 지역화, 지식정보화 등 새로운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사회·경제적 환경개선 등을 포함하는 지역개발정책의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음.**
- 2000년대에 들어 지역이 창조도시로서의 기능과 매력적 장소로서의 의미를 통해 지속가능한 개발정책을 펼치기 시작하였으며, 정부의 접근방식도 과거 하향식 구조에서 점차 상향식으로 변하기 시작함. 지역에서 문화를 통한 발전정책이 활성화 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각 관련 부처별 법령제정 및 구체적 지역개발 정책사업이 추진되기 시작함.

1) 부처별 지역재생 관련 정책동향

- 우리나라 각 부처별 지역재생 관련정책은 2000년대에 이르러서 본격화되기 시작하였음. 그동안의 하드웨어 위주의 사업추진에서 탈피하여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의 문화자원을 활용하고 주민의 주체 역량을 키워 자생적이고 자발적인 지역 활성화 방향으로 이끌어내하고자 하고 있음.
- 최근 수년 사이에는 문화를 활용한 지역재생 정책을 각 부처에서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경향이 커지고 있으며, 유럽 등 해외 주요 국가들에서와 마찬가지로 개별지역과 단위사업을 넘어 지역에 대한 종합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음.

〈표 68〉 국토해양부 지역재생 관련 사업 흐름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하드+소프트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시범사업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		

〈표 69〉 국토해양부 도시재생사업단 개요

구분	내용
비전	삶의 질 향상과 도시경쟁력 확보
목표	G7 국가수준의 도시경쟁력 확보를 위한 도시재생시스템 구축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재생사업(쇠퇴도시 유형별 재생기법 및 지원체제 개발, 사회통합적 주거공동체 재생기술 개발, 구도심 복합용도 공간 재생기술 개발, 도시시스템 녹색재생 기술개발 등 인문 사회과학적 과제와 공학, 기술적 과제 연구) - 한국형 도시재생 패러다임 설정 및 국가 중장기 전략수립, 도시재생 역량강화, 도시재생사업의 파급효과 및 성과분석, 테스트베드 실행 및 실용화 방안 등 핵심과제 지원·종합 수행
최근 프로젝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공동체 자력수복형 도시재생 개발기법/ 도시재생 기반기술 개발 연구 - 지역자력형 테스트베드 사업

〈표 70〉 행정안전부 지역재생 관련 사업 흐름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하드+소프트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시범사업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 집경특화발전지구 (~ '30)		

〈표 71〉 농림수산식품부 지역재생 관련 사업 흐름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하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소프트				농어촌 축제지원사업					
하드+소프트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하드+소프트/휴먼					농어촌 신문화공간 조성사업				

〈표 72〉 2011년 지역발전위원회 창조지역사업 현황

권역	지자체	부처	사업명	사업내용
충청권	대전	국토부	○ (대덕구) 배달강좌제50	■ 평생학습+서비스개선
	충북	농식품부	○ (음성군) 동요 에듀케어 project	■ 전래동요+교육문화
	충남	농식품부	○ (공주시) 사이버시민과 5도2촌 주말도시 융복합 사업	■ 사이버시민+도농교류 (도시농업)
농식품부		○ (서산시) Birds of Korea project	■ 철새 +모바일Application	
호남권	전북	국토부	○ (전주시) 국선생 맵프로젝트	■ 막걸리+전통주 +지역재생
		국토부	○ (전주시) 소리산업 아카이브 구축	■ 소리+음향산업
	전남	농식품부	○ (순천시) 행복24시 정겨운 순천사람들	■ 자원봉사+의료·복지
농식품부		○ (순천시) 문화로 가꾸는 경관농업	■ 논+캠버스+순천만 +철새	
동남권	경남	농식품부	○ (고성군) 공통특화자원화-4D 입체	■ 공통+영상 →창조자원화
		농식품부	○ (남해군) 생생테마랜드 - 에너지 자족 마을	■ 환경집적시설+공공디자인 →창조자원화
		농식품부	○ (산청군) 동의보감촌 문화콘텐츠 개발	■ 동의보감 →창조자원화
대경권	경북	농식품부	○ (경산시) 로터스 floating 아일랜드 가든	■ 연꽃+수상식물원 →창조자원
		농식품부	○ (예천군) 꿀벌 우수 종봉선발 사업	■ 꿀벌 → 창조자원화
강원	강원	농식품부	○ (정선군) 아리랑의 고향 정선 조성	■ 정선아리랑 →창조자원화
총계			12개 시·군·구, 13개 사업	

- 창조지역사업은 그동안 지역정책이 시설물 건립 위주의 단기적, 관 주도적 사업의 실패로 인하여 지자체 재정 부담이 심화되고, 주민복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행함을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향후 지방재정 악화 예상 및 시민사회의 거버넌스 요구 등을 고려한 지역정책으로서 대통령산하 자문기구기인 지역발전위원회 사업으로 추진하게 됨.
- 창조지역사업은 2011년, 2012년 추진되고 있는데, 진행된 창조지역사업과 관련하여 문화부, 농식품부 추천으로 문화기획·지역·농촌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된 컨설팅단이 구성되어 현장 모니터링 및 컨설팅

팅 프로그램이 추진되고 있음. 지역사업에 대한 컨설팅단 운영모델은 지역민족문화과에서 추진한 <문전성시 컨설팅단> 및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컨설팅위원회> 성과를 적극적으로 수용한 사례임.

2) 부처별 지역재생 관련 정책동향 분석시사점

1) 2000년대 이후 개별단위 지역개발에서 통합적 지역재생 정책으로 전환

- 한국에서 지역정책은 한국 현대사의 굴곡과 맥락을 같이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국제환경 변화에 대응하면서 급속하게 변화와 발전, 시행착오의 과정을 겪고 있음. 1980년대까지는 경제성장 중심의 물리적 개발과 환경개선에 기반을 둔 지역정책이 지배적이었지만 1990년대는 지역분권 및 지역주민 삶의 질 패러다임이 세계화 경향과 연동되어 추진되기 시작하였음. 2000년대가 되면서 한국도 세계의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지역 고유의 특성에 기반을 둔 통합적 관점에서 지역재생 정책이 전국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함.

2) 2007년 이후 여러 중앙부처에서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 정책에 주목함

- 지역을 정책대상으로 삼고 있는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 농림수산업부 등 여러 중앙부처에서 지역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전략으로 2007년 이후부터 “문화”를 매개한 지역재생 정책에 주목하기 시작했음. 이전에는 지역재생정책에서 문화는 거의 비중이 없거나 일부였다면 점차 중요 요소로 인식되고 있음.
- 이는 창조사회로의 전환 등 지역을 둘러싼 패러다임이나 지역여건이 변화하면서 지역정책을 추진하는 관점과 방법이 매우 다양해졌고, 문화산업 및 창조경제에 대한 비전, 삶의 질 고양 및 사회통합 등과 관련해서 부처별 정책기조에 문화 관련 정책 프로그램이 반영되고 있는 것이라 봄.

3) 하드/소프트/휴먼을 강화하는 종합적 시도가 있지만 실체가 허약함

- 최근 추진되는 지역재생 관련 여러 가지 정책사업은 시대적 변화에 부합하여 과거와 같이 하드웨어적 개선에 머물고 있지 않으며, 대체로 소프트/휴먼 요소를 종합적으로 연계 시도하고 있음. 국토해양부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시범사업>, 행정안전부의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참살고싶은 마을가꾸기>, 농림수산식품부의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농어촌신문화공간 조성사업> 등이 모두 그러함.
- 그러나 그동안 지역에서 주류였던 물리적 개선위주의 지역개발의 관행이 잘 해결되지 않으며, 지역문화를 활용한 소프트 콘텐츠 개발에서도 창의적 기획보다는 전형적이고 획일적인 모델로 진행되고, 지역주민들은 아직도 수동적 시혜 대상에서 참여와 주체로서 진화하고 있지는 않음. 형식적 진화에 비해 내용적 실체는 허약함.

4) 지역재생의 접근방식에서 연계와 교류, 운영구조의 혁신이 필요

- 지역재생은 개별 지역이나 프로젝트 단위를 넘어 지역의 종합적 관점에서 활성화하고자하는 정책이므로 지역의 통합적 관점에 입각한 접근방식이 필요함. 즉, 지역의 필요에 따라 정책과 지원을 연계하고 교류함으로써 지역의 자원, 공간, 사람을 지역재생의 핵심 요소를 자리매김 하는 “과정”이 필요함.
- 지역재생 사업의 운영구조에서도 한국 지역상황에 실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전반적 혁신이 필요함. 하드-소프트-휴먼 요소에 대한 형식적 접근이 아니라 실체를 가지고 지역에 맞게 구축되도록 추진과정을 섬세하게 돕는 정책운영이 필요함.

3. 문화부 내 지역재생 관련정책 추진현황 분석

3.1. 지역민족문화과 지역재생 관련정책 추진현황

〈표 73〉 지역민족문화과 지역문화정책 흐름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하드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생활친화적 문화공간 조성									
소프트	지방대 활용 지역문화 컨설팅									
	지방문화원 중심 지역문화프로그램									
휴먼	지역문화아카데미 사업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시범사업									
하드+소프트	문화역사 마을 가꾸기	디자인 공간 문화과 이관								
		문화도시조성사업(경주, 전주, 부여·공주)								
하드+소프트+휴먼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여가정책과에 서 이관	문화이모작 사업	

3.2. 디자인공간문화과 지역재생 관련정책 추진현황

〈표 74〉 디자인공간문화과 공간문화정책 흐름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하드+소프트+휴먼	공공 디자인	공공디자인 시범도시 조성								
									문화디자인 프로젝트(간이역)	
소프트	문화역사마을 가꾸기									
하드+소프트	공간화 조성 및 문화공간	근대문화 유산을 활용한 구(舊)서울역사복합문화공간조성								
								문화역 서울284 개관식	문화역 서울284 운영	
		당인리 화력발전소의 문화예술창작벨트 조성								
하드+소프트+휴먼	지역근대산업유산을 활용한 예술창작벨트 조성									
	생활공간 문화적 개선사업 (2008년부터 문화로 행복한 학교 만들기 사업으로 중점)									

3.3. 정책사업별 현황

1) 문화역사마을가꾸기 조성사업(2002~)

〈표 75〉 문화역사마을가꾸기 조성사업 개요

구분	내용
사업목적	마을의 문화·역사적 소재를 발굴·육성, 관광자원화하여 문화와 환경이 아름답게 조화된 자생력 있는 마을 조성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량위주의 건축, 마을정비 사업보다는 문화·역사·환경·소득이 조화된 장기적 마을발전 전략 수립 운영 - 지역관광자원 개발 및 관광객 증대를 위한 마을별 특화된 문화·역사 마을 가꾸기 사업 전개로 경관개선, 상징물 설치, 관광상품 개발, 역사마을체험 프로그램 및 마을운영 프로그램 개발 등 - 일률적 개발방식을 지양하고 마을의 특성을 고려한 특화된 마을 조성
사업유형	마을의 문화 역사적 환경을 활용한 마을 콘텐츠 개발
사업대상	전국 9개도의 각 도에 1개 마을 원칙
예산지원	총 240억원
추진현황	1차년도(2003) - 장수, 태안, 해남, 합천, 고양 사업 진행 2차년도(2004) - 16곳 추가 총 21개 지역 사업 진행 3차년도(2005) - 2단계 사업 진행한 21곳 중 우수한 3개 지역 선정 진행
담당부서	디자인공간문화과

2) 문화도시 조성사업(2005~)

〈표 76〉 지역거점 문화도시 조성사업 개요

	경주 역사문화도시	전주 전통문화도시	공주·부여 백제역사문화도시	부산 영상문화도시
사업비전	“천년의 역사와 미래가 공존하는 세계적인 역사문화도시, 경주”	“세계와 소통하는 가장 한국적인 도시, 전주”	“역사·자연·사람이 미래를 만드는 살맛나는 백제왕도, 공주·부여”	“아시아 영상허브”
사업목적	· 천년고도 경주를 문화유산과 관광이 조화되는 도시로 재창조, 세계적인 관광문화도시로 조성	· 전주의 풍부한 전통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문화도시 창출	· 백제의 고도인 공주와 부여의 역사와 문화자원을 활용한 역사문화도시조성 · 역사적 정체성 확립과 고도경관 형성	· 아시아 시장을 지향 · 산업+문화 동시육성 · 클러스터 구성요소 구비
사업기간	2006 ~ 2035년 (30년간)	2007 ~ 2026 (20년간)	2009 ~ 2030 (22년간)	2005 ~ 2014 (10년간)

※ 부산영상문화도시의 사업기간은 부산영상문화도시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 기준 자료이며, 2011년 사업이 종료되었음.

3) 공공디자인 시범도시 조성사업(2005~)

〈표 77〉 공공디자인 시범도시 조성사업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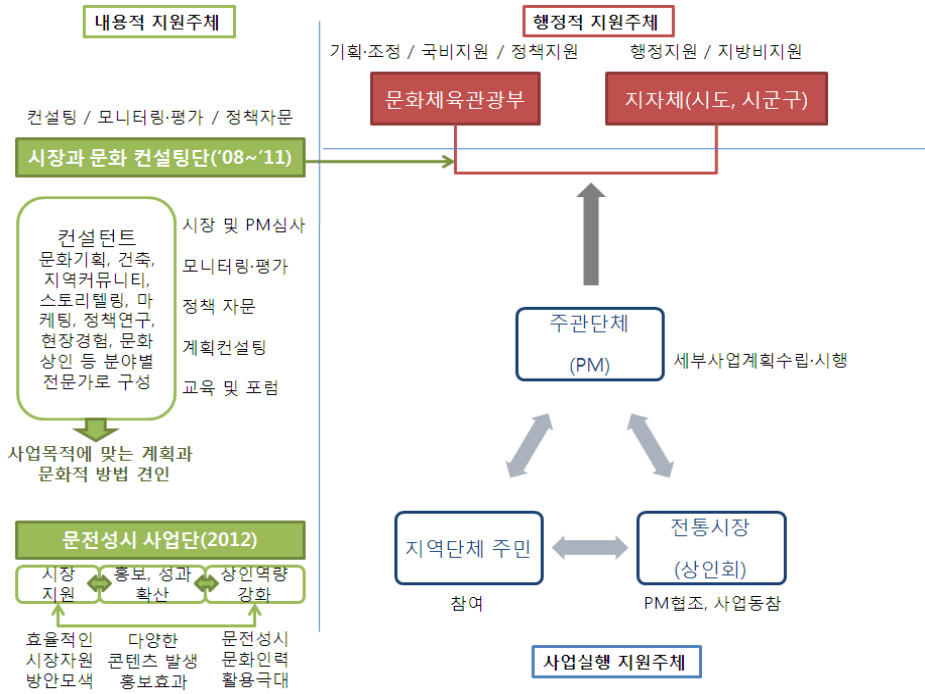
구 분	내용
사업목적	도시 재생의 시범 모델로서 도시이미지 구축에 지역의 테마, 지역주민들의 참여로 발굴하는 문화 콘텐츠 구축, 지역민들이 중심이 된 문화 커뮤니티 활성화와 역량 향상에 중점을 둠
사업내용	가로환경 개선, 지역 고유의 역사성과 문화적 정체성을 살리는 공간사업
사업유형	공간 디자인 개선을 통한 역사 문화적 환경 조성
사업대상	선정지역 주민
예산지원	마스터플랜 수립 및 기본실시설계 사업비 1억 5천만원 (전년도 배정) 사업별 3~5억원 차등 지원 (총 사업비의 50% 사업년도 배정)
추진현황	9개 지역 조성 (부산 광복로 가로환경개선사업, 영등포 공공디자인 시범거리 조성사업, 대구 동성로 공공디자인 개선사업, 안양 만안구 공공디자인 시범도시조성사업, 양평 한강아트로드조성사업, 익산 아름다운 금강 변포구마을 가꾸기 사업, 안동 인도교 및 문화체육단지 조성사업, 부산 진구 서면 특화거리 조성사업)
담당부서	디자인공간문화과

4) 생활공간 문화적 개선사업(문화로 행복한 학교 만들기/2006~)

〈표 78〉 생활공간 문화적 개선사업 개요

구 분	내용
사업목적	구조·형태·디자인·질감 등의 변화를 통해 공간의 심미적 쾌적성 제고 또는 지역공동체 구성원 간 배려와 소통이 원활한 공간으로의 개선
사업내용	계획 중인 지자체 내 개선 사업을 대상으로 심사, 선정하여 해당 지자체에 지원
사업유형	공모사업
사업대상	지자체내 일정 구역에 대한 생활공간 문화적 개선사업
예산지원	2006년 : 10억원 2007년 : 9억원
추진현황	2006년 : 9개 2007년 : 17개 2008년부터 학교 문화공간 조성사업을 중점
담당부서	디자인공간문화과

(그림 20) 문전성시 추진체계



6) 지역근대산업유산 활용 예술창작벨트 조성사업(2008~)

〈표 81〉 지역근대산업유산 활용 예술창작벨트 조성사업 개요

구분	내용
사업목적	· 산업시대의 역사성과 지역의 정체성 보존 · 지역주민의 예술창작 및 문화향유 기반 확대 · 문화·예술·관광의 랜드마크 조성을 통한 지역재생
사업내용	리모델링 등 물리적 문화 환경 조성과 지역별로 특화된 문화예술프로그램 운영
사업유형	국정과제
사업대상	시범사업 대상지(군산, 신안, 포천, 대구, 아산 근대유산)
예산지원	400억원
추진현황	총 5개 지역 군산 : 조선은행, 나가사키18은행, 미즈상사, 대한통운 창고 리모델링 신안 : 염전체험장, 염생식물관찰원, 염전전망대 소금창고 리모델링, 소금공원, 염전경관 조성 포천 : 교육전시센터 조성, 문화예술 카페 리모델링, 관람·편의시설 확충 대구 : KT&G 리모델링, 미디어테크(문화예술자료), 예술창작 프로그램 운영 아산 : 폐역사, 폐선로 경관정비, 농협창고(2동) 리모델링
담당부서	디자인공간문화과

7)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시범사업⁹⁴⁾(2009~)

〈표 82〉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시범사업 개요

구분	내용
사업목적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문화예술활동의 주체가 되어 공동체를 형성 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국민들의 문화향수권을 보다 구체적으로 신장하고 지역공동체를 강화시키기 위함
사업내용	· 문화소외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문화예술활동을 매개로 한 공동체 활성화 지원 · 대상지역에 기반을 두고 활동하는 문화예술 관련 단체/기관을 대상으로 활동비 및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사업유형	공동체 예술형, 공동체 문화동아리형, 생활문화네트워크형, 문화예술교육형, 기타
사업대상	문화소외지역 주민 (서민단독주택밀집지역, 농산어촌 등)
예산지원	2011년: 1,200백만원(복권기금)
추진현황	2009년:18개 지역 / 2010년:19개 지역 / 2011년:15개 지역 / 2012년:24개 지역
담당부서	지역민족문화과(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문화원연합회지원주관)

〈그림 21〉 2009년 ~ 2011년 생문공 시범사업 정책개념 및 사업유형



94) 추미경, 『2011 생활문화공동체만들기 시범사업 평가건설링 연구』, 한국문화원연합회, 2011.

8) 마을미술 프로젝트(2009~)

〈표 83〉 마을미술 프로젝트 사업 개요

구 분	내용
사업목적	· 지역의 정체성과 특성을 기반으로 한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민의 예술 향유 및 지역활성화에 기여 · 역사, 문화, 생태, 정서적으로 분명한 특색으로 가진 지역의 거점과 공간을 문화예술 공간으로 재창조
사업내용	생활공간 공공미술로 가구기 사업으로 지리, 역사, 생태, 문화적 가치가 잠재되어 있는 마을과 거점시설을 공공미술을 통해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조성
사업유형	행복프로젝트 / 기쁨두배 프로젝트 / 예술의 정원
사업대상	공모를 통해 선정된 마을
예산지원	연차별 약 20~23억 원 지원
추진현황	2009년 : 21개 2010년 : 15개 2011년 : 10개 2012년 : 11개
담당부서	예술정책과

9) 문화이모작 사업(2010~)

〈표 84〉 문화이모작 사업 개요

구 분	내용
사업목적	· 지역 내 문화역량을 강화하고 전문 문화인력 양성과 자발적인 기획사업 추진을 통해 지속가능한 마을 문화심기 모델 실현 및 전문 문화인력 활용성 제고 · 농산어촌 마을 문화심기 정책에 따른 현장 기반의 사업추진과정을 실행할 수 있도록 체계적·입체적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궁극적으로 정책현장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지역의 문화역량 강화
사업내용	· 기초와 심화교육과정 이수자에 한하여 사업제안서를 제출, 선정하여 사업이 교육의 실습이 될 수 있게 함 · 사업선정 마을에 컨설팅을 지원하고 최종적으로 평가를 실시하여 향후 마을자체 문화적 역량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함 · 농어촌마을 주민이 주요 대상이 되는 문화사업이어야 함
사업유형	지역 컨설팅, 교육, 실습형 사업
사업대상	· 농산어촌 체험마을 리더 : 마을대표, 추진위원장, 부녀회장 등 · 농산어촌 마을 관련 기관 담당자 : 지자체 공무원, 읍면동사무소, 농협 등의 기관 근무자, 문화재단 근무자 등 · 농산어촌에 거주 또는 귀촌·귀농 희망자 : 문화예술인, 개인사업자 등 · 농산어촌 지역 문화사업에 참여하고자하는 단체 및 개인 · 기타 농산어촌 지역 외 문화이모작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예산지원	2010년 : 14억 2011년 : 4억 2012년 : 2억
추진현황	2010년 : 2개 (영덕군, 강진군) 2011년 : 교육 사업(총 200명) 2012년 : 13개 (평창군, 춘천시(3), 홍성군, 제천시, 청주시, 익산시(2), 완주군, 칠곡군, 부산 금정구, 부산 기장군)
담당부서	문화체육관광부 여가정책과/농림수산식품부 농어촌사회과

3.4. 문화부 내 지역재생 관련정책 분석시사점

1) 하드웨어 중심 지역재생 방식의 재현, 개별적 정책성과의 한계

- 문화부의 지역재생 정책에서도 하드웨어 중심 방식이 재현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1999년 시작된 ‘문화의 거리 조성’ 사업, ‘문화역사 마을 가꾸기 사업’, ‘생활 친화적 문화공간 조성’ ‘디자인문화도시 시범사업’ 등의 하드웨어 중심 조성사업이 최근까지 주를 이루고 있음. 또한 추진한 사업들은 법적 지원방안, 콘텐츠 지표구성 등에 있어 소프트 인프라 측면이 구체적으로 설정되어있지 않고 오히려 하드웨어 인프라 조성에 집중되어 비효율적인 측면이 발생함.
- 최근 문전성시, 생활문화공동체만들기, 문화이모작 사업 등에서 이러한 경향을 실천적으로 극복하고자 하는 정책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문화와 지역재생이라는 지속가능한 지역문화의 내재적 성과를 구축되는 장치를 가지고 있지 않음.

2) 도시발전전략으로서 거대담론(메가 이벤트)적인 지역 재생 전략 접근

- 문화부에서 주도한 문화도시, 디자인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영향으로 2000년대에 들어 전국 수많은 도시가 문화도시조성사업 전략을 경쟁적으로 추진해 왔음. 이러한 문화도시 조성사업은 문화적 자산의 발굴과 문화적 역량 제고를 그 목표로 하고 있음. 하지만 이들 사업들은 물리적 시설 확충 중심의 도시계획 방식과는 구분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음. 하지만 보다 큰 규모의 메가 이벤트적인 문화도시전략에 치중함으로써 여전히 지역재생이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 도시 특성화 사업의 성격이 강한 한계를 지니고 있음.
- 이러한 메가 이벤트적인 문화도시조성사업은 물리적 프로그램과 비물리적 프로그램을 연계하는 방안을 통해 지역재생, 경제재생, 문화

재생, 환경재생, 복지재생 등으로 영역화하고 구체화함으로써 다양한 주체가 자생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사회적 문화적 지역재생이 이루어지는 사회적 가치 실현에 한계적임.

3) 획일적 지역문화 정책의 경로 의존성 심화

- 서구를 중심으로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 정책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각광을 받게 되자 국내에서 한국적 토양과는 무관하게 표준화되고 획일적인 해외 사례 적용한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음. 즉 **한국에서 추진되고 있는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 정책은 무분별한 해외의 지역재생 사례를 답습하는 '경로의존성(path dependency)'의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함.**
- 즉 지역의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시도하고 있는 많은 사업의 결과 실재는 지역의 특수성을 상쇄하면서 다른 지역과 동일화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해외의 지역재생 정책이 국내 도시의 지역재생 정책으로 보편화되고, 제도로 표준화됨으로서 지역재생의 실질적인 모습은 기존 도시정비방식과의 변별이 뚜렷하지 않은 한계를 보이고 있음(조명래, 2011).

4) 사람/공간/자원의 어우러짐 없는 지역재생의 반복

- 지역은 장소와 생활이 결합된 의미로서의 장소와 공동체가 결합된 의미를 지니며, 사회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내부의 지속가능한 발전가능성을 확보해야만 하는 생활공간환경 단위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이영범, 2009) 하지만 이러한 지역에 대한 개발과 재생 전략은 그동안 문화 없는 지역 재생을 반복적으로 추진하고, 지역의 주체인 주민 자발적 참여가 제한되고, 공동성 또는 공공성에 기반을 둔 재생의 형태를 가지고 추진하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음.

-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장소와 공동체가 결합된 지역의 재생을 추진하고, 지역의 인적 물적 자원, 시설, 프로그램, 사회적 관계, 제도의 형태와 방식으로 도시 공간 내에 다양한 자원을 구축하고 장소화된 ‘문화 공동체’를 생성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사람/공간/자원이 어울릴 수 있는 지역재생을 통해 궁극적으로 ‘사회 문화적 재생’이 이뤄지고 창조적 사회적 관계망의 재생까지 확장 할 수 있는 지역재생의 토대 마련에 주안점을 둘 필요가 있음.

3.5. 문화부 내 지역재생 관련정책 향후 추진전략 수립 시사점

1) 통합적 관점의 정부 지역재생 정책 수립 및 조정

-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의 방향은 사업방향은 크게 **정부 부처의 통합적인 관점에서 <문화를 통한 지역 재생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하여 **정부 부처의 지역재생 관련 담당자들의 협의기반을 마련하고, 지역재생 정책을 통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함.**
- 특히 동일한 지역에 광역단위사업, 도시단위사업, 소규모 단위 사업이 중복 운영되고, 서로 이질적인 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조정과 통합을 할 필요가 있음. **각 정부 부처가 참여하여 통합적 관점에서 지역재생 정책을 추진하고, 사업을 조정할 수 있는 추진체계가 필요함.**
- 이를 통해 각 부처별로 진행하는 권역사업, 도시사업, 장소단위사업의 **개념과 방향이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기준과 가이드를 마련하고, 문화관광체육부에서 추진해야 하는 영역을 중심으로 통합적이고 일관성 있는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 정책을 도출할 필요**가 있음.

2) 지역주민과 문화예술인이 참여하는 지역재생 추진

- 지역문화의 생산자이자 주체자로서 지역주민과 지역 문화예술가들의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지역의 역사적 유산과 현대 지역민의 문화적 감성을 포괄한 지역정체성 구축과 문화발전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함.
- 또한 최근의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은 문화예술, 생태, 복지, 비즈니스, 주거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이 복합적으로 추진됨. 따라서 사업의 참여 주체로서 지역주민, 문화예술인이 보다 다양한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다면적으로 협력하는 지역재생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특히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커뮤니티 시설을 주민협의체가 자주적으로 관리 운영함으로써 공공부문과 대등한 파트너십을 이룰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이에 적합한 권한을 부여할 수 있어야 할 필요가 있음.

3) 소프트웨어와 휴먼웨어 통합추진에서의 실체 확보

- 그동안 정부 부처의 지역재생 정책의 방향이 하드웨어 중심에서 소프트웨어와 휴먼웨어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는 있지만 정책과정 및 지역현장에서 실체가 허약한 편임. 때문에 형식적 구조는 갖추었지만 실체가 공허한 상황이 갈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공간적 재생, 생활적 재생, 문화적 재생이 일정 부분 상호간에 중첩되며 밀접한 관련을 가진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즉 지역의 공간문화를 살리는 콘텐츠는 지역의 쇠락한 공간구조(하드웨어)를 재생시키는 소프트웨어가 되고, 이러한 지역의 유무형의 자원을 주민이 직접 발굴 활용하고, 때로는 지역 주민이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재생산하는 일련의 활동(휴먼웨어)을 통해 지역의 고유한 정체성이 회복되는 선순환의 재생전략을 취할 필요가 있음.

4.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 정책 및 추진체계(안)

4.1.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 정책추진 방향

1) 창조사회로의 전환 및 사회경제적 변화를 고려한 창조적 지역사회 기반 구축

- **첫 번째, 창조사회(creative society)로의 시대적 전환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함.**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은 이러한 창조사회로의 전환을 지역 차원에서 준비할 수 있는 창조적 지역사회기반을 만들어가는데 기여하는 것이어야 할 것임. 즉, **문화, 지식기반, 창의력을 구축하는 사업이 지역사회와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공동체, 문화정체성, 지역경제, 환경 등 지역을 구성하는 전반의 요소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지역공동체 연계/밀착형이어야 함.**
- **두 번째, 한국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회경제적 변화를 반영한 미래의 관점에서 지역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함.** 한국사회는 최근 저출산에 따른 낮은 인구성장률로 인한 인구저성장과 고령화, 1인 가구의 증가 등으로 인해 연령계층별 도시시설 수요와 활용도에 변화가 수반될 것임. 새로운 도시개발 수요보다는 쇠퇴가 진행되는 구도심을 중심으로 도시재생정책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음.
- 두 가지 요소를 종합하면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 정책”은 **창조사회로의 전환에 발맞추어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하는 “문화를 통한 도시재생 기법”으로서 고유한 가치(브랜드)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를 위해서는 **창의성의 기반으로서 예술, 문화**

를 적극 활용하되, 새로운 개발과 조성보다는 기존의 콘텐츠, 공간, 사람 자원의 가치를 예술과 문화를 통해 새롭게 발견하고 지역사회의 창조적 기반으로 연계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

2) 지역 고유의 문화콘텐츠, 생활문화를 가치화하는 지역문화창조 전략

- 창조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창조산업의 관점에서 지역재생을 위한 ‘문화’와 ‘예술’의 연계방식은 단순한 경제적 발전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민들의 유대감 형성 및 공동체 구축, 지역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확립해가는 전반적 과정과 결합되면서 지역의 창조적 경제를 구축하는 특성을 가짐.⁹⁵⁾
- **지역문화 활성화 관련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어 왔지만 지역문화자원을 창조경제와 연계된 문화콘텐츠로서 접근하는 관점이 미약했음.** 지역관광축제 활성화, 관광산업 관련 단위 정책사업 등으로 추진되거나 아예 도시 차원의 문화도시 전략으로 포괄적으로 접근됨으로써 지역의 고유한 문화자원, 생활문화 등을 지역 고유한 문화콘텐츠로 가치전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음.
-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 정책에서는 이러한 제한된 시각을 넘어 지역에 존재하고 있는 유형, 무형의 다양한 문화자원을 창조경제와 연동할 수 있는 문화콘텐츠⁹⁶⁾로 구축해가고, 지역사회의 일상적 삶과 직접적으로 연동되는 생활문화를 가치화하는 지역문화창조 전략으로 구축해가는 것이 필요함.** 즉, 지금까지 지역문화는 문화자원을 발굴하고, 지역문화정체성의 대상화 경향이 컸지만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 정책은 지역과 문화를 종합적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창조의 과정, 활동과 관련한 역동적 개념으로 접근하는 “지역문화창조” 전략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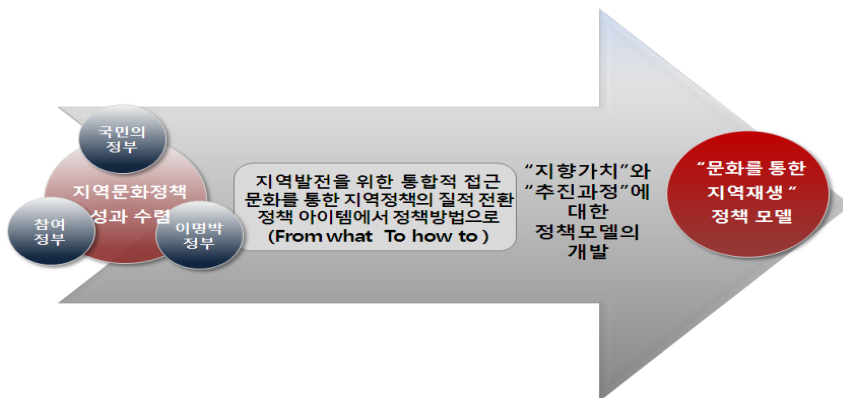
95) 추미경 외, 『기초예술과 문화산업의 연계방안 연구』, 2008,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부분적으로 인용.

96) 여기서 문화콘텐츠는 디지털 정보화된 문화자원으로 협소하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경제의 구조 속에서 적절하게 유형, 무형의 가치로 전환되어 자산화 되는 포괄적 개념으로 사용함.

3) 지역문화창조의 질적 전환을 위한 "How To" 정책 틀 마련

- 국토해양부를 중심으로 전국 도시재생에 관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농림수산물식품 등 여러 부처에서도 내용적으로 연계성이 높은 유사 프로젝트들이 최근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음. 특히, 창조사회로의 전환과 더불어 최근에는 도시재생에서 문화, 지역의 고유한 자산을 활용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음.
- 그러나 이중에서도 **지역 고유의 문화콘텐츠를 활용하는 접근방식은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민족문화과 고유의 업무이며, 과 설립의 근간**이기도 함.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 정책"은 이러한 맥락에서 그동안 지역민족문화과에서 추진하여 성과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통합적 지역문화정책의 성과로 모아내기 어려웠던 개별적 정책성과를 종합하고 가치화하는 플랫폼 정책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

〈그림 22〉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 정책 틀



- 따라서,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 정책개념 및 추진전략은 지금까지 지역민족문화과에서 추진해왔던 사업을 성과가 드러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향후 새롭게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사업의 지향가치와

추진과정을 창조적으로 재구성하고 만들어가는 방향으로 정립하는 것이 필요함. 때문에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 정책은 새로운 정책 아이템(what)에 대한 접근이 아니라 정책 지향가치에 따른 추진과정과 방법(how to)을 중심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

4.2.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 정책 제안

- 지역문화창조 클러스터링 vs 지역문화창조 파트너십(가칭)

1) 제안배경

- 창조사회의 핵심 동력으로 그 개념이 구축되고 있는 창조산업은 예술과 문화사업이 결합된 융합적 개념으로 양자의 영역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새로운 영역까지 포괄해서 창의성과 산업을 결합시키고 있음. 창조산업은 과거처럼 단지 산업으로서 단순히 소득을 창출하는 수단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창의성이 발현되는 토대를 제공하여 노동과 여가를 접목시켜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고용을 증진시키며, 부가가치 생성에 일조하고, 나아가 삶의 가치와 태도를 변모시키는 복합적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음.
- 때문에 창조적 경제를 구축하기 위한 예술과 지역개발(재생)의 연계는 구체적인 하나의 결과물 자체보다는 지속적인 과정 자체를 중요하게 다룸. 또 지역의 발전을 진단하는 정형적인 틀에 갇히는 것보다는 지역의 활성화, 지역민 삶의 질적 발전을 이루는 데 무엇이 어떻게 창조적으로 다루었는지에 대한 새로운 관점의 특징들을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함.
- 지역문화 현장에서는 이러한 창조경제 환경으로의 변화가 실질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시행되고 있는 지역재생 정책에서 예술과 문화를 중심에 둔 지역재생 사업이 부처별로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는 경우가 있는 한편 성과중심의 정책추진 및 정책적 연속성

이 보장되지 못하는 관계로 지역에서는 그 성과가 분산되고 있는 상황임.

- 또한 지방자치제도 실행 15년, 지역문화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지 10년이 넘어서면서 지역 단위에서는 지역문화 관련 많은 양적인 성장과 변화, 지역문화를 구성하는 사람, 공간, 자원 등의 측면에서 내발적 진화과정이 수반되었음. 때문에 이제는 지역에 새로운 무엇인가를 지속적으로 만들어내는 방향보다는 지역에 이미 존재하는 고유한 지역문화자원 및 정책성과를 가치롭게 묶어내고 연계함으로써 지역의 창조경제로 클러스터링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임.

2) 정책개념 정립

가. 창조경제 비전 속에서 지역문화의 창조적 재구성

- < 지역문화창조 클러스터링/파트너십(가칭) >의 개념은 예술가들의 창작활동 및 사회적 생산활동 클러스터의 기능에 기초하여 지역문화자원으로 확장하는 개념임. 예술가 창작활동 중심의 문화 클러스터에서 그 범위를 지역문화콘텐츠로 확장하여 지역에 고유한 문화자원, 생활문화 등을 창출하고 생산하는 지역문화 창조활동 중심의 문화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개념임.
- < 지역문화창조 클러스터링/파트너십(가칭) >은 그동안 그 가치와 정책 성과가 분산되어 있거나 개별화 되어 있는 지역문화자원을 창조사회로의 전환에 맞추어 지역마다의 개성과 규모에 맞는 다양한 창조경제의 비전 속에서 창조적으로 재구성하는 정책 개념임. 장소나 공간적 개념의 ‘클러스터’가 아닌 과정, 네트워크 성격을 강조한 ‘지역문화창조 클러스터링/파트너십’으로 사용하는 것이 필요함.

2) 지역문화자원(자원, 공간, 사람)의 창조적 역음

- < 지역문화창조 클러스터링/파트너십(가칭) >은 지역문화자원을 크게 **자원, 공간, 사람**으로 구분하여 세 영역에서의 자원을 창조적으로 묶어내고 연계하고 소통하여 창조적 지역문화로 엮어냄.
- 그동안 유형, 무형의 지역문화자원에 대한 가치의 발굴, 지역문화자원으로의 전환 관련 수많은 작업들이 진행되었지만 창조경제의 구조속에서 구체적 가치로 구현되는 지역문화콘텐츠로 정립되지 않는 상황. 따라서 **다양한 지역문화자원을 지역사회, 지역경제, 지역공동체와 연계할 수 있는 지역 고유의 문화콘텐츠로 등록, 체계화하여 클러스터링** 하도록 함.
- **공간**은 지역에 조성된 다양한 유형의 문화공간, 예술공간을 비롯해 유희시설로 존재하는 일상공간이나 문화유적 등을 모두 포함해서 **지역공동체의 생활속문화공간으로 활용하고 연계할 수 있는 공간전략 개념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사람**은 새롭게 인력을 양성하거나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양한 유형의 지역문화인력을 지역문화창조 비전 속에서 네트워킹, 협업, 역량강화 등을 돕는 지역문화창조인력 네트워크 개념으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함.

발제 2

진안군의 마을만들기 정책과 주요활동

-주민 주도 상향식 마을만들기의 10년 성과와 과제-

곽동원

진안군청 아토피전략 산업과 마을만들기 담당

- 농업·농촌은 식량안보의 시대를 대비해 우리가 지켜야 할 자존이며 생명과 같은 것으로 공적인 영역으로 접근해야 함
- 마을만들기사업은 몰락하고 있는 농촌을 재생시키기 위한 대안으로 핵심은 마을공동체를 복원에 있음
- 마을공동체 복원을 위해서는 각 지역 각 마을의 특색을 살려 고유문화를 되살리거나 새로운 문화의 창조하는 것이 바람직함
- 지역 주민을 문화의 주체로 내세워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해 살기 좋은 마을, 살고 싶은 마을을 만들어 지속가능한 농촌을 만드는데 기여

1. 살기 좋고 살고 싶은 마을만들기와 진안군

□ 농촌 마을만들기의 의미

- 마을만들기는 **농촌살리기의 핵심 사업**
 - 풀뿌리 마을 공동체 복원과 주민 역량 강화를 위한 훈련장
- 마을만들기는 **녹색성장 산업**
 - 자연친화적이고 순환경제가 살아있는 농촌 마을 복원의 출발점
- 마을만들기는 **종합적 농촌개발사업**
 - 마을을 기반으로 경제와 문화, 복지, 환경 등 종합적 개발 사업

- 마을만들기는 **거버넌스(민관협치)** 시스템
 - 마을에서 출발하여 행정과 민간의 ‘긴장된 균형관계’ 구축 계기
 - ==> 당장의 성과는 작지만, 농촌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

□ 진안군과 마을만들기 성과

- 진안군은 **주민주도 상향식 마을만들기의 발상지**
 - 2003년 으뜸마을가꾸기, 2008년 그린빌리지 사업 등 10년 역사
- 진안군은 **마을만들기의 백화점**
 - 다양한 영역(체험마을, 귀농귀촌, 사회적 기업 등)의 시도가 집중
- 진안군에는 **현장 경험이 풍부한 인제가 집중**
 - 마을만들기 주민 지도자, 계약직 공무원, 귀농귀촌인 등
- 진안군은 **마을만들기의 전국적, 국제적 선진지로 정착 중**
 - 연간 150팀, 2,500명 이상 방문
 - ==> 진안군은 농촌 마을만들기의 성과와 과제를 가장 잘 보여주는 곳

2. 진안군 마을만들기 사업의 역사와 시스템

□ 주민 주도 상향식 마을만들기 사업의 도입과 정착

- 주민 주도 상향식의 농촌개발을 확산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2001년부터 도입된 으뜸마을가꾸기 사업이 출발점
 - ‘주민 주도 상향식’의 내발적 발전론 원칙을 견지하며 도시민 인재 유치(귀농귀촌) 사업으로 보완하는 방법론 모색
- 2007년 2월, 전국 농촌 최초로 군청 마을만들기담당 신설
 - 행정내 각종 마을 단위 업무를 총괄하고 조정하는 사무국 역할 수행
 - 마을 사업과 귀농귀촌, 도농교류 업무의 총괄 기능 담당
 - ‘주민 주도 상향식’의 원칙을 견지할 수 있는 행정내 시스템 구축
- * 2009년 제18회 대산농촌문화재단 농촌발전부문 대상 수상

- 2008년, 소액 지원 경관 중심의 ‘그린빌리지’ 사업을 도입
 - 주민의 공동훈련을 강조하며 1개 마을당 2백만원 내외 지원
 - 마을 단위 사업의 가장 기초 단계로 설정, 매년 30개 마을 내외 추진
 - 주민 스스로 만족하며 새로운 사업을 다시 시도하며 마을 발전의 새로운 희망을 확보

□ 마을 단위 사업에서 마을 네트워크 구축으로 확산

- 마을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외부 인력 보완 시스템 구축
 - 2006년 1월 귀농귀촌인 중심의 마을간사 제도를 도입하고, 2007년부터는 ‘도시민 유치 프로그램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마을만들기와 귀농귀촌 업무의 통합을 자발적으로 추진
 - * 기존 업무 영역을 넘어 타 자치단체와 달리 진안군에서는 귀농귀촌 업무를 마을만들기 업무와 통합하여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
- 마을 단위 사업에서 면소재지, 군 단위 네트워크로 확산
 - 행정리 중심의 마을 단위 사업(특히 체험마을)을 통한 마을 자체의 활성화는 쉽지 않고, 면소재지 중심기능 강화와 마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보완되어야 함
 - 진안군의 마을만들기는 2001년 시작된 이래로 점에서 선, 면으로 중장기 전략을 가지고 단계적으로 발전해왔음
 - * 단체장과 계약직공무원이 바뀌어도 정책의 일관성을 지속적으로 유지
- 마을 경관과 경제 사업에서 문화, 복지, 환경으로 확산
 - 주민 훈련을 통한 역량 강화 사업에서 출발하여 주민 스스로 문화와 복지, 환경 영역을 통합하기 시작

* 역량이 성숙되기 시작한 마을은 행정의 업무 영역을 넘어 스스로 관련 사업을 파악하고 공모사업 신청, 읍면장 재량사업 요청, 개인 농가 지원사업 확보 등을 추진함

3. 진안군 마을만들기의 성공 시스템 사례

□ 마을만들기 전담팀 신설과 행정TF팀 구성

- 전임 계약직 공무원 채용으로 행정 전문성 강화
- 전국 농촌 최초로 마을만들기 전담팀 신설(2007.2)
 - 계약직 공무원(박사급)은 8년째 근무 후 민간조직과 연계
 - 행정담당 공무원 10년이상 근무중
- 마을 단위 사업의 행정 협조를 위한 TF팀 구성(2007.3)
 - 개별 사업을 통한 협력 경험을 바탕으로 8개 담당이 참여하는 행정TF팀 구성

==> 행정 창구 일원화와 전문성 강화를 통해 민간 그룹에 대한 대표성과 신뢰성 확보, 공무원 업무 경험자의 순환풀 형성에 기여

□ 마을 단위 사업의 단계화로 성공모델 창출

- 7개 담당별로 분산 추진되는 마을 단위 사업의 단계화를 명확하게 명시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한 성공모델 창출
 - 2010년 5월 공포된 마을만들기 기본조례에 정식으로 반영
- 1단계 그린빌리지사업으로 주민 공동활동의 경험을 축적하고 단계적으로 발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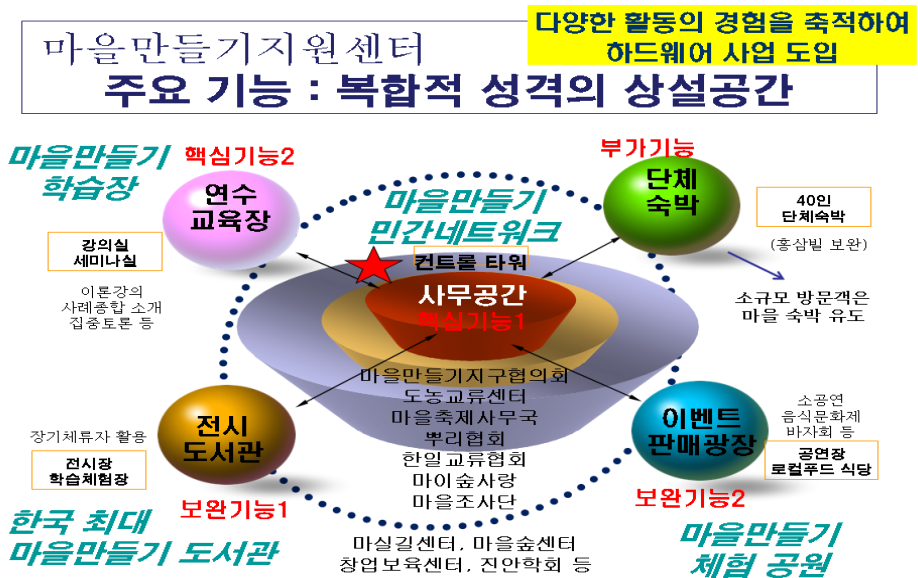
==> 주민들도 마을 공동활동을 열심히 하면 소득사업도 가능하고 꼭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됨



□ 민간 영역의 사업 연계 강화를 위한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설립

- 2008년 2월,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임시 사무실 개소
 - 마을사업과 귀농귀촌, 도농교류 등의 민간조직이 공동 입주하여 운영

- 2008년 8월,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신규 설립 필요성 제기
 - 진안군 마을만들기 10년 활동들의 경험을 축적하여 행정과 협력하고 민간의 다양한 활동들이 연계될 수 있는 핵심 거점 공간 확보 차원
 - * 2010년 5월 공표된 마을만들기 기본조례에 명시
 - 2010년 예산 확보, 2011년 리모델링, 2012. 12월 개소
 - 마을만들기 컨설팅과 교육, 지자체 연구용역 수탁 등을 수행할 수 있는 민간 연구소 역할 병행 추진(마을만들기 관련 15개 단체 50여명 상주)
 - * 사회적 기업 인증, 농어촌공동체회사 형태로 발전 모색중
- ==> 진안군 마을만들기 10년의 성과를 모아 핵심 거점공간 구축으로 주민들에게 상징적인 자부심을 제공



□ **민간 중심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진안마을 주식회사 창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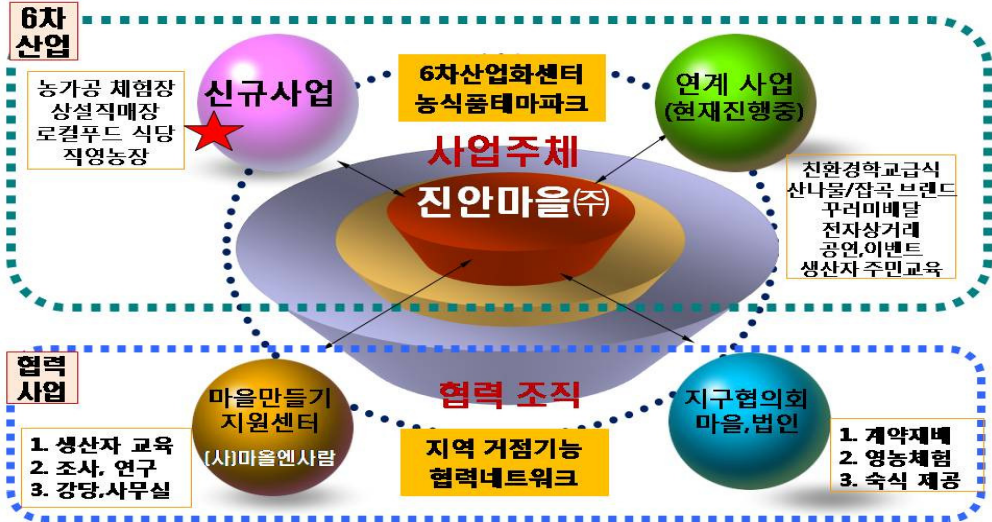
- 2011. 7. 8. : 법인 설립 총회 개최
- 상근 근무자 : 5명

- 회원 구성 (총 128명) 및 출자금 (총액 150백만원, 2012. 9월 현재)
 - 현재 진행중인 주요 사업
 - 생산자 교육 및 조직화 : 마을 순회 교육, 학습회 등
 - 독자브랜드 상품 개발 및 판매 : 산나물세트, 잡곡세트 상품, 고추부각 등
 - 친환경 학교급식 공급 : 2012. 8. 20
 - 설립목적 : 사회적 목적과 수익성의 조화로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에 기여
 - 마을 농산물의 공동 유통을 책임지는 전문 법인으로서 농산물의 친환경 생산과 직거래 유통을 통해 판매소득의 마을 환원을 목적으로 설립
 - 고령화 영세농가, 독거 노인 등 농촌 마을의 사회적 약자들을 배려한 농특산물 판매 기여
 - 다품종 소량생산 체계에 있는 노인농가 및 귀농귀촌인 농가들의 농산물 판로 확대 기여
 - 지역 관내 농산물 가공 소규모 영세업체들의 판매 기회 확대 기여
- ==> 생산·가공·유통의 안정적 시스템 구축으로 농가 소득향상에 기여하여 마을 주민들의 안정적 삶을 유지토록 기회 제공

추진주체 : 진안마을(주)

협력조직 : 지구협의회 + 지원센터 + 마을, 법인 등

책임 운영체 + 네트워크 협력 방식의 결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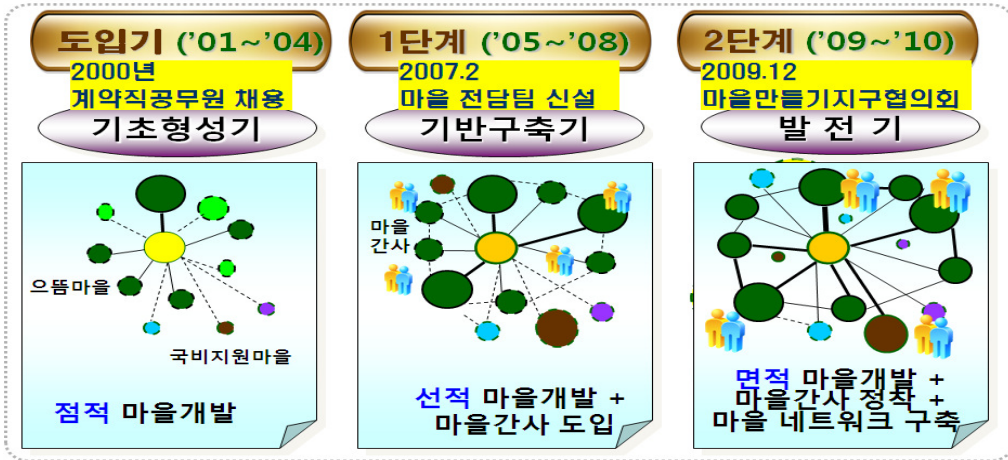
4. 진안군 마을만들기의 종합평가

□ 진안군 마을만들기 사업의 10년 역사

- 전국 지자체 최초로 주민주도 상향식 마을 단위 사업 도입
 - 으뜸마을가꾸기에서 시작하여 그린빌리지 사업으로 강화
- 마을 단위 사업에서 귀농귀촌, 도농교류 영역으로 확산
 - 최근 들어 민간 주도로 마을 농특산물 유통, 마실길, 농촌창업, 사회적 기업 등으로 계속 확산중
- 마을 단위 사업도 경제와 문화, 복지, 환경을 통합하는 방향으로 전개중
 - 주민들의 역량 상승으로 주체적으로 통합 시도

==> 진안군 마을만들기는 '더디 가도 제대로 가는 길'을 걸으며 주민들이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진화 발전중에 있음

주민주도 상향식 마을만들기의 역사



“점에서 선, 면으로 전략적 전개, 심화, 발전”

2011년부터 경제 영역까지 외연을 확대

□ 마을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과 마을만들기

- 주민들의 역량 강화 : 농사 등 농업이외의 다양한 활동 기회 제공
- 마을의 고유 기능 회복 : 전통적으로 함께 해 온 마을의 소중함을 인식
- 마을문화 정착 : 같은 풍토에서 살아 온 사람들의 공감대 형성
- 마을만들기를 통한 마을 공동체 형성 : 함께 하는 훈련을 통해 공동체의 중요성 인식 확대

==> 마을 문화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결속력 강화 및 자신감 회복으로 지속 가능한 마을만들기에 일조

□ 전국 마을만들기의 선진지로 부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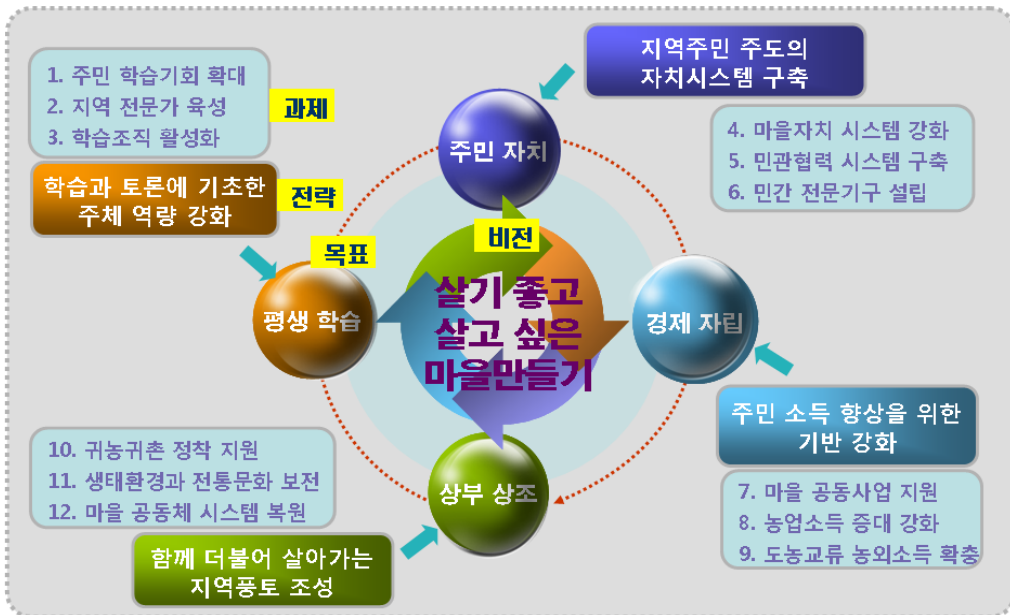
- 연간 150여팀, 2천명 이상의 견학/조사팀이 방문
- ‘마을만들기 10년의 경험과 시스템’ 책자 발간 : 2011. 국토연구원
- 2009년 대산농촌문화대상 농촌발전부문 대상 수상, 2011년 제1회 대한민국농어촌 마을대상 대통령상 수상,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 주관 지방자치 20년 변화와 혁신사례 좋은 변화상 수상

==> 10년 성과와 더불어 풀어야 할 숙제도 계속 확인하며 전국 농촌 마을만들기의 선두주자로서 계속 발전해갈 것임

□ **진안군 마을만들기의 목표와 전략, 과제**

- 관련 행정 실과소 협력, 민간 역량 강화로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단계적 추진
- 향후 마을만들기 사업의 방법론이 지자체 정책 전반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함
- 단기적으로는 마을 단위 사업, 도농교류, 귀농귀촌, 주민자치, 평생학습 등의 업무가 상호연계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계속 모색중임





공간과 문화자원 활용을 통한 지역재생 방향

김효정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1. 문화를 통한 지역개발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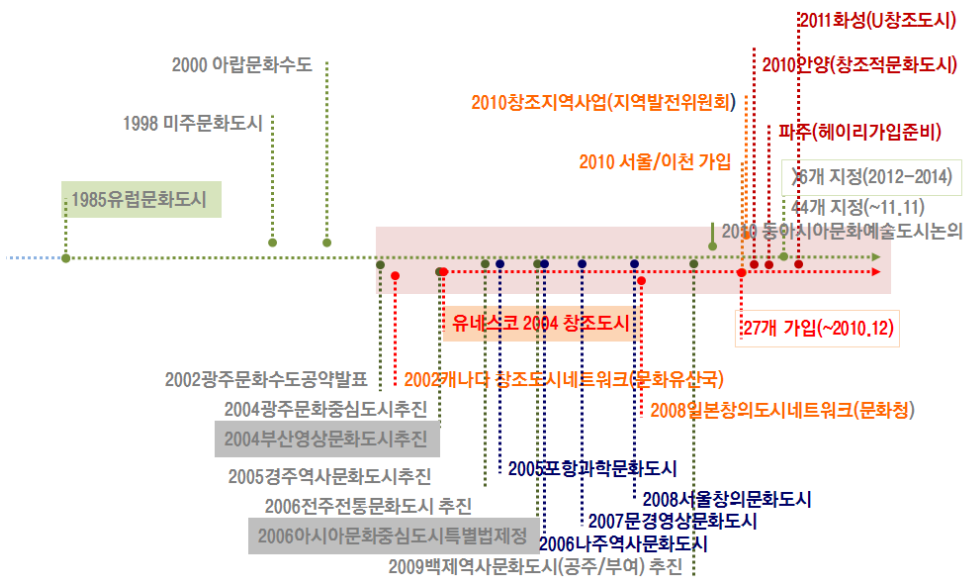
1.1. 전개과정

■ 유럽문화수도 사업으로 접화

- 1985년 유럽문화의 풍부함과 다양성증진, 유럽시민 간 문화공유, 상호이해 증진을 목적으로 유럽연합에서 시작한 ‘유럽문화도수도’사업이 일부 도시에서 사회경제적 파급 효과를 유발하면서 세계전역에 문화도시 열풍 전개
 - 1985년 아테네를 시작으로 2012년 기마랑이스, 마리보르까지 46개가 지정되었고, 앞으로 2013년 마르세유, 코치세부터 2016년의 브로츠와프, 산세바스티안까지 6개의 도시가 지정되어 있음
 - 문화도시로 지정되면서 다양한 문화행사를 진행 시민뿐만 아니라 유럽인, 세계인으로부터 관심을 받으면서 하나의 도시브랜드로 ‘문화도시’ 부각
- 미주문화도시(1998), 아랍문화도시(2000), 동아시아문화도시논의(2010) 등 세계적으로 문화도시사업 추진 또는 구상
- 우리나라 역시 2002년 대선 공약을 시작으로 광주문화중심도시, 부산여양문화도시, 경주역사문화도시, 전주문화도시, 나주역사문화도시, 포항과학문화도시, 문경영성문화도시, 서울창의문화도시 등 국가주도 또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적으로 추진

■ 창조도시로 개념 확대

- 유럽문화수도가 유럽지역 간의 상호이해 증진을 목표로 예술가와 시민들의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하였다면 유네스코에서 2002년 논의되기 시작한 창조도시네트워크는 전 세계 지역을 대상으로 문화예술을 도시발전전략으로 추구, 도시산업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
- 문학, 영화, 민속예술, 디자인, 미디어예술, 미식학, 음악 등 7개 영역을 중심으로 도시발전 전략을 추구하는 도시를 선정하고, 도시문화자산 증진과 창의산업 육성, 회원도시들과 공유
 - 2004년 창조도시네트워크에 문학의 도시로 에딘버러가 선정되면서 본격화 현재 28개 도시 가입(2011년 현재)되었으며, 2010년 서울, 이천이 유네스코 창의도시네트워크에 가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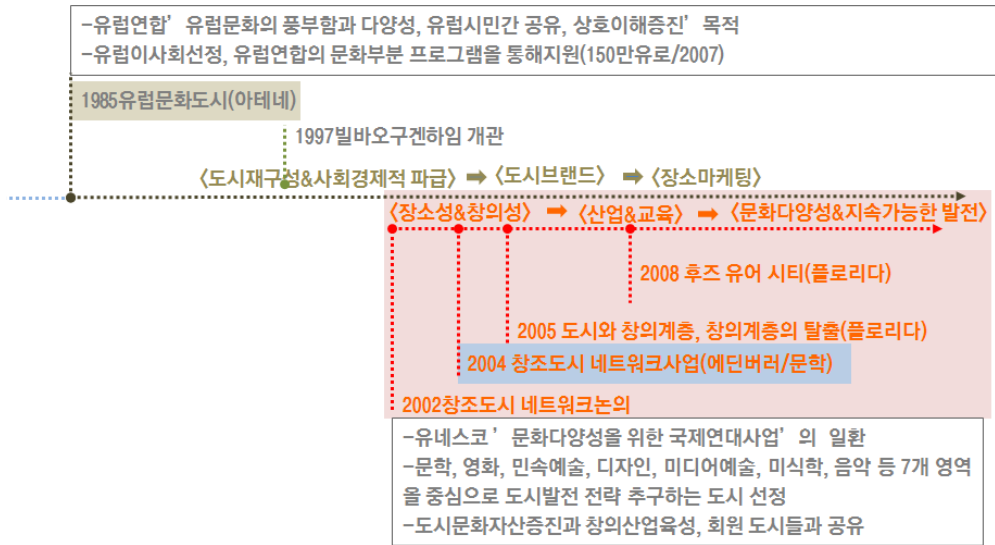


[그림] 문화를 통한 사업전개

다. 창의성과 도시발전 간의 상관성 논의

- 문화도시와 창조도시에 대한 국내외적 관심이 고조되면서 문화성과 창조성, 문화지수와 지역개발, 문화를 통한 도시창조성 증진, 도시창조성이 도시발전에 미치는 영향

등 다양한 연구진행



[그림] 문화를 통한 국제적 주요 사업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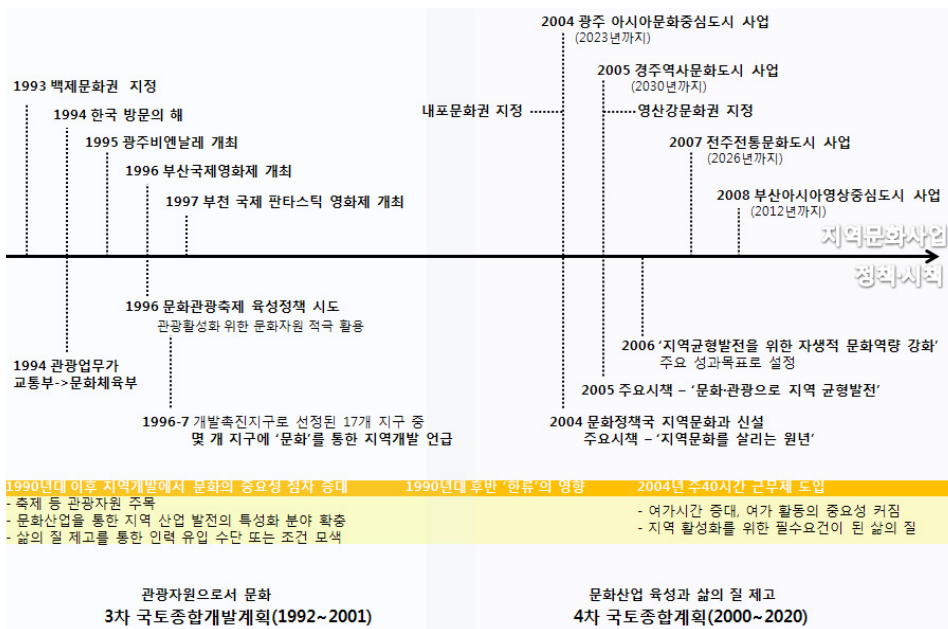
1.2. 문화적용 형태

■ 도시재생 모델로 문화적용

- 1990년 영국의 글래스고우와 같이 쇠퇴한 도시의 재생 모델로서 문화도시사업이 전개되어 성과를 거두면서 도시재생 모델로서 문화도시사업 추진사례 증가
- 특히 1997년 스페인 빌바오에서 구겐하임미술관 개관으로 도시가 재구성되자 문화를 통한 지역개발의 가능성을 확신하게 되었으며, 도시랜드마크로서 문화시설의 활용가치, 문화시설로 인한 도시홍보마케팅 전략개발 등 다양한 측면에서 도시브랜드화 추진
 - 2004년 광주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시작으로 경주, 전주 등 역사도시를 중심으로 하는 국가주도형 도시재생 문화도시 프로젝트시작

■ 외부영향으로 도시로 정책영역 확대

- 유럽 발 문화도시의 성과와 주 40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인하여 여가활동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면서 문화를 통한 지역개발의 가능성이 높아짐
- 또한 부산, 마산 등 제조업 중심의 도시가 쇠퇴하고 광주, 경주 등 여러 도시들이 도청 및 시청 이전 등으로 인해 도시공동화 현상을 겪으면서 새로운 도시재생 모델모색
 - 문화도시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2002년 대선공약으로 광주문화도시 추진, 역사문화도시사업 탄력
 - 2004년 본격적으로 문화부내 지역문화과 신설 등 문화를 통한 지역개발에 대한 정책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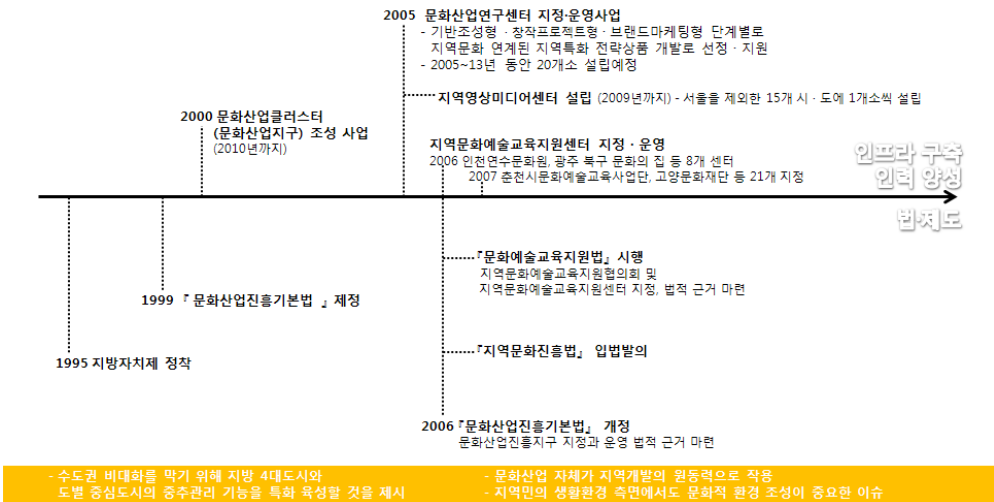


[그림] 지역개발사업 정책 및 시책

■ 문화예술에서 문화경제로 중심이동

- 우리나라에서 2004년 역사문화도시 사업이 추진되기 시작할 때 국제사회에서는 문화도시의 경제적 성과를 토대로 지역발전 경제모델로서 문화도시의 변이시작

- 창조산업, 창조도시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기 전에 우리나라에서 문화산업 육성정책이 1996년 문화산업기본법을 시작으로 진행되었으나 도시와 연계 창조도시의 핵심자원으로 자리매김하기 시작한 것은 최근의 일로 2010년 서울창의도시를 모델로 많은 도시들이 창의도시를 표방한 정책 및 사업 수립
 - 창의인재를 중심으로 창조산업 육성을 기본으로 도시디자인, 도시브랜드, 도시경제로 확대하는 개념으로 발전



[그림] 문화산업, 인력양성과 법/제도

2.2. 주요이슈

■ 지역경제 및 지역재생

- 문화도시의 도입동기, 배경에서 나타나듯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도시재생의 목적으로 사업추진 진행
- 도시민의 문화향유 등을 고려 예술 활동 진흥 및 문화복지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으나 그 이면에서 도시의 지속가능성과 도시경제와 연계한 문화산업으로서 성장가능성에 문화자원 활용을 가치화하고 있음

사례: 유네스코 디자인 창의도시 서울

2010.7 유네스코 지정 디자인 창의도시 선정. 축적된 디자인 시정에 대한 국제적 인증을 바탕으로 도시브랜드 가치 높이고, 풍부한 문화유산, 창의적 잠재력 바탕으로 디자인 산업과 창의인재 육성해 나감
 - 디지털 콘텐츠, 관광·MICE, 녹색사업 등 서울 8대 신성장동력산업 기반이 되는 디자인산업체계적 육성, 디자인밀집지역 동대문, 마포, 구로, 강남 등 디자인클러스터 중심 마케팅지원, 자금지원, 컨설팅 지원을 통해 디자인기업 지원
 자료: 2011 창의도시포럼

도시디자인 개선

- 궁극적으로 문화예술 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도시사업의 결과로 도시전반의 미적 수준 향상이 내제되어 있는 경우가 다수
 - 도시경관, 도시공공디자인 측면에서 접근하여 도시간판정비 및 환경, 도시미관 개선에 기여

사례: 안양 공공예술프로젝트

2005년 예술공원조성사업을 시작으로 공공시설 및 장소에 예술성을 추구하여 지역공동체에 새로운 활력과 시민들이 수준높은 예술작품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제공으로 삶의 질 향상과 도시디자인 향상에 기여



석수아트프로젝트-로라쿠퍼(자료: www.apap2010.or)

유휴공간 활용

- 도 청사, 시청사, 군사기지 이전 등 공공청사 이전으로 인한 유휴 공간 활용 및 주변 지역개발에 문화를
 - 활용하고자 하는 사례 증가
 - 충남도청사, 경북도청사, 용산미군기지, 문화부 등 정부청사를 활용한 문화공간 조성 프로젝트 증가
- 채석장, 탄광, 발전소, 역사 등 산업유휴공간을 활용한 문화공간으로 조성으로 지역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례증가

- 포천아트벨리, 서울역사문화공간, 안양유유산업이전적지 등 폐산업시설을 이용

사례: 포천아트벨리

90년대 중반 화강석 채취를 중단한 폐채석장을 2005년부터 2009년까지 155억 사업비를 투자하여 문화예술공간으로 전환. 영화상영, 공연, 전시관을 통한 기획 및 상설전시, 호수를 배경으로 하는 다양한 퍼포먼스가 전개. 2010년 교육전시센터를 건립하여 문화콘텐츠를 활용한 전시, 체험, 교육이 이루어짐(자료: www.artvalley.or)



■ 문화, 예술, 환경 유기적 결합

- 지역 내 문화공간의 활용에 있어 장기적인 대책수립이 세워 자립적인 활용과 지속적인 관리에 중점을 둔 유희공간 활용, 문화지구, 예술지구 등 조성
- 최근 들어 지역의 창조적인 발전전략이 강조되며 변화를 포용하는 능동적인 움직임과 지역의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동인들이 지속적으로 작용, 발전해가는 양상을 띠며 이에 맞춘 문화공간 활용이 지역의 새로운 랜드마크 형성
- 기존에 조성된 문화공간 역시 지역 고유의 문화자원을 이용하여 특수성을 드러낼 수 있도록 지역민과 지자체가 능동적으로 활용 가능

2.3 문제점

■ 대규모 시설 위주의 사업전개

- 지역 및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하고 있는 사업에 대부분 포함되어 있는 것이 대규모의 문화시설과 메가 이벤트, 예술가를 활용한 프로그램 운영 등은 실제 많은 지역에서 기대 이하의 성과를 얻고 있으며 특히 예산 및 인력 등 운영상의 문제를 안고 있음
 - 지역 활성화, 도시재생 모델로 일차적으로 대규모 문화시설 및 특화거리, 문화

클러스터, 창작센터 등 제안하는 경우 다수

■ 외형지상, 표준화 및 획일화 위험

- 문화를 적용한 지역개발 개념 확산과 동시에 ‘디자인’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지역경관, 도시경관, 문화경관 등 관련 정책 및 사업 증가
- 지역과 도시의 외형적 모습의 질적 수준을 중시하면서 「건축기본법」, 「경관법」 등 제정되고 평균적인 ‘미’의 기준을 설정하여 디자인하면서 과거 난개발에 의한 무차별적인 경관과 다른 또 다른 차원에서 의 표준화되고 획일화된 지역 경관이 형성되고 있음
- 난잡한 지역 및 도시 디자인 수준을 개선하고자 시행하는 정책이 자칫 디자인은 일정 수준을 유지할 수 있으나 문화적 감동은 없는 모습을 연출할 수 있다는 모순이 내제되어 있음

■ 주민(수혜자) 없는 일방적 사업

-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사업의 경우 사업수혜자인 지역주민의 의사와 참여를 토대로 사업이 추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일정 및 절차 등을 이유로 주민 없는 지역재생이 이루어 경우 다수
- 지역재생 사업결과, 원주민은 떠나고 새로운 주민이 이주하여 또 다른 형태의 지역을 만들어 가는 형태

3.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사업 전개 방향

>> 앞서 나타난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의 형태를 전개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사회변화/패러다임을 수용하여 고려할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일방향에서 쌍방향으로

- 사업자(행정 등)에 의해 일방적으로 사업을 개발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에 의해 지역재생사업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사업전개
- 시간과 절차가 복잡하고 주민의견 수렴 및 통합과정이 어렵더라도 지역자원을 발굴

하여 스스로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사업설계

■ 만들기에서 지역문제해결 과정으로

- 새로운 공간이나 시설 조성 등을 통하여 지역재생 및 발전을 유도하기 보다는 지역이 처한 문제가 무엇인지를 지역주민과 함께 발견하고 그것을 단계적으로 하나씩 해결해나가는 과정으로서 지역재생사업 접근
- 지역문제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토대로 문제해결 방안으로서 사업을 제안하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과정으로서 사업전개
 - 예) 지역주민에 의해(전문가와 협력) 지역의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공동체문화로서 지역재생사업 공모 “지역의 새로운 문화발견 프로젝트”

■ 수혜대상에서 주체로

- 지역주민은 사업결과의 수혜대상인 피동적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할 수 있는 사업주체로서 인식전환
 -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자세에서 긍정적이며 적극적으로 사업주체적 성격 부여
- 지역주민에 의해 진행되는 지역재생사업 전개(규모가 크지 않으면서 “1인이 할 수 있는 10명 할수 있는 100명이 할수 있는 1000명이 할 수 있는 10000명이 할 수 있는 사업....” 등 개발)를 통하여 스스로 만들어 가는 문화

■ 문화와 예술, 틀에서 일상으로

- 기존에 규정되어있는 문화와 예술의 장르와 형식에서 벗어나 사람과 사람들의 삶에 집중하여 사업개발 및 전개
- 문화사업이라는 고정관념을 깨고 사업추진의 궁극적인 목표를 위한 방법 또는 사업전개를 통해 얻어진 무형의 결과? 등 보다 자유롭게 접근 .끝

발제 4

장소성과 지역문화재생 :

관계의 재생, 가치의 재생, 공간의 재생

이영범
경기대학교 건축대학원 교수

1. 장소성에 기반한 도시재생의 의미

도시재생은 장소의 재생이고 관계의 재생이다.

도시에서 장소라 함은 그 특정한 공간환경에 내재된 사람들의 삶의 과거와 현재, 미래에 대한 희망, 그리고 시간성, 역사성, 사회성, 문화, 정치경제적 에피소드, 주민들의 삶의 기억과 편린 등의 복합체이며 동시에 그 공간환경 주변의 도시적 맥락에 대한 관계의 복합체이기도 하다. 도시에서의 재생은 결국 이러한 관계성을 담고 있는 장소성에 대한 보존을 의미하며 또한 이러한 관계성의 공간을 통한 미래지향적인 재구성을 의미하기도 한다. 오늘날 도시에서 재생이란 이름으로 개발되는 공간은 대부분 비장소성을 갖는다. 이를 프랑스 인류학자인 마르크 아우게(Marc Augé)는 비장소('non-places')라고 명명한다. 도시의 오래된 사회성이나 역사적 가치, 거주자들의 거주환경 특성, 문화성 등과 상관없이 어디서나 삽입 가능한 보편화된 후기자본주의적 공간들, 예를 들면 거대한 쇼핑몰, 복합영화관, 주상복합타워 등이 비장소들이다. 도시를 재생한다고 장소의 특정한 관계망을 오려내고 거기에다 어디에 두어도 상관없는 가치중립적이고 몰개성적인 초 근대적 공간(super modern space)을 삽입한다. 이 경우, 부분의 재생이 결코 도시 전체의 재생을 위한 긍정적인 합(positive sum)이 되지 못한다. 왜냐하면 이들은 남을 압도하거나 억압할 뿐이지, 자신을 통한 공간의 사회적 공유의 가능성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도시의 재생은 물리적 외연뿐만 아니라 그 안에 내포된 삶의 방식까지도 포함한다.

도시재생에서는 재생의 안과 밖의 문제를 모두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아모스 라포포트나 하이데거의 주거의 근대성에 근거하여 재생의 안과 밖의 문제를 살펴보면 외연과 내포 사이의 간극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껍데기는 고전주의 양식을 유지하면서 내부는 현대화된 인테리어와 가구, 그리고 거기에 맞는 주거생활을 영위한다면 이를 주거의 근대성이라고 볼 수 있는가. 아니면 극히 현대적인 외형을 한 주택이지만 내부는 안티크 가구로 단장하고 사는 이들이 전통과 격식에 찬 주거방식을 고집한다면 이 또한 주거의 근대성이라고 볼 수 있는가. 즉 진정한 재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형식과 내용을 일치시키는 것이 재생에서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지나치게 도시재생을 물리적 외형을 보존하려고 하는데 집착하지나 않는지를 되돌아보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이다. 북촌의 한옥도 마찬가지이다. 한옥의 외형은 더 수려해지지만 한옥에 담긴 전통적인 주거방식, 즉 길과 마당을 통한 공간과 생활의 확장이나 길과 집과의 관계를 통한 마을이나 공동체의 가능성은 한옥의 재생과 함께 사라진 지 오래다. 마당은 있지만 열린 마당이 아니라 닫힌 마당만이 있을 뿐이다. 전통의 담장으로 개보수를 했지만 담장을 넘나드는 길과 집과의 관계는 더 높은 담을 쌓아 올렸다. 한옥은 재생되었지만 그 안에 담긴 가치와 생활이 사라지고 만다면 그 재생의 진정성은 어디에 있는가.

재생은 공유의 가치를 지녀야 한다.

우리주변에도 재생의 좋은 사례들이 많다. 나비 하나로 지방축제의 대명사가 된 함평나비축제, 그리고 재래시장으로 대박을 터트린 정선5일장이나 겨울철 가족여행의 으뜸 행선지가 된 강원도 인제의 빙어낚시축제가 그런 것들이다. 죽어간다는 재래시장이나 시골의 얼음판에 사람들이 발걸음이 메워터지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들은 우리가 갖고 있는 것에 대한 성찰과 우리의 기억 속에 있는 것들을 되살려 내는 지혜가 바로 재생의 가장 창의적인 밑거름임을 이야기해 준다. 대체로 재생의 언어는 사회적인 성격을 띠기보다는

물리적인 형식을 띠기 마련이다. 그러다보니 재생은 흔히 시간성의 무시, 비가시적 가치의 무시, 자신만의 정체성의 무시 등의 오류를 범한다. 지금 원하는 유행적인 가치에 의존해 극히 자극적인 물리적인 재생을 통해 직접적인 가치를 만들어 내려고 하기에 생기는 오류들이다. 재생의 가치는 절대적이지 않고 상대적이며, 개관적이기보다는 오히려 주관적인 차원에서 결정되는 경향이 강하다. 그래서 재생은 기본적으로 공유의 가치를 가져야 한다. 시간성과의 공유,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와의 공유, 도시와 자연과의 공유 등등. 공유의 가치를 가질 때 재생은 시공간의 제약을 극복하고 역사와 삶을 이어준다. 공유의 가능성은 단절이 아닌 연속된 흐름에서 생기며, 또한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부의 가치와 지혜에서 싹틈을 기억해야만 한다. 우리 주변의 좋은 사례들을 보자. 이들은 한결같이 재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보다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에 대한 성찰임을 이야기한다. 즉 버려야 할 것으로서의 과거가 아니라 다시 살려내 활용하는 가치로서의 과거에 대한 성찰이 도시재생에서는 중요하다. 우리의 기억 속에 있는 것들을 되살려 내는 지혜야말로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가져야 할 재생의 방법론이다. 도시재생에서도 온고지신(溫故知新)의 지혜가 요구된다고나 할까. 잊혀져 가는 것들, 사라져 가는 것들에 대한 아련한 추억을 생명띠로 하여 지금 우리의 일상과 연결하는 지혜야말로 재생의 지름길이자 살림의 올바른 길이다.

공간을 통한 시간과 의미의 재생

패션플라자와 도심공원 조성을 위해 철거된 동대문 운동장의 경우 철거를 둘러싸고 야구인들의 반발이 거세었다. 운동장의 철거반대가 비단 야구인만의 바램일까. 건물이 멋있어서 보존하자는 게 아니다. 동대문 운동장에는 거기에만 담긴 시간과 의미가 있다. 지방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던 시절, 동대문 야구장에서 열린 고교야구 경기의 단체응원 덕에 상경하여 처음 서울구경을 해보기도 했다. 도시의 역사를 함께 했던 공간은 이처럼 개인의 미시적 일상에도 깊숙이 관여되어 있다. 동대문운동장은 보잘것없는 개인의 추억을 담고 있음으로써 한 시대를 증언하는 공간이기도 하다. 동대문 운동장을 재생하면서 그 안에 담긴 시간과 의미가 공유될 수 있도록 현재화하지 못한다면 그 재생은 결국 꺾이기만 재생한 꼴이 될 것이다. 남들이 이뤄놓은 모범사례를 많이 본다고 해서 다 내 것이 되는 게 아닌 모양이다. 우리에게도 도시재생

이 너무 지나칠 정도로 현존을 무시한 물리적 재생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듯하다. 부수고 새로 짓는 것이 재생이 아니다. 말 그대로 다시 살리는 것이다. 그렇다면 무엇을 어떻게 다시 살려야 한단 말인가. 도시재생의 문제는 공간의 공유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공간의 공유는 시간의 공유와 함께 도시재생을 이루는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다. 오래되고 쓸모없는 것들이 시간성을 초월하여 사회적으로 공유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재생이고, 재활용이고, 지속가능성이다. 버려진 폐광촌과 산업화시대의 발전소나 공장건물들이 문화예술의 공간으로 탈바꿈한 사례들을 우리는 도시재생의 성공사례라고 부른다. 성공의 비법을 캐내려고 여기저기 견학 다니느라 바쁘지만 전가(傳家)의 보도(寶刀)가 있을 리 만무하다. 그저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잘 다듬어 거기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공통된 특징이라고나 할까. 한 가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공간을 통한 시간과 의미의 공유이다. 시간과 의미의 공유는 도시재생이 다루는 물리적인 실체는 아니다. 이들은 재생된 물리적 실체에 존재의 당위를 부여하는 정신적 가치이다. 앞서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공간 안에 개입된 관계들의 이해관계가 서로 대립되지 않고 공동의 가치를 향해 협력할 수 있게 만드는 이해관계의 공유가 공간공유의 실체이다. 관계의 공유를 바탕으로 한 공간의 공유가 시간의 공유와 함께 결합될 때 도시재생의 가능성은 커진다. 시간의 공유는 그 장소에 담긴 역사성을 현재화하여 지금 우리가 일상을 통해 체험할 수 있게 해주는 창조적 혁신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그 장소만이 갖는 의미를 공유하게 된다. 도시에서의 현재의 시간이 과거의 시간과 끊임없이 교차되고 있음을 누가 부인할 수 있을까. 도시의 과거와 미래가 얼마나 역동적으로 현재의 흐름 속에서 긴장관계를 맺고 통합되느냐가 성공적인 도시재생에서는 분명히 드러난다. 도시재생에 수학문제와 같은 해답이 있을 리 없지만, 적어도 재생을 이야기할 수 있으려면 관계, 가치, 공간, 시간의 공유를 통해 ‘장소적 의미’를 되살려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해본다.

발췌: 이영범 저, “도시의 죽음을 기억하라” (2009, 서울: 미메시스)

2. 역사문화를 활용한 지역재생의 과제

역사도시에 대한 모순된 가치와 태도가 혼재되어 있다.

잃어버린 도시공간역사의 일상생활의 가치를 간직한 골목길과 그 길을 맞대고 서 있는 시대의 생활공간과 건축유산이 자본과 시간의 흐름을 거역하지 못한 채 물밑 듯이 밀려드는 자본의 개발논리에 의해 하루아침에 부서지고 파괴되는 것이 역사도시 서울의 진면목이라 할 수 있는 사대문 안의 풍경이다. 도시 속에 시대와 사회의 정신과 가치를 담는 데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은 무한하나 사회의 무관심과 자본의 이해가 도시의 흔적을 쓸어버리는 데에 걸리는 시간은 찰나에 불과하다. 도시의 역사문화와 생활문화의 켜가 적층된 종로의 피맛골과 청진동이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철거되는 순간, 다른 한편에서는 바로 이웃한 세종로변을 국가상징거리로 조성하는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 지금 이 순간 서울의 도시역사와 전통에 대한 가치와 태도는 일관성을 상실한 채 서로 모순된 양상만을 노출하고 있다.

역사문화공간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절실하다.

이처럼 서로 가치를 달리 하는 도시정책이 양립하며 도시역사문화의 회복과 보존에 대한 일관된 정책수립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근본적으로 역사문화 도시만들기의 큰 그림과 사회적 합의가 미비한 데 그 원인이 있다. 흔히 큰 그림그리기는 정책개발과 제도적 보완을 통해 이루어진다. 여기에 또 다른 문제가 노출된다. 정책개발과 제도적 보완이 행정이 설정한 목표와 성과를 구현하는 도구로서 활용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 경우 역사문화도시에 대한 큰 그림 그리기가 지나치게 경직되고 모든 내용이 일정 내 목표구현이라는 강박관념에 의해 왜곡되기 쉽다. 정책의 한 끝(특히 일정과 목표)이 열려있는 정책모델을 개발하고 도시의 전통문화를 통한 재생이라는 큰 틀은 목표와 일정, 예산에 의해 집행되기 보다는 도시민들의 내부적 합의와 자발적 참여, 자생적 문화상품에 의해 완성되어야한다. 이를 위해서는 이해당사자들의 협

정이나 협약을 활성화하여 역사문화환경을 둘러싼 사적재산권의 문제와 공공의 지원, 그리고 일정한 장소성을 공유하는 공동체의 조성 등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역사문화공간의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도시의 현대성을 어떻게 제어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한옥보다는 비한옥이 문제의 핵심으로 본 북촌의 사례처럼 우리의 역사도시문제는 내재된 전통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의 문제보다는 내재된 자원이 현재적 욕구에 의해 빠르고 광범위하게 파괴되고 훼손되는 현대성의 문제가 시급하다. 흔히 자본과 개발을 통해 드러나는 도시의 현대성은 부정적인 이미지로 폄하될 뿐 역사문화환경에 미치는 현대성의 폐해에 대한 구체적인 대처방안이 진지하게 고민되진 않는다. 도시의 현대성이 역사문화환경과 양립해야 할 가치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현대성의 가치를 부정적으로 보거나 긍정적으로 볼 경우 역사문화환경과 현대성을 다룰 때 서로 다른 접근이 요구된다. 먼저 전통을 파괴하는 것으로서 도시의 현대성을 바라볼 경우 활용가능한 자원인 전통문화보다는 도시 전체의 경관을 해치는 현대성(개발압력/개인재산권/건축형태/상업화)을 어떻게 제어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식과 해결책이 필요하다. 현대성의 긍정적 평가: 전통의 가치를 재생산해낼 수 있는 동력으로 도시의 현대성을 바라볼 경우 현대를 어떻게 전통과 어울릴 수 있도록 유도해 낼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 정책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역사문화공간이 디지털시대의 변화와 통합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보하자.

도시의 역사와 전통문화의 회복과 보존, 그리고 지속가능한 활용은 세월의 흐름에 따라 달라진 세상에서 변해서는 안될 것을 지켜가기 위한 노력이며, 동시에 도시의 문화정체성을 확보하여 도시경제와 도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도시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근본적인 가치이다. 하지만 역사문화를 보존과 활용이라는 보수적인 틀에서만 다룰 경우 역사문화를 통해 다양한 문화가치를 만들어내기 힘들어진다. 도시의 문화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통문화를 상징하는 물리적 도시경관의 보존, 개선, 활용과 더불어 전통문화를 현대적 도시생활과 접목시키는 컨버전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디지털 미디어와 정보통신의 다양한 콘텐츠가 어떻게 보존이라는 절대적 가치로 인해 물리적 훼손이 용납되지 않고 역사문화환경의 품격으로 인해 다양하게 적용되지 못하는 현실의 장벽을 극복할 것인가 역시 도시역사문화공간의 조성에서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과제이다.

단편적 역사문화공간의 거점을 지양하고 사람들이 걸어서 찾아갈 수 있는 역사문화공간의 흐름을 만들자.

역사문화환경도시 내의 단편적인 거점을 분산된 형태로 조성할 경우 도시의 문화밀도를 느끼게 할 수 없다. 지나치게 도식화된 개발내용은 지양하고 압축된 핵심거점(북촌 한옥마을처럼)을 보다 더 강화하고 이 핵심거점을 통해 역사문화공간의 집적화된 육성을 통해 도시의 가치가 확산될 수 있는 공간모형을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역사문화공간의 거점이 징검다리처럼 도시에 입체적으로 뿌려질 때 사람들이 걸어서 끊임없이 이동하는 흐름이 생긴다. 이런 사람들의 움직임을 통해 역사문화공간 주변부에 다양한 부가가치가 창출된다. 즉 역사문화공간과 주변부 생활공간이 서로 공유의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역사문화공간을 통해 삶과 관광이 함께 할 수 있는 길찾기가 필요하며 전통적 형태와 문화를 유지한 채로 장기간에 걸친 점진적인 생태적 변신 과정을 통해 옛 것과 새 것이 생태적 거부반응 없이 짧은 시간 내에 융화되어 어울리고 현재(現在)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 역시 시급한 과제이다.

역사문화공간의 스케일과 레벨을 차별화하여 접근하자.

역사문화공간을 다룰 때 도시계획의 차원, 도시디자인의 차원, 건축디자인

의 차원으로 구분하여 스케일에 따라서 서로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하다. 도시계획의 차원에서 규정되지 않은 채 미시적인 건축디자인영역에서만 역사문화공간을 다루거나, 도시계획의 차원에서만 규정된 채 역사문화공간의 세부적인 디테일을 다룰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역사문화공간의 일관된 실현이 불가능하다. 아울러 역사문화공간을 도시거주자와 방문자의 레벨에서 다르게 보고 이를 서로 통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 역사문화환경은 도시내부의 거주자 입장에서는 살고 싶은(Livable) 가치를 가져야 하며, 도시외부의 방문자 입장에서는 기념하고 싶은(Memorable) 가치를 가져야 한다. 도시거주자나 도시방문자의 입장이 서로 차이를 가질 수는 있으나 근본적으로 역사문화공간에 대한 중요한 태도는 단순히 역사문화환경을 보존하고 활용하는 차원이 아니라 사람들에 의해 생활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자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발제 2

공간/자원/사람의 연계에 의한 장소기반형 지역재생 전략

최정한
공간문화센터 대표

지역문화를 바라보는 관점

지역에 대한 현실인식

- 서울중심의 사회경제적 관계망과 라이프스타일로 인한 지역공동화, 인구고령화 심화
- 공간, 지역자원에 대한 1차원적 접근 및 공간문화전략의 부재로 인한 낭비
- 지방관료 헤게모니에 의한 예산배분 및 관리의 왜곡, 비효율, 중복현상 심화

지역내발적 발전의 한계

- 창조인력(젊은 계층)의 대도시 집중으로 인해 콘텐츠 생산, 유통, 소비의 자생성 결여
- 지역문화 및 의사소통체계의 단절, 보수화, 폐쇄성, 고령화 등 한계에 봉착 ▶ 지역악순환



■ 소셜라이프 형성 - 홍대앞 클럽데이

클럽문화의 뿌리 - 홍대앞 클럽데이

- 10개의 댄스클럽을 기반으로 브랜딩한 홍대앞 클럽문화
- 트렌드셋터, night life, 서브컬처의 요소들이 융합한 플랫폼
- 클럽데이 10년을 주관해온 커넥터 - 클럽문화협회의 역할



■ 소셜라이프 형성 - 전주 남부시장

전통시장 2층 유희공간을 활용한 청년몰사업 - 소셜비즈니스

- 12개 가게를 통한 소셜비즈니스 생태계 형성
- 청년장사꾼프로젝트와 야시장, 문화프로그램이 융합한 소셜비즈니스의 플랫폼
- 전주 이음에 의한 커뮤니티디자인사업-하늘정원 조성, 전주 비빔사운드페스타-남부시장 옥상라운지파티로 이어지는 일련의 흐름



■ 소셜라이프 형성 - 태국 풀문파티

코팡안해변을 가득 메운 리조트파티에서 대형리조트축제로

- 코팡안해변의 작은 바에서 시작된 파티가 알려지면서 규모가 대형화하여 태국정부가 지원하는 관광상품으로 성장
- 코사무이, 코팡안에 산재한 수많은 휴양시설, 리조트, 관광시설을 기반으로 매월 보름달이 뜰 때마다 코팡안해안에서 개최되는 대규모파티. 태국의 주요관광상품으로 육성되면서 최근에는 하프문, 블랙문파티까지 생김



■ 공간/자원/사람의 융합을 위한 공간문화전략

기존공간에 대한 창조적 해석과 재구성

- 개방성과 수요자중심의 공간, 장소 공급이 중요 : 기존 레지던시프로그램과 차별화
- 창조에너지가 자유롭게 소통, 융합할 수 있는 환경 제공

사례1 북촌한옥마을

- 멸실되는 한옥을 보존하기 위해 서울시 북촌마을가꾸기 기본계획 수립과 주민참여
- 현장에 파견된 서울시 북촌사업소를 중심으로 행정/주민/전문가/문화예술인들이 협력



■ 공간/자원/사람의 융합을 위한 공간문화전략

오스트리아 린츠의 아르스일렉트로니카/픽셀호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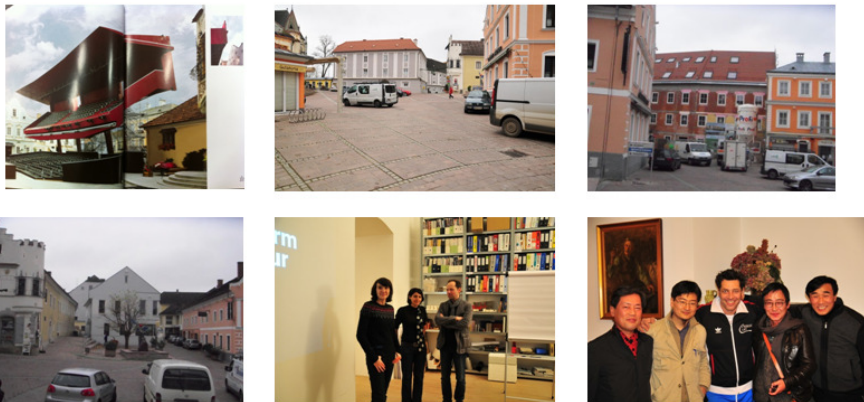
- 60년대 이후 쇠락한 공업도시 린츠를 문화예술로 재생시키기 위해 아르스일렉트로니카페스티벌 개최 → 그 성과와 인적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아르스일렉트로니카센터 건립
- 2008년 유럽문화수도 지정을 계기로 도시의 버려진 유휴공간을 호텔객실화하고 이를 조식을 위한 레스토랑 등과 연계하여 도시투어 유도



■ 공간/자원/사람의 융합을 위한 공간문화전략

오스트리아 소도시 HAAG의 연극가설무대

- 마을의 주차광장에 독특한 조립형 가설객석을 설치하여 여름연극제에 활용
- 6월 한달 개최되는 여름연극제에 10만명의 관객 유입(HAAG인구 5,000명)



■ 인사동·북촌·홍대앞에서 선셋장항까지

인사동

- 작은가게살리기운동에서 핸드메이드인사동활동으로의 진화 좌절
- 최초의 지구단위계획 지구지정과 문화지구 지정/계획의 한계

북촌마을

- 서울시 북촌사업소와 주민참여의 결합을 통한 북촌마을가꾸기
- 주거와 관광의 충돌에 의한 딜레마/급속한 상업화와 외부자본의 유입

홍대앞

- 클럽데이를 통한 홍대지역 브랜딩/문화예술생태계 형성
- 문화와 주거의 충돌/클럽경제권의 형성과 상업화/외부자본 유입 혹은 내부자원 유출

선셋장항

- 선셋장항페스티벌을 통한 체류형 아트캠프 구축/지역사회와의 갈등
- 거점공간 구축을 위한 하드웨어 예산 이외 운영비 확보 실패
- 지역정치구조 및 리더십의 한계/외부창조인력 유입을 위한 환경의 열악과 폐쇄성

■ 선셋장항프로젝트 컨설팅내용소개 (2010~2012. 9)

선셋장항프로젝트 - 대상지역



■ 선셋장항프로젝트 컨설팅내용 소개 (2010~2012. 9)

지역특성 및 현황

- 장항은 일제의 자원수탈 목적으로 조성된 개항도시이자 한국근대 초기의 산업도시
 - 장항제련소, 장항항, 장항선 철도를 주축기반으로 성장
- 장항제련소 폐쇄, 장항항의 기능 약화, 군산-장항간 도선장 폐쇄, (구)장항역의 화물역화 등으로 인해 산업도시로서의 기능 및 도시활력 상실
- 인구유출 및 고령화와 전복 군산으로의 생활권 편입



■ 선셋장항프로젝트 컨설팅내용 소개 (2010~2012. 9)

지역자원 현황

- 일제시대 창고 등 근대산업유산의 산재와 삶의 흔적들
- 강과 바다가 만나는 기수역으로써 바닷가 송림, 금강하구둑 등 수려한 생태자원 및 해산물 등 먹거리 풍부



■ 선셋장항프로젝트 컨설팅내용 소개 (2010~2012. 9)

장항재생사업의 필요성

- 항구 및 산업의 쇠퇴, 장항역 이전, 도선장 폐쇄로 인해 도시기능 상실 및 공동화현상 심화
- 장항의 근대산업유산과 자연환경, 지역자원을 연계, 활용하는 새로운 도시형 창조관광산업 기반 조성이 절실

사업의 목적

- 외부의 문화예술콘텐츠와 근대산업유산의 결합을 통한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장항읍의 지역콘텐츠를 기반으로 하는 체류형 창조관광기반 조성
- 2013년 국립생태원,국립해양생물자원관 개관에 따른 관광수요의 장항유입 유도

■ 선셋장항프로젝트 컨설팅 내용 소개 (2010~2012. 9)

기본컨셉 : 과거의 삶을 지우지 않고 미래로 발전하는 무경계 예술마을



■ 선셋장항프로젝트 컨설팅내용 소개 (2010~2012. 9)

트라이포트 거점공간의 개발



■ 선셋장항프로젝트 컨설팅내용 소개 (2010~2012. 9)

구장항역(장항화물역) 현황



일제시대 미곡창고 현황



■ 선셋장항프로젝트 컨설팅내용 소개 (2010~2012. 9)

도선장



+ 송림지구



■ 선셋장항프로젝트 컨설팅내용 소개 (2010~2012. 9)

기본콘텐츠

미디어콘텐츠

- 디지털 기술과 문화예술콘텐츠의 융합을 기반으로 한 프로젝트, 워크숍, 컨퍼런스, 인터랙티브프로그램 등을 통해 중소규모 콘벤션사업, 체험관광 활성화

클럽문화

- 홍대앞 클럽문화를 통해 문화예술, 문화기술의 생태계 조성을 유도하고 선셋 이후 체류형 예술캠프로서의 장항을 이미지화
- 서울의 젊은 첨단문화가 결합하여 인접도시의 젊은 문화향수계층의 유입을 유도

미디어문화체험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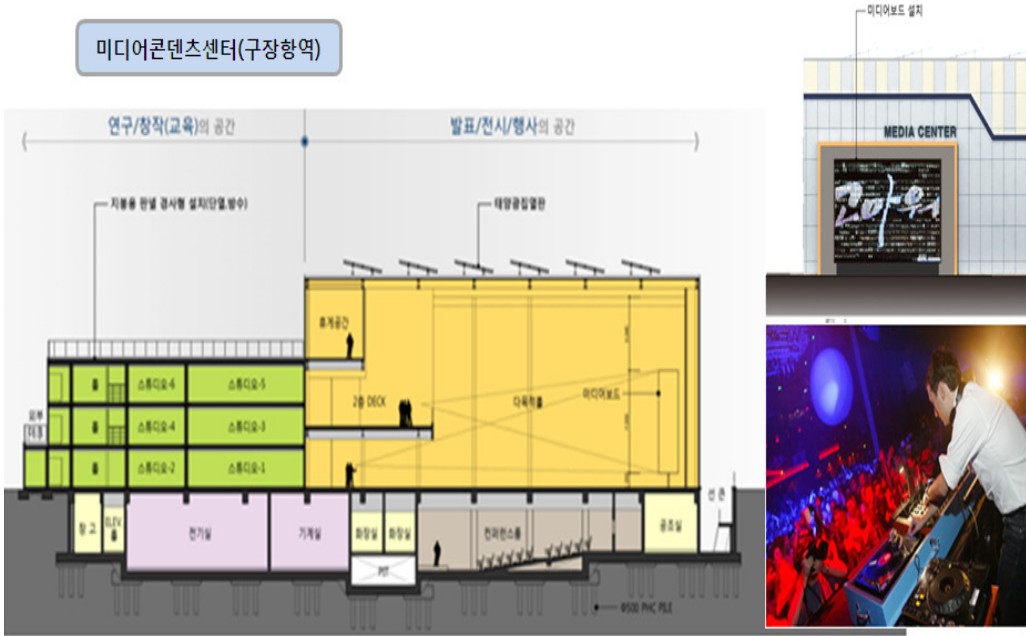
- 미디어콘텐츠센터 전시의 부속 혹은 독립프로그램으로써 가족단위 관광객 참여
- 서천의 아름다운 생태관광 체험, 국립생태원 및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체험학습을 도입하여 미디어예술, 뉴테크놀로지, 생태 및 농업을 융복합한 콘텐츠 제작 및 체험교육

로컬푸드

- 지역의 로컬푸드를 새롭게 스타일링하여 관광콘텐츠화하는 동시에 지역음식전문가 양성

■ 선셋장항프로젝트 컨설팅내용 소개 (2010~2012. 9)

미디어콘덴츨센터(구장항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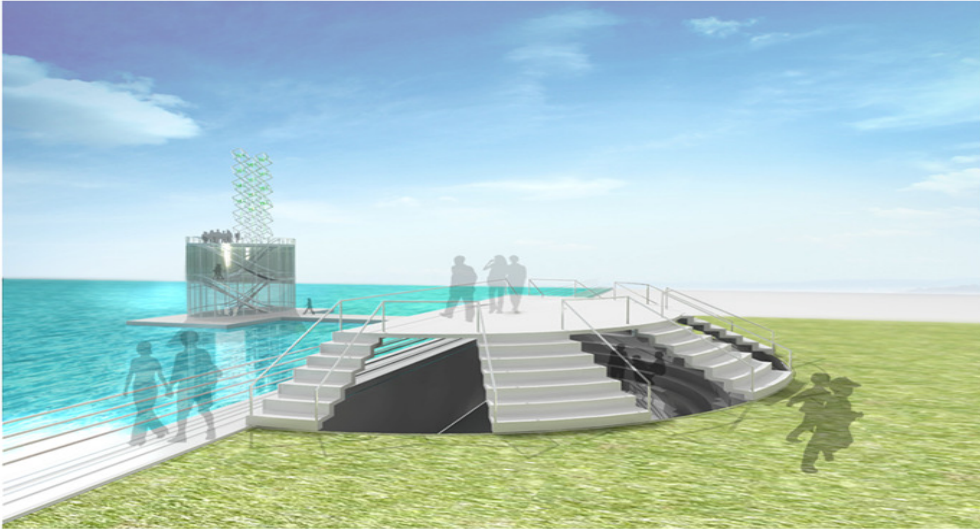
■ 선셋장항프로젝트 컨설팅내용 소개 (2010~2012. 9)

미곡창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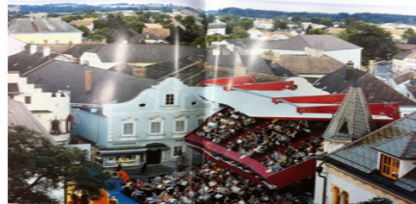
■ 선셋장항프로젝트 컨설팅내용 소개 (2010~2012. 9)

재즈파크(도선장)



■ 선셋장항프로젝트 컨설팅내용 소개 (2010~2012. 9)

Haag의 무대



■ 선셋장항프로젝트 컨설팅내용 소개 (2010~2012. 9)

Pixel Hotel



■ 선셋장항프로젝트 컨설팅내용 소개 (2010~2012. 9)

OPEN YOUR STORY @ JANGHANG

서해마다 드물게 바닷물로
묻은 모래사장, 삶의 공간들과 자연의
미를, 풍요, 휴머니티, 삶의 풍요와 여유가
새로운 감각에 이끌 시키게 한다.

2012

7.13 fri

- 22 sun 10days

SUNSET JANGHANG FESTIVAL

선셋장항페스티벌
Open your Story @ Janghang

장항읍 금강중공업 창고, 어망공장 창고, 마곡창고, 물양장 부지, 강항화물역사, 송림백사당 등 장항 일대

+ 여행처 인터파크 티켓 ticket.interpark.com 1598-1555

+ 문의: 서천군 서천발전전략사업단 041-990-4723 선셋장항컨퍼런스 주관위원회 02-3144-1745-6

www.sunset-janghang.com

facebook.com/sunsetjanghangfestival @ sunsetjanghang

PROGRAM

공감미술제 The Art Factory Project
장항읍 장항리 200-100-100 (2012. 7. 13) 14:00 ~ 17:00 (Sat) 14:00 ~ 17:00 (Sun)
장항읍 장항리 200-100-100 (2012. 7. 14) 14:00 ~ 17:00 (Sat) 14:00 ~ 17:00 (Sun)

매직믹스쇼 마술쇼 Magic Show (14:00 ~ 17:00) (Sat/Sun)
장항읍 장항리 200-100-100 (2012. 7. 13) 14:00 ~ 17:00 (Sat) 14:00 ~ 17:00 (Sun)

발명전시 Invention Camp
장항읍 장항리 200-100-100 (2012. 7. 13) 14:00 ~ 17:00 (Sat) 14:00 ~ 17:00 (Su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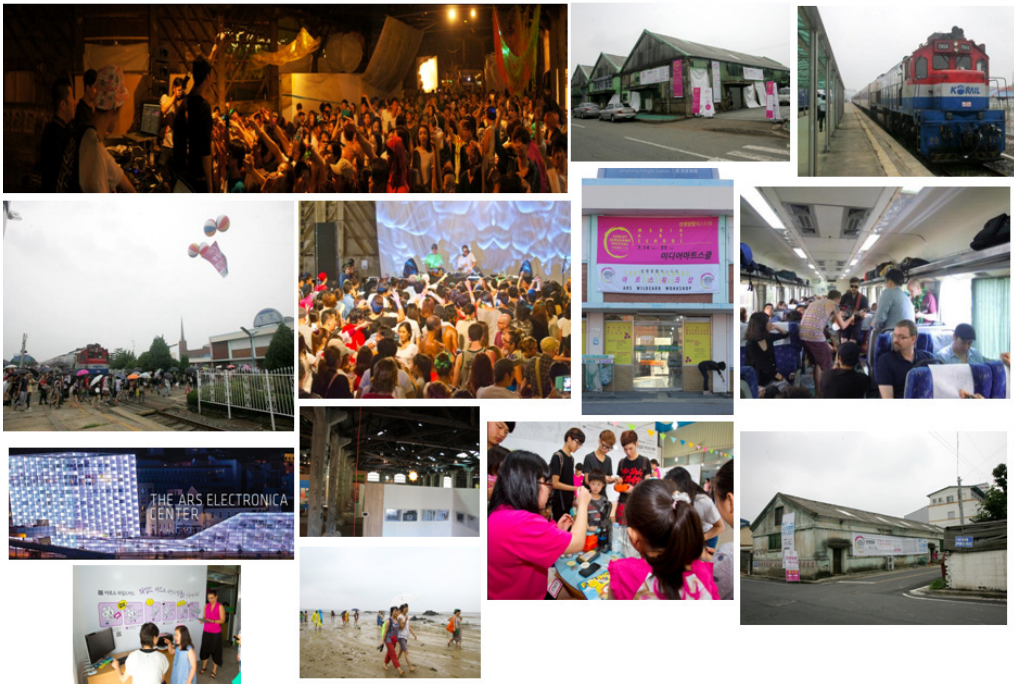
스노우리크 캠프대회 Snowpark Camping
장항읍 장항리 200-100-100 (2012. 7. 13) 14:00 ~ 17:00 (Sat) 14:00 ~ 17:00 (Sun)

스퀘어싱 발라드 연주 Square Sing Ballad Performance
장항읍 장항리 200-100-100 (2012. 7. 13) 14:00 ~ 17:00 (Sat) 14:00 ~ 17:00 (Sun)

에어쇼 워크숍 Air Workshop (14:00 ~ 17:00) (Sat/Sun)
장항읍 장항리 200-100-100 (2012. 7. 13) 14:00 ~ 17:00 (Sat) 14:00 ~ 17:00 (Sun)

로쿠월드스 음악제 Roco World Music Festival (14:00 ~ 17:00) (Sat/Sun)
장항읍 장항리 200-100-100 (2012. 7. 13) 14:00 ~ 17:00 (Sat) 14:00 ~ 17:00 (Sun)

■ 선셋장항프로젝트 컨설팅내용 소개 (2010~2012. 9)



■ 문화를 통한 지역순환 창조경제와 장소마케팅

장소기반형의 플랫폼 2.0 구축

- 사람→이야기→장소성으로 진화할 수 있는 공간문화전략과 거점 조성
- 플랫폼 패러다임의 전환과 자율성 보장 : 서교예술실험센터/문래아트팩토리의 실험

공간/자원/사람(콘텐츠)의 융합을 통한 체류형 문화생태계 형성

- 새로운 삶의 씬을 체험하고 교감,참여할 수 있는 재미와 매력을 상호제공
- 일상탈출,경계허물기,관계맺기를 매개하는 나이트라이프의 경험
- 소셜라이프의 형성과 창조경제의 발생 : 체류에서 정주로

창조여행과 컨벤션사업을 통한 지역재생

- 수도권을 중심으로 삶의 체험,공유 등 새로운 여행가치의 창조 및 사업화
- 콘텐츠 생산 및 소비를 근거로 한 컨벤션사업을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순환 문화관광

2.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 정책추진 방안 전문가 집담회 주요내용

2.1. Session 1,2 발제

◇ 발제 1.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 정책추진 방안 연구 | 추미경

- 소프트 파워 중심의 창조사회로 전환되는 시대적 패러다임 속에서 국내에서도 2000년 전후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본격화됨. 이에 국제 정책동향 및 국내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 농림수산부 등 부처별 지역재생 관련 동향을 살펴봄.
- 지역재생의 국제적 흐름은 소프트/휴먼이 결합된 지역에 대한 종합적 접근, 상향식, 10년까지의 장기지원, 파트너십 강화, 커뮤니티 재생으로 전환, 도시 간 국제 경쟁구조의 강화 등으로 요약됨. 국내 정책동향을 살펴보면 2000년대 이후 통합적 지역재생 정책으로 전환하면서 중앙부처에서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 정책에 주목, 하드/소프트/휴먼이 결합된 종합적 정책모델을 추진하고 있으나 형식 요소에 맞는 내용적 실체가 매우 허약함.
- 문화부에서는 지역민족문화과, 디자인공간문화과 중심으로 2000년 전후부터 문화를 통한 지역활성화 정책을 다양하게 추진, 최근 문전성시, 생활문화공동체만들기, 문화이모작 사업을 통해 소프트웨어와 휴먼웨어의 종합적 접근에 성과를 보이고 있음.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하드웨어 중심의 지역재생 방식 재현, 사람/공간/자원의 어우러짐 없는 개별 정책성과의 한계를 보이면서 전체적으로 문화와 지역재생이라는 지속가능한 지역문화의 내재적 성과를 구축되는 장치를 가지고 있지 않음.
- 이에 문화부는 여러 부처가 추진하는 지역재생 정책 파트에서 “문

화”영역을 브랜드/특화시키고, 창조적 경제기반과의 유기적 연계 위에서 사람/공간/자원이 어우러지는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함. 즉, 창조사회로의 전환 및 사회경제적 변화를 고려한 창조적 지역사회 기반 구축, 지역 고유의 문화콘텐츠 및 생활문화를 가치화하는 지역문화창조 전략, 지역문화역량의 질적 전환을 위한 "How To" 정책 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 정책은 새로운 정책 아이템(what)에 대한 접근이 아니라 정책 지향가치에 따른 창의적 추진과정(creative process)과 질적 방법(qualitative how to)을 중심으로 추진하도록 함. 개별화 되어 있는 지역문화자원 및 지역문화정책 성과를 창조사회로의 전환에 맞추어 종합적 관점에서 지역 개성과 규모에 맞도록 재구성하는 <지역문화창조 클러스터링 또는 지역문화창조 파트너십(가칭)> 정책으로 구체화하는 방안을 제안함.

◇ 발제 2. 진안군의 마을만들기 정책과 주요활동 | 곽동원

- 마을 만들기는 자연스럽게 삶의 뿌리를 만듦으로써 농촌 마을을 살리는 작업임. 파괴된 공동체를 ‘문화적인 접근’을 통해 마을 단위가 회복되어야 농촌이 살아날 수 있음. 또한, 농촌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고 있음. 이는 식량 문제로 이어져 장기적으로 국가의 뿌리가 흔들리는 일이므로 “운동”의 개념으로 마을만들기에 접근하는 것이 필요함.
- 진안군의 마을만들기는 외부자원이 아닌, 내부의 자원을 활용하고 있으며 공무원이 주도하는 하향식 정책추진이 아닌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사람들을 조직화하고 역량을 강화하는 상향식 방법에 대한 원칙을 가지고 운영해 옴. 또한, 주민들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표를 가질 수 있도록, 마을에서 하는 일의 10%라도 공공을 위한 일을 하는 것을 구성원들과 공유토록 노력함. 이러한 원칙 속에서 작년 12월에 진안군에 “마을만들기 지역센터”가 구성되어 방향을 갖추게 됨.

- 핵심 역량으로 진안군청에서 박사급의 전문가를 컨설턴트가 아닌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 지난 8년 동안 일시적인 자문이 아닌 정책을 함께 수립하고 실현하는 구조를 운영해왔음. 이를 통해 일관된 의지를 갖고 전문가와 행정의 호흡을 맞춰 주민의 신뢰를 이끌 수 있었음. 더불어, 마을 구성원들의 공공적 방향성 및 자발성을 이끌기 위하여 단계적 예산 지원 및 평가를 통해 일종의 공동체 훈련이 진행됨. 처음부터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이 아닌 적은 예산으로 사업의 방향성을 익힐 수 있도록 한 후 점차적으로 사업의 확대. 이를 통해 사업의 실패 가능성을 줄임.
- 행정조직이 각 지역의 마을만들기를 모두 관할하는 데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음. 이에 외부 인재를 끌어들이거나 귀농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통한 중간조직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함. 마을만들기 측면지원을 위하여, 축제를 활용함. 이를 위해서는 축제가 단순히 외부관광객을 위한 것이 아닌 마을 구성원이 즐거울 수 있어야 함.
- 농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이윤, 가시화된 성과만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문화적인 접근이 절대적으로 필요함. 문화는 단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 장기적인 관점으로 농촌의 지역민들이 문화를 만들고, 참여 구성원들이 삶 속에서 활기를 경험하고 변화될 수 있어야 함.

〈특이사항〉

- 진안군은 광동원 공무원이 10년 이상 담당하며 지속성을 펼 수 있었음.
- 사업 시 한 마을에 예산을 다 주지 않음.(30개 마을에 150~200만원의 예산 지급 → 성과에 따라 1000만원을 지급하는 단계적 구조를 가지고 있음.)

〈진안군의 사업〉

- 축제 - 마을단위, 주민들의 참여로 추진, 8월 초 휴가기간에 농촌으로 가도록 홍보. 방문객보다 주민이 즐길 수 있는 축제 기획
- 기록 - 마을 노인들의 이야기와 삶을 기록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스토리 콘텐츠 개발
- 길 - 관광지가 아닌 마을의 길, 선조들의 삶과 이야기를 녹임. 14주간 걸어서 프로젝트 진행
- 귀농인 - 젊은 귀농인들 상대로 다양한 관련 프로그램 만들.
- 마을박물관 - 버려지던 마을 물건들을 모으기 시작하여 만들. 한 군데 설립 후, 옆 마을들이 연달아 시행하여 마을문화 콘텐츠로 자리잡음.
- 한글교육 - 어르신들의 편지, 시 등 훌륭한 작품들이 만들어짐. 마을 안에서 스토리텔링 콘텐츠가 제작됨

〈향후 방향〉

- 통합적 사고가 필요. 공동체의 효과 - 많은 범죄 예방 가능
- 문화적 접근, 공존의 필요성 - 주민학습, 평생학습, 상부상조의 역할을 함

◇ 발제 3. 공간과 문화자원 활용을 통한 지역재생 방향 | 김효정

- 국제적으로 문화도시의 경우, 문화자원(역사, 예술, 시설, 생활 등)을 활용하여 도시재생을 목적으로 진행함. 국내에는 개발 중심의 정책으로 도시에 접근. 도시경제와 결합하는 방식, 또한 유희공간을 어떻게 지원해 나갈 수 있는지 등으로 접근하여 물리적 재생에 머문 경향이 큼.
- 각 부처들의 지역재생 관련 사업을 살펴보면, 대부분 큰 규모의 시설을 먼저 생각함. 이는 예산집행, 행정절차의 편의를 위해, 결국 비슷한 매뉴얼의 똑같은 모습을 만들게 됨. 지역재생의 과정을

살펴보면 대부분 행정에서 일방향적인 소통에 의존하고 있으며, 구성원들의 형식적인 참여에 그치면서 실제로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낸 경우가 많지 않음.

-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은 일방적인 형태가 아닌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므로 이에 맞는 새로운 방식이 필요함. ‘문제’를 전문가가 푸는 것이 아닌, 주민들로 의해서 발견하고 해결해가는 ‘프로세스’가 필요한 것임. 문화가 특별한 것이라는 문화 강박에 빠지는 것이 아닌, 만들어가는 문화, 함께하는 문화가 되도록 해야 함.
- 주민들이 스스로 찾을 수 있도록 하고 전문가는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이에 사업전체가 ‘만들기’에서 ‘과정’으로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함. 과정으로서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이 필요함.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 전개방향〉

- 완성이 아닌 ‘과정형 사업’으로의 전환 필요 : 전문가의 강요를 넘어서 주민과의 쌍방향 소통이 이뤄져야 함. 마을만들기에 있어서는 ‘함께 만드는 문화’에 중점.
- 전문가 : 주민, 지역과 다른 차원의 시각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 전문가의 역할임. 문화예술에 대한 강박을 버리고 재생사업만큼은 함께 만들어가야 함.
- 주민 : 주체적 주인의식을 가져야 함. 수혜나 학습의 대상으로 머물게 하면 안 되며, 주도적인 위치에 설 수 있도록 의식전환 필요. 최근에 이루어지는 여러 유형의 마을 탐색 프로젝트 등에 있어서는 주민 주도성이 성과를 내고 있음.
- 재생사업내용 : 참여자들 모두가 즐거운, 흥분 상태를 만들어주는 방향으로 전환 필요.

◇ 발제 4. 장소성과 지역재생; 관계의 재생, 가치의 재생, 공간의 재생 I 이영범

- 국토해양부는 도시재생법을 통하여 통합적인 접근과 재생, 범 부처 간의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였지만, 실제로는 같은 부처 내에서조차 각각의 칸막이가 존재함. 제도화 과정에서 도시재생이라는 가치와 패러다임이 아닌, 기존의 ‘개발’ 논리 성향을 답습함. 또한 추진 시스템의 경직성 때문에 지역 특성에 맞춘 사업 진행이 어려움. 사업의 한계를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직시할 필요가 있음.
- 좋은 의도로 시작하지만 개념화 → 제도화 → 사업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경직성이 생기고 실현 가능성이 축소됨. 이러한 과정에서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풍부한 역량이 제도적인 ‘사업’에서 발휘되기 어려움. 문제의 대안으로는 사업의 가치와 방향성의 일관성을 가질 수 있도록 전문가 컨설팅의 결합이 필요함. 또한, 주체 세분화가 필요한데, 주체별 역량에 따라서 사업내용이 차별화될 수 있어야 함. 사업의 일반적인 형태로 모든 지역에 진행되는 것이 아닌 각각의 대상 지역의 상황 및 특성에 따라서 각기 다른 내용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
- 도시재생에는 시간적 개념이 절대적으로 필요함. 지속성 사업으로서 도시재생 안에서 시간은 중요한 자원임. 사실 문화에서 가장 중요한 차원이 공간과 더불어 시간의 요소임. 문화를 다룰 때 시간을 압축시키거나 빼버리게 되면 표준화된 형태가 됨.
- 또한 마을기업을 통한 사회적 개발경험을 살펴보면 자산관리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함. 특히, 자생적으로 지속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선 재정의 독립성, 수익구조가 필요함. 문화공간을 위한 일종의 신탁제도. 주민이 주도적으로 하며 재정적인 독립성이 필요한 기법의 개발이 필요한데. 일종의 지역재생을 위한 자산관리(asset management) 기법의 개발이 필요함.

- 문화적 지역재생에서 역사문화에 몰입되기 전에 도시의 현대성을 어떻게 제어할 것인가가 함께 고민되어야 함. 즉, 현대성의 부정적 단면인 상업화, 자본화, 물질화 경향에 맞서 고유한 가치의 보존 및 공존, 사회와의 공유를 만들어갈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함.

〈역사문화마을만들기 사업의 실패적 요소〉

- 내용, 취지는 좋았지만 방식이 적절하지 않았던 사례
- 마을역사자원 → 사업 대상지 선정 후, 역사문화의 동일한 맥락 속에 있는 옆 마을은 차별받았다는 상실감, 공허감 등에 위화감이 조성됨.
- 내용적으로는 가령 한 마을에 주어진 지원예산 20억을 n분의 1로 주민이 가져간다는 지원금에 대한 왜곡된 기대와 의존감이 지배적이면서 마을문화를 해치는 경우가 많음.

⇒ 투여된 지원금(자본)으로 인해 마을의 공동체가 망가지는 경우임.

〈성공한 사례의 특징〉

- 똑같은 사람이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진행. 단체장이 바뀌어도 꾸준히 추진할 수 있는 이유는 이미 주체의 조직화가 되어있기 때문임.

〈문제점〉

- 공무원이든 담당정책제안자가 어느 시점이 되면 다 바뀌어버림.
 - 전문 공무원이 필요한 실정
- 공무원은 사업에 관심이 있어도 체계상 버티기 힘든 구조.
- 개인의 입장에서 책임이 분산되어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힘들.
- 문화적 재개발 : 결국 자본이 들어가면 사업에 영향을 미치므로 가려운 곳을 긁어줄 수 있는 적절한 방안이 필요함.

◇ 발제 5. 공간/자원/사람의 연계에 의한 장소기반형 재생전략

I. 최정한

- 지역의 실제적 현실에 대한 객관적 인식이 필요함. 즉, 서울, 대도시에 집중된 관계망과 라이프 스타일, 지역의 공동화, 창조인력(젊은 계층)의 대도시 집중으로 콘텐츠 생산, 유통, 소비 자생성의 결여로 인해 “지역은 없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임. 때문에 고정관념에 있는 지역의 모습을 벗어나서 현실적 지역의 조건을 전제로 공간, 지역자원, 사람의 융합을 통한 지역의 창조적 재구성 필요. 더불어 젊은 계층을 어떻게 지역에 끌어들이 수 있는지 전략이 필요함.
- 특정한 취향, 소셜 라이프를 공유하는 사람들이 모여 문화생태계가 형성됨. 공간문화전략과 거점이 조성되고, 자율성이 보장되어, 공간과 자원, 사람이 융합이 되어야 함.
- 지역이 가지는 콘텐츠는 질(quality)이 보장되어야 지속가능함. 이에 지역이 치열하고 질 높은 콘텐츠의 고민과 더불어 좋은 사람들이 지역에 유입될 수 있는지는 개방성과 유입에 대한 유연성을 가져야 함.
- 문화와 경제는 불가분의 관계, 이에 장소기반형의 창조적인 플랫폼이 필요. 이를 통해 지역이 새로운 실험을 하고 숨통이 될 수 있어야 함.

〈문화생태계와 소셜라이프 형성의 중요성〉

- 한 지역에서 생태계 만드는 것이 중요 - 소셜 라이프 → 스토리 → 장소성 → 장소마케팅으로 이어지는 프로세스
- 소셜 라이프 : 뉴욕 소호 등의 성공적 평가 사례도 시장구조 안에서의 연계 때문임.
- 소셜 라이프 ‘인(人)’을 연결하는 커넥터 역할이 중요

- 최근 경향 : 협동조합법도 생김으로써 콘텐츠 형성이 편리해짐.

〈국내외사례 - 소셜 라이프 형성〉

- 흥대의 사례 - 클럽으로 콘텐츠화
- 전주남부시장 : 전통시장 2층 유휴공간을 활용한 청년몰 사업으로 12개 가게를 통한 소셜 비즈니스 생태계 형성. 청년장사꾼 프로젝트와 야시장, 문화프로그램이 융합된 소셜 비즈니스의 플랫폼
- 태국 풀문 파티 : 코팡안 해변에서 매월 보름달이 뜰 때마다 개최하는 대규모 파티. 태국 주요 관광상품으로 육성되며 하프 문, 블랙문 파티까지 생김.

〈국내외사례 - 공간/자원/사람의 융합을 위한 공간문화전략〉

- 북촌한옥마을 : 멸실되는 한옥을 보존하기 위해 주민의 참여와 서울시가 기본계획 수립, 행정/주민/전문가/문화예술인들이 협력한 사례
- 오스트리아 린츠의 아스일렉트로니카/픽셀호텔 : 유서 깊은 유휴공간을 호텔 객실화하고 조식을 위한 레스토랑 등과 연계한 도시투어를 만들.
- 오스트리아 소도시 HAAG의 연극 가설무대 : 마을의 주차광장에 독특한 조립형 가설객석 설치, 여름연극제에 활용.

〈선셋장항 프로젝트〉

- 장항의 도시기능 상실 및 공동화현상 심화, 근대산업유산과 자연환경, 지역자원을 연계, 활용하는 새로운 도시형 창조관광산업 기반 조성이 절실
- 외부의 문화예술콘텐츠와 근대산업유산의 결합 통한 관광 및 미역경제 활성화, 장항읍 지역콘텐츠를 기반으로 한 체류형 창조관광 기반 조성
- 프로젝트의 기본 콘텐츠는 미디어 콘텐츠, 클럽문화, 미디어문화체험교육과 로컬푸드, 특히 Seafood 개념을 형성하고, Local Food Lab으로서 아카이브 홀을 만들. 미곡창고안에서 클럽놀이를 하는 컨셉의 페스티벌.

〈문화를 통한 지역순환 창조경제와 장소마케팅〉

- 거점조성 : 지역에서 거점 조성이 이뤄져야 함. 즉, 장소기반형인 창조적 플랫폼이 필요 → 새로운 시도, 기반 마련. 지역의 눈높이로 가면 안 됨. 공간, 자원, 사람이 융합되어야 함. 굳이 외부사람을 찾는 것보다 내부인력을 활용해야 함.
- 지역의 문화사업 : 콘텐츠의 질이 높아야 지속 가능. 향수만 건드리면 안 됨. 지역이 좀 더 치열하고 질 높은 콘텐츠를 생산해야 함. 또한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개방성과 관용성이 필요.
-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의 사례 : 초반에 지역민들의 비판적인 시선만 받다가 4회째부터 지역에 경제적인 효과 창출과 지역브랜드를 형성하며 투자의 통인으로 작용됨.
- 지역민에게 필요한 자세 : 바깥의 창조적인 것을 받아들여야 함. 현재 대부분 공무원 아니면 지역의 교수나 지역의 업자들이 지역 문화에 변화를 시도하여 제대로 된 비전이 나오기 힘든 환경. 지역민들이 전반적으로 주체적인 자세가 필요.

2.2. Session 3 종합토론

◇ 종합토론 주요 의견

■ 지역재생 유형의 다양화

- 지역재생의 유형을 지역특성에 맞도록 다양하게 열어둘 필요가 있음. 각각의 지역이 가지고 있는 가치에 맞는 방법론이 필요
- 문화의 높낮이를 떠나서 각 지역의 다양한 문화적 가치를 적절하게 살리는 것이 중요함
- 지역 내부의 자원을 활용 vs 외부 질 높은 콘텐츠의 유입에서의 유연성 필요

■ 공공 및 행정의 지역재생의 역할

- 공공 또는 행정이 지역재생에서 자원을 배분하고 관리하는 역할이 매우 중요하나, 대부분 토건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소프트웨어 중심의 경험이 부족함.
- 모든 지자체가 구도심 문제를 고민함. 문화부에서 다른 부처와는 다른 접근방식의 구도심 재생(문화를 통한 구도심 재생 등)의 롤모델을 만드는 것이 필요. 사업 아이템에 있어 문화부가 문화부만의 가치를 정확히 브랜딩 해야 함.
- 문화부만이 할 수 있는 지역재생사업에 있어서 가이드라인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즉, 다른 부처의 성과와 물리적 접근방식의 한계에 문화적 접근의 가이드라인을 줄 수 있는 관점이 필요함. 실제적으로 문화부 문전성시, 생문공 사업 등의 추진개념, PM 및 컨설팅단 등과 같은 추진구조,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등의 정책개념이나 프로세스가 타 부처 사업에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음. 이에 대해 문화부가 타 부처에 성과를 주었다는 관점보다는 대국적 차원에서 롤모델 또는 문화적 관점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역할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함.

■ 공간의 자본화로 인한 갈등

- 많은 경우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 시, 공간의 자본화의 모순과 갈등이 따름. 이에 지역재생 초기에 이러한 ‘현대성’을 제어할 수 있는 계획이 필요
 - 공간이 상업화·자본화되며 초기 지역의 플랫폼을 형성시킨 예술가들의 설자리가 없어짐.
 - 공동체가 자산관리의 개념으로 공간을 관리하여, 사회자본의 결실을 공공에게 돌릴 수 있어야 함.

■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 시 매개조직(중간조직)의 중요성

-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 시 매개자 또는 코디네이터 등의 전체적인 과정에서 방향성을 이끌어 갈 수 있는 매개조직의 설정과 적절한 결합이 중요
 - 전문가들의 결합을 통하여 사업의 방향성을 유지할 수 있는 컨설

팅을 지원하고, 지역이 가진 자원과 사람을 효과적으로 연계

- 이에 정책적으로 각각의 주체 및 사람/자원/공간을 연계하고 통합적인 차원에서 이끌어 낼 수 있는 지역문화 파트너십 또는 창조적 파트너십의 필요

논의 주제	지역문화 파트너십 추진방법	지역사업의 질적 전환 방법
추미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로운 발전전략과 지역내적 진화과정 중 지역에 맞는 선택이 필요 : 양자 중 한번이라도 제대로 시행되는 것이 중요 · 사업에 적절한 충격과 밸런스가 필요 · 주민들의 주체화 : 수혜가 아닌 공동참여 필요/권한과 의무의 공평한 역할분담이 필요함 · 여러 주체들 사이에 컨설팅과 코디네이터가 이어져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소성 기반 : 외부 에너지를 지역에 끌고오는 것의 장점이 있지만 내부 자원과의 부합성 및 균형감이 전제되어야 함. · 지역의 오랫동안 고립되어온 안목에 변화가 필요 · 지역문화 다양성에 걸맞은 제도화 필요 · 사업담당자 변화에 흔들리지 않는 지속가능한 운영조직의 장치가 필요함
곽동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업에서 인재의 중요성 : 지역에 리더십을 가지고 꾸준히 할 수 있는 사람이 존재하는 것이 중요. · 지역 내적 에너지에 기반을 둔 단계적 접근이 중요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민들의 주체성 : 지역민들이 스스로 참여하고 만족할 수 있어야 함.
김효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발적인 사업은 지양 : 지역민들에게 부정적인 인식 형성가능 · 사업이 추구하는 가치와 방법의 균형이 필요 · 좋은 콘텐츠라도 지역민에게 수용이 가능해야 함 · 발전과 유지에 있어서 지역의 선택권이 필요 : 정부의 일방적인 사업추진에 대해 고민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민들의 성취감이 중요 · 인사동의 사례 : 싼값의 외국공예품이 40%이상 유입되어 활성화되면서 국산이 줄어들고 질도 낮아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게 됨.
이영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식민주의 : B급에서 A급으로만 추구. 문화예술에 있어 공간의 자본화가 가장 큰 문제. 어떤 식으로든 성공스토리에만 치중 => 대안으로 공동체가 함께 소유하는 공간 플랫폼이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성의 생태계 : 지역마다 고유 정체성을 기반으로 콘텐츠 형성. 다양한 정체성들이 지역문화의 가치. 다들 A급만 원하지만 B급도 필요.
최정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발적 욕구의 한계 : 지역에서 부정적이게 볼 경우 사회적 자원 배분에도 가치가 쉽게 왜곡됨. · 민간의 책임 : 제도적, 시스템 운영방식에서 민간도 책임을 지며 공무원과 함께 가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예술의 다양성 : 모든 Subculture에서 시작. 비주류가 주류를 잠식해가므로 등급을 설정하는 용어는 적절치 않음. 다양성을 인정해야 함.

참고문헌

<국내문헌>

- 강동진 외, (2011). 『지역 근대산업유산 예술창장벨트화 시범사업평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강현주 외, (2011). 『문화적 관점의 공공디자인사업 평가지표 보고서』.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 구문모, (2012). 「문화중심 지역개발사업의 창조생태계적 접근과 정책적 함의: 개념적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문화경제학회.
- 권영섭 외, (2012). 『국토 및 지역발전 정책의 평가와 효율적 추진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 김경인, (2008). 『문화로 아름답고 행복한 학교 만들기 양지중학교(전주시) 시범사업 보고서』.
- 김남일, (2008). 『강릉학보』 vol.2.
- 김복환, (2010). 『建築 2010년 5월호』. 2010.
- 김수현, (2011). 『지역과 발전』 vol.7.
- 김승근, (2008). 『농촌건축 : 한국농촌건축학회논문집』.
- 김인선 외, (2010). 『대한건축학회논문집』. 제26권 제5호(통권259호).
- 김재홍, (2011). 『지방정부연구』 제 15권 제1호.
- 김정섭 외, (2011). 『농촌 지역 활성화 정책의 평가와 발전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효정 외, (2007). 『문화를 통한 지역개발 사례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대한민국 국회, (2011). 『2011년도 공청회자료집(예산안기금운용)』.
- 두리공간환경연구소, (2011).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시범사업 성과와 과제』, 국토연구원 도시재생지원사업단.
- 류정아, (2010). 『농촌지역 문화환경 개선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모성은, (2009). 『월간 자치발전 2009년 5월호』. (사)한국자치발전연구원.
- 문전성시사업단, (2012). 『문전성시 컨설팅 보고서 2008-12』.
- 문전성시사업단, (2012). 『문전성시 컨설팅 보고서 2008-12』.
- 문화체육관광부, (2006). 『2006년 생활공간 문화적 개선사업 추진 계획(안)』.
- 문화체육관광부, (2008). 『2008 문화예술정책백서』.
- 문화체육관광부, (2009). 『2009 문화예술정책백서』.
- 문화체육관광부, (2010). 「2010년 공공디자인 조성사업 추진계획(안)」.
- 문화체육관광부, (2011). 『2011 문화예술정책백서』.

- 문화체육관광부, (2011), 『2011 문화예술정책백서』 .
- 문화체육관광부, (2012), 「2012 마을미술프로젝트사업 공모 계획서」 .
- 박세훈 외, (2011), 『도시재생을 위한 문화클러스터 활용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 박승규 외, (2008), 『살기좋은지역만들기 사업의 발전적 개편방안』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박신의, (2012), 『2012 문화정책논총』 제26집 1호.
- 박현찬, (2006), 『건축과 사회』 .
- 배진희, 임수경, (2007), 『영국지역발전기구(RDA)에 대한 평가체계 분석』 , 한국산업기술평가원, 2007.
- 송미령 외, (2008),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새로운 도전과 구상』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양재섭, (2007), 『서울정책포커스 제43호』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양재섭, (2008), 『건설주택포럼 2008년 세미나 자료』 .
- 염철호 외, (2009), 『지역기반 건축·도시프로그램 지원 네트워크 구축 및 코디네이터 기능 활성화 방안연구』 . 건축도시공간연구소.
- 예술경영지원센터, (2009), 『2009 마을미술 프로젝트 평가보고서』 .
- 오동훈, (2010), 『도시행정학보』 제23집 제1호.
- 오민근, 정현일, (2008), 『문화관광 너울』 . vol. 208.11월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오정은, (2012), 『유럽의 상호문화정책연구 : 상호문화도시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다문화와 평화』 , 성결대학교 다문화평화연구소.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09), 『창의도시네트워크 신청서 작성 매뉴얼』 .
- 이동균, (2007), 『주민참여에 의한 마을가꾸기 사업에서 참여주체의 관계구도와 역할에 관한 연구 : 문화·역사마을가꾸기 사업을 중심으로』 .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 이병민, (2011), 『글로벌라이제이션과 지역발전에 대한 연구방법론 고찰』 . 문화콘텐츠연구 제1호, 건국대학교 글로벌문화전략연구소.
- 이성근, 최민아, (2012), 『국토계획』 제47권 제4호.
- 이왕건 외, (2011), 『지역자산활용형 도시재생 전략에 관한 연구』 .국토연구원.
- 이왕건, (2010), 『국토정책브리프』 285호.
- 이윤경, (2011), 『공공디자인 시범도시 조성사업 현황진단 및 개선방안』 .
- 이충기, (2010), 『2010 문전성시 프로젝트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 경희대 산학협력단.
- 임문영, (2006), 『한국프랑스학논집 제55집』 .
- 전병태, (2008), 『유네스코 창조도시 네트워크 가입지원 연구』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전영미, (2010), 『한국농촌건축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자료』 .
- 전영미, (2011), 『한국주거학회 2011년도 춘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
- 정준호, (2013), 『지역과 발전』 vol10.
- 정철모, (2009), 「선진국의 도시재생을 위한 파트너십 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도시행

- 정학회, 2009.
- 지역발전위원회, (2012). 『2012 창조지역사업 가이드라인』 .
- 지역발전위원회, (2013). 『농림수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간 연계협력사업 편람』 .
- 최막중, 윤세형, (2009). 『국토계획』 제44권 제3호.
- 추미경 외, (2008). 『기초예술과 문화산업의 연계방안 연구』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추미경, (2006). 「도시문화전략과 장소마케팅의 흐름」 . 홍익대출판부.
- 추미경, (2011). 『2011 생활문화공동체만들기 시범사업 평가컨설팅 연구』 . 한국문화원연합회.
- 추미경, (2012). 『2012 경남문화재단 정책세미나 자료집』 .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1). 「2011 문화이모작-농어촌문화심기 사업설명서」 .
- 행정안전부, (2007). 『접경지역 지원 성과평가 및 발전방안』 .
- 행정안전부, (2007). 『지역공동체 복원 및 형성에 관한 연구』 .
- 홍중열, (2011). 『유럽연합(EU)의 문화정책 연구 : 글로컬라이제이션 전략을 중심으로』 .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 황소영; 이정형, (2011). 『한국도시설계학회 2011년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 .

〈해외문헌〉

- Bianchini & Parkins, (1993). 『Cultural policy and urban regeneration: The West European experience』 . Manchester University Press.
- Peter Roberts & Hugh Sykes, (2000). 『Urban Regeneration: A Handbook』 . SAGE Publication

〈웹사이트〉

- | | |
|------------------------|---|
| 도시재생사업단 홈페이지 | http://www.kourc.or.kr/ |
| Council of Europe 홈페이지 | http://www.coe.int/ |
| 지역발전위원회 홈페이지 | http://www.region.or.kr/ |
| 문화로 행복한 학교 만들기 홈페이지 | http://www.happy-school.or.kr/ |
| 2012 마을미술 프로젝트 홈페이지 | http://www.maeulmisul.org/ |
| 웹진관광 홈페이지 | http://www.kcti.re.kr/ |